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⑧

---

일지 / 자료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⑧

---

## 일지 / 자료

국정홍보처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 편찬위원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 편찬위원

### 1권 총론 / 대통령 발언록

성경룡 정책실장(감수)

정동수 정책조정비서관(책임집필)

### 2권 민주주의

차성수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천호선 홍보수석(감수)

윤건영 정무기획비서관(책임집필)

### 3권 경제

김대유 경제정책수석(감수)

문일재 경제정책비서관(책임집필)

### 4권 사회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감수)

김동완 사회정책비서관(책임집필)

### 5권 통일 · 외교 · 안보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감수)

배기찬 동북아비서관(책임집필)

### 6권 균형발전

이민원 국가균형발전 위원장(감수)

남동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비서관(책임집필)

### 7권 정부혁신

차의환 혁신관리수석(감수)

권해상 혁신관리비서관(책임집필)

### 8권 일지 / 자료

김정호 기록관리비서관(책임집필)

## 편집 총괄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

---

# 발간사

참여정부는 북핵과 신용불량자 위기 속에서 출발해 지난 5년 동안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개혁,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동반성장, 동북아 평화 정착,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각 분야의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켰다.

권위주의, 특권과 유착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대통령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졌고 초과권력을 위해 이용됐던 권력기관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권력에 의해 굴절됐던 과거사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정착시켰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수출 3천억 달러 달성은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시장경쟁이 만들어낸 경제성과다. 미래의 성장을 위해 한·미 FTA 협상도 타결시켰다.

참여정부는 지난 시기 성장 제일주의, 승자독식이 만들어낸 양극화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정부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재정과 사회투자를 꾸준히 늘렸다.

북핵 문제로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지만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북한과 주변국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대세를 만들어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제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내다보게 되었다. 한·미 간 여러 난제들을 풀어내고 수평적 동맹 관계로 성숙시켰다.

행정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국토의 고른 성장을 도모한 것과 정부 혁신을 통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도 참여정부의 중요한 성과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남발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는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과 역사적 평가에 필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이 참여정부에 대한 공정하고 성숙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쓰이길 기대해본다.

2008년 2월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장 김병준

---

# 차 례

## 대통령 일지 / 자료

1. 주요 재임일지 .....	10
2003년 · 10	
2004년 · 24	
2005년 · 33	
2006년 · 43	
2007년 · 53	
2. 정상외교 일지 .....	63
2003년 · 63	
2004년 · 64	
2005년 · 65	
2006년 · 66	
2007년 · 67	
3. 권양숙 여사의 주요 활동 .....	69
정책 테마별 행사 · 69	
청와대 초청 격려 행사 · 91	
외교업무 수행 · 100	

---

4. 참여정부 주요 정무직 .....	108
국무총리·장관 · 108	
감사원장 및 장관급 · 111	
차관 · 114	
처·청장 · 118	
차관급 · 120	
5. 주요 자문기구 .....	129
6. 노무현 대통령 연보 .....	199
1946 ~ 1987년 · 199	
1988 ~ 1989년 · 201	
1990 ~ 1991년 · 202	
1992 ~ 1995년 · 204	
1996 ~ 1998년 · 207	
1998 ~ 2001년 · 208	
2002년 · 210	

---

## 참여정부 주요 일지

7. 일지 편 (2002. 12 ~ 2007. 12) .....	216
2002년 12월 · 216	
2003년 · 221	
2004년 · 278	
2005년 · 326	
2006년 · 389	
2007년 · 439	

# 대통령 일지 / 자료

# 1

## 주요 재임일지

### 2003년

- 2. 25
  - 국립묘지 참배
  -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 청와대 수석·보좌관 이상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
  - 미국 정부대표 접견
  - 취임 리셉션
  - 중국 부총리 접견
  - 러시아 상원의장 접견
  - 외빈 초청 만찬
- 2. 26
  - 수석·보좌관회의
  - EU 의장국(그리스) 교체  
외교장관 접견
  - 영국 외교부 국무상 접견
  - 프랑스 불·한 의원  
친선협회장 접견

- 2. 26
  - 나카소네 前 일본 총리 접견
  - OECD 사무총장 접견
  - 모리 前 일본 총리 접견
  - WTO 사무총장 접견
  - 폰 바이체커  
前 독일 대통령 접견
  - 다우너 호주 외교장관 접견
  - 미국 인사(16명) 단체 접견
  - 밀러 가츠프롬 사장 접견
  - 스트롱 유엔 사무총장  
자문관 접견
  - 러시아 인사(5명) 단체 접견
  - 한국을 빛낸 해외동포  
(13명) 단체 접견
  - 해외 유력 금융인사(3명) 접견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조각(組閣) 관련 기자회견</li> </ul>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재정경제부 업무보고</li> <li>• 경제 관련 단체장과의 오찬</li> </ul>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경제보좌관 임명장 수여식</li> <li>• 학군단(ROTC) 졸업 및 임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장, 교육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li> <li>• 베트남, 카타르, 브루나이, 짐바브웨, 이디오피아 대사 임명장 수여식</li> </ul>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4주년 3.1절 기념식</li> </ul>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li> </ul>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li> </ul>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타임 지 회견</li> <li>• 한국방송공사 창사 30주년 기념 리셉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민련 지도부 만찬</li> </ul>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기획예산처 업무보고</li> </ul>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한국방송공사 해외동포상 수상자 접견</li> <li>• 각계 원로 지도자 오찬</li> <li>• 통일·외교·안보장관 회의</li> </ul>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나라당 지도부 오찬</li> <li>• 진해 용동중학교 방문</li> <li>•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li> <li>• 해군함정 을지문덕호 순시</li> </ul>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교육부총리·노동부 장관·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관세청장·외교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li> <li>•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오찬</li> <li>• 참여정부 국정토론회(1박 2일)</li> </ul>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농림부 업무보고</li> <li>• 임시 국무회의</li> <li>• 대국민 담화 발표</li> </ul>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 국정토론회</li> <li>• 참석자 부부동반 만찬</li> </ul>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업무보고</li> </ul>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지검 평검사와의 대화</li> <li>• 민주당 지도부 만찬</li> </ul>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법무부 업무보고</li> <li>•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ul>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li> </ul>

2003년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li> <li>• 제30회 상공의 날 행사</li> <li>• 노동부 업무보고</li> <li>• 제주 컨벤션센터 개관식 영상 메시지 녹화</li> </ul>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국무총리 업무보고</li> <li>• 부패방지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li>• 산업자원부 업무보고</li> <li>• 민주당, 한나라당 원내총무 만찬</li> </ul>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만찬</li> <li>• 체니 미 부통령 전화통화</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과학기술부 업무보고</li> <li>• 과학기술부 출연 연구기관 오찬</li> <li>•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li> <li>• 담화 발표</li> <li>• 경찰대학 졸업식</li> </ul>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육군 3사 졸업식</li> </ul>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임시 국무회의</li> <li>• 외국인 투자기업 CEO 오찬 간담회</li> <li>• 정책실장, 비서관 접견</li> <li>• 경찰청장, 금융감독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li>• 레이니 前 주한 미 대사 접견</li> <li>• 이라크戰 관련 정치지도자 초청 간담회</li> </ul>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건설교통부 업무보고</li> <li>• 주한 미 대사 오찬</li> <li>•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li> <li>• 해군참모총장 신고</li> <li>• 경제정책 조정 회의</li> </ul>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행정자치부 업무보고</li> <li>• 경제보좌관 업무보고</li> <li>• 국세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임명장 수여식</li> <li>• 통일부 업무보고</li> <li>• 국가안보보좌관 업무보고</li> </ul>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정보통신부 업무보고</li> <li>• 팔고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접견</li> <li>• 감사원 업무보고</li> </ul>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서실 직원 워크숍 참석</li> </ul>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부패방지 대책 보고회</li> <li>•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 로드맵 발표</li> </ul>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해양수산부 업무보고</li> </ul>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정연설</li> <li>•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오찬</li> <li>• 환경부 업무보고</li> <li>• 군 인사 진급 및 보직 신고</li> </ul>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총장, 국립박물관장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민주당 지도부 접견</li> <li>• 안보 관계 장관 회의</li> <li>• 김운용 IOC 위원 접견</li> <li>•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 만찬</li> </ul>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구축함(문무대왕함) 진수식</li> </ul>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업무보고</li> <li>• 동티모르 사망 장병 유족 오찬</li> <li>• 여성부 업무보고</li> <li>• 주한 스리랑카, 룩셈부르크, 말리, 알라위, 카메룬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위원회 다과회</li> </ul>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8회 식목일 기념행사 및 기념 식수</li> </ul>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행사</li> </ul>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li> <li>•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li> <li>• 제47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li> </ul>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4대 국정과제 추진기획단 현판식</li> </ul>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문화관광부 업무보고</li> </ul>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케이 후쿠시마 국제 라이온스 회장 접견</li> <li>• 루치우스 빌트하머 유럽 인권소장 접견</li> <li>• 부시 前 미 대통령 만찬</li> </ul>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조찬기도회</li> <li>• 교육부 업무보고</li> </ul>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워크숍</li> <li>• 미 하원의원(4명) 접견</li> <li>• 한·일전 축구 관람</li> </ul>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li> <li>• 러시아 국방장관 접견</li> <li>•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li> <li>• 워싱턴 포스트 도널드 그래함 회장 회견</li> </ul>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정부혁신 국정과제회의</li> <li>• 미 상원의원(7명) 오찬</li> </ul>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남대 국민반환 행사</li> </ul>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 국립묘지 참배</li> <li>• 미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li> </ul>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과학의 날 기념식</li> <li>• 타임캡슐 매설 행사</li> <li>• 과학기술인(180명) 오찬</li> <li>• 인간유전체 기능연구 사업단 연구소 방문</li> </ul>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장 접견</li> <li>• 국무회의</li> <li>•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및</li> </ul>

2003년	4. 22	제품 시연회 • 재정집행점검단 다과회 • 녹지원 영상 메시지 촬영 •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 만찬	5. 3	• 차관급 공직자 워크숍 참석
	4. 23	• 안보관련 장관·보좌관 간담회 • 무역진흥 확대회의 • 세계 일류기업 대표 오찬 • 한·일 경제협회 일측 회장단 접견	5. 5	•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 어린이날 행사
	4. 24	• 수석·보좌관회의 • 국정과제회의 • 유럽의회 대표단 접견	5. 6	• 국무회의 •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 블라스 오픈레 필리핀 외교장관 접견
	4. 25	• 국가정보원장 임명장 수여식 • 청와대 이웃주민 초청 간담회	5. 7	• 수석·보좌관회의 • 미 불룸버그 통신 외신회견 • 미 공영방송 PBS 한국특집 방송 영상 메시지 촬영 •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4. 28	• 수석·보좌관회의 •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 이라크 파병장병 신고식 및 격려식	5. 8	• 민주당 지도부 접견 • 대통령 초·중·고 은사 초청 오찬
	4. 29	• 국무회의 • 시·도지사 협의회 및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오찬 간담회 • 제2건국위원회 중앙위원 전체회의 결과 보고회 • 한일 차세대 정치지도자포럼 일본의원 5명 접견	5. 9	• 수석·보좌관회의 • 국정과제회의 • 언론인 초청 오찬 • 워싱턴타임즈 외신회견 • 국회 통외통위 위원 만찬
	5. 1	• 수석·보좌관회의 • 정책기획위원장,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 • 텔레비전 방송 토론	5. 10	•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5. 2	• 국정과제회의	5. 11	• 입시 국무회의 • 미국 순방(5. 11 ~ 5. 17)
			5. 17	• 귀국 보고
			5. 18	• 제2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 5.18 국립묘지 순례 • 전남대 5.18 특별 강연
			5. 19	• 수석·보좌관회의 • 발명의 날 기념식 및 전시장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C위원 접견</li> </ul>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루마니아, 짐바브웨, 피지, 잠비아 대사 임명장 제정식</li> </ul>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5.18 행사 추진위원회 간부 접견</li> <li>• 카림 유네스 알제리 하원의장 접견</li> <li>•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기원 콘서트 영상 메시지 촬영</li> </ul>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정과제회의</li> <li>•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 회의</li> <li>• 경호실 무도 시범 참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기원 콘서트 영상 메시지 촬영</li> <li>• 여야 정당대표 만찬</li> </ul>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의 날 기념식</li> <li>• 인천항만 방문</li> <li>•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li> <li>• 제일 민단 고국방문단 접견</li> <li>• 부산 국제청소년 국가대표 축구대회,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li> <li>• 전남방송 개국 개막식 영상 메시지 촬영</li> </ul>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정과제회의</li> <li>• 깔 미레 스위스 외교장관 접견</li> <li>• 제너럴 일렉트론닉스 회장단 접견</li> <li>• 재외공관장 부부 동반 만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li> <li>• 제일 민단 고국방문단 접견</li> <li>• 부산 국제청소년 국가대표 축구대회,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li> <li>• 전남방송 개국 개막식 영상 메시지 촬영</li> </ul>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 (IACC) 개최 리셉션 연설</li> </ul>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GF) 전체회의 기조연설</li> <li>• 에반스 미 상무장관 오찬</li> </ul>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li> <li>• 해리티지 재단 이사장 일행 접견</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계 인사 28명 오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한겨레신문 인터뷰</li> <li>• 국정홍보처 업무보고</li> <li>• 민주당의원 내외 만찬</li> </ul>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하원의원 6명 조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월포워즈 미 국방부장관 등 6명 접견</li> <li>• 참여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및 춘추관 시찰</li> <li>• 요미우리 신문 회견</li> <li>• 일본 국민방문 연설문 관련 회의</li> </ul>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한겨레신문 인터뷰</li> <li>• 국정홍보처 업무보고</li> <li>• 민주당의원 내외 만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국정과제회의</li> <li>• 노사협력 유공자 오찬</li> </ul>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국정과제회의</li> <li>• 노사협력 유공자 오찬</li> </ul>		

2003년

- 6. 3
  -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
  - 한·필리핀 정상회담
  - 노사협력 모범업체 유한양행 방문
  - 필리핀 대통령 내외 만찬
- 6. 4
  - 국무회의
  - 일본 언론 16개사 서울 상주 특파원 합동간담회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사편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 6. 5
  - 수석·보좌관회의
  - 국정과제회의
  -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특강 및 오찬 간담회
  - 보훈병원 방문
- 6. 6
  - 제48회 현충일 추념식
  - 일본 순방(6. 6 ~ 6. 9)
- 6. 9
  - 일본 순방 귀국행사
- 6. 10
  - 수석·보좌관회의
  - 6.10민주항쟁 인사 오찬
- 6. 11
  - 3급 이상 공무원 인터넷 조회(朝會)
  - 국무회의
  - 국민경제 자문회의
- 6. 12
  - 대구 테크노파크 전시물 관람
  - 국정과제회의
  - 대구지역 인사 오찬 간담회
- 6. 13
  - 전국 세무서장 특강 및 오찬
  -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 6. 16
  - 아멕社 메손 회장 접견
  - 수석·보좌관회의
  - 전국경찰지휘관 특강 및 오찬
  - 유엔난민 고등판무관(5명) 접견
- 6. 17
  - 사회관계 장관회의 및 조찬
  - 국무회의
- 6. 18
  - 시중 지방은행장 오찬
  - 한국 해외봉사단원 초청 다과회
- 6. 19
  - 수석·보좌관회의
  -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및 오찬
  - 재향군인회 회장단 오찬
- 6. 20
  -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 오찬 간담회
  -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직자와의 대화
- 6. 21
  - 특검, 특검보, 법무부장·차관 조찬
  - 계룡대 군 지휘부와의 대화 및 오찬 간담회
- 6. 23
  - 수석·보좌관회의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 전국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및 오찬 간담회
- 6. 24
  - WHO 이종욱 사무총장 접견
  - 국무회의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자 격려 오찬
  - 산학협력 및 청년실업 해소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들과의 오찬 및 간담회
6. 25	• 보훈처 업무보고		• 중국 인민일보 왕천 사장 기자회견
	•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 6.25 참전용사 위로연 참석	7. 4	• 수석·보좌관회의
6. 26	• 수석·보좌관회의		• 서울 상주 중국 언론 합동 기자회견
	• 국정과제회의		• 여성주간 기념식 참석
	• 전국 검찰간부와의 대화 및 오찬		•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
	•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	7. 7	• 중국 순방(7. 7 ~ 7. 10)
6. 27	• 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회장단 접견	7. 10	• 중국 순방 귀국 환영행사
	• 포브스 지 스티브 포브스 회장 접견	7. 11	• 수석·보좌관회의
	• 경인방송 라디오방송국 개국 축하 영상 메시지 녹화	7. 14	• 종교계 7개 종단 대표 오찬
	• 관리직 여성공무원과의 대화 및 오찬	7. 15	• 수석·보좌관회의
	•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문	7. 15	• 경제·민생 점검회의 및 오찬
6. 30	• 참여정부 경제 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기조연설	7. 16	• 국무회의
	• 수석·보좌관회의	7. 17	• 문화방송 ‘느낌표(!)’ 특집 프로그램 녹화 촬영
	• 참여정부 경제 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자 만찬	7. 18	• 전문경영인 초청간담회 및 오찬
7. 1	• 국무회의	7. 18	• 국정과제회의
	• 의문사위원회 등 민주화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 접견	7. 17	• 프로야구 올스타전 시구 및 관람
7. 2	• 비서실 직원 조희	7. 18	• 한·호주 정상회담 및 호주 총리 내외 오찬
7. 3	• 신행정수도 관련 국정과제회의	7. 20	• 한·영국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
	• 대전지역 외청 근무 공무원	7. 21	• 영국 총리 내외 만찬
			• 수석·보좌관회의
			• 기자회견
			• 기능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2003년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대국민보고회 및 오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업무보고</li> </ul>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오찬</li> <li>•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친수 및 다과회</li> </ul>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제도개선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및 오찬</li> <li>• 국민경제 산업·통상 분야 자문회의</li> </ul>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사스(SARS) 방역 평가보고회</li> </ul>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기조연설</li> <li>• 통일고문회의 고문단 오찬 간담회</li> <li>• 국정과제회의</li> </ul>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li> <li>• 기획수석조정관, 사회수석 조정관 임명장 수여식</li> <li>• 지방분권특별법안 등 주요과제 토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li> </ul>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 장·차관급 토론회</li> </ul>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뉴질랜드 정상회담 및 오찬</li> <li>• 민주평통 11기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li> <li>•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참석 해외석학 만찬</li> </ul>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차관급 워크숍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 11기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li> </ul>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계휴가 시작(8. 4 ~ 8. 9)</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li> <li>• 전쟁기념관 6.25 전쟁 조형물 제막식</li> </ul>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 공무원과의 대화</li> <li>• 국무회의</li> <li>• 농어촌 특별대책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기념관 6.25 전쟁 조형물 제막식</li> </ul>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홍보관과의 간담회</li> <li>• 국제적십자연맹 총재 접견</li> </ul>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신저 前 미 국무장관, 허 바드 주한대사, 리온 라포트 연합사령관과의 조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대우 일렉트로닉스 방문 및 오찬</li> </ul>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li> <li>• 경북도민 오찬 간담회</li> <li>• 포스코 방문 및 간담회</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정과제회의</li> <li>• 독일, 헝가리, 보츠와나,</li> </ul>

	아르메니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8. 15	•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접견	8. 26		• 경제 관련 언론지 합동 회견	
8. 18	•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			• 태국 총리 공식만찬 및 공연	
8. 19	• 을지 국무회의 및 정례 국무회의			• 금융감독위원장 조찬	
	• 수석·보좌관회의	8. 27		• 국무회의	
	• 대구·경북 언론인과의 만남 및 오찬			•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8. 20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표단 오찬	8. 28		• 홍보수석 임명장 수여식	
	• 해외한인지도자 대표단 접견 다과회			• 국정과제회의	
8. 2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8. 29		•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 방문	
	• 수석·보좌관회의			• 수석·보좌관회의	
	• 한일포럼 운영위원장단 접견	8. 29		• 김 리치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접견	
	•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 참석	9. 1		• 자크로게 IOC 위원장 접견	
8. 22	•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 보고 대회			• 기초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	
	•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 종합 상황 보고회	9. 2		• 크레이그 베틀 인텔 사장 접견	
	•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 준비모임 만찬	9. 3		• 수석·보좌관회의	
8. 23	• 가와구치 일본 외상 접견			• 이천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8. 24	• 제36차 태평양경제협의회 (PBEC) 서울총회 개막식	9. 4		• 경기도민과의 대화 및 오찬	
8. 25	•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			• 국무회의	
	• 태국 국민방문 공식 환영식	9. 5		•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 만찬	
	• 한·태국 정상회담 및 조약 서명식	9. 8		• 서민주거안정 관련 현장 방문	
				• 태평양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 참석자 접견 다과회	
				• 수석·보좌관회의	
				• 노사정위원회 국정과제회의	
				• 6자회담 보고회 만찬	
				• 8개국 공관 대사·총영사 신임장 수여식	
				• 전국 시·도지사 회의	

2003년	9. 8	• 부산 신항만 방문	9. 24	•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언론 합동회견
	9. 9	• 국무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기 전체회의
	9. 10	• 중추절 관련 행사		• 허브코리아 행사 관련 다국적기업 CEO 다과회
		• 서울경찰청 방문		
	9. 15	• 수석 · 보좌관회의	9. 25	• 기자회견
		• 퇴임대법관 서훈 친수 및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 국정과제회의
	9. 16	• 국무회의		•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위원 다과회
		•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 접견	9. 26	• 무역진흥확대회의
		• 베트남 총리 오찬	9. 29	• 수석 · 보좌관회의
	9. 17	• 광주 · 전남지역 언론사 합동 기자회견		• 해양수산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회견		• 아시아 · 유럽 기자포럼 참석자 접견 다과
	9. 18	• 수석 · 보좌관회의		• ASEAN+3 회의 준비
		• 중소 벤처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만찬
	9. 19	• 사형 폐지 관련 종교계 오찬 간담회	9. 30	• 국무회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식		• 주한 브라질 · 말레이시아 · 네덜란드 · 필리핀 대사 신임장 제정식
	9. 20	• 태풍 피해지역 현장 시찰		• 주한외교단 리셉션
	9. 22	• 수석 · 보좌관회의	10. 1	•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 경제민생 점검회의		• 영상 메시지 촬영
		• 학술원상 및 예술원상 수상자 접견 다과회		• 국군의 날 경축연
		• 이노우에 히로시 일본 TBS 사장 접견	10. 2	• 임시 국무회의
9. 23	• 국무회의		• 노인의 날 기념행사	
	• 마가렛 워트만 eBay 사장 접견		• 국정과제회의	
	• 해외 민주인사 다과회		• 노인대표 만찬	

10. 6	• ASEAN+3 회의(10. 6 ~ 10. 9)	10. 17	•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10. 9	• 서울 도착		• 다니엘 필립 헤이즈 캐나다 상원의장 접견
	• 수석·보좌관회의		• 대한민국 기술대전 개막식
10. 10	•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		• 재향군인회 임원 등 오찬
	•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 간담회
	•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 접견		• 로이더 통신 회견
	• 국무총리 등 오찬		• 한·미 정상회담 대책보고
	• 존 라슨 세계 구세군 대장 접견		• APEC 참석 싱가포르 방문행사 2차 보고
	• 재일동포 상공인 고국 방문 및 연수회 참가자 접견 다과회	10. 18	• 국가안전보장회의
	• 전국체전 참가	10. 19	• 태국 싱가포르 순방(10. 19~24)
	• 국정연설 준비	10. 24	• 서울 도착
10. 11	• 이태섭 국제라이온스협회장 등 접견		• 국무총리, 비서실장 비공개 만찬
	• 국무총리 보고	10. 25	• 자민련 총재 접견
	• 스티븐 코비 등 접견		• 열린우리당 대표 접견
	• 기자회견	10. 26	• 민주당 대표 접견
10. 13	•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연설		• 한나라당 대표 접견
	• 비서실장 등 오찬	10. 27	• 수석·보좌관회의
	• 아시아재단 회장단 접견 다과회		• 오송단지 기공식 및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충북 지역 인사 오찬 간담회
10. 14	• 수석·보좌관회의	10. 28	• 국무회의
	•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 오찬
10. 15	• 국정과제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무회의		• 서울 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
10. 16	• 세계지식포럼 참석자 접견 및 특별강연	10. 29	• 부동산 관련 경제민생 점검회의
	• 선거부정방지대책 관련 회의		

2003년	10. 29	• 서희 제마부대 해외 파병장병 격려 다과회			• 민생치안을 위한 강력부 검사 오찬
	10. 30	•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 원내총무·원내대표단 접견 다과회
		• 문화예술계 인사 오찬	11. 11		•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
		• 문화산업현장 방문			• 농업인의 날 기념식
		• 송도신도시 투자유치 관련 CEO 접견 다과회	11. 12		• 국무회의
	10. 31	• 제2회 제주평화포럼 기조연설	11. 13		• 대전·충남지역 언론 합동회견
		• 제주도민 오찬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11. 3	• 수석·보좌관회의			• 어린이 안전지역 현장 방문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 국정과제회의
		• 노동계 전문가그룹 오찬			• 카자흐스탄 대통령 공식만찬
		• 주한 불가리아, 레바논, 이 디오피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11. 14		•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오찬
		• 김대중도서관 개관식	11. 17		• 수석·보좌관회의
	11. 4	• 국무회의			•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 접견
		• 요네쿠라 료코 한국 문화관광 친선대사 접견	11. 18		•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접견
	11. 5	•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			• 국무회의
		• 원로지식인 등 오찬			• 감사원 사무총장 등 임명장 수여식
	11. 6	• 국회 통외통위 위원 조찬			•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임원진 접견
		• 아시아 신문업계 대표단 접견 다과회	11. 19		• 노동 관련 인사 오찬
		•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과 정상회담 및 조약 서명식			• 한국 청년회의소 임원 등 다과회
		• 국정과제회의	11. 20		• 여성단체장 오찬
		• 국민 만찬 및 공연	11. 21		• 국회 산자위 위원 등 조찬
	11. 7	• 광주 전남 방문			• 2만 달러 시대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경쟁력 방안 보고대회
	11. 10	• 수석·보좌관회의			
		•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			

	• 노벨과학상 수상자 등 접견 다과회	12. 6	• 임시 국무회의
	• 영자신문 · 종교방송 · 인터 넷언론 편집국장 등 만찬	12. 7	• 뮤지컬 관람
11. 24	• 수석 · 보좌관회의	12. 8	• 수석 · 보좌관회의
11. 25	• 국무회의		• 전군 주요지휘관 만찬
	• 몽골 총리 접견	12. 9	•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조약 서명식
11. 26	• 전북지역 언론 합동회견		• 국무회의
11. 27	• 경남지역 방문		• 국민 만찬
11. 28	• 제40회 무역의 날 기념식	12. 10	• 생명공학 현장 방문
	•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 접견 다과회	12. 11	•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12. 1	• 수석 · 보좌관회의		• 국정과제회의
	• 사랑의 열매 전달식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등 오찬
	• 국무총리 등 오찬	12. 12	• 농촌사랑 공동 선포식
12. 2	• 국무회의	12. 12	• 연말 국군장병 위문 방문
	• 주한 영국, 스웨덴, 에리트 리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12. 14	• 4당대표 초청 접견 다과회
12. 3	• 국회 이라크 조사단 조찬	12. 15	• 동아시아포럼(EAF) 창립총회
	•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		• 수석 · 보좌관회의
	• 이북5도민 회장단 오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등 접견 다과
12. 4	• 소프트 엑스포 및 디지털 콘텐츠 페어 2003 개막 행사	12. 16	• 국무회의
	• 국민일보 인터뷰		•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
	• 한 · 일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다과회	12. 17	• 통일외교안보 관련 장관회의
12. 5	• 2003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 대전 · 충남지역 인사 오찬		•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	12. 18	• 부처 업무개선 담당자 오찬
			• 문화산업전문가 비전 보고회
			•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
			• 충북지역 언론 합동회견

2003년	12. 1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12. 29	• 수석·보좌관회의
	12. 19	• 관광진흥대책 보고회 • 문화산업단지 방문		•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12. 22	• 해인사 방문 • 민생 하위직 일선 공무원 만찬		• 필립 쿠릴스키 파스티르 소장 등 접견
	12. 23	• 해양경찰청 창설 50주년 기념식 • 경찰병원 방문 • 국무회의	12. 30	• 제11차 경제민생 점검회의 및 1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 조달청장 임명장 수여식 • 국무회의
	12. 24	• 교육부총리 임명장 수여식 • 서민생활 현장 방문		•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부부동반 송년 만찬
	12. 25	• 개신교 천주교 연합 성탄음악회	12. 31	•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방문

## 2004년

2004년	1. 2	• 기획예산처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 수석·보좌관회의 • 임시 국무회의 • 장·차관급 신년인사회	1. 9	• 식품의약품안전청 방문
	1. 3	• 장·차관 워크숍	1. 10	• 비서실 직원 연수
	1. 5	• 수석·보좌관회의	1. 12	• 수석·보좌관회의 • 대한노인회 회장단 오찬 • 2004 아테네올림픽 국가대표선수 격려
	1. 6	• 국무회의 • 농민단체장 오찬 • 경제계 신년하례식	1. 13	• 국무회의 •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서명식 • 경제특보 임명장 수여식
	1. 7	• 농민단체장 오찬 •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 전직 대통령 부부동반 만찬
	1. 8	• 국회의장실 방문 •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1. 14	•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1. 15	•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 • 주한 카자흐스탄, 콩고,

	미얀마, 슬로바키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1. 16	• 부산민항공사 창립행사	2. 6	• 사회형평 인재등용방안 국정과제회의
1. 17	•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2. 9	• 구미지역 방문 •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 • 독일 테센그룹 회장단 접견
1. 19	•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 수석·보좌관회의		• 수석·보좌관회의
	• 전경련회장단 오찬	2. 10	• 공식 만찬 • 국무회의
	• 주제네바, 주태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		•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 노사정위원회 격려 오찬
1. 20	• 국무회의		• 한국과학상 및 젊은과학상 시상 및 수상자 격려 다과회
	• 근로자 현장 방문 및 오찬		
1. 26	• 적십자회비 전달 및 접견 • 중앙부처 실국장과의 대화	2. 11	• 중동권 언론 회견 • 경제부총리 등 임명장 수여식
	• 부처인사 교류대상 국장단 만찬	2. 12	•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 자유총연맹 오찬
1. 27	• 국무회의		• 국정과제회의
	• 안보 관련 장관회의		• 재외공관장 부부동반 만찬
1. 28	•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2. 13	•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1. 29	• 지방의회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2. 14	• 모리 일본 전 총리 등 접견 • 비서실장 등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 5개 부처 차관 임명장 수여식		• 중앙일보 회견
1. 30	•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2. 16	• 수석·보좌관회의 • 통합방위 보고회의
	• 보좌관 임명장 수여식		•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만찬
2. 2	• 나라사랑 원로모임 만찬	2. 17	• 국무회의 • 이공계 출신 CEO 오찬
	• 수석·보좌관회의		• 중동권 13개국 공관장 접견 다과회
2. 3	•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2. 4	• 국무회의	2. 18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2. 4	•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 2004년 전경련新春포럼		
2. 5	• 강원지역언론 합동회견		

2004년	2. 18	수여 • 경기 인천지역 언론 합동회견 • 반부패 기관 협의회 • 환경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2. 27	• 참여정부 경제사회비전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및 토론 • 한·일 협력위원회 합동총 회 참석자 접견 다과회 • 환경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
	2. 19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 도자회의 • 방송회견 녹화	2. 28	• 국제세미나 참석자 만찬 • 한겨레21 회견 • 방송통신대 졸업식
	2. 20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 • 전북 익산(주)하림 현장 방문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3. 1	• 제85주년 3.1절 기념식
	2. 22	• 매일경제 언론회견	3. 2	• 국무회의 • 교육부 업무보고
	2. 23	• 수석·보좌관회의 •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유공자 격려 오찬 •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	3. 3	• 제주지역 언론 합동회견 • 재외문화원장 등 접견 다과회 • 모범·성실납세자 접견 다과회
	2. 24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특별회견 • 국무회의	3. 4	• 노동부 업무보고 • 민주노총 지도부 오찬 • 한국방송공사 해외동포상 수상자 접견 다과회
	2. 25	•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 영상 메시지 촬영	3. 5	•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경단련 회장 등 일본대표단 접견 다과회 •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혁신 사례 보고대회 및 오찬
	2. 26	• 이라크 키루쿠크 주지사 일행 접견 다과회 • 펠러 IMF 총재 접견 • 호크 前 호주 총리 접견 •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 대통령상 수상자 오찬 • 2004년도 학군장교 임관식	3. 8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 혁신·성공 재래시장 방문 • 수석·보좌관회의 • 농림부 업무보고
			3. 9	• 국무회의 •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인력 채용박람회</li> <li>• 성우회 회장단 등 만찬</li> <li>•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 정상회담</li> <li>• 정치특보 위촉장 수여식</li> <li>• 국정과제회의</li> </ul>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글레시아스 중남미 개발 은행 총재 접견</li> <li>• 국무회의</li> </ul>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 국무회의</li> <li>• 기자회견</li> <li>• 신입 공관장 23명 신임장 수여식</li> <li>• 국책연구기관 워크숍 결과발표 청취 및 연설</li> </ul>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셴룽 싱가포르 부총리 접견</li> <li>• 국정과제회의</li> <li>•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 만찬</li> </ul>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지역혁신협의회 보고회</li> <li>• (주)로템 현장 방문 및 오찬간담회</li> <li>•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li> <li>• 임시 국무회의</li> <li>• 탄핵 기간(3. 12~5. 14)</li> </ul>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행정수도 추진위원 17명 위촉장 수여식</li> <li>•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li> </ul>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 오찬</li> <li>• 교육혁신·인적자원 양성 관련 비공개 회의</li> <li>• 국무총리 등 비공개 만찬</li> <li>• 고이즈미 일본 총리 전화통화</li> </ul>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li> </ul>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담화 발표</li> </ul>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li> </ul>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시민사회·사회정책·정책 기획수석 임명장 수여식</li> <li>• 경제상황 점검회의</li> </ul>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 특별강연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li> <li>•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li> </ul>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li> </ul>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li> </ul>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와구찌 일본 외무대신 접견</li> <li>• 열린우리당 당선자 및 중앙위원 등 만찬</li> </ul>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노사대표 간담회</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하라지 이란 외교부 장관 접견</li> </ul>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한인회장단 다과회</li> <li>• 소방방재청장·법무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li> <li>• 주한 콜롬비아·핀란드 대사 등 4개국 신임장 제정식</li> </ul>

2004년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장 수여식</li> <li>•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서울총회 참가자 만찬</li> </ul>	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ul>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우석 연구팀 포상 수여 및 오찬</li> <li>•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li> </ul>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린우리당 지도부 접견</li> <li>•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li> </ul>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위원 토론회</li> </ul>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국가유공자 오찬</li> </ul>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제3기 지방이양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li> </ul>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9회 현충일 추념식</li> </ul>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동북아시아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ul>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대 국회개원 축하연설</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담화 발표</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그리셴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접견</li> </ul>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처드 웨저너 미국 GM 회장 접견</li> </ul>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li> <li>• 6월민주항쟁 관련 인사 오찬</li> <li>•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의원 만찬</li> </ul>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난관리 발전과제 보고회</li> <li>• 재난종합상황실 방문</li> <li>• 6.25 참전용사 위로연</li> </ul>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언론사 경제부장단 만찬</li> </ul>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한·일 양국 친선협회 대표단 오찬</li> <li>• 미 PBS 방송회견</li> </ul>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찬 총리지명자 등 만찬</li> </ul>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제2차 반부패기관협의회 보고</li> </ul>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실장, 정부혁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세계경제포럼 참석자 오찬</li> </ul>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li> <li>•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li> </ul>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li> <li>• 국무회의</li> </ul>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li> <li>• 국정과제회의</li> </ul>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간담회</li> <li>• 열린우리당 지도부, 국민통합실천위원회 등 만찬</li> </ul>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 국무회의</li> <li>• 한·미 재계회의 초청 오찬</li> <li>• 인적자원개발 관계장관회의</li> </ul>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사바 쿠웨이트 총리 접견</li> <li>• 제35회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개회식</li> </ul>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혁신추진토론회</li> <li>•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li> <li>• 포항 가속기연구소 현장 방문</li> </ul>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민생점검회의</li> <li>• 문화관광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li> </ul>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차관급 6명 임명장 수여식</li> </ul>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크노파크 벤처빌딩 준공식</li> <li>•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li> </ul>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정상회담</li> <li>•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li> <li>• 정상회담 참석자 만찬</li> </ul>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li> <li>•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접견</li> </ul>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정상 산책</li> </ul>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디지털 TV 방송 관계자 오찬</li> </ul>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요르단 정상회담 및 만찬</li> </ul>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1차 회의</li> <li>• 국민경제 민간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li> <li>• 정부혁신박람회</li> <li>• 국제행정학회 세계 총회 개막식 및 개막연설</li> </ul>	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무회의</li> </ul>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러플린 카이스트 신입총장 접견</li> </ul>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츠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li> <li>• 갈등관리 워크숍</li> </ul>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li> <li>• 광주·전남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li> <li>• 신영중공업 현장 방문</li> <li>• 국방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2004년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문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li> <li>• 아테네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방문 및 오찬</li> <li>• 국정과제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토론회</li> <li>• 원주의료기기 산업단지 현장 방문</li> <li>• 공군 제8전투비행단 방문</li> </ul>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보건복지특보 등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li> </ul>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례 토론회</li> </ul>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국무회의 및 정례 국무회의</li> <li>•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및 만찬</li> </ul>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주요지휘관 오찬</li> </ul>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치모세비치 폴란드 외무장관 접견</li> <li>• 세계기독교협의회 위원 접견 다과회</li> </ul>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li> <li>• 현대자동차 현장 방문</li> </ul>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식</li> <li>• 국정과제조정회의 전체회의</li> <li>• 조무제 퇴임 대법관 서훈 수여식</li> </ul>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li> <li>• 경제민생 점검회의</li> </ul>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li> <li>• 독립유공자 유가족 오찬</li> <li>• 제주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li> <li>• 서귀포 감귤농장 방문</li> </ul>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식</li> </ul>	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지능화연구소 방문</li> <li>• 자칭린 중국 정협 주석 접견</li> <li>• 제1차 규제개혁 추진위원회</li> </ul>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열린우리당 의장 오찬</li> </ul>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주OECD 대사 임명장 수여식</li> <li>• 한국기자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리셉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li> </ul>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혁신 워크숍</li> <li>•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오찬</li> </ul>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li> </ul>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경제정책회의</li> <li>국무회의</li> <li>아테네올림픽 선수단 및 임원 초청 다과회</li> </ul>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막식 축하</li> </ul>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과제조정회의</li> <li>일본 연립여당 간사장 접견</li> <li>주한 미국대사 등 5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과제 조정회의</li> <li>합참의장 보고</li> <li>국정과제회의</li> <li>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li> </ul>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부패기관협의회</li> <li>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li> </ul>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혁신특별보좌관 위촉장 수여식</li> </ul>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부 차관 등 차관급 6명 임명장 수여식</li> <li>러시아 방송·통신사 회견</li> <li>디지털 ON-AIR 선포식</li> </ul>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자흐스탄·러시아 방문 출국</li> </ul>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사례 학습토론회 및 특강</li> </ul>	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도착</li> </ul>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지역 혁신발전 토론회</li> <li>ITU 텔레콤 아시아 2004 개막식</li> </ul>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보좌관회의</li> </ul>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제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li> <li>러시아 교통장관 접견</li> </ul>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li> </ul>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대사 9명 신임장 수여식</li> <li>수단 외교장관 접견</li> </ul>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국민방문 및 ASEM 정상회의(10. 4~10. 12)</li> </ul>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및 선포식</li> </ul>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보좌관회의</li> </ul>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보좌관회의</li> </ul>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민주인사 접견 다과회</li> </ul>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신행정수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li> </ul>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전 참전 국제향군연맹 제7차 총회 참석자 접견 다과회</li> </ul>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li> <li>수석·보좌관회의</li> <li>과학기술부총리, 농림부·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li> </ul>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매입 임대주택 입주현장 방문</li> </ul>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li> <li>세명대 한의학 연구소 현장 방문</li> </ul>

2004년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li> <li>•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회장단 접견 다과회</li> </ul>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오찬</li> <li>• 정책기획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제49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및 예술원상 수상자 오찬</li> </ul>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마찌무라 일본 외상 접견</li> </ul>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li> </ul>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 접견</li> <li>• 철도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장 수여식</li> <li>• 국무회의</li> </ul>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li> </ul>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접견</li> <li>•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초청 격려</li> </ul>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오찬</li> </ul>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백신연구소 건물 제공식</li> <li>•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li> </ul>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li> </ul>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li> <li>• 광양항 2단계 2차 컨테이너 부두 준공식</li> </ul>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브라질 공식 방문 APEC 정상회의 (11. 12~11. 23)</li> </ul>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혁신 장·차관 워크숍</li> </ul>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열매 전달식</li> <li>• 장 뽕 유엔총회 의장 접견</li> <li>• 쿠지악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 접견</li> </ul>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부요인 및 정당대표 초청 만찬</li> </ul>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너지자문회의</li> <li>• 외국인 투자기업 CEO 만찬</li> </ul>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회 무역의 날 기념식</li> <li>• 무역아카데미 방문</li> </ul>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방송 여성시대 방송 30년 기획특집 녹화</li> <li>• 열린우리당 의원 등 만찬</li> </ul>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3 정상회의 및 유럽 순방(11. 28~12. 9)</li> <li>• 주러시아·이라크 대사</li> </ul>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장 수여식</li> <li>수석·보좌관회의</li> <li>민주평통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합동회의</li> <li>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 접견</li> </ul>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향신문 회견</li> <li>KBS '사랑의 리퀘스트' 녹화 촬영</li> </ul>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균형인사 실천 보고회</li> <li>CBS 방송 50주년 기념 리셉션</li> </ul>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 정부업무 평가 보고회</li> </ul>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북부지역 방문 및 중부 내륙고속도로 개통식</li> </ul>	1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BS '사랑의 리퀘스트' 생방송 출연</li> </ul>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외무장관 접견</li> <li>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li> </ul>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한 세르비아·캄보디아·스위스·도미니카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li>신임 적십자사 총재 접견</li> <li>청소년특별회의 초청 만찬</li> </ul>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방문(12. 17~12. 18)</li> </ul>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와대 출입기자단 만찬</li> </ul>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보좌관회의</li> <li>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li> <li>사랑의 열매 음악회</li> </ul>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차 경제민생점검회의 및 제15차 국민경제자문회의</li> </ul>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li> </ul>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정보원 차장 임명장 수여식</li> <li>국정과제조정회의</li> <li>5부 요인 부부동반 오찬</li> </ul>

## 2005년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보좌관회의</li> </ul>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법개혁위원회 관계자 오찬</li> </ul>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3부 요인 신년인사회</li> </ul>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년 내·외신 기자회견</li> <li>여성계 신년인사회</li> </ul>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li> <li>경제계 신년인사회</li> </ul>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보좌관회의</li> <li>중소기업특별위원회</li> </ul>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li> </ul>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상헌 국제형사재판관 접견</li> </ul>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li> <li>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보고회</li> </ul>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보좌관회의</li> </ul>		

2005년	1. 20	• 국정원 업무보고	2. 18	• 주미대사·주영대사 신임장 수여식
	1. 21	• 민정수석·인사수석 임명장 수여식		• 홍보문화특보 등 임명장 수여식
		• 국정과제회의	2. 19	•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 소장 부부 접견
		• 대한적십자사 회비 전달식 및 오찬	2. 21	• 수석·보좌관회의
	1. 24	• 수석·보좌관회의	2. 22	• 국무회의
	1. 25	• 정통부 차관 등 임명장 수여식		• 국정과제회의
		• 경제정책협의회	2. 25	• 국회의장, 정당대표 등 간담회
		• 시민사회수석 등 임명장 수여식		• 취임 2주년 국회 본회의 대통령 국정연설
	1. 26	• 노인 대표 초청 오찬		• 감사원 감사위원 등 임명장 수여식
		• 열린우리당 집행부 만찬		•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접견
	1. 27	• 제주 세계평화의섬 지정 서명식 및 다과회	2. 28	• 수석·보좌관회의
		• 한·일 우정의 해 2005 개회식		•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1. 28	• 교육부총리 등 임명장 수여식	3. 1	• 제86주년 3.1절 기념식
	1. 29	• 정부혁신추진토론회	3. 2	• 국가조찬기도회
	1. 31	• 수석·보좌관회의		• 남극 세종기지 월동연구대원 초청 오찬
	2. 2	• 마포 자활 후견기관 방문	3. 3	•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다과회		•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2. 3	• 부패방지평가 보고회	3. 4	•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 제4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시상 및 오찬	3. 5	•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2. 14	• 수석·보좌관회의	3. 7	•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
	2. 17	• 재외공관장 만찬		• 수석·보좌관회의
				•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쿠웨이트 대사 등 12명 신임장 수여식</li> <li>•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li> </ul>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li> </ul>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사회협약 체결식</li> <li>• 해양수산부 업무보고</li> </ul>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일랜드 정상회담</li> <li>• 국무조정실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신용불량자 대책회의</li> </ul>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헝가리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및 공식 만찬</li> </ul>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li> <li>• 노동부 업무보고</li> <li>• 문화관광부 업무보고</li> <li>• 국회·여야정당 지도부 초청 만찬</li> </ul>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li> <li>• 연료전지 자동차 시승식</li> <li>• 국가에너지자문회의</li> </ul>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라이터 아시아재단 회장 접견</li> <li>• 교육부 업무보고</li> <li>•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li> <li>• 김학수 유엔 아·태 경제사 회위원회 사무총장 접견</li> </ul>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주한 칠레 대사 등 4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li>• 퇴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훈 및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li> </ul>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최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가보훈처 업무보고</li> </ul>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li> <li>• 농림부 업무보고</li> </ul>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li> </ul>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li> <li>• 경찰대학교 졸업 및 임용식</li> </ul>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부 업무보고</li> </ul>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콩고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및 국빈 만찬</li> </ul>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li> <li>• 전자통신연구원 방문</li> <li>• 정보통신대학교 방문</li> </ul>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업무보고</li> <li>• 여성부 업무보고</li> </ul>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인 오찬 간담회</li> <li>• 행정자치부 업무보고</li> </ul>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접견</li> <li>• 아테나지 나이지리아 외교장관 접견</li> </ul>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환경부 업무보고</li> </ul>		

2005년	4. 1	• 영화 <말아톤>의 실제 인물 배형진 군 초청 오찬		위촉장 수여식
	4. 2	• 정부혁신추진 토론회		•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4. 4	• 국가인권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	4. 25	• 재외한민족센터 인사 접견
		• 수석·보좌관회의		• 수석·보좌관회의
	4. 5	• 제60회 식목일 기념 행사	4. 26	•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4. 6	• 건설교통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4. 27	• 한·예멘 정상회담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 국민 만찬
		•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간담회	4. 28	• 청소년위원장 등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
		• 대외경제위원회		• 국정과제회의
		•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	4. 29	• 한일수교 문서공개 대책 민관공동위원회 오찬
	4. 7	• 주한 베트남·예멘 대사 신임장 제정식	4. 30	• 국방부 업무보고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5. 2	• 통일부 업무보고
	4. 8	• 페리 前 미국 대북정책조정 관 등 접견	4. 29	• 한국 국제전시장(KINTEX) 개장식
	4. 10	• 독일, 터키 국빈 방문(4. 10~4. 18)	4. 30	• 법제처 업무보고
	4. 19	• 국립 4. 19 묘지 참배	5. 2	• 국가재원배분회의
	4. 20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5. 3	•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4. 21	• 법무부 업무보고	5. 3	• 수석·보좌관회의
		• 국민고충처리위원장	5. 4	• 국무회의
			5. 4	•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5. 5	• 국정과제회의
			5. 6	• 세계대학 총장 포럼
			5. 8	• 어린이날 특집 생방송 출연
			5. 16	• 일본 연립여당 간사장단 접견
				• 러시아 실무 방문,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5. 8~5. 12)
				• 수석·보좌관회의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li> <li>• 전국중소기업인대회</li> <li>• 주한 파키스탄·멕시코·파나마·부탄·오리타니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 대통령 국민만찬</li> <li>• 국가소송업무 지원체제 개선 토론회</li> </ul>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 기념식</li> <li>• 한국광기술원 방문</li> </ul>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차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및 공식 만찬</li> </ul>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디지털포럼 2005 개막식</li> </ul>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 개최식</li> </ul>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개발회의</li> <li>• 주한 외교단 리셉션</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보고회의</li> <li>•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오찬 간담회</li> <li>• 주유엔대사 등 6명 신임장 수여식</li> </ul>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li> </ul>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촌관광마을 체험</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접견</li> </ul>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인사위원장 등 임명장·위촉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경제부 차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지키스탄 대통령 접견</li> <li>• 정부혁신세계포럼 개최식</li> <li>• 국제혁신박람회 참관</li> <li>• 태국 총리 접견</li> <li>• 정부혁신세계포럼 환영 만찬</li> </ul>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제자문회의</li> </ul>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브라질 정상회담</li> <li>• 스리랑카 총리 접견</li> </ul>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li> </ul>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0회 현충일 추념식</li> </ul>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고위장성 초청 오찬</li> </ul>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방문(6. 9~6. 11)</li> </ul>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환담</li> <li>•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li> </ul>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2005년	6. 14	• 3부 요인 · 정당대표 초청 오찬			• 주한 러시아 · 자메이카 · 네팔 · 아제르바이잔 대사 신임장 제정식
	6. 16	• 인천대교 기공식			• 수석 · 보좌관회의
	6. 18	• 물류 · 경제자유구역회의	7. 4		• 국무회의
	6. 20	• 지방행정혁신 토론회	7. 5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
	6. 20	• 수석 · 보좌관회의			• 문화강국 C-Korea 육성전략 보고회
	6. 23	• 한 · 일 정상회담 및 만찬			• 중앙언론사 보도 · 편집국 장단 간담회 및 오찬
	6. 23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방안 보고회의	7. 6		• 반부패기관협의회
	6. 23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토론회	7. 7		• 대학혁신포럼
	6. 23	•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접견	7. 8		• 자이툰 사단장 등 무공훈장 수여식
	6. 24	•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 접견	7. 11		•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6. 24	•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			•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
	6. 25	• 6. 25전쟁 56주년 참전용사 위로연			• 수석 · 보좌관회의
	6. 27	• 수석 · 보좌관회의			• 대형 수송함(독도함) 진수식
	6. 27	•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	7. 12		• 해병대 신병교육단 오찬
	6. 28	• 국가보훈처 차장 임명장 수여식			• 국가안전보장회의
	6. 28	• 비서실 사무원 초청 간담회	7. 13		•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접견
	6. 29	•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방문			• 세계한인회장 초청 다과회
	6. 29	• 국회 및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7. 14		• 라냐 ANOC 회장 접견
	6. 29	• 국회 및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 농어업 ·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
	6. 29	• 법무부, 환경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보고회의
	6. 30	•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오찬 간담회
	7. 1	• 민주평통 전체회의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제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li> <li>• 국민경제자문회의</li> <li>• 역사와 미래를 위한 범국민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li> <li>• 네팔 왕세자 내외 접견</li> </ul>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15민족대축전 북측대표단 접견 및 오찬</li> </ul>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월 前 미 국무부 장관 접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 및 오찬</li> </ul>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ul>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관리토론회</li> </ul>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주한 파푸아뉴기니·남아공·스페인·미얀마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국무회의 및 정례국무회의</li> </ul>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경제부 제2차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우수과학자 초청 오찬</li> <li>•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li> </ul>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및 오찬</li> </ul>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li> </ul>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li> </ul>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li> <li>• 외교부 제2차관 임명장 수여식</li> </ul>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 '국민과의 대화' 방송녹화</li> </ul>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장 수여식</li> </ul>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기획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li> <li>• 6자회담 대표단 격려 오찬</li> </ul>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일본·폴란드·이스라엘·방글라데시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li>• 부동산정책 간담회</li> </ul>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li> </ul>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가과학기술위원회</li> </ul>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독립·국가유공자 초청 오찬</li> </ul>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양산 1호기 출고 기념식</li> <li>• 항공기 탑승 시연 및 조립동 방문</li> <li>• 해인사 방문</li> <li>•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초청 만찬</li> </ul>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 간담회 및 오찬</li> </ul>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 소녀의 집 합창단 공연</li> </ul>

2005년

- |       |   |  |  |
|-------|---|--|--|
| 9. 1  | • 열린우리당 교육위원과의<br>교육정책 간담회 및 만찬                                       | 9. 28  | • 에너지전시회 관람<br>• 국가에너지자문회의   |
| 9. 2  | •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br>신임장 수여식  | • 국정과제회의                                       |  |
| 9. 5  | • 수석·보좌관회의  | 9. 29  |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br>• 유공 기능인 등 오찬   |
| 9. 6  | •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br>(PECC) 제16차 총회 개막식                                   | 9. 30  | • 외교부 제2차관 임명장<br>수여식  |
| 9. 7  | • IMF 총재 접견<br>• 엘빈 토플러 박사 부부 접견<br>•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                     | • 파키스탄 수상 접견<br>•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br>한국 측 위원 접견 |  |
| 9. 8  | • 멕시코·코스타리카 국민<br>방문 및 유엔총회 참석<br>(9. 8~9. 17)                        |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br>위촉장 수여식                       |  |
| 9. 20 | • 국무회의<br>• 법무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br>• 6자회담 대표단 만찬<br>•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 10. 1  | •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br>•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
| 9. 21 | • 수석·보좌관회의<br>•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br>전화 통화                                  | 10. 4  | • 국무회의<br>• 수석·보좌관회의   |
| 9. 22 | • 고이즈미 총리와 전화 통화  | 10. 5  | •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br>박람회   |
| 9. 23 | • 오만 부총리 접견<br>•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br>• 퇴임 대법원장 서훈                         | 10. 6  | •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br>• 정책기획위원 만찬 간담회                                   |
| 9. 26 | • 수석·보좌관회의<br>• 주한 중국·덴마크·이집<br>트·사이프러스 대사 신임<br>장 제정식<br>• 부동산정책 간담회 | 10. 10   | • 세계 화상대회 개막식<br>• 수석·보좌관회의<br>• 자크 로게 IOC 위원장 만찬                      |
| 9. 27 | •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br>간담회 및 오찬   | 10. 11   | • 교육혁신위원회 위원<br>위촉장 수여식<br>• 울산 시장 등 접견                                |
|       |   | 10. 12   |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br>위원 위촉장 수여식<br>• 주미대사 신임장 수여식<br>•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br>만찬 |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li> <li>• 이종욱 WHO 사무총장 접견</li> <li>• 농촌사랑 도·농상생 한마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li> </ul>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제전 개막식</li> </ul>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ul>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주한 인도·아랍에미리트·튀니지·알제리·프랑스·미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필리핀 대사 신임장 수여식</li> <li>•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친수 및 오찬</li> </ul>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li> <li>•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환영식 및 정상회담</li> <li>• 한·루마니아 협정 서명식 및 회담결과 발표, 국민 만찬</li> </ul>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기념식</li> <li>• 전시물 관람</li> </ul>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세계 줄기세포 허브 개소식</li> </ul>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정 지도부 만찬</li> </ul>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li> <l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li> </ul>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출입기자단 산행 및 오찬</li> </ul>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li> <li>• 린스펠드 미국 국방장관 접견</li> </ul>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접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민고충처리위원장·사무처장 임명장 수여식</li> <li>• 국민참여형 민원행정 개선 성과 보고대회</li> </ul>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li> <li>• 중소기업정책 혁신성과 보고회</li> </ul>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성공회 의장 접견</li> <li>•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li> </ul>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현장 방문</li> </ul>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고객관리 토론회</li> </ul>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 총리 공식 환영식 및 정상회담</li> <li>• 공식 만찬</li> </ul>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상주 외신 지국장급 등 오찬 간담회</li> </ul>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신임 사무관 특강</li> </ul>

2005년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 前 미국 대통령 내외 오찬</li> <li>• 2005년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li> <li>• 한·일 의원연맹 회장단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위원회와의 대화</li> <li>• 한·일 양자회담</li> <li>• 만찬장 해외 정상 영접</li> <li>• APEC 정상회담 공식만찬 및 문화공연</li> </ul>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li> </ul>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정상회의장 각국 정상 영접</li> <li>• 제2차 APEC 정상회의 정상들과 오찬</li> <li>• 공식 사진촬영</li> <li>• APEC 정상 선언문 발표</li> <li>• 각국 정상 전송</li> <li>• 내·외신 단독 기자회견</li> <li>• 한·러 정상회담</li> <li>• 한·러 정상 공동 기자회견</li> <li>• 만찬</li> </ul>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li> </ul>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요크 공 접견</li> </ul>		
	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페루 정상회담, 의정서 서명식 및 국빈 오찬</li> <li>• 한·중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공동기자회견 및 국빈 만찬</li> </ul>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정상회담</li> <li>•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li> <li>• 한·미 정상 오찬</li> <li>• 불국사 방문</li> <li>• 한·브르나이 양자회담</li> <li>• 한·베트남 양자회담</li> <li>• 한·호주 양자회담</li> </ul>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li> <li>•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식</li> </ul>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도네시아 양자회담</li> <li>• 한·캐나다 양자회담</li> <li>• 한·칠레 양자회담</li> <li>• 협정 서명식</li> <li>• 최고경영자 회의 연설</li> <li>• APEC 정상회의장 도착</li> <li>• 제1차 APEC 정상회의</li> <li>• APEC 기업인</li> </ul>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li> <li>• 반부패기관협의회</li> </ul>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제르바이잔 외교부 장관 접견</li> <li>• 제42회 무역의 날 기념식</li> </ul>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전략 보고회</li> <li>• 소프트엑스포 2005</li> </ul>

	전시회 관람		오찬
	• 미주개발은행 총재 접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 사랑의 열매 전달식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12. 2	• 제5회 지역방송의 날 기념		• 국정과제회의
	대담 녹화	12. 2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12. 5	• 수석·보좌관회의		정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 2005 규제개혁 추진		수여식
	보고회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2. 6	• 폰 바이체커		간담회
	前 독일대통령 오찬	12. 23	• 공통혁신과제 토론회
	•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 부처 혁신기획관 오찬
12. 7	• 눈 피해상황 보고		• 문화방송 성탄특집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희망콘서트' 초청 공연 녹화
	착공식		• 종교지도자 만찬
12. 8	•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문,	12. 26	• 수석·보좌관회의
	ASEAN+3 정상회의	12. 27	• 대국민 성명 발표
	(12. 8~12. 16)	12. 28	•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12. 19	• 수석·보좌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12. 20	•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
	평가 보고회	12. 29	• 사회복지 현장 방문 및
	• 주스웨덴 대사 신임장		간담회
	수여식	12. 30	• 방위사업청장 등 임명장
12. 21	• APEC 정상회의 유공자		수여식

## 2006년

1. 2	• 수석·보좌관회의		초청 신년인사회
	• 폭설피해 복구현장 방문	1. 4	• 경제계 신년인사회
1. 3	• 국무회의	1. 5	•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1. 9	• 이코우스키 미국 상원

2006년	1. 9	• 동아태 소위원장 접견 • 수석·보좌관회의	2. 6	• 수석·보좌관회의
	1. 10	• 여성계 신년인사회	2. 7	• 한·인도 대통령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및 국빈 만찬
	1. 11	•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2. 8	• 남도르지 몽골 국회의장 접견
	1. 12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개청 기념행사	2. 9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담회
	1. 13	• 지방선거 부정방지 관계장관회의 • 노인 대표 초청 오찬 • 주한 브루나이·터키·호주·보츠와나 대사 신임장 제정식	2. 10	• 과학기술부총리 겸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1. 16	• 수석·보좌관회의	2. 12	• 북악산 개방 시범답사
	1. 18	• 대통령 신년 연설	2. 13	• 수석·보좌관회의 • 아커만 도이치은행 회장 접견
	1. 19	• 신항 개항식(부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
	1. 23	• 수석·보좌관회의	2. 14	• 국무회의 •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오찬
	1. 24	• 임업인 초청 오찬	2. 15	•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5
	1. 25	•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2. 16	• 대외경제위원회 • 재외공관장 만찬
	1. 26	• 방과후학교 정책 토론회 • 20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2006년 정부혁신 토론회	2. 17	• 통일부 차관 등 임명장 수여식
	1. 31	• 지속가능발전위원장 등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 • 수석·보좌관회의		• 주한 스웨덴·필리핀·우르파이·모로코·뉴질랜드 대사 신임장 제정식
	2. 1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 만찬	2. 20	• 국가안전보장회의 •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접견
	2. 2	• 부동산 정책회의	2. 21	• 수석·보좌관회의 • 혁신도시 건설 보고회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전통문화예술인 오찬</li> <li>•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위원 오찬</li> </ul>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 보고회</li> </ul>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기자단 북악산 산행</li> </ul>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li> <li>• 주한 에콰도르·벨라루스·마이크로네시아·지부티·크로아티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li>• 중소기업특별위원회</li> </ul>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li> </ul>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군장교 임관식</li> </ul>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상공회의소 대통령 초청 특별강연</li> <li>• 정보통신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국무회의</li> <li>•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수여식</li> </ul>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7주년 3.1절 기념식</li> </ul>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및 협정 서명식</li> <li>•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이사회 의장 접견, 국빈 만찬</li> </ul>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 등 신임장 수여식</li> </ul>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 행사</li> </ul>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li> </ul>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식</li> <li>•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만찬</li> </ul>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나이지리아·알제리 국빈 방문 (3. 6~3. 14)</li> </ul>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5단체장 오찬</li> </ul>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협력위원회 대표단 접견</li> <li>•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ul>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OC 총회 개최식</li> </ul>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기관협의회 업무보고</li> <li>• 정당·원내대표 만찬</li> </ul>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및 약정 서명식</li> <li>• 국무회의</li> <li>• 공식 만찬</li> </ul>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2006년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li> <li>• 제주 방문의 해 관계자 오찬</li> <li>•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내 대표 등과 오찬</li> </ul>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하인즈 워드 모자 오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4.19민주묘지 참배</li> <li>• 장애인 일터 현장 방문</li> </ul>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1회 식목일 기념 행사</li> </ul>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조찬기도회</li> <li>• 유럽연합 대외관계집행위원 접견</li> <li>•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li> </ul>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크로아티아 정상회담, 국빈 만찬</li> </ul>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국빈 만찬</li> <li>• 정진석 추기경 서임 축하 오찬</li> </ul>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접견</li> </ul>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위원 재원분배회의</li> </ul>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li> </ul>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국회의장 접견</li> <li>• 재일민단 신임 지도부 접견</li> <li>• 국정과제회의</li> </ul>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현장 이어달리기</li> </ul>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li> <li>•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폴리텍7대학 창원대학 방문</li> <li>• 학생 및 관계자들과 오찬</li> <li>• 부산 종합고용안정센터 방문 및 간담회</li> </ul>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 및 12개국 재무장관 접견</li> <li>• 주거복지정책 토론회</li> <li>• 국정과제회의</li> </ul>	
	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방부장 접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 접견 및 오찬</li> <li>• 국정과제회의</li> <li>• LG필립스 LCD 파주공장 준공식</li> </ul>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4.19혁명단체 회원 접견</li> <li>• 경제정책수석 임명장 수여식</li> <li>• 동해 EEZ 관련 정당 대표·</li> </ul>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li> <li>• 주한 아르헨티나·케냐·르완다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맨발의 기봉이&gt; 관람</li> </ul>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 한 · 미연합사령관 접견</li> <li>• 수석 · 보좌관회의</li> </ul>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 · 보좌관회의</li> </ul>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li> </ul>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회의</li> <li>•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li> </ul>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li> <li>• 전국 교육감 · 교육장 오찬</li> <li>• 국민경제자문회의</li> </ul>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가정 방문</li> <li>•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주민한마당 참석</li> </ul>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날 특집 생방송 출연</li> </ul>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 접견</li> <li>• 중국 상무부장 접견</li> <li>• 외국인 정책회의</li> </ul>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 아제르바이잔 · UAE 방문(5. 7~5. 15)</li> </ul>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혁신토론회</li> </ul>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사무총장 접견 및 오찬</li> </ul>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임 재향군인회장단 접견</li> <li>• 수석 · 보좌관회의</li> </ul>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OECD 대사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 오찬</li> </ul>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월포위즈 세계은행 총재 접견</li> </ul>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 18민주화운동 기념식</li> <li>• 광주종합고용안전센터 방문</li> </ul>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회 동시지방선거 투표</li> </ul>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너지자문회의</li> <li>•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초청 오찬</li> <li>• 리관유 싱가포르 前 총리 접견</li> <li>• 주한 외교단 리셉션</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실장 · 경제정책수석 임명장 수여식</li> </ul>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홍보 토론회</li> </ul>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나 외교장관 접견</li> <li>• 다우코르 OPEC 의장 접견</li> <li>• 수석 · 보좌관회의</li> </ul>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1회 현충일 추념식</li> </ul>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제자문회의</li> <li>• 세계한인회장 다과회</li> </ul>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라유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접견</li> <li>• 해군 최신형 잠수함</li> </ul>

2006년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원일합’ 진수식</li> <li>• 6월민주항쟁 관계자 등 만찬</li> </ul>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25 참전용사 위로연</li> </ul>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고공화국 외교장관 접견</li> <li>• 포털사이트 대표 및 뉴스책임자 오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주요 대학 총장 오찬</li> </ul>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li> </ul>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하메드 아브다비 UAE 왕세자 접견</li> </ul>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바이오혁신전략 보고회</li> <li>• 대덕 연구현장 방문</li> <li>•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li> </ul>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란지알리 유엔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 접견</li> <li>• 조달청장 임명장 수여식</li> <li>• 건축문화·건설기술 선진화방안 보고회의</li> </ul>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미니카 정상회담 및 협정 서명식, 국민 만찬</li> </ul>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li> <li>•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li> </ul>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실장 임명장 수여식</li> <li>• 국무회의</li> </ul>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석 및 다과 간담회</li> </ul>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 토론회</li> </ul>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경제위원회 보고회의</li> </ul>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 EEZ 해양주권 수호 관련 해양경찰관 초청 오찬</li> <li>• 한·미 재계회의 대표 접견</li> </ul>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고회의</li> <li>• 열린우리당 지도부 등 만찬</li> </ul>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에리트리아·마다가스칼·스왓질랜드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전략사업 성과 보고회</li> <li>•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방문</li> </ul>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위촉장 수여</li> <li>•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li> <li>• 국정과제회의</li> </ul>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릭 위렌 목사 등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회의</li> <li>• 방송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li> </ul>		8. 10	장학증서 수여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부총리·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li> <li>• 국제박람회 사무국 사무총장 접견</li> </ul>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접견</li> </ul>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리랑카 외교장관 접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안보관계장관회의</li> <li>• 서울대학교 총장 임명장 수여식</li> </ul>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의 오찬</li> <li>•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 원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해 및 응급복구 현장 방문</li> <li>• 교육부총리·기획예산처 장관 임명장 수여식</li> </ul>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li> </ul>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2차 대외경제 장관회의</li> <li>• 발터 카스퍼 추기경 등 접견</li> <li>• 세계감리교대회 회장단 접견</li> </ul>		8.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li> </ul>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무회의</li> </ul>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사이버 안전 위기대응 통합연습 참관</li> <li>• 을지국무회의 및 정례 국무회의</li> </ul>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특위 확대회의</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li> <li>• 광역자치단체장 등 오찬</li> <li>• 교육부 교육현안 보고</li> </ul>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가나·우크라이나·이탈리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인사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대통령 과학장학생</li> </ul>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li> <li>• 법무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li> <li>•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li> </ul>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자유무역협정 특위 위원 등 만찬</li> </ul>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헝가리 국회의장 접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위크라마나야카 스리랑카 총리 접견</li> <li>• 마루프 바킷 요르단 총리 접견</li> </ul>	

2006년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접견</li> <li>•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li> <li>•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만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자 격려 오찬</li> <li>• 문화방송 '100분 토론' 방송 녹화</li> </ul>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 2030 보고회의</li> <li>•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li> <li>• 한국방송공사 방송의 날 기획 대통령 특별회견 녹화</li> </ul>	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li> <li>• 방송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ul>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제자문회의</li> <li>• 기니 외교장관 접견</li> <li>• 군 의무 발전 추진계획 보고</li> </ul>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궁 신무문 · 집옥재 개방행사</li> </ul>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미국 방문 및 ASEM 정상회의(9. 3~9. 16)</li> </ul>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li> </ul>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 · 보좌관회의</li> </ul>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쿨런 뉴질랜드 부총리 접견</li> <li>•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보고회</li> <li>• 교육부총리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li> </ul>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주한 독일 · 브라질 · 싱가포르 · 피지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ul>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li> <li>•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접견</li> </ul>	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60돌 한글날 경축식</li> <li>• 한·일 정상회담 및 기자 회견</li> <li>• 환영 만찬</li> </ul>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활력사업 성과보고회</li> <li>• 생약초시장 · 정선5일장 현장 방문</li> </ul>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야 5당 대표 · 원내대표 조찬</li> <li>• 전직 대통령 오찬</li> </ul>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 · 보좌관회의</li> </ul>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협 관계자 오찬</li> <li>•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li> <li>• 동북아 안보 관련 전문가 만찬</li> </ul>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 · 무궁화 위성</li> </ul>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막식</li> <li>• 중국 방문 준비</li> </ul>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실무방문 출국</li> <li>• 한·중 정상회담</li> </ul>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도착</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장 영결식</li> </ul>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정상 간 전화통화</li> <li>• 비야라이고사 LA 시장 등 접견</li> </ul>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임명장 수여식</li> <li>• 현대 일관제철소 기공식</li> <li>• 현대제철 관계자 오찬</li> <li>• 2006 지방행정 혁신토론회</li> </ul>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레고어 워싱턴 주지사 접견</li> <li>•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접견</li> <li>• 혁신도시건설실행전략 보고회</li> <li>•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li> </ul>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li>• 국무회의</li> </ul>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등 접견</li> <li>•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보고대회</li> <li>• 외교부 장관 보고</li> <li>• 마이크로크레딧 창시자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접견</li> <li>• 벤처코리아 2006 행사</li> <li>•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접견</li> </ul>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자문보고</li> <li>•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li> <li>•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li> </ul>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소 일본외상 접견</li> <li>•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li> </ul>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li> </ul>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 국민 오찬</li> <li>• 글로벌 기술인력 혁신 보고회</li> </ul>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기획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li> <li>•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명 축하 주한 외교단 초청 만찬</li> </ul>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li> <li>• 한·콩고 정상회담 및 협정 서명식</li> <li>• 한·탄자니아 정상회담</li> <li>• 한·가나 정상회담</li> <li>• 한·베넵 정상회담</li> <li>•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자 초청 만찬</li> </ul>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엘살바도르 정상회담</li> <li>• 국민 만찬</li> </ul>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li> </ul>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 최규하 前 대통령</li> </ul>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li> </ul>
		11. 9	
		11. 10	

2006년	11. 13	• 수석·보좌관회의	12. 1	• 사랑의 열매 전달식
	11. 14	• 주한 노르웨이·수단·유럽연합·스리랑카 대사 신임장 제정식		• 갈등조정특위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오찬
		• 알제리 민영화투자부장관 접견		•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 반기문 외교부 장관 서훈 수여식		• 군 3성 장군 진급 및 보직신고
	11. 15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	12. 3	• 인도네시아·호주·뉴질랜드·필리핀 방문 및 ASEAN+3 정상회의 (12. 3~12. 10)
	11. 16	•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12. 11	• 통일부 장관·건설교통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 국정과제회의	12. 13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11. 17	• 베트남, 캄보디아 방문 및 APEC 정상회의 (11. 17~11. 22)		• 수석·보좌관회의
	11. 23	• 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 임명장 수여식	12. 15	• 2006 방과후학교 성과보고회
		• 한·덴마크 정상회담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임명장 수여식
	11. 24	• 한·일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12. 18	• 주프랑스 대사 등 6개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
		• 국정과제회의		•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11. 27	• 국방부 차관 등 임명장 수여식		• 국민 만찬
		• 수석·보좌관회의	12. 19	• 수석·보좌관회의
	11. 28	• 국무회의	12. 21	• 주한 가봉·네덜란드·쿠웨이트·콜롬비아·보스니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보고회의		• 민주평통 상임위원 회의
	11. 29	•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보고 및 오찬	12. 22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오찬
		• 균형발전 정책점검 및 누리사업 성과보고회		
	11. 30	• 제43회 무역의 날 기념식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접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성과 보고대회</li> <li>• 정책기획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li>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li> </ul>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li> <li>• 창원 컨벤션센터 전시장 관람</li> </ul>		

## 2007년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 접견</li> </ul>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2007년 신년인사회</li> </ul>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임스 맥너니 보잉사 회장 접견</li> <li>• 2007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및 오찬</li> </ul>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경제점검회의</li> <li>• 과천 청사 공무원들과 오찬</li> </ul>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단체 원로 등 오찬</li> </ul>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 석유광물장관 등 접견</li> <li>•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li> </ul>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대통령 특별담화</li> </ul>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신년 특별연설</li> </ul>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오찬</li> </ul>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li> </ul>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오찬</li> </ul>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 13~1. 15)</li> </ul>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부대 시찰</li> <li>•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li> </ul>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li> <li>• 알제리 국토개발 환경부</li> </ul>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li> </ul>

2007년	1. 30	장단 오찬	2. 27	• 국무회의
	1. 31	•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 과제 및 자문위원회 합동 워크숍		• 인터넷신문협회 초청 토론회
		• 하마드 카타르 부총리 접견	2. 28	• 재외공관장 만찬
	2. 5	• 이탈리아 외교장관 접견	3. 1	• 2006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 수석·보좌관회의	3. 2	• 제88주년 3.1절 기념식
	2. 6	• 열린우리당 개혁특위 위원 오찬		• 차기전차 출고식
		• 국가안전보장회의		•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2. 7	•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3. 5	• 수석·보좌관회의
		• 제6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오찬	3. 6	• 국무회의
	2. 8	•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		• 노인대표 초청 오찬
		• 정치·헌법·공법학회 회장단 오찬		•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2. 9	• 교육혁신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	3. 7	• 폴슨 미 재무장관 접견
		• 스페인·이탈리아·교황청 방문(2. 11~2. 17)		• 과거사 정리 관계위원장 오찬
	2. 11	• 서울 도착		•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접견
		• 평창 IOC 조사 평가단 접견	3. 8	• 법무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
	2. 17	• 올림픽 전문매체 인터뷰		•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구직자 비정규직 정책)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	3. 9	• 특별 기자회견
	2. 22	•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 만찬		• 2007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
		• 재외홍보관 접견	3. 12	• 리처드 파슨스 타임워너 회장 접견
	2. 23	•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 환경조성 보고회		• 비서실장·경호실장 임명장 수여식
				• 나집 말레이시아 부총리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 개막식</li> <li>• 국무회의</li> <li>•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여성·아동·청소년 정책)</li> </ul>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li> <li>• 국무회의</li> <li>•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국 경제’ 워크숍</li> </ul>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아제르바이잔·폴란드·라오스 대사 신임장 제정</li> </ul>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장애인 정책)</li> </ul>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현장 방문</li> <li>•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중소기업 정책)</li> </ul>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2회 식목일 행사 및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 행사</li> </ul>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3사관학교 임관 및 졸업식</li> <li>• 대구 육상경기장 방문</li> </ul>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영어방송 교육채널 개국 행사 및 특강</li> </ul>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국방장관 접견</li> </ul>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한·중국 정상회담 및 협정 서명식, 공식 만찬</li> </ul>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천주교 지도부 초청 오찬</li> <li>•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농어업인 정책)</li> </ul>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접견</li> <li>•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만찬</li> </ul>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li> </ul>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접견</li> <li>•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정상 회담</li> </ul>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과학기술인 정책)</li> <li>• 대전 대덕 R&amp;D 특구 성과 점검 및 오찬 간담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총리 오찬</li> <li>• 합참차장 등 진급 및 보직 신고</li> </ul>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헌법재판관 서훈 및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국 경제’ 2차 워크숍</li> </ul>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 방문 (3. 24~3.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헝가리 외교장관 접견</li> </ul>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li> </ul>	4. 13	

2007년	4. 13	• 제9차 반부패기관 협의회	5. 7	• 수석·보좌관회의
	4. 14	• 국무위원 국가재원 배분회의	5. 8	• 국무회의
	4. 16	• 수석·보좌관회의		• 호콘 노르웨이 왕세자 내외 접견 및 오찬
	4. 17	• 국무회의		•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 주한 포르투갈·말라위· 에티오피아·라트비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5. 9	• 춘추관 출입기자단 가족 초청 행사
	4. 18	•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	5. 11	•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 이탈리아 총리 오찬	5. 14	• 수석·보좌관회의
	4. 19	•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식	5. 15	• 국무회의
	4. 20	• 독일 국방장관 접견		•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 초청 오찬
		• 법제처장 등 임명장 수여식		
	4. 23	• 법제처 차장 등 임명장 수여식	5. 16	• 평창 D-50 계기 유치성공다짐 간담회
		• 한·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		• 매경·MBN 합동회견
		• 한·아제르바이잔 협정 서명식 및 기자회견, 국민 만찬	5. 17	• 주한 페루·마셜군도·슬 로베니아·부룬디 대사 신 임장 제정식
	4. 24	• 국무회의	5. 18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4. 26	• 국가조찬기도회	5. 22	• 국무회의
	4. 27	• 한우농가 방문 및 간담회		•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총리 면담 및 오찬
	4. 30	•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		• 수석·보좌관회의
	5. 1	• 국무회의	5. 23	• 제주 감귤농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5. 25	•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
	5. 2	• 군 장병 유가족 초청 오찬	5. 29	• 국무회의
	5. 3	• 음람보-응쿠카 남아공부통령 접견	5. 30	• 해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격려	6. 18	•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 포스코 파이넥스 설비 준공식 및 오찬		• 노른 폴란드 하원의장 접견
	•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	6. 19	• 수석·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5. 31	• 할릴로프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 접견		•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 컬리 AP통신 사장 회견	6. 20	•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개회식
6. 2	• 참여정부 평가포럼 6월 월례 강연회		• 건설 60주년 기념 건설의 날 행사
6. 4	• 수석·보좌관회의	6. 21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임명장 수여식
	• 제6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 수석대표와의 간담회		• 농업인 단체장 및 농민 CEO 간담회
	•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를 위한 만찬	6. 22	• 제4차 제주평화포럼
6. 5	• 국무회의		• 제주지역 혁신리더· 경제인 오찬
	•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	6. 25	• 참전용사 위로연
6. 6	• 제52주년 현충일 추념식	6. 26	• 대학 총장과의 토론회 및 오찬
6. 7	• 싱가포르 외교장관 접견	6. 27	• 민생·개혁법안의 국회처 리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 라오스 외교장관 접견		• 충북지역 주요인사 오찬 간담회
	•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		• 육거리시장 방문
	• 민원제도개선 담당공무원 격려 오찬		•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
6. 8	• 원광대 특강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6. 10	• 6.10민주항쟁 기념식	6. 29	• 민주평통 부의장 임명장 수여식
6. 13	• 주한외교단 만찬		• 영화 <밀양> 제작진
6. 14	• 킨들러 화이자 회장 접견		
6. 15	• FTA 국내대책위원 위촉장 수여 및 환담		
6. 17	•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2007년	6. 29	격려 오찬 • 임시 국무회의			관련 유공자 격려 오찬 •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및 협정 서명식, 국민 만찬
	6. 30	• 시애틀·과테말라·호놀룰루 방문 및 IOC 총회 참석 (6. 30~7. 7)	7. 25		• 경남지역 주요인사 오찬 간담회
	7. 9	• 수석·보좌관회의			•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
	7. 10	• 국무회의			• 진주바이오 21센터 방문
	7. 11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접견	7. 27일		• 뉴질랜드 외교장관 접견 • 제1회 국가 인적자원위원회 회의
	7. 12	•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 보고회			• 경제보좌관 등 임명장 수여식
	7. 13	• 한·EU FTA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	8. 6		• 금융감독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7. 16	• 레바논 평화유지단장 신고 및 무공훈장 친수 • 수석·보좌관회의	8. 7		• 수석·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7. 18	• 국방 중기계획 보고 •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관계자 격려 오찬 • 국민경제자문회의	8. 9		• 코나레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접견 • 국무조정실장 등 임명장 수여식
	7. 19	• 유엔 기후변화협약 특사 접견 •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제13기 민주평통 전체회의	8. 10		• 봉고 가봉 대통령 접견 및 오찬
	7. 20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8. 14		• 국무회의 • 제5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7. 23	• 재일민단 신임 집행부 접견 간담회 • 수석·보좌관회의	8. 15		•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
	7. 24	• 국무회의 • 향만노무공급체계 개혁	8. 16		• 페이스 미 합참의장 훈장 친수 및 접견
			8. 20		• 을지국무회의 및 정례 국무회의
			8. 21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및

	오찬		
8. 22	•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	9. 6	• 호주 방문 및 APEC 정상회의(9. 6~9. 10)
8. 24	•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9. 11	•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
8. 27	• 수석·보좌관회의		
8. 28	• 한·미 FTA 협상 및 비준 관련 격려 오찬	9. 12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 및 주요인사 오찬 간담회
8. 29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 선진화과제 성과보고	9. 13	• 여수세계박람회 제2차 국제 심포지엄 참석
8. 30	• 워커 미국 감사원장 접견		
8. 31	• 주한 에콰도르·세네갈·파키스탄·캐나다 대사 신임장 제정식		•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환영 오찬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3기 협약체결 격려 오찬	9. 14	• 고 윤이상 선생 부인 이수자 여사 접견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식	9. 17	•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 장치(KSTAR) 완공식
	• PD연합회 20주년 기념식		•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
9. 2	• 오마이뉴스 인터뷰	9. 18	• 인도 외교장관 접견
9. 3	•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단 접견	9. 19	• 국무회의
	• 수석·보좌관회의		•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
	• 제44회 방송의 날 축하연		• 사법개혁 참여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9. 4	• 법무부,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 국무회의	9. 20	• 혁신도시 기공식
	•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9. 21	• 환경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 아사도프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접견		• 국무회의
9. 5	•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 간담회		• 국가정보원 격려 방문 및 오찬
		9. 27	• 수석·보좌관회의

2007년	10. 1	• 제59주년 국군의 날 행사			간담회
	10. 2	•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메시지 발표		10. 18	• 2007 벤처기업 대상 시상식 및 특강
		• 2007 남북정상회담 (10. 2~104)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10. 8	• 덴마크 여왕 공식 환영식 및 면담		10. 19	•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2차 회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보고회			•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10. 20	• 오마이뉴스 인터뷰
		• 덴마크 여왕 국빈 만찬		10. 22	• 영국 존 스튜어트 Lord mayor 접견
	10. 9	•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초청 오찬			• 수석·보좌관회의
	10. 10	• 국립생물자원관 개관식		10. 23	• 국무회의
		• 남북정상회담 관련 헌법기관장 간담회			•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
	10. 11	•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10. 24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
		•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10. 25	•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10. 12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1차 회의			•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 부산 방과후학교 방문		10. 26	• 외국인 정책회의
	10. 15	• 수석·보좌관회의		10. 27	•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
	10. 16	•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 람사르 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 주한 헝가리·일본·코스 타리카·알바니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10. 29	•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10. 17	•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			• 수석·보좌관회의
				10. 30	• 국무회의
					•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및 협정서명식, 공식 만찬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li> <li>•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 준공식</li> <li>• 세계 한상대회 개막식</li> </ul>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식</li> </ul>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1차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원회</li> </ul>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베트남 정상회담, 공식 만찬</li> </ul>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사히 신문 회견</li> <li>• 알제리 산업부지유치부장관 접견</li> </ul>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li> </ul>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르스키 벨로루시 총리 접견</li> <li>• 알 아티야 카타르 부총리 접견</li>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 접견</li> <li>•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li> <li>• 남북총리회담 참석자 접견 및 환송 오찬</li> </ul>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고사이비 사우디 경제기획장관 접견</li> <li>• 게이츠 前 미국 국방장관 접견</li> <li>• 한·EU FTA 관련 보고</li> </ul>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방문, ASEAN+3 정상회의(11. 19~11. 22)</li> </ul>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안 국제공항 개항식</li> <li>•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식</li> <li>• 광주·전남지역 주요인사 오찬</li> <li>•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기공식</li> </ul>	1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경주 PGA 선수 서훈 수여식</li> <li>• 검찰총장, 감사위원 임명장 수여식</li> </ul>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의 날 기념식</li> <li>•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착공식</li> <li>• 원자력발전소 방문</li> </ul>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 대법회</li> </ul>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li> <li>• 2007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li> </ul>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레이븐 IPC 위원장 등 접견</li> <li>•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 접견</li> </ul>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기자회견</li> <li>• 제1차 균형발전 정책 보고회</li> </ul>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4회 무역의 날 기념식</li> </ul>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열매 전달식</li> <li>• 국제청장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2007년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사 관련 위원회 오찬</li> <li>• 과학기술자문회의</li> </ul>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li> </ul>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li> <li>• 한·중동 협력포럼 참석대표 합동 접견</li> </ul>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발전정책 보고회 및 오찬</li> </ul>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보좌관회의</li> </ul>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태안 유류 오염사고 현장 방문</li> <li>• 주한 파나마 대사 등 5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li> <li>• 주니카라과 대사 등 6개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li> </ul>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ul>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li> </ul>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준웅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li> </ul>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임명장 수여식</li> </ul>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li> <li>• 청와대 출입 기자단 송년 만찬</li> </ul>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경제자문회의</li> </ul>		

# 2

## 정상외교 일지

### 2003년

5. 11 ~ 17	• 미국 실무 방문, 정상회담		
6. 3	• 필리핀 대통령(아로요) 국빈 방한		
6. 6 ~ 9	• 일본 국빈 방문, 정상회담		
7. 7 ~ 10	• 중국 국빈 방문, 정상회담		
7. 18	• 호주 총리(하워드) 공식 실무 방한		
7. 20	• 영국 총리(블레어) 방한		
7. 25	• 뉴질랜드 총리(클라크) 실무 방한		
8. 25	• 태국 총리(탁신) 공식 방한		
9. 16	• 베트남 총리(관 반 카이) 공식 방한		
10. 6 ~ 9	• ASEAN+3 정상회의 참석 (제주도)		
		10. 19 ~ 22	•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및 한·중·일 정상회담
		10. 22 ~ 24	• APEC 정상회의 참석(태 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 아와 정상회담
		10. 22 ~ 24	• 싱가포르 국빈 방문, 정상회담
		11. 6	• 파키스탄 대통령 (무샤라프) 국빈 방한
		11. 13	• 카자흐스탄 대통령(나자 르바예프) 공식 실무 방한
		11. 25	• 몽골 총리(엠흐바야르) 공식 실무 방한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제리 대통령 (부테플리카) 국민 방한</li> </ul>
-------	---

## 2004년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키 총리(에르도안) 공식 방한</li> </ul>	11. 14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정상회담</li> </ul>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웨덴 총리(페르손) 방한</li> </ul>	11. 16 ~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라질 국민 방문, 정상회담</li> </ul>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쿠웨이트 총리(알-사바) 공식 방한</li> </ul>	11. 18 ~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EC 정상회의 참석, 칠레 공식 방문</li> </ul>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총리(고이즈미) 방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칠레 캐나다 중국 미국 호주와 정상회담</li> </ul>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르단 국왕(압둘라 2세) 방한</li> </ul>	11. 28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EAN+3 정상회의 참석(라오스)</li> </ul>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레이시아 총리 (바다위) 공식 방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싱가포르 라오스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li> </ul>
9. 19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자흐스탄 국민 방문, 정상회담</li> </ul>	11. 30 ~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국민 방문, 정상회담</li> </ul>
9. 20 ~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공식 방문, 정상회담</li> </ul>	12. 3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폴란드 국민 방문, 정상회담</li> </ul>
10. 4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국민 방문, 정상회담</li> </ul>	12. 5 ~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공식 방문, 정상회담</li> </ul>
10. 6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EM 정상회의 참석 (베트남)</li> <li>독일 유럽연합 중국 폴란드 베트남과 정상회담</li> </ul>	12. 17 ~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실무 방문, 정상회담</li> </ul>

## 2005년

3. 10	• 헝가리 총리(쥬르차니) 공식 방문	9. 8 ~ 11	실무 방한 • 멕시코 국민 방문, 정상회담
3. 17	• 콩고 대통령(카빌라) 공식 방한	9. 11 ~ 13	• 코스타리카 국민 방문, 정상회담
3. 23	• 아일랜드 대통령 (맥길리스) 국민 방한		•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와 정상회담
4. 10 ~ 14	• 독일 국민 방문, 정상회담		•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4. 14 ~ 17	• 터키 국민 방문, 정상회담	9. 13 ~ 16	• 유엔 고위급 본회의 참석
4. 26	•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살레) 국민 방한		• 이탈리아 몽고 오스트리 아 알제리 네덜란드와 정 상회담
5. 8 ~ 10	• 러시아 실무 방문, 정상회담	9. 30	• 파키스탄 총리(샤우카트) 접견
5. 10 ~ 12	• 우즈베키스탄 국민 방문, 정상회담	10. 18	• 루마니아 대통령 (바세스쿠) 국민 방한
5. 23	•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모노프) 접견	11. 8	• 벨기에 총리(베르호프스 타트) 공식 방한
5. 24	• 태국 총리(탁신) 접견	11. 16	• 페루 대통령(톨레도) 국민 방한
5. 25	• 브라질 대통령(룰라) 국민 방한	11. 16	• 중국 주석(후진타오) 국민 방한
5. 25	• 스리랑카 총리 (라자팍사) 접견	11. 16 ~ 18	• APEC 정상회의 참석(부산) •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일본과 정상회담
5. 27	• 슬로바키아 총리 (주린다) 공식 방한	11. 17	• 미국 대통령(부시)
6. 9 ~ 11	• 미국 실무 방문, 정상회담		
6. 20	• 일본 총리(고이즈미)		

11. 19	실무 방한 • 러시아 대통령 실무 방한		
12. 8 ~ 14	• ASEAN+3 회의 참석,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12. 14 ~ 16	• 말레이시아 인도 뉴질랜드와 정상회담 • 필리핀 국빈 방문, 정상회담

## 2006년

2. 7	• 인도 대통령(압둘칼람) 국빈 방한	6. 14	접견 • UAE 왕세자(아부다비)
3. 6 ~ 9	• 이집트 국빈 방문, 정상회담	6. 30	접견 • 도미니카 대통령 (페르난데스) 국빈 방한
3. 9 ~ 11	•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 정상회담	9. 3 ~ 5	• 그리스 국빈 방문, 정상회담
3. 11 ~ 13	• 알제리 국빈 방문, 정상회담	9. 5 ~ 7	• 루마니아 국빈 방문, 정상회담
3. 21	• 캄보디아 총리(훈센) 공식 방한	9. 7 ~ 12	• ASEM 정상회의 참석 (핀란드) • 핀란드 국빈 방문, 정상회담
3. 29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리모프) 국빈 방한	9. 12 ~ 15	• 폴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프랑스 덴마크와 정상회담
4. 6	• 크로아티아 대통령 (메시치) 국빈 방한	10. 9	• 미국 실무 방문, 정상회담
4. 20	• 뉴질랜드 대통령 (카트라이트) 국빈 방한	10. 13	• 일본 총리(아베) 실무 방한
5. 7 ~ 10	• 몽골 국빈 방문, 정상회담	10. 17	• 중국 실무 방문, 정상회담
5. 10 ~ 12	• 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상회담	10. 25	• 러시아 총리(프라드코트) 접견
5. 12 ~ 14	• 아랍에미리트연합 공식 방문, 정상회담	11. 6	• 엘살바도르 대통령 (사카) 국빈 방한
5. 16	• UN 사무총장(코피 아난)		• 나이지리아 대통령

11. 17 ~ 19	(오바산조) 국민 방한 • APEC 정상회의 참석, 베트남 실무 방문	12. 3 ~ 5	(라스무스) 실무 방한 •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 정상회담
11. 19 ~ 22	• 중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12. 5 ~ 7	• 호주 국민 방문, 정상회담
11. 23	• 캄보디아 국민 방문, 정상회담	12. 7 ~ 10	• 뉴질랜드 국민 방문, 정상회담
	• 덴마크 대통령	12. 18	•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센코) 국민 방한

## 2007년

1. 13 ~ 15	• ASEAN+3 정상회의 참석, 필리핀 실무 방문	1. 13 ~ 15	• 공식 방한
	• 필리핀, 한·중·일 정상회담	4. 12	• 이라크 총리(알 말리키) 공식 실무 방한
2. 12 ~ 14	• 스페인 국민 방문, 정상회담	4. 18	• 이탈리아 총리(프로디) 공식 실무 방한
2. 15 ~ 16	• 로마교황청 공식 방문	4. 23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리예프) 국민 방한
2. 15 ~ 16	• 이탈리아 공식 방문, 정상회담	5. 8	• 노르웨이 왕세자(호콘) 공식 방한
3. 24 ~ 26	•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 정상회담	5. 22	• 아랍에미리트 총리 (모하메드) 실무 방한
3. 26 ~ 27	• 쿠웨이트 국민 방문, 정상회담	5. 28	• 몽골 대통령 (앵흐바야르) 국민 방한
3. 27 ~ 29	• 카타르 공식 방문, 정상회담	5. 30	• 남아공 부통령 (음람보-응쿠카) 접견
4. 2	• 오스트리아 대통령 (피셔) 국민 방한	7. 1 ~ 5	• IOC 총회 참석, 과테말라 실무 방문, 정상회담
4. 10	• 중국 총리(윈자바오)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도요노) 국빈 방한</li> </ul>		(마그레테 2세) 국빈 방한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봉 대통령 (봉고 온딤바) 실무 방한</li> </ul>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쏘) 공식 방한</li> </ul>
9. 6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정상회의 참석, 호주 실무 방문</li> <li>• 중국 미국 호주 베트남 러시아 페루와 정상회담</li> </ul>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로루시 총리 (시도르스키) 접견</li> </ul>
10. 2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남북정상회담</li> </ul>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공산당서기장 (농 득 마잉) 방한</li> </ul>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여왕</li> </ul>	11. 19 ~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3 정상회의 (싱가포르)</li> </ul>

# 3

## 권양숙 여사의 주요 활동 2003~2007년

### I. 정책 테마별 행사

#### 1) 도서관 분야

-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 어린 시절의 꿈이 ‘서점 주인’이었을 정도로, 권양숙 여사는 독서를 가까이 했으며, 대통령과의 연애도 책을 주고받다 시작하게 됨
- 취임 초기 ‘미국 경쟁력의 원천은 도서관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권양숙 여사의 집중 프로젝트로 결정
  - 크게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어린이 교육 측면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공동체적 관점으로 접근



- 참여정부 기간 내 ‘도서관 분야’는 민간 방송사의 캠페인과 각종 국제행사,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
  - MBC TV ‘느낌표’의 「기적의 도서관」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 2004 서울국제도서전
  -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개최
  -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등
- 선진국 도서관들이 마을 단위의 생활편익과 지역문화 형성에 많은 기능을 수행해 온 점에 착안,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을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선도할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
  - 2006년 4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설치
  - 2006년 중앙정부 지원으로 58개소의 작은도서관 설치
  - 2007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 ◆ 도서관 관련 국제행사 지원

서울국제도서전 참관 (2004년 6월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참관. 어린이들을 위한 e-

book 전시장과 화상교육 시스템인 e-learning 전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임. 출판계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탄핵 기간 동안 조심스러운 마음에 거의 인수문(관저 정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거실과 안방을 대통령과 번갈아 가며 책을 참 많이 읽었다”고 회고하기도 함.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관계자 격려 오찬 (2005년 3월 28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 관련자들을 초청해 우리 도서출판계의 높은 역량과 문화의 깊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역대 최고의 주빈국이 될 것”이라고 격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관계자 접견 (2005년 4월 29일)

페트라 로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 김우창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 황지우 총감독(시인) 등 도서전 관계자들 초청 환담. “올해는 독일과 한국 관계에서 특별한 한 해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물질 위주의 현대 조류를 넘어 정신세계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 초청 오찬 (2006년 5월 30일)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도서관 규모와 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 같은 도서관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며 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 이번 서울대회는 150여 개국 5천 명의 도서관·정보 관계자들이 참여.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막식 참석 (2006년 8월 20일)

개막 축사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이끄는 가장 역동적인 엔진”이라고 강조.

## ◆ 어린이/청소년/작은도서관

부영초교 '기적의 도서관' 개관식 참석 (2003년 11월 10일)

전남 순천 부영초등학교 전자도서관 특별수업 참관. 축사를 통해 “어린이가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값진 투자”라고 말함. 도서관 건립을 위해 애써 온 순천시와 ‘책읽는 사회 국민운동본부’, MBC ‘느낌표’ 제작진 등 후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함.

국립중앙도서관 500만 장서 기념행사 참석 (2004년 9월 15일)

500만 장서를 돌파한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 “도서관이야말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주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책 읽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바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말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장서 500만 권을 돌파. 이는 세계 10~12위 수준이지만 해방 이후 6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를 달성한 것은 의미가 남다름.

‘어린이와 도서관 한마당’ 참석 (2005년 7월 18일)

정부가 다음 달에 마련할 ‘작은도서관 확충계획’과 ‘소규모 독서시설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한 후, “놀이터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 이상 값진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부천 ‘도서관 문화한마당’ 개막식 참석 (2005년 9월 24일)

경기도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6회 도서관 문화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 “우리는 책을 통해 앞선 이들의 지혜를 빌리고, 미래의 꿈을 키워 간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감과 창의를 얻게 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값진 투자일 것”이라는 내용으로 축사.

김천시립도서관 방문 (2006년 10월 18일)

첨단전자시스템에 문화공간까지 어우러진 김천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사랑의 책 읽어 주기’ 등의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다른 도서관과의 연결 여부와 점자 도서관의 하루 이용객에 대해 질문하는 등 시설 이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임.

‘일죽 작은도서관’ 개관행사 참석 (2007년 5월 1일)

2006년 중앙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58개소의 작은도서관 추진사업을 돌아보기 위해 안성 송천리의 ‘일죽 작은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 “정보화 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만큼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은 없을 것”이라며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문화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함. 또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소외된 곳이나 부족한 시설이 없는지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겠다”고 약속.

제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개막식 축하 (2007년 9월 12일)

“훌륭한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크고 작은 도서관이 더욱 늘어나고, 그 속에서 지식과 창조력을 기르는 어린이들, 실력과 문화적 품성을 쌓아 가는 국민이 많아질 때, 세계 일류 국가의 미래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힘. 특히 “국민 누구나 차별과 소외 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나라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접근성에 대해 강조.

#### ◆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발족식 참석 (2007년 6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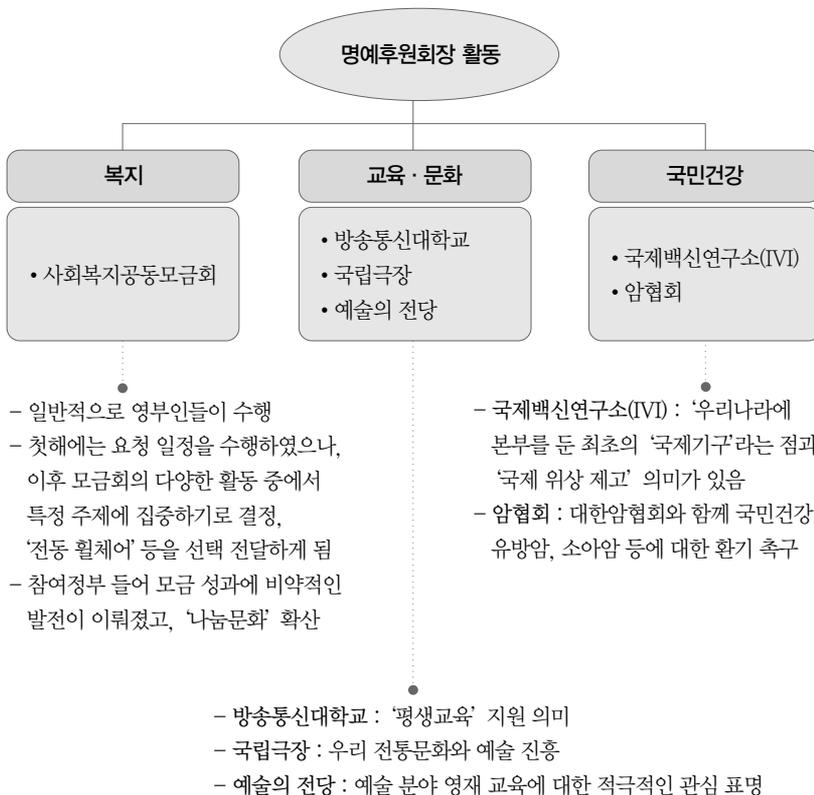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세계 각국이 지식정보 자원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서관인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관계자 격려 오찬 (2007년 6월 26일)

“오늘 조출한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10년, 20년 후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얘기하자”며 참석자들을 격려.

## 2) 명예후원회장 활동

- 기초 : 복지 / 국민건강 / 교육 · 문화 분야에 중점
  - 기존 영부인들의 의례적 직위에서 탈피하고자 했으며, 변화된 시대와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는 분야를 지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

이웃돕기 유공자 초청 오찬 (2003년 5월 27일)

청와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유공자를 초청, 오찬을 함께 함. 참여 정부가 민간복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웃사랑 실천가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보다 살맛나는 곳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격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5주년 기념 축사 (2003년 11월 7일)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지금 나는 사랑은 미래의 희망이 된다”며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과 개인이 모두 힘을 모아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더 큰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 (2004년 7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전동 휠체어 전달식’에 참석하고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으로,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로 나가게 된다”고 말함. 또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전동 휠체어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및 장애인 이동보장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차별 개선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제안.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전달식 참석 (2006년 11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의 ‘점자정보단말기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 “지식정보화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오늘 전달되는 1,271대의 점자정보단말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아울러 고가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2010년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설명하기도 함.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예지 양으로부터 ‘손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이라고 적힌 점자 감사패를 받음.

사랑의 열매 ‘사랑나눔 음악회’ 참석 (2006년 12월 18일)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높고 낮은 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 행복한 사랑을 열어 갑니다.” 이어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수출 실적에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함.

#### ◆ 국제백신연구소(IVI) (건강)

분당 서울대병원 개원식 참석 (2003년 6월 25일)

서울대병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 이어 재활치료실과 작업치료실에 들러 환자들의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참여정부는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체계 실현’을 목표로 공공의료 강화와 노인의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함.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명예회장 추대 (2004년 9월 3일)

한국에 본부를 둔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됨. 수락연설에서 “북한을 비롯한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때 백신을 투여받지 못해 매년 5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어린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을 함께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 말함.

국제백신연구소 창립 8주년 기념 축사 (2005년 10월 11일)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 건물에서 열린 IVI 창립 8주년 기념식에 참석, 연구소 임직원과 후원인 등 관계자들을 격려. “질병에 국경이 없다면 이를 극복하는 노력에도 국가 간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주력해 온 저개발 국가의 백신비축사업을 변함없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제백신연구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 대한암협회 (건강)

‘2005 암중모색’ 〈암을 이긴 사람들〉 격려 만찬 (2005년 6월 3일)

암(癌)을 극복한 환자와 가족, 담당 주치의 등 200여 명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올해 안에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암관리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특히 “불치의 병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등 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조기진단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

소아암 극복 어린이 초청 격려 오찬 (2007년 6월 20일)

암을 극복한 어린이들을 초청해 격려(권양숙 여사는 대한암협회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해 옴). “어린이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보니 청와대가 더 밝아진 것 같다”며 환영하고 “시련을 극복해 낸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도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함.

#### ◆ 국립암센터 (건강)

국립암센터 명예후원회장 수락 (2007년 9월 21일)

경기도 일산의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한 후 암센터가 주최한 명예후원회장 위촉식에 참석해 수락 연설. “커다란 일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에게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 방송통신대학교 (교육)

방송대 명예후원회장 추대 (2004년 9월 7일)

방송통신대 명예후원회장에 추대됨. 학생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밝다고 느꼈다”며 “지금은 실력만이 유일한 힘이고 자신감이 되는 시대이며, 여러분의 노력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함.

평생교육학교 졸업식 참석 (2006년 2월 9일)

소아마비 장애인인 후 마흔이 넘어 졸업장을 받게 된 양진수(46, 여) 씨의 졸업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 것이 인연이 되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됨.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끈기있게 학업에 정진해 온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축하.

방송통신대학 학위수여식 축사 (2006년 2월 23일)

“배움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학습이 일상화돼야 한다”면서 “‘열린교육, 평생학습’을 선도해 온 방송통신대 졸업생 여러분이야말로 21세기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 “지금껏 보여 줬던 그 용기와 자신감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범을 보여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덧붙임.

## ◆ 국립극장 (문화)

국립극장 후원회 명예고문 위촉 및 공연 관람 (2005년 3월 18일)

2006년, 2007년 국립극장 업무보고 및 오찬 (2006년 2월 15일 / 2007년 2월 2일)

## ◆ 예술의 전당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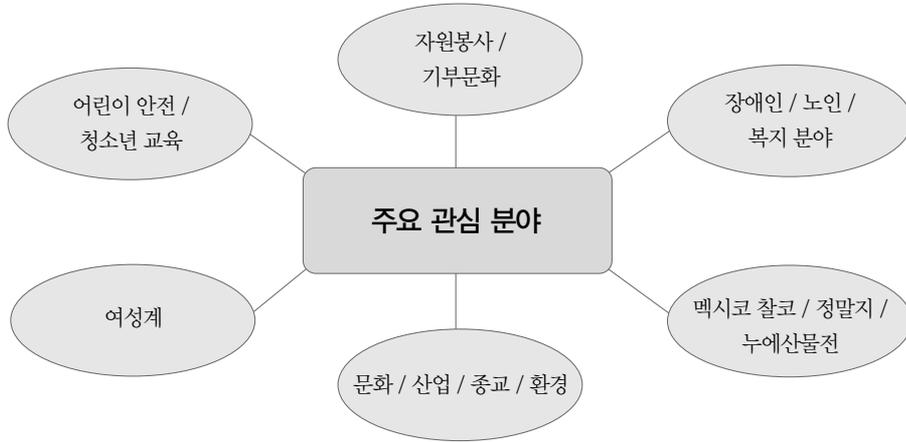
예술의 전당 명예후원회장으로 추대 (2007년 5월 23일)

상춘재에서 열린 추대식에서 추대패를 받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다. 모쪼록 한국 예술이 세계로 뻗어 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가자”고 당부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함. 또 “시간 내기가 어려워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이제 저도 핑계거리가 생겼으니 명예후원회장이 꼭 가야 한다고 하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대통령 모시고 같이 나들이 가겠다”고 약속.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관람 (2007년 7월 12일)

행정 각부 장관 부인들과 함께 예술의 전당을 방문해 ‘김용배의 11시 콘서트’를 관람. 전 좌석 관람료를 2만 원으로 책정하고 낮시간대에 공연하는 등 주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공연. 1부 공연이 끝난 휴식시간에 “저로서는 참여정부 생김 이후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다”며 소감 표현.

### 3) 주요 관심 분야



-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어린이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함
  - 2003년 5월 5일 어린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방문을 계기로 그해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를 함
  - 급식(식품 안전), 소방 훈련(시설 안전),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점검했으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School Zone)’(학교 주변 보호구역)은 참여정부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스쿨존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과 연계, 국민 관심을 제고시켰고 지자체들의 적극적 지원도 이끌어 냄
  
-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에 관심
  - 선진국일수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기부가 활발한 만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
  
- 여성계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있어 여성 전문가 1호 및 여성 경제인 등을 적극 격려

- 특히 OECD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모유 수유 비율에 착안, 직장여성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뒷받침의 하나로 모유수유실 설치를 적극 지원

#### ◆ 어린이 안전/청소년 교육 현장 방문

2003 유럽 코리아재단 장학 프로그램 발족식 참석 (2003년 7월 2일)

“유럽연합 각국과 기업들이 경제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사회복지 활동, 그리고 장학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쏟아 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활동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보다 성숙한 동반자로서 미래의 희망과 번영을 함께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함.

학생 수련원 현장 점검 (2003년 7월 29일)

서울시 학생교육원 대성분원을 방문, 청와대 어린이안전점검단 및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전국 수련원 합동점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상황 점검. 이 자리에서 여름철 급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

미아찾기센터 방문 (2004년 2월 6일)

서울경찰청 미아찾기센터에서 진행된 미아찾기 정책현황과 개선방안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 “저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도로 찾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경찰이 더 애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

학교·여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 (2005년 8월 31일)

선진국 못지않은 밤길 치안서비스를 갖춘 데 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

‘도전 골든벨’ 300회 특집 출연 (2005년 10월 30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21번 문제를 출제하고 학생들에게 한비아 씨의 저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선물.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촬영장에 등장하자 방청석의 학생들이 달려가 대통령을 껴안으며 환호하기도.

이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방문 (2006년 1월 26일)

18세가 되어 자립해야 하는 퇴소 청소년들은 주택문제 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짐. 사회로 나가는 이들의 첫걸음을 격려하며 양복 정장을 선물하고 “성인이 된 만큼 힘든 일이 많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꼭 희망을 이루도록 하라”고 당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체험 (2006년 4월 28일)

KBS가 준비한 ‘좋은나라 운동본부’와 함께 직접 등갯길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방송이 스쿨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면 좋겠다”고 당부.

학교 안전점검의 날 시범행사 참석 (2006년 5월 3일)

서울동자초등학교(광진구 자양동)를 방문, 안전교육을 참관하고 소방체험활동에 참여. 학부모 4명과 함께 교실기구 모서리 보호대를 부착하고 소화기 방수 시범 등을 보임.

영화초등학교 방문, 문화예술 교육 수업 참관 (2006년 10월 18일)

영화감상수업, 영화이해수업, 영화제작수업 참관 및 실습 참여. “요즘 학교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감탄. 특히 “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현장에서 접목하는 모습이 좋다”며 “다른 부처도 이처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말함. 정부는 영화수업뿐 아니라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 및 전문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소년원생, 보육원생, 장애인, 노인, 군인, 농어촌 주민 등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 자원봉사/기부문화 현장 방문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 (2003년 11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고 ‘사랑의 선물’ 제작 활동에 동참 및 격려. “‘사랑의 선물’이 추운 겨울을 맞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이날 함께 제작한 선물들은 태풍 이재민,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됨.

소년원 자선공연 참석 (2003년 12월 8일)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열린 ‘소년원 학생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2003 불우이웃 돕기 자선공연’을 관람. “질풍노도 같은 청소년기에 누구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교하며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

푸드뱅크 기금 마련을 위한 ‘주먹밥 콘서트’에 참석 (2004년 12월 29일)

모금함에 성금을 낸 후, 천막에서 직장인들과 주먹밥을 들며 ‘나눔이 있는 행복한 점심’에 대해 이야기함. 성공회 푸드뱅크는 기금으로 30개 지역에서 하루 1만 1,700여 명의 결식이웃에게 음식을 나눠 주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 영상 메시지 (2005년 3월 17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좀더 평온하고 고통 없이 보살펴 주는 일, 환자의 품위와 인격을 마지막까지 지켜 주는 일, 인생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훌륭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호스피스 활동의 중요성 강조.

대한적십자사 전국봉사원 170여 명 격려 (2005년 3월 29일)

용천역 폭발사고와 쓰나미 참사 등 적십자사 봉사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 사례 발표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고향의 봄’과 ‘사랑으로’를 합창.

#### 적십자봉사원 대축제 참석 (2005년 9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00주년 기념 ‘적십자봉사원 대축제’에 참석해 “참된 공동체의 바탕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라며 “‘사랑은 봉사’라는 구호처럼, 여러분이 펼치는 봉사 활동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함.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전히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성숙한 사회에 걸맞은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자원봉사 대축제 축하 영상 메시지 (2005년 10월 5일)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공동체의 참된 화합을 일구어 내는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성숙한 사회에 걸맞은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을 지적. 정부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함.

####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참석 (2005년 12월 2일)

“정부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력하지만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아직 많은 분들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여러분이 펼치는 사랑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

#### 2005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축사 (2005년 12월 7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05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이웃돕기나 재난구호와 같이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일에서부터, 공정선거와 정책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왔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달 있었던 부산 APEC의 성공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APEC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의를 표함.

## ◆ 장애인/노인/복지 관련 행사 참석

2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2003년 4월 18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진정한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삶을 이끌어 가는 동력인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고 격려. 또한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며 이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광주애육원 방문 (2003년 5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제23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헌화 분향한 후, 단독 일정으로 광주애육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아동들을 위로하고 격려함.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애육원 관계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소명감과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보살펴 줄 것”을 당부.

대구 성보 장애인학교 및 재활원 방문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과 대구를 방문, 지역인사들과의 오찬에 앞서 단독 일정으로 지역 내 공립 장애인 재활학교인 대구성보학교와 성보재활원을 찾아 아동들을 위로하고 격려. “우리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더욱더 버거운 현실이 가슴에 와 닿는다”며 “우리 사회 장애아동들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재활의 꿈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 (2003년 9월 19일)

“굳은 의지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각한 장애도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며 “참가자 모두가 우승자”라고 축하. 이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채용해,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제안.

####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2004년 12월 21일)

일본, 이집트 대사 부인들과 강동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 구내식당에서 원생들에게 반찬을 나눠 주고 식판을 나르는 등 배식에 참여하고 식사를 함께 함. 보청기 등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기구의 보험적용 여부를 일일이 물어 본 후 저소득층에게 더 배려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겠다고 말함.

#### 중랑구 신내 노인요양원 방문 (2005년 1월 28일)

중환자실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환자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조정님 할머니 등 노인 환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얼굴을 닦아 주며 빠른 쾌유를 빕. 이에 앞서 요양원 시설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노숙자나 행려병자 대책에 대한 건의가 잇따르자, 함께 간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시행착오도 이미 겪었고 실상도 제일 잘 아는 만큼 앞으로 복지부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달라”고 당부.

#### 경로효친 큰잔치 참석 (2005년 5월 26일)

어르신들에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치매와 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 3대가 공존하는 모범가족으로 선정된 아홉 가족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함.

#### 2005 전동 휠체어 나눔식 참석 (2005년 11월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2005 전동 휠체어 나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법과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문턱 없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 (2006년 4월 20일)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이며 정부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 또한 2010년까지 10만 개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들이 선진국 수준의 평균소득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함.

#### ◆ 여성계 행사 참석

전국주부교실 지도자대회 참석 (2003년 4월 22일)

여성과 주부들의 사회 참여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 또한 보육문제, 자녀문제 등 주부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부들로 하여금 보다 생산적인 일에 자신의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대한간호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2003년 5월 30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아 달라고 당부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첫 아시아 개최 세계여성학대회 개막 축사 (2005년 6월 20일)

참여정부가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력해 온 성과를 세계 여성들에게 보고하며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모성보호 강화,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여성 국회의원 증가, 보육예산 증액, 여성가족부 출범’ 등에 대해 설명함. 세계여성학대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권양숙 여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행사의 명예대회장을 맡음.

APEC 여성지도자네트워크 개막 축하 (2005년 8월 24일)

APEC 21개국 여성 인사 400여 명이 참가한 이 행사 개막 축하에서 한국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을 설명하고 “여성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될수록 인류 공동번영의 길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 강조.

세계 여성과학기술인대회 개막 연설 (2005년 8월 26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공연구기관 신규채용 인력의 30%를 여성에게 배분하는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설명하고 “창의적이고 섬세한 여성들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같은 첨단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주게 될 것”이라 강조.

제41회 전국여성대회 축하 (2005년 10월 27일)

여성의 역할이 양성평등의 차원을 넘어 국가 발전의 주역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정부도 보육예산을 세 배 이상 늘렸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하 (2006년 3월 2일)

국군의 건강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대국민 의료봉사와 해외파병 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는 간호사관학교의 역할을 평가하고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 수준으로 올려 나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세계 여성경제인 총회 참석 (2006년 5월 2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세계 여성경제인 총회 개막식에 참석. “앞으로 지식정보화가 진전되고 문화·서비스산업이 발전할수록 여성 경제인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힘. “전 세계 기업의 30%가 넘는 여성 기업은 각국의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 강조하고,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함. 아울러 IT,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의 유망산업들을 설명하며 한국 경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기도.

#### 청와대 모유수유소 개소식 참석 (2007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추진 중인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26호가 청와대에 설치됨. “작은 배려와 관심이 있을 때 직장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과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이나 기관 방문 시 모유수유 시설이 없는 곳에 모유시설 설치를 돕기로 약속.

#### 세계여성포럼 2007 개막 축사 (2007년 9월 13일)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 내고,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과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강조. 이어 “지구촌의 보다 평화로운 내일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

### ◆ 문화/산업/종교/환경

#### 영화 <오세암> 시사회 참석 (2003년 4월 24일)

불우 근로 청소년들과 함께 영화 관람.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줄 것”을 당부. 이 행사에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양천구 청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근로 청소년 100여 명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영화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함.

#### 세계박물관대회 참석 (2004년 10월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4 서울 세계박물관대회에 참석해 “문화유산을 얼마나 많

이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잘 보존해 나가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저력을 알 수 있다”며 “사라져 가는 각국 무형문화재의 계승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800회 특집행사 참석 (2005년 11월 6일)

“그동안 ‘거룩한 만남’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살아 있는 취재를 통해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나눔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함. 또 “특히 오늘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들었다”면서 “정부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자랑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밝힘.

‘유니버설 킴’ 호 명명·취향식 축사 (2005년 1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 도입을 추진했던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용한 첫번째 선박이자 초대형 유조선인 ‘유니버설 킴’ 호 취향식에 참석. IMF사태 여파로 해운산업이 위축되던 당시 상황을 슬회하며 현재 부동의 세계 1위를 달리는 조선업을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 5대양 6대주에 해양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자고 당부.

안동 하회동 탈 박물관 방문 (2006년 2월 8일)

“해외에 나가 보면 첨단과학기술이 발달한 곳도 많이 보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가장 그 나라다운 곳”이라며 “역사와 전통이 있고 생활문화가 있는 지역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고 말하며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

세계 누에산물전 참석 (2006년 10월 14일)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사양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바꾼 누에산물전을 둘러보며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본다”고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개막 축하 (2007년 5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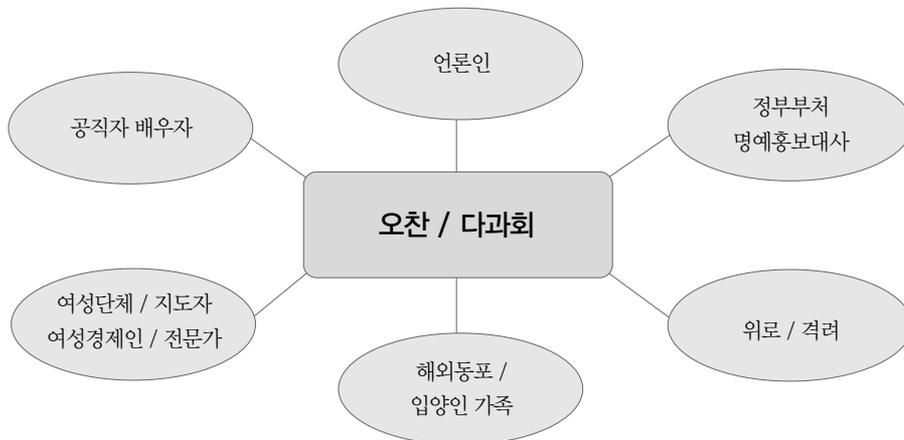
“문화예술이야말로 인류의 진보를 싹틔우는 씨앗”이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이나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말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ARCO 아트페어 행사에 주빈국으로 참가한 바 있음.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실 개관 축하 메시지 (2007년 6월 8일)

“세계 최고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한국실이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전시공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니 더욱 뜻 깊다”고 밝힘. 권양숙 여사는 2003년 5월 방미 당시 박물관을 찾아 한국실 설치를 직접 요청한 바 있으며,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한국실에는 한국의 자연, 전통도예, 한글 등 7개 주제로 유물 280여 점이 전시될 예정.

## II. 청와대 초청 격려 행사

### 1) 오찬/다과회



-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배우자들을 초청,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
  - 국무위원, 비서실/경호실 직원, 광역단체장 및 FTA 협상단 등
- 청와대 출입기자단, 여기자협회, 지역 여기자 등도 초청 격려
- 정부부처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예술인 등을 격려
  - 각 분야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더 높은 자부심과 적극성 기대 메시지 전달
- 여성 단체 / 여성 지도자 / 여성 경제인 / 여성 전문가
  -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와 지도자 및 기량과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직접 경청
- 해외동포 및 입양인과 가족들 초청 격려
  - 지구촌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포들 격려 및 처우 개선과 입양인과 가족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자리 마련
- 불의의 사고 유가족 및 국가 유공자 가족들 초청 격려

#### ◆ 여성계 인사 초청 및 격려

이금형 여성경찰서장 격려 (2003년 4월 17일)

여성출신 3호 경찰서장인 이금형 충북 진천서장을 면담하고 격려. “같은 여성으로서 축하한다. 장하다”며 “아들, 딸이 또 있으면 경찰에 보냈으면 하고 생각했다”고 말함.

200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자 만찬 (2003년 10월 5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국내외 참가자 15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격려사를 통

해 “세계 속의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한인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도 더욱 활발해진다”고 강조.

####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 가족과 오찬 (2004년 6월 1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선정한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은 없어야 하며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먼저 가신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 이날 행사 끝 무렵 회의가 일찍 끝난 노무현 대통령이 예정 없이 찾아와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

#### 200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자 초청 오찬 (2004년 7월 9일)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 올해 4회째인 ‘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는 국내외 여성 인사 350여 명이 참여, ‘한민족 여성공동체’를 주제로 ‘동북아 경제 중심과 한민족 여성’ 등에 대해 논의.

#### 각계 여성 인사 ‘1호’ 오찬 (2005년 1월 25일)

여성 인사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 보육예산 50% 증액, 가족 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 등의 최근 분위기를 전하며 “여성계의 숙원이 하나하나 풀려 가고 있다”고 밝힘.

#### 대한 YWCA 대표단 오찬·격려 (2005년 5월 25일)

여성가족부와 보육예산 순위 배정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여성 일자리 창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결식아동과 모자가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 지방자치와 분권의 성공을 위해 여성지도자 육성에 YWCA의 참여와 노력을 당부하기도 함.

여성 관리직 공무원 초청 오찬 (2005년 9월 7일)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50% 미만인 데 비해 소득 2만 달러인 국가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60.8%인 것을 설명하며 “2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참여와 여성 인력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힘. 또 “정부의 지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의 노력인 만큼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귀감이 돼 달라”고 당부하기도.

비추미 여성대상 수상자 초청 오찬 (2006년 11월 10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여성문화 창달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해 시상하는 비추미 여성대상 관계자들과 올해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귀하신 분들이라 생각돼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한옥인 상춘재에 모셨다”며 “심사하신 분들도 애쓰셨다. 앞으로도 권위 있는 좋은 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인데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함.

부산 생활과학교실 관계자 초청 간담회 (2007년 2월 8일)

2004년 부산 생활과학교실이 시작할 때를 회상하고, “불과 3년 만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생활과학교실이 과학문화 대중화의 산실로, 시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당초 5개소로 출발한 부산 생활과학교실은 올해 6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확대, 교육기간은 주 1회 2시간씩 1년 과정으로 수강료는 무료, 현재 전국 43개 지역 5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여성 경제인 대표 격려 오찬 (2007년 4월 25일)

“여성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의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 친화적인 기업여건 조성과 여성특화지원 등을 통해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이날 행사엔 안운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 참가자들은 여성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지원, 기업 내 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을 건의하기도.

여성계 초청 남북 정상회담 결과 설명 간담회 (2007년 10월 11일)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 여러 나라를 순방했지만 방북 2박 3일처럼 긴장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북에서 따뜻하게 맞아 줬고, 서로 배려해 주고 환영해 주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감동적이었다”고 소회. 이어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합의선언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아울러 남북관계를 결혼생활에 비교하며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심이 필요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며 “남북관계에서도 기다릴 줄도 알고 이해해 주고 이끌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

재일한국부인회 접견 다과회 (2007년 10월 24일)

다과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의의를 설명하고 재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 ◆ 어린이 안전 관련 인사 초청 환담

학교폭력예방운동 관계자 초청 격려 (2003년 5월 31일)

학교폭력예방운동 관계자를 비롯해 시·도별 학생 및 교사대표 50명을 청와대로 초청 환담. “더 많은 국민들이 학교폭력 문제와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씨랜드 화재 유가족 초청 위로 다과 (2003년 7월 3일)

씨랜드 화재 발생 4주기를 맞아 13명의 씨랜드 참사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나눔.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어른들, 그리고 국가와 관계기관은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어린이안전점검단 자문위원과 오찬 간담회 (2004년 11월 3일)

“어린이는 항시 어른들이나 사회가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어린이 급식이나 교통안전문제,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문제, 시설안전문제 등의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

어린이안전점검 자문위원단 격려 오찬 (2007년 9월 18일)

노 대통령이 2003년 5월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포하며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50% 감축을 목표로 만든 어린이안전점검 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6년 현재 2002년에 비해 40.6%의 감소율을 보여 2007년에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전망. 다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

#### ◆ 사회복지/지원봉사자 초청 격려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초청 오찬 (2003년 9월 18일)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어 ‘참여복지의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노인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참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도 함.

희귀병 어린이·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잔치 (2003년 12월 16일)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출연했던 희귀병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잔치를 함께 함. 준비한 선물을 일일이 건네며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함.

보건복지 명예홍보대사 격려 오찬 (2007년 5월 29일)

보건복지 분야에서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방송인, 가수 등 19명을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노고를 격려. “원로 연예인과 젊은이들도 있지만 모두 공인이라고 생각하실 줄 안다”며 “공인에 걸맞은 공익과 사회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활동하는 데 감사를 드린다”고 말함. 또한 명예홍보대사들의 활동 덕분에 결핵, 비만, 암, 흡연 등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입양, 아동학대, 예방, 헌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 ◆ 기타 정책 분야별 인사 초청 격려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다과 (2003년 6월 13일)

도서벽지 어린이 3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를 베풀며 격려. “도서벽지의 교육 여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께서도 서울과 지방이 고루 발전하고 도시 어린이와 시골 어린이들이 함께 훌륭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주위 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항상 큰 꿈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당부.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격려 (2003년 7월 31일)

해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재외동포 교사 250명을 청와대로 초청.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우리 말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네쌍둥이 낳은 송일·김보원 부부 격려 (2007년 7월 27일)

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부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두 부부가 힘을 합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을 키워 줄 것을 당부. 아울러 “정부에서도 아이들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의 양육지원 대책과 함께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늘려 가겠다”고 약속.

모범용사 초청 다과회 (2004년 6월 21일)

국군 모범용사 60명을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 다과를 나누며 격려. “철통같이 지켜 주고 계신 여러분을 대하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며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사도 갖고 월급도 넉넉지 못했을 텐데 항상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함.

독립유공자 후손 접견 (2004년 9월 21일)

러시아 방문 이틀째, 재러 독립유공자 후손 10여 명과 간담회 진행. “오늘의 한국 발전은 여러분의 선친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도 여러분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함.

스미소니언 박물관 부관장 등 접견 (2005년 3월 17일)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국립 자연사박물관에 한국전시실이 생기는 것과 관련 폴 테일러 부관장 등이 권양숙 여사를 방문하고 일정을 설명함. 권양숙 여사는 지난 2003년 5월 방미 중 이 박물관을 찾았을 때 한국실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국비 유학생 초청 오찬 (2007년 10월 18일)

“사우디 국왕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국비로 여러분을 유학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양국 관계에 큰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

## 2) 기념 사진 촬영

- 일정상 오찬/다과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청와대 녹지원이나 영빈관 등에서 기념 사진 촬영에 협조.
- 때로는 공식 일정을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관람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을 보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즉석 기념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함.
- 영부인의 기념 촬영에 대통령도 깜짝 방문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도 함.

### 소록도 어린이들의 청와대 방문 (2004년 6월 10일)

전남 고흥반도의 소록도 어린이들이 청와대를 방문. 당초 어린이날 방문 예정이었으나 어린이들이 권양숙 여사를 만나길 위해 ‘탄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의견을 모아 이날 방문이 이루어짐. 권양숙 여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녹지원에서 ‘비눗방울 놀이’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냄. 이날 행사에는 예정에 없던 노무현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함.

### 소록도 어린이들 청와대 초청 (2007년 5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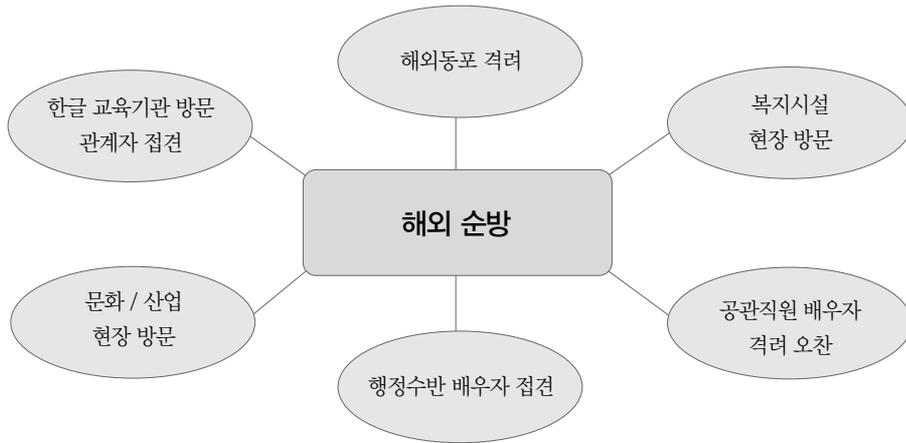
권양숙 여사는 활짝 웃으며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았다. 내년에는 주인이 다를 테지만 그래도 또 오라”며 아이들을 반갑게 맞음. 이날 행사에는 춘천마임축제에 참가 예정인 ‘모단메아리 마임극단’의 강정균 대표가 <신기한 가방>이라는 주제로 마임과 마술을 선보임.

###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동자승 초청 (2007년 5월 17일)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24일)을 맞아 동자승들을 초청하여 조계사, 동화사 동자승 17명 참석함. 동자승들이 연등을 건네며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자,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화답함. 동자승들에게 가방과 모자를 선물함.

### III. 외교업무 수행

#### 1) 해외 순방



- 해외 순방 시 가능하면 한글 교육기관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며, 여의치 않을 시 한글 교육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격려
- 선진국의 복지시설을 시찰하고, 개도국 방문 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격려 후원금 전달
- 방문국과의 협정 내용을 부각할 수 있는 산업이나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연계성을 높이는 현장 등을 방문
  - 과테말라 드림 프로그램, 이슬람 도자기 박물관, 톨스토이 문학상, 로마의 디자인 산업 지도자, 베트남 한국문화원 개원식 등
- 각국 영부인과의 환담 사진과 주요 메시지 기록

- 세계 각국에서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는 공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배우자 격려 오찬을 반드시 마련하고자 함.

#### 뉴욕 한글학교 교사들과 간담회 (2003년 5월 14일)

대통령과 함께 방미하고, 백악관을 방문해 로라 부시 여사와 환담. 로라 여사는 노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과의 유사점에 깊은 관심을 보임. 권양숙 여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미국 병사들의 소중한 희생에 대해 한국인들의 변함없는 사의를 전한다”고 인사.

#### 도쿄 한국학교 등 방문 (2003년 6월 7일)

대통령과 함께 방일하여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도쿄한국학교 방문,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 또한 재일한국부인회의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부야구에 소재한 일본 적십자사 부속 유아원을 방문, 복지시설을 둘러봄.

#### 방중 측면지원 (2003년 7월 8일)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평페이원 주석을 비롯한 간부 일행 접견하고,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회의 활동에 관심 표명.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부인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격려하기도 함.

#### 인도네시아 방문 (2003년 10월 8일)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현지 한글학교를 방문하고 2세들의 한글 교육에 힘써 온 교사들을 격려. 이 학교에 컴퓨터와 액정 모니터, 프린터 등을 선물.

#### 태국 방문 (2003년 10월 20일)

대통령과 함께 태국을 방문. APEC에 참석한 정상 부인들과 함께 왕궁을 시찰하고

오찬을 함께 함. 다음 날 방콕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격려했으며 대사관 직원 부인들과 함께 시내에 위치한 ‘짐 톰슨’ 박물관을 관람.

#### 싱가포르 한인학교 방문 (2003년 10월 23일)

한국 국제학교를 방문. 한 학생이 “영부인이 왜 싱가포르 한국학교에 왔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 공부하는 것이 보고 싶어 그곳의 한국학교에 꼭 가 본다”고 답함.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국제화 시대로 어디에 살든 국제인으로 갖춰야 할 교양과 지식이 있다”며 “이곳 학생들은 매우 유익한 교육을 받는 만큼 세계인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 고아 돌보는 ‘어머니들 헌신’ 에 감사 (2004년 9월 20일)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을 방문. ‘아스타나 SOS 어린이마을’ 을 방문하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머니’ (봉사자들의 호칭)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프로젝션 TV 등을 전달. SOS 어린이마을은 ‘가정식 고아원’ 으로 12개 주택에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음.

#### 모스크바 한국학교 방문 (2004년 9월 22일)

각 학년의 교실을 돌며 학생들과 인사하고 수업도 참관. 교육 담당자들에게 “2·3·4 세들이 우리나라 말과 문화를 잊지 않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함.

#### 멕시코 ‘찰코 소녀의 집’ 방문 (2005년 9월 11일)

멕시코의 가난한 지역에 건립된 무료 교육기관인 ‘찰코 소녀의 집’ 을 방문해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여러분이 자라 멕시코의 훌륭한 숙녀가 됨과 동시에 한국을 사랑하는 우정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학생들과 함께 우리 가요인 ‘탄남’ 을 합창하기도 함.

## 이집트 카이로 한국학교 방문 (2006년 3월 8일)

카이로시 외곽 뉴카이로 까파메야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격려. “우리 말과 글을 열심히 익히는 학생들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다”면서 “세계 속의 당당한 한국인으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힘.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장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알제리 알제대학교 한국어 과정 수강 학생 접견 (2006년 3월 13일)

알제 국제회의장에서 알제대학교 한국어 과정 수강 학생들을 접견, 격려. “여러분이 한국어를 알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알제리에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 주시면 양국의 우호가 증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함. 또 “한국어를 선택하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칭찬드리고 싶다. 한국은 가능성이 아주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놀라운 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격려함.

## 제1차 한·영 여성과학자 포럼 참가자 청와대 초청 (2006년 3월 31일)

“제1차 한·영 여성과학자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양국의 여성 과학자들이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한·영 여성과학자 포럼(1st Korea-UK Women in Science Forum)은 2004년 대통령 내외분의 영국 국빈 방문 시 권양숙 여사가 영국왕립연구소를 방문, 양국 여성 과학기술인 간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심을 표시한 것을 계기로 양국 여성 과학기술인 간 협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6년 3월 3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제1회 포럼을 개최함.

## 베트남 한국문화원 개원식 참석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문화원 개원식에 참석,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양국 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감 표현. 베트남문화원은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에 설립한 최초의 문화원이며 한국어 강의실과 도서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음.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방문 (2006년 11월 20일)

프놈펜에 위치한 소아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 한국 정부는 1974년 국제구호단체에 의해 설립된 이 병원에 지난해부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통해 총 240만 달러의 예산을 제공하고 있음.

백남준기획전 관람 (2007년 2월 14일)

스페인 방문 마지막 날, 마드리드 중심가에 있는 텔레포니카 전시장 방문. 전시장에는 지난 1월 타계한 고 백남준 선생의 특별전이 열림. 권양숙 여사는 그의 대표작 ‘백팔번뇌’, ‘소통/운송’, ‘김유신’, ‘고인돌’ 등 수십 점의 작품을 관람하며 한·스페인의 문화교류에 대해 관심 표명.

과테말라 어린이집 방문 (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 어린이집(Villa de los Ninos)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도서기증행사를 가지고, 10만 달러 상당의 도서지원금을 전달함. 과테말라 어린이집은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기관.

한국어 교육 관계자 및 우수 학생 격려 간담회 (2007년 9월 7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과 호주를 방문하고, 한국어 교육 관계자와 우수 학생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함. 호주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양국 교류협력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함.

북측 여성 지도자들과 간담회 (2007년 10월 2일)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 중, 북측 여성 지도자 11명을 초청해 간담회 진행. “평양에 오는 동안 추수를 하기 전인 들녘을 보면서 서울과 평양이 참 가깝고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현하자, 북측 여성 지도자 대표인 박순희 위원장은 “통일의 마음을 안고 좋은 계절에 평양을 방문한 권 여사와 남측의 여러 인사들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함.

#### 평양 시내 인민대학습당 방문 (2007년 10월 2일)

평소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 권양숙 여사의 행보가 평양에서도 이어짐.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해 북한의 도서관 시설들을 둘러보며 북측 관계자들과 환담. “남과 북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국립박물관 명품 100선』이란 책 10여 권을 인민대학습당에 선물함.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관람 (2007년 10월 3일)

고대관에서 시작해 19개 전시실을 모두 둘러본 후, “(남북이) 서로 보고 싶은 게 많다”며 “(남북 박물관 사이에) 정기적인 교류와 지속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유물의 도록 2권을 북측에 전달함. 박물관 안내를 맡은 북한의 차순용 여성강사가 전통악기 전시관에 전시된 편종과 편각을 이용해 멋진 공연을 보여 주자 큰 박수로 답례함.

#### 고려의학과학원 방문 (2007년 10월 3일)

평양 방문 이틀째, 한의학 연구 및 치료기관인 고려의학과학원을 방문. 고려의학과학원 최득룡 원장의 설명을 듣던 중, “우리 쑥뜸과는 어떻게 다르냐”며 남북 한방 연구 및 치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임.

#### 싱가포르 총리 부인 주최 오찬 참석 (2007년 11월 20일)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 중,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부인이 주최한 아세안+3 정상 배우자를 위한 오찬에 참석하고, 정상 부인들과 함께 오찬장이 마련된 국립박물관 내 주요 시설과 전시물을 둘러봄.

## 2) 외교 접견

- 국빈 방문 또는 실무방문차 방한하는 외국 정상 또는 국빈 배우자와 접견, 환담하는 일정

### 장웨이쥘 중국 상무위원장 부인 접견 (2003년 9월 3일)

우방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부인 장웨이쥘 여사를 접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청소년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환담. 장 여사는 중국의 한류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생신을 축하한다고 전함.

### 클라우소바 체코 대통령 부인과 환담 (2003년 9월 23일)

리비아 클라우소바 체코 대통령 부인을 접견하고 환담. 장애아동과 아동학대 문제가 중요하지만 일반 아동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클라우소바 여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돌봐야 하며, 이를 위해 ‘가출 청소년 센터’와 같은 청소년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함.

### 아일랜드 대통령 명예법학박사 학위 축사 (2005년 3월 24일)

메리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의 이화여대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머지않아 우리도 맥컬리스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함. 특히 아일랜드의 노·사·정 사회협약 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함.

### 베를린 ‘아·태주간 행사’ 관계자들 접견 (2005년 4월 12일)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에서 크노프 장관, 바이트 동아시아 박물관장 등 ‘아·태주간 행사’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2005년 한국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이들과 50분간 한국학 교육과 한국 영화 등 다양한 한·독 문화교류를 논의.

APEC 정상 부인 환영 오찬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 부인들과 회원국 대사 부인들을 초청해 한국 고유의 궁중요리와 전통무용으로 대접. 오찬에 앞서 부산 범어사를 찾아 경내를 둘러보고 전통 차와 다식을 나눔.

UN 사무총장 부인과 환담 (2006년 5월 16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 네인 아난 여사를 접견. 노무현 대통령과 코피 아난 사무총장 내외의 오찬에 앞서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를 둘러봄.

# 4

## 참여정부 주요 정무직

(총리/장관(급)/ 처·청장 / 차관(급))

### 국무총리·장관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현 직
국무총리	고 건(高 建)	2003. 2.27 ~ 2004. 5.24	
	이해찬(李海瓚)	2004. 6.30 ~ 2006. 3.15	국회의원
	한명숙(韓明淑)	2006. 4.20 ~ 2007. 3. 6	국회의원
	한덕수(韓惠洙)	2007. 4. 3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金振杓)	2003. 2.27 ~ 2004. 2.10	국회의원
	이헌재(李憲宰)	2004. 2.11 ~ 2005. 3. 9	
	한덕수(韓惠洙)	2005. 3.15 ~ 2006. 7.17	국무총리
	권오규(權五奎)	2006. 7.18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윤덕홍(尹德弘)	2003. 3. 7 ~ 2003.12.2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영(安秉永)	2003.12.24 ~ 2005. 1. 4	연세대 교수
	이기준(李基俊)	2005. 1. 5 ~ 2005. 1.10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표(金振杓)	2005. 1.28 ~ 2006. 7.20	국회의원

	김병준(金秉準)	2006. 7.21 ~ 2006. 8. 8	정책기획위원장
	김신일(金信一)	2006. 9.20 ~	
(과학기술부 장관)	박호군(朴虎君)	2003. 2.27 ~ 2003.12.28	인천대 총장
	오 명(吳 明)	2003.12.29 ~ 2004.10.17	건국대 총장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吳 明)	2004.10.18 ~ 2006. 2. 9	건국대 총장
	김우식(金雨植)	2006. 2.10 ~	
통일부 장관	정세현(丁世鉉)	2003. 2.27 ~ 2004. 6.30	민화협 상임의장
	정동영(鄭東泳)	2004. 7. 1 ~ 2005.12.30	
	이종석(李鍾奭)	2006. 2.10 ~ 2006.12.10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이재정(李在禎)	2006.12.11 ~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尹永寬)	2003. 2.27 ~ 2004. 1.16	서울대 교수
	반기문(潘基文)	2004. 1.17 ~ 2006.11. 9	UN사무총장
	송민순(宋旻淳)	2006.12. 1 ~	
법무부 장관	강금실(康錦實)	2003. 2.27 ~ 2004. 7.28	
	김승규(金昇圭)	2004. 7.29 ~ 2005. 6.28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천정배(千正培)	2005. 6.29 ~ 2006. 7.25	국회의원
	김성호(金成浩)	2006. 8.30 ~ 2007. 9. 3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국방부 장관	조영길(曹永吉)	2003. 2.27 ~ 2004. 7.28	
	윤광웅(尹光雄)	2004. 7.29 ~ 2006.11.22	한국국방연구원
	김장수(金章洙)	2006.11.23 ~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金斗官)	2003. 2.27 ~ 2003. 9.18	
	허성관(許成寬)	2003. 9.19 ~ 2005. 1. 4	광주과학기술원장
	오영교(吳盈敎)	2005. 1. 5 ~ 2006. 3.21	동국대 총장
	이용섭(李庸燮)	2006. 3.27 ~ 2006.12. 3	
	박명재(朴明在)	2006.12.13 ~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李滄東)	2003. 2.27 ~ 2004. 6.30	영화감독

	정동채(鄭東采)	2004. 7. 1 ~ 2006. 3.26	국회의원
	김명곤(金明坤)	2006. 3.27 ~ 2007. 5. 7	
	김종민(金鍾民)	2007. 5. 8 ~	
농림부 장관	김영진(金泳鎭)	2003. 2.27 ~ 2003. 7.21	민족농어업연구소장
	허상만(許祥萬)	2003. 7.24 ~ 2005. 1. 4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박홍수(朴弘綬)	2005. 1. 5 ~ 2007. 8.30	
	임상규(任祥奎)	2007. 8.31 ~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尹鎭植)	2003. 2.27 ~ 2003.12.16	서울산업대 총장
	이희범(李熙範)	2003.12.17 ~ 2006. 2. 9	무역협회 회장
	정세균(丁世均)	2006. 2.10 ~ 2007. 1. 4	국회의원
	김영주(金榮柱)	2007. 1.29 ~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陳大濟)	2003. 2.27 ~ 2006. 3.21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주) 대표이사
	노준형(盧俊亨)	2006. 3.28 ~ 2007. 8.27	서울산업대 총장
	유영환(柳英煥)	2007. 9. 4 ~	
보건복지부 장관	김화중(金花中)	2003. 2.27 ~ 2004. 6.30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근태(金槿泰)	2004. 7. 1 ~ 2005.12.30	국회의원
	유시민(柳時敏)	2006. 2.10 ~ 2007. 5.24	국회의원
	변재진(卞在進)	2007. 6.18 ~	
환경부 장관	한명숙(韓明淑)	2003. 2.27 ~ 2004. 2.15	국회의원
	곽결호(郭決鎬)	2004. 2.18 ~ 2005. 6.28	수자원공사 사장
	이재용(李在庸)	2005. 6.29 ~ 2006. 3.2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치범(李致範)	2006. 4. 7 ~ 2007. 9. 4	
	이규용(李圭用)	2007. 9.21 ~	
노동부 장관	권기홍(權奇洪)	2003. 2.27 ~ 2004. 2.10	단국대 총장
	김대환(金大煥)	2004. 2.11 ~ 2006. 2. 9	인하대 교수
	이상수(李相洙)	2006. 2.10 ~	
(여성부 장관)	지은희(池銀姬)	2003. 2.27 ~ 2005. 1. 4	덕성여대 총장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진(張夏眞)	2005. 1. 5 ~	
건설교통부 장관	최종찬(崔鍾璨)	2003. 2.27 ~ 2003.12.28	롯데그룹 고문
	강동석(姜東錫)	2003.12.29 ~ 2005. 3.28	인천엑스포조직위 위원장
	추병직(秋秉直)	2005. 4. 6 ~ 2006.11.15	
	이용섭(李庸燮)	2006.12.11 ~	
해양수산부 장관	허성관(許成寬)	2003. 2.27 ~ 2003. 9.18	광주과학기술원장
	최낙정(崔洛正)	2003. 9.19 ~ 2003.10. 1	해양문화재단 이사장
	장승우(張丞玕)	2003.10.14 ~ 2005. 1. 4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오거돈(吳巨敦)	2005. 1. 5 ~ 2006. 3.21	
	김성진(金成珍)	2006. 3.27 ~ 2007. 5.10	
기획예산처 장관	강무현(姜武賢)	2007. 5.11 ~	
	박봉흠(朴奉欽)	2003. 2.27 ~ 2004. 1. 1	금융통화위원
	김병일(金炳日)	2004. 1. 2 ~ 2005. 1.27	삼성고른교육기화재단이사
	변양균(卞良均)	2005. 1.28 ~ 2006. 7. 3	
	장병완(張秉浣)	2006. 7.21 ~	

## 감사원장 및 장관급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현 직
감사원장	이종남(李種南)	1999. 9.29 ~ 2003. 9.28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윤철(田允喆)	2003.11.10 ~ 2007.11. 9	
	전윤철(田允喆)	2007.11.10 ~	
대통령비서실장	문희상(文喜相)	2003. 2.25 ~ 2004. 2.13	국회의원
	김우식(金雨植)	2004. 2.14 ~ 2005. 8.25	과학기술부 장관
	이병완(李炳浣)	2005. 8.26 ~ 2007. 3.11	대통령 정무특보

문재인(文在寅) 2007. 3.12 ~

대통령정책실장	이정우(李廷雨)	2003. 2.25 ~ 2004. 1. 1	경북대 교수
	박봉흠(朴奉欽)	2004. 1. 2 ~ 2004. 6.13	금융통화위원
	김병준(金秉準)	2004. 6.14 ~ 2006. 5.31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권오규(權五奎)	2006. 6. 1 ~ 2006. 7. 3	재정경제부 장관
	변양균(卞良均)	2006. 7. 4 ~ 2007. 9.10	
	성경룡(成旻隆)	2007. 9.21 ~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송민순(宋旻淳)	2006. 1.27 ~ 2006.11.30	외교통상부 장관
	백종천(白鍾天)	2006.12. 1 ~	NSC사무처장 겸임
(국가안보보좌관)	라종일(羅鍾一)	2003. 2.25 ~ 2004. 1.29	우석대 총장
	권진호(權鎭鎬)	2004. 1.30 ~ 2006. 1.26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趙昌鉉)	2002. 5.24 ~ 2005. 5.23	방송위원회 위원장
	조창현(趙昌鉉)	2005. 5.24 ~ 2006. 8. 8	방송위원회 위원장
	권오룡(權五龍)	2006. 8. 9 ~	
국무조정실장	이영탁(李永鐸)	2003. 2.27 ~ 2004. 2.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한덕수(韓惠洙)	2004. 2.11 ~ 2005. 3.14	국무총리
	조영택(趙泳澤)	2005. 3.23 ~ 2006. 3.28	문화중심도시 위원장
	김영주(金榮柱)	2006. 3.29 ~ 2007. 1. 8	산자부 장관
	임상규(任祥奎)	2007. 1. 8 ~ 2007. 8. 8	농림부 장관
	윤대희(尹大熙)	2007. 8. 9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철규(姜哲圭)	2003. 3.10 ~ 2006. 3. 9	서울시립대 교수
	권오승(權五乘)	2006. 3.16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정재(李晶載)	2003. 3.17 ~ 2004. 8. 2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윤증현(尹增鉉)	2004. 8. 4 ~ 2007. 8. 3	
	김용덕(金容德)	2007. 8. 4 ~	
검찰총장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변호사
	김종빈(金鍾彬)	2005. 4. 3 ~ 2005.10.16	변호사

	정상명(鄭相明)	2005.11.24 ~ 2007.11.23	
	임채진(林采珍)	2007.11.24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신 홍(申 弘)	2003. 3.25 ~ 2006. 4. 9	중노위 심판담당공익위원
	김유성(金裕盛)	2006. 4.10 ~ 2007. 8. 7	
	이원보(李元甫)	2007. 8. 9 ~	
법제처장 *장관급 격상	성광원(成光元)	2003. 3. 3 ~ 2005. 1. 4	
	김선욱(金善旭)	2005. 1. 5 ~ 2007. 4.19	
	남기명(南基明)	2007. 4.20 ~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안주섭(安周燮)	2003. 3. 3 ~ 2004. 9.23	한국코치협회 회장
	박유철(朴維澈)	2004. 9.24 ~ 2007. 4.19	
	김정복(金井復)	2007. 4.20 ~	
국가정보원장	신 건(辛 建)	2001. 3.26 ~ 2003. 4.24	변호사
	고영구(高泳耆)	2003. 4.25 ~ 2005. 7.10	변호사
	김승규(金昇圭)	2005. 7.11 ~ 2006.11.22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김만복(金萬福)	2006.11.23 ~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	2003. 5.10 ~ 2006. 5. 9	
	이상희(李相禧)	2006. 7.14 ~ 2006. 8.24	서울대 명예교수
	조창현(趙昌鉉)	2006. 9.25 ~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韓相範)	2002. 4.18 ~ 2004. 4.17	
	한상범(韓相範)	2004. 4.18 ~ 2004.12.31	동국대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金昌國)	2001.11.25 ~ 2004.11.24	변호사
	최영도(崔永道)	2004.12.24 ~ 2005. 3.22	변호사
	조영환(趙永晁)	2005. 4. 4 ~ 2006.10. 1	변호사
	안경환(安京煥)	2006.10.30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	2003. 3.25 ~ 2004. 8.26	공직자윤리위 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성진(鄭城鎭)	2004. 8.30 ~ 2007. 8. 8	법무부 장관
	이종백(李鐘伯)	2007. 8. 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	강만길(姜萬吉)	2005. 5.31 ~ 2007. 5.30
	성대경(成大慶)	2007. 6.2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송철호(宋哲鎬)	2005.10.30 ~ 2007.11.20
	신철영(申澈永)	2007.11.30 ~ 2010.11.29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송기인(宋基寅)	2005.12. 1 ~ 2007.11.30
	안병욱(安秉旭)	2007.12. 1 ~
군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	이해동(李海東)	2006. 1. 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	2006. 7.13 ~

## 차 관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현 직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金光琳)	2003. 3. 3 ~ 2005. 6. 1	세명대 총장
	박병원(朴炳元)	2005. 6. 2 ~ 2005. 7.27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박병원(朴炳元)	2005. 7.28 ~ 2007. 2. 5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석동(金錫東)	2007. 2. 9 ~	
재정경제부 제2차관	권태신(權泰信)	2005. 7.28 ~ 2006. 5.16	주OECD대표부 대사
	진동수(陳棟洙)	2006. 5.17 ~ 2007. 7.26	
	임영록(林英鹿)	2007. 7.27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서범석(徐凡錫)	2003. 3.10 ~ 2004. 7.19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김영식(金永植)	2004. 7.20 ~ 2006. 1.31	대교협 사무총장
	이기우(李基雨)	2006. 2. 1 ~ 2006. 3.15	재능대학 학장
	이중서(李鍾瑞)	2006. 3.22 ~ 2007. 6.20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서남수(徐南洙)	2007. 6.21 ~	
과학기술부 차관	권오갑(權五甲)	2003. 3. 3 ~ 2004. 1.28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임상규(任祥奎)	2004. 1.29 ~ 2004.10.25	국무조정실장
	최석식(崔石植)	2004.10.28 ~ 2006. 1.31	건국대 대외협력부총장
	박영일(朴永逸)	2006. 2. 1 ~ 2007. 7.26	
	정 윤(鄭 潤)	2007. 7.27 ~	
통일부 차관	조건식(趙建植)	2003. 3. 3 ~ 2004. 7.19	
	이봉조(李鳳朝)	2004. 7.20 ~ 2006. 2.16	통일연구원 원장
	신연상(申彦祥)	2006. 2.17 ~ 2007. 8. 8	
	이관세(李寬世)	2007. 8. 9 ~	
(외교통상부 차관)	김재섭(金在燮)	2003. 3. 3 ~ 2004. 1.28	
	최영진(崔英鎭)	2004. 1.29 ~ 2005. 1.24	주UN대표부 대사
	이태식(李泰植)	2005. 1.25 ~ 2005. 7.27	
외교통상부 제1차관	이태식(李泰植)	2005. 7.28 ~ 2005. 9.29	주미국 대사
	유명환(柳明桓)	2005. 9.30 ~ 2006.11.30	주일본 대사
	조중표(趙重杓)	2006.12. 1 ~	
외교통상부 제2차관	유명환(柳明桓)	2005. 7.28 ~ 2005. 9.29	주일본 대사
	이규형(李揆亨)	2005. 9.30 ~ 2006.11.30	주러시아 대사
	김호영(金浩榮)	2006.12. 1 ~	
법무부 차관	정상명(鄭相明)	2003. 3.13 ~ 2004. 5.31	검찰총장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25	변호사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24	헌법재판관
	정동기(鄭東基)	2006. 8.25 ~ 2007. 3. 4	대검 차장검사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국방부 차관	유보선(俞普善)	2003. 3. 3 ~ 2004. 8.29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유효일(劉孝一)	2004. 8.30 ~ 2005. 5. 6	
	황규식(黃圭軾)	2005. 5.27 ~ 2006.11.26	

	김영룡(金榮龍)	2006.11.27 ~	
(행정자치부 차관)	김주현(金住炫)	2003. 3. 3 ~ 2004. 7.19	지방행정연구원장
	권오룡(權五龍)	2004. 7.20 ~ 2005. 7.27	중앙인사위원장
행정자치부 제1차관	권오룡(權五龍)	2005. 7.28 ~ 2006. 8. 8	중앙인사위원장
	최양식(崔良植)	2006. 8. 9 ~	
행정자치부 제2차관	문원경(文元京)	2005. 7.28 ~ 2006. 1.31	소방방재청장
	장인태(張仁太)	2006. 2. 1 ~ 2007. 4.19	
	한범덕(韓凡憲)	2007. 4.20 ~	
문화관광부 차관	오지철(吳志哲)	2003. 3. 3 ~ 2004. 7. 1	
	배종신(裴鍾信)	2004. 7. 7 ~ 2006. 1.31	
	유진룡(劉震龍)	2006. 2. 1 ~ 2006. 8. 8	을지대 교수
	박양우(朴良雨)	2006. 8. 9 ~	
농림부 차관	김정호(金正鎬)	2003. 3. 3 ~ 2004. 1.28	사료협회 회장
	김주수(金周秀)	2004. 1.29 ~ 2004. 9.16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이명수(李銘洙)	2004.10.18 ~ 2006. 8. 8	주넨마크 대사
	박해상(朴海相)	2006. 8. 9 ~	
(산업자원부 차관)	김칠두(金七斗)	2003. 3. 3 ~ 2004. 7.19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조환익(趙煥益)	2004. 7.20 ~ 2005. 7.27	수출보험공사 사장
산업자원부 제1차관	조환익(趙煥益)	2005. 7.28 ~ 2006. 1.31	수출보험공사 사장
	김중갑(金鍾甲)	2006. 2. 1 ~ 2007. 2. 8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오영호(吳永鎬)	2007. 2. 9 ~	
산업자원부 제2차관	이원걸(李源杰)	2005. 7.28 ~ 2007. 2. 5	한국전력 사장
	이재훈(李載勳)	2007. 2. 9 ~	
정보통신부 차관	변재일(卞在一)	2003. 3. 3 ~ 2004. 1.28	국회의원
	김창곤(金彰坤)	2004. 1.29 ~ 2005. 1.2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노준형(盧俊亨)	2005. 1.21 ~ 2006. 3.27	서울산업대 총장
	유영환(柳英煥)	2006. 3.28 ~ 2007. 8.30	정통부 장관

	김동수(金東洙)	2007. 8.31 ~	
보건복지부 차관	강윤구(姜允求)	2003. 3. 3 ~ 2004. 7.19	순천향대 교수
	송재성(宋在聖)	2004. 7.20 ~ 2006. 2.16	
	변재진(卞在進)	2006. 2.17 ~ 2007. 6.17	보건복지부 장관
	문창진(文昌珍)	2007. 6.21 ~	
환경부 차관	곽결호(郭決鎬)	2003. 3. 3 ~ 2004. 2.17	수자원공사 사장
	박선숙(朴仙淑)	2004. 2.27 ~ 2006. 1.31	
	이규용(李圭用)	2006. 2. 1 ~ 2007. 9.20	환경부 장관
	김수현(金秀顯)	2007. 9.21 ~	
노동부 차관	박길상(朴吉祥)	2003. 3. 3 ~ 2004. 9. 2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정병석(鄭秉錫)	2004. 9. 3 ~ 2006. 1.31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김성중(金聖中)	2006. 2. 1 ~ 2007. 8.30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민기(盧民基)	2007. 8.31 ~	
(여성부 차관)	안재현(安載憲)	2003. 3. 3 ~ 2004. 7.19	충북과학대학 학장
여성가족부 차관	신현택(申鉉澤)	2004. 7.20 ~ 2006. 1.31	예술의 전당 사장
	김창순(金昌淳)	2006. 2. 1 ~ 2007. 8. 8	
	박승주(朴昇柱)	2007. 8. 9 ~	
건설교통부 차관	최재덕(崔在德)	2003. 3. 3 ~ 2004. 9.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세호(金世浩)	2004. 9. 3 ~ 2005. 5. 6	
	김용덕(金容德)	2005. 5.27 ~ 2006.11.26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춘희(李春熙)	2006.11.27 ~	
해양수산부 차관	최낙정(崔洛正)	2003. 3. 3 ~ 2003. 9.18	해양문화재단 이사장
	김영남(金英南)	2003. 9.29 ~ 2004.10.17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무현(姜武賢)	2004.10.18 ~ 2006. 8. 8	해수부 장관
	이 은(李 垠)	2006. 8. 9 ~	
기획예산처 차관	변양균(卞良均)	2003. 3. 3 ~ 2005. 1.27	
	장병완(張秉浣)	2005. 2. 7 ~ 2006. 7.20	기획예산처 장관

정해방(丁海昉) 2006. 8. 9 ~ 2007. 3.30

반장식(潘長植) 2007. 4.20 ~

## 처·청장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현 직
(법제처장)	성광원(成光元)	2003. 3. 3 ~ 2004. 3.10	
국정홍보처장	조영동(趙永東)	2003. 3. 7 ~ 2004. 2.10	
	정순균(鄭順均)	2004. 2.11 ~ 2005. 3.22	방송광고공사 사장
	김창호(金蒼浩)	2005. 3.23 ~	
(국가보훈처장)	안주섭(安周燮)	2003. 3. 3 ~ 2004. 3.10	
국세청장	이용섭(李庸燮)	2003. 3.24 ~ 2005. 3.13	
	이주성(李周成)	2005. 3.15 ~ 2006. 6.29	
	전군표(全君杓)	2006. 7.18 ~ 2007.11. 7	
	한상률(韓相律)	2007.11.30 ~	
관세청장	김용덕(金容德)	2003. 3. 3 ~ 2005. 5.26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성윤갑(成允甲)	2005. 6. 2 ~	
조달청장	김경섭(金敬燮)	2003. 3. 3 ~ 2003.12.16	감사위원
	최경수(崔庚洙)	2003.12.30 ~ 2005. 7.27	
	진동수(陳棟洙)	2005. 7.28 ~ 2006. 5.16	재경부 제2차관
	김용민(金容珉)	2006. 6.15 ~ 2007. 7.26	경제보좌관
	김성진(金聖眞)	2007. 7.27 ~	
통계청장 *차관급 격상 (직제개편 7.22자)	오갑원(吳甲元)	2005. 7.28 ~ 2006. 8. 8	
	김대유(金大猷)	2006. 8. 9 ~ 2007. 8. 8	경제정책수석
	이창호(李昌昊)	2007. 8. 9 ~	

기 상 청 장 *차관급 격상 (직제개편 7.22자)	신경섭(申慶燮)	2005. 7.28 ~ 2006. 1.31	작고
	이만기(李萬基)	2006. 2. 1 ~	
병무청장	김두성(金斗星)	2003. 3. 3 ~ 2005. 1.20	
	윤규혁(尹圭赫)	2005. 1.21 ~ 2006. 8. 8	
	강광석(姜光錫)	2006. 8. 9 ~	
방위사업청장	김정일(金烜一)	2006. 1. 1 ~ 2006. 7.24	
	이선희(李仙熙)	2006. 8. 9 ~	
경찰청장 (치안총감)	최기문(崔圻文)	2003. 3.21 ~ 2005. 1.18	계명대 초빙교수
	허준영(許淮榮)	2005. 1.19 ~ 2005.12.29	
	이택순(李宅淳)	2006. 2.10 ~ 2008. 2. 9	
소방방재청장	권 욱(權 郁)	2004. 6. 1 ~ 2006. 1.31	
	문원경(文元京)	2006. 2. 1 ~	
문화재청장 *차관급 격상 (직제개편 3.11자)	노태섭(盧太燮)	2004. 3.11 ~ 2004. 9.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
	유홍준(俞弘濬)	2004. 9. 3 ~	
농촌진흥청장	김영욱(金榮旭)	2003. 3. 3 ~ 2004. 7.19	
	손정수(孫貞秀)	2004. 7.20 ~ 2006. 1.31	상지대 초빙교수
	김인식(金仁植)	2006. 2. 1 ~	
산림청장	최종수(崔鍾秀)	2003. 3. 3 ~ 2004. 7.19	공해방지사업단 이사장
	조연환(曹連煥)	2004. 7.20 ~ 2006. 1.31	농협경제연구소 소장
	서승진(徐承鎭)	2006. 2. 1 ~	
중소기업청장	유창무(柳昌茂)	2003. 3. 3 ~ 2004. 7.19	무역협회 부회장
	김성진(金成珍)	2004. 7.20 ~ 2006. 3.21	
	이현재(李賢在)	2006. 3.22 ~	
특허청장	하동만(河東萬)	2003. 3. 3 ~ 2004. 9. 2	
	김종갑(金鍾甲)	2004. 9. 3 ~ 2006. 1.31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전상우(全湘雨)	2006. 2. 1 ~ 2006. 4.30	
	전상우(全湘雨)	2006. 5. 1 ~ 2008. 4.3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심창구(沈昌求)	2003. 3. 3 ~ 2004. 9. 2	서울대 교수
	김정숙(金貞淑)	2004. 9. 3 ~ 2006. 1.31	
	문창진(文昌珍)	2006. 2. 1 ~ 2007. 6.20	보건복지부 차관
	김명현(金明炫)	2007. 6.21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춘희(李春熙)	2006. 1. 1 ~ 2006.11.26	건교부 차관
	남인희(南仁熙)	2006.11.27 ~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 격상 (직제개편 7.22자)	이승재(李承栽)	2005. 7.28 ~ 2006. 8. 8	변호사
	권동옥(權東玉)	2006. 8. 9 ~	
(철도청장)	김세호(金世浩)	2003. 3. 3 ~ 2004. 9. 2	
	신광순(申光淳)	2004.10.26 ~ 2004.12.31	

## 차관급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현 직
(정무수석비서관)	유인태(柳寅泰)	2003. 2.25 ~ 2004. 2.13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	권오규(權五奎)	2003. 2.25 ~ 2004. 5.16	재경부 장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원덕(李源德)	2004. 5.17 ~ 2006. 1.26	직업능력개발원장
	김용익(金容益)	2006. 1.27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김영주(金榮柱)	2004. 5.17 ~ 2004.12.23	산자부 장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김영주(金榮柱)	2004.12.24 ~ 2006. 3.28	산자부 장관
	권오규(權五奎)	2006. 4.18 ~ 2006. 5.31	재경부 장관
	윤대희(尹大熙)	2006. 6. 1 ~ 2007. 8. 8	국무조정실장
	김대유(金大猷)	2007. 8. 9 ~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文在寅)	2003. 2.25 ~ 2004. 2.13	대통령 비서실장
	박정규(朴正圭)	2004. 2.14 ~ 2005. 1.13	변호사

	문재인(文在寅)	2005. 1.21 ~ 2006. 5. 3	대통령 비서실장
	전해철(全海澈)	2006. 5. 4 ~ 2007.12.21	변호사
	이호철(李縞喆)	2007.12.22 ~	
홍보수석비서관	이해성(李海成)	2003. 2.25 ~ 2003. 8.24	조폐공사 사장
	이병완(李炳浣)	2003. 8.25 ~ 2005. 2.17	대통령 정무특보
	조기숙(趙己淑)	2005. 2.18 ~ 2006. 2.16	이화여대 교수
	이백만(李百萬)	2006. 2.17 ~ 2006.11.15	대통령 홍보특보
	윤승용(尹勝容)	2006.12.15 ~ 2007.12.21	
	천호선(千皓宣)	2007.12.22 ~	
(국민참여수석비서관)	박주현(朴株賢)	2003. 2.25 ~ 2004. 5.16	변호사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문재인(文在寅)	2004. 5.17 ~ 2005. 1.20	대통령 비서실장
	이강철(李康哲)	2005. 1.25 ~ 2005. 9.27	대통령 정무특보
	황인성(黃寅成)	2005.11.21 ~ 2006. 5. 3	외교부 평화협력대사
	이정호(李貞浩)	2006. 5. 4 ~ 2007. 7.26	부경대 교수
	차성수(車聖秀)	2007. 7.27 ~	
(인사보좌관)	정찬용(鄭燦龍)	2003. 2.25 ~ 2005. 1.13	여수엑스포유치위 부위원장
인사수석비서관	김완기(金完基)	2005. 1.21 ~ 2006. 5. 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박남춘(朴南春)	2006. 5. 4 ~ 2007.12.21	
	정영애(鄭映愛)	2007.12.22 ~	
혁신관리수석비서관	이용섭(李庸燮)	2005. 4.27 ~ 2006. 3.20	
	차의환(車義煥)	2006. 5. 4 ~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	서주석(徐柱錫)	2006. 2.17 ~ 2006.11.30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병세(尹炳世)	2006.12. 1 ~	
경제보좌관	조운제(趙潤濟)	2003. 2.28 ~ 2005. 1.24	주영국 대사
	정문수(丁文秀)	2005. 1.25 ~ 2006.11.15	
	김용덕(金容德)	2006.11.27 ~ 2007. 7.26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김용민(金容珉)	2007. 7.27 ~ 2007.12.27	감사위원

(외교보좌관)	반기문(潘基文)	2003. 2.25 ~ 2004. 1.16	UN 사무총장
	정우성(丁宇聲)	2004. 8.30 ~ 2006. 1.26	주EU대표부 대사
(국방보좌관)	김희상(金熙相)	2003. 2.25 ~ 2004. 1.29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윤광웅(尹光雄)	2004. 1.30 ~ 2004. 7.28	한국국방연구원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김태유(金泰由)	2003. 2.25 ~ 2004. 1.29	서울대 교수
	박기영(朴基榮)	2004. 1.30 ~ 2006. 1.25	순천대 교수
	김선화(金璿和)	2006. 5. 4 ~	
대통령경호실장	김세욱(金世鈺)	2003. 3. 3 ~ 2007. 3.11	
	염상국(廉相國)	2007. 3.12 ~	
감사위원	윤은중(尹銀重)	1999.10.25 ~ 2003.10.24	
	편호범(片浩範)	2003.11.14 ~ 2007.11.13	
	하복동(河福東)	2007.11.15 ~	
감사위원	박승일(朴勝一)	1999.12.16 ~ 2003.12.15	
	김경섭(金敬燮)	2003.12.17 ~ 2007.12.16	
	김용민(金容珉)	2007.12.28 ~	
감사위원	한광수(韓光洙)	2000. 3.24 ~ 2004. 3.23	변호사
	양인석(梁仁錫)	2004. 3.24 ~	
감사위원	정휘영(鄭輝泳)	2001. 7.18 ~ 2005. 2.24	청양대 학장
	김종신(金鍾信)	2005. 2.25 ~	
감사위원	노옥섭(盧鈺燮)	2002. 3.26 ~ 2006. 3.25	코리안리 사외이사
	박종구(朴宗九)	2006. 3.27 ~	
감사위원	이원창(李源昌)	2002. 3.26 ~ 2006. 3.25	삼성생명화재 사외이사
	이석형(李錫炯)	2006. 3.27 ~	
감사원 사무총장	황병기(黃炳基)	2002. 3.26 ~ 2003.11.13	신세계백화점 사외이사
	김종신(金鍾信)	2003.11.14 ~ 2005. 2.24	감사위원
	오정희(吳正熺)	2005. 2.25 ~ 2006.12.14	한국자금증개 대표이사
	김조원(金照源)	2006.12.15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	이중석(李鍾奭)	2003. 3.24 ~ 2006. 2. 9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법개정 폐지(2006.10.4)			
국무총리비서실장	탁병오(卓秉伍)	2003. 3. 3 ~ 2003. 7.29	
	김대곤(金大坤)	2003. 8.12 ~ 2004. 7.22	
	이기우(李基雨)	2004. 7.23 ~ 2006. 1.31	재능대학 학장
	김성진(金成珍)	2006. 4.25 ~ 2007. 4. 8	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
	윤후덕(尹厚德)	2007. 4. 9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조영택(趙泳澤)	2003. 8. 1 ~ 2005. 3.22	문화중심도시 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俞宗相)	2005. 4. 4 ~ 2007. 1.25	
	이병진(李秉珍)	2007. 1.26 ~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최경수(崔慶洙)	2003. 8. 1 ~ 2005. 3.23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최경수(崔慶洙)	2005. 4. 4 ~ 2006. 1.31	
	박종구(朴鍾九)	2006. 2. 1 ~ 2007. 1.25	과학기술본부장
	신철식(申喆湜)	2007. 1.26 ~	
법제처차장	박세진(朴世鎭)	2004. 3.20 ~ 2005. 7.27	한국법제연구원장
*차관급 격상 (직제개편 3.11자)	남기명(南基明)	2005. 7.28 ~ 2007. 4.20	법제처장
	김기표(金基杓)	2007. 4.23 ~	
국가보훈처차장	배철호(裵哲浩)	2004. 3.18 ~ 2005. 6. 1	국회예산정책처장
*차관급 격상 (직제개편 3.11자)	김정복(金井夏)	2005. 6.28 ~ 2007. 4.20	국가보훈처장
	정일권(鄭一權)	2007. 4.23 ~ 2007.11.11	
	김흥걸(金興傑)	2007.11.23 ~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조학국(趙學國)	2003. 3.17 ~ 2005. 7.27	법무법인광장 고문
	강대형(姜大衡)	2005. 7.28 ~ 2006. 8. 8	법무법인케이씨엘 고문
	김병배(金炳培)	2006. 8. 9 ~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광웅(尹光雄)	2003. 3. 3 ~ 2004. 1.29	한국국방연구원
	김희상(金熙相)	2004. 2.11 ~ 2006. 2.16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안광찬(安光瓚)	2006. 2.17 ~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崔英姬)	2005. 4.27 ~ 2008. 4.26	
*차관급 격상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李東傑)	2003. 3.21 ~ 2004. 9. 2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천식(梁天植)	2004. 9. 3 ~ 2006. 9.10	수출입은행장
	김석동(金錫東)	2006.10. 2 ~ 2007. 2. 8	재정경제부 제1차관
	윤용로(尹庸老)	2007. 2. 9 ~ 2007.12.20	중소기업은행장
	이승우(李昇雨)	2007.12.21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상규(任祥奎)	2004.10.26 ~ 2007. 1. 8	농림부 장관
	박종구(朴鍾九)	2007. 1.26 ~	
통상교섭본부장	황두연(黃斗淵)	2001. 2.22 ~ 2003. 3. 6	
	황두연(黃斗淵)	2003. 3. 7 ~ 2004. 7.28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김현종(金鉉宗)	2004. 7.29 ~ 2007. 8. 8	주UN대표부 대사
	김중훈(金宗燾)	2007. 8. 9 ~	
(외교안보연구원장)	신성오(申成梧)	2002. 2.19 ~ 2003. 3.31	
※ 2005.4.15 개정 : 차관급 또는 14등급 외무관 → 14등급 외무관	최영진(崔英鎭)	2003. 4. 1 ~ 2004. 1.28	주UN대표부 대사
	한태규(韓泰奎)	2004. 3.18 ~ 2005.12.25	주타이 대사
	조중표(趙重杓)	2005.12.26 ~ 2006.11.30	외교부 제1차관
	이주흠(李柱欽)	2006.12.19 ~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채용(丁采隆)	2003. 3. 3 ~ 2003. 8.11	
	박명재(朴明在)	2003. 8.12 ~ 2006. 3.30	행자부 장관
	이성열(李星烈)	2006. 4. 7 ~ 2007. 8.22	지적공사 사장
	이승우(李升雨)	2007. 8.31 ~ 2008. 1. 6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중양(金重養)	2002. 7.19 ~ 2003. 6. 3	영산대 교수
	김완기(金完基)	2003. 6. 4 ~ 2005. 1.20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이성열(李星烈)	2005. 1.28 ~ 2006. 4. 6	대한지적공사 사장
	정택현(鄭澤炫)	2006. 4. 7 ~	
경찰위원회	이강중(李康鐘)	2000. 7.31 ~ 2003. 7.30	

상임위원	김형진(金炯鎭) 2003. 7.31 ~ 2006. 7.30 이규식(李奎植) 2006. 7.31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성무(李成茂) 1999. 8. 2 ~ 2003. 6. 3 이만열(李萬烈) 2003. 6. 4 ~ 2006. 8. 8 유영렬(柳永烈) 2006. 8. 9 ~	역사문화연구원장 국가보훈위 부위원장
황해도지사	정용근(鄭容根) 2000.12. 5 ~ 2003. 5. 1 고순호(高順鎬) 2003. 5. 2 ~ 2006. 6.22 설봉희(薛鳳熙) 2006. 6.23 ~	
평안남도지사	강의용(姜義勇) 2000.12. 5 ~ 2003. 5. 1 장 암(張 岩) 2003. 5. 2 ~ 2006. 6.22 정중렬(鄭重烈) 2006. 6.23 ~	
평안북도지사	백형인(白亨麟) 2000.12. 5 ~ 2003. 5. 1 차인태(車仁泰) 2003. 5. 2 ~ 2007. 2.27 백도웅(白道雄) 2007. 4. 9 ~	
함경남도지사	유재만(劉在萬) 1999. 7.12 ~ 2003. 5. 1 김기형(金基亨) 2003. 5. 2 ~ 2006. 6.22 김 청(金 淸) 2006. 6.23 ~	
함경북도지사	남성관(南星寬) 1999. 7.12 ~ 2003. 5. 1 오무영(吳武英) 2003. 5. 2 ~ 2006. 6.22 신효현(申孝憲) 2006. 6.23 ~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건무(李健茂) 2003. 4. 2 ~ 2006. 8. 8 김홍남(金紅男) 2006. 8. 9 ~	용인대 교수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우석(金禹奭) 2002. 7. 1 ~ 2003.11. 9 원세훈(元世勳) 2003.11.10 ~ 2006. 6.30 김흥권(金興權) 2006. 7. 1 ~ 2007.12.20 라진구(羅鎭求) 2007.12.21 ~	
서울특별시	최재범(崔在範) 2002. 7. 1 ~ 2004. 5.11	한진중공업 부회장

행정(2)부시장	양운재(梁鈞在)	2004. 7. 7 ~ 2005. 9. 7	
	장석효(張錫孝)	2005.10.12 ~ 2006. 6.30	
	최창식(崔昌植)	2006. 7. 1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최명주(崔命柱)	2001. 4.11 ~ 2003. 4.30	국제안보대사
	염돈재(廉燉載)	2003. 5. 1 ~ 2004.12.29	
	서대원(徐大源)	2004.12.30 ~ 2006. 4.24	
	김만복(金萬福)	2006. 4.25 ~ 2006.11.22	국가정보원장
	이수혁(李秀赫)	2006.11.27 ~	
국가정보원 제2차장	이수일(李秀一)	2001.11.28 ~ 2003. 4.30	* 작고
	박정삼(朴丁三)	2003. 5. 1 ~ 2004.12.29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전용카지노회사 사장
	이상업(李相業)	2004.12.30 ~ 2006.11.26	
	한진호(韓進濤)	2006.11.27 ~	
국가정보원 제3차장	김보현(金保鉉)	2000. 7. 3 ~ 2003. 4.30	
	김보현(金保鉉)	2003. 5. 1 ~ 2004.12.29	
	최준택(崔俊澤)	2004.12.30 ~ 2006.11.26	
	서 훈(徐 薰)	2006.11.27 ~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金東善)	2002. 2.21 ~ 2003. 5. 9	제일화재 경영고문
	이효성(李孝成)	2003. 5.10 ~ 2006. 5. 9	성균관대 교수
	최민희(崔敏姬)	2006. 7.14 ~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이궁규(李肯珪)	2000.12.16 ~ 2003. 5. 9	
	양휘부(梁輝夫)	2003. 5.10 ~ 2006. 5. 9	
	강동순(姜東淳)	2006. 7.14 ~	
	조강환(曹康煥)	2000. 2.12 ~ 2003. 5. 9	생활경제TV 대표이사
	박준영(朴竣永)	2003. 5.10 ~ 2006. 5. 9	
	전 육(全 堉)	2006. 7.14 ~	
	성유보(成裕普)	2003. 5.10 ~ 2006. 5. 9	
	주동황(朱東晁)	2006. 7.14 ~ 2006.10.16	광운대 교수

	마권수(馬權秀)	2006.11.21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시춘(柳時春)	2001.11.25 ~ 2004. 3.12	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최영애(崔永愛)	2004. 7.23 ~ 2007. 7.22	
	최경숙(崔敬淑)	2007. 9.21 ~	
	박경서(朴庚緒)	2001.11.25 ~ 2004.11.24	대한민국 인권대사
	정강자(鄭康子)	2004.12.24 ~ 2007.12.23	
	유남영(柳南榮)	2007.12.24 ~	
	유 현(俞 炫)	2001.11.25 ~ 2004. 7.20	변호사
	김호준(金好俊)	2004.12.24 ~ 2007.12.23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겸사무처장)	채일병(蔡日炳)	2002. 1.25 ~ 2004. 1.28	국회의원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겸 사무처장	김성호(金成浩)	2004. 1.29 ~ 2006. 8.21	법무부 장관
	장태평(張太平)	2006.10. 2 ~	
(부방위 상임위원)	이상환(李相煥)	2002. 1.25 ~ 2005. 1.24	
국가청렴위 상임위원	성해용(成海鏞)	2005. 1.25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노경채(盧景彩)	2005. 5.31 ~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상임위원겸 사무처장	신철영(申澈永)	2005.10.30 ~ 2007.11.29	
	남영주(南永柱)	2007.11.30 ~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위 상임위원	김동춘(金東椿)	2005.12. 1 ~ 2007.11.30	
	김동춘(金東椿)	2007.12.11 ~	
	김갑배(金甲培)	2005.12.22 ~ 2007.12.21	
	이영조(李榮祚)	2005.12.22 ~ 2007.12.2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상임위원	이준식(李俊植)	2006. 7.13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장완익(張完翼) 2006. 7.13 ~  
재산조사위  
상임위원

---

# 5

## 주요 자문기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5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위원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중앙건설기술심의회 위원
	권오경	(주)한미파슨스 상무·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김종희	SOC건설경제연구원장·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
	김혜란	(주)경화엔지니어링 상무
	김혜정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박철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한국도시계획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온영태	경희대 토목건축공학부 교수
	이학기	동아대 건축학부 교수·대한건축학회 시공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순	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 원장·한국방재학회 회장
	정기용	기용건축 대표·민예총 민족건축협의회 회장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 문화다양성포럼 공동대표  
 최 일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송병록    (주)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대표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 · 과학기술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문화관광부 장관 · 농림부 장관 · 산업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03 ~ 2007)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2003. 3 ~ 2006. 6)
	조성준	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6. 6 ~ 2007. 8)
	김성중	노동부 차관(2007. 8 ~ )
상임위원	이 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위원장 · 한국노동교육원 원장(2003. 4 ~ 2004. 1)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 대전지방노동청장(2004. 1 ~ 2007. 2)
	최병훈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 산재의료원 이사장(2007. 7 ~ )
근로자위원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2003. 5 ~ 2004. 6)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2004. 6 ~ )
사용자위원	김창성	경총 회장(2003. 10 ~ 2004. 3)
	이수영	경총 회장(2004. 3 ~ )
	손길승	전경련 회장(2003. 5 ~ 2003. 12)
	강신호	전경련 회장(2003. 12 ~ 2007. 4)
공익위원	신동식	한국여기자클럽 회장 · 언론중재위원회 심사위원(2000. 7 ~ 2004. 7)
	박환구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2000. 5 ~ 2004. 5)
	김유성	서울대 법학부 교수(2003. 5 ~ 2007. 4)
	김상균	서울대 사회학 교수(2003. 5 ~ 2007. 4)

송위섭	아주대 경제학 교수(2003. 5 ~ 2007. 4)
황한식	부산대 경제학 교수(2003. 5 ~ 2007. 4)
이호준	전남대 법학과 교수(2003. 5 ~ 2007. 4)
조 은	동국대 사회학 교수(2003. 5 ~ 2007. 4)
김동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중앙위원(2003. 5 ~ 2007. 4)
안영수	전 노동부 차관(2003. 5 ~ 2007. 4)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2006. 4 ~ 2007. 4)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 교수(2007. 4 ~ 2007. 8)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2007. 4 ~ )

---

정부위원	재경경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2007. 4)

---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4 ~ 2005)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위원	김경신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태헌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김태현	한국노년학회 회장 · 성신여대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능후	경기대 교수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백종만	전북대 교수
서형수	한겨레신문 이사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 옥	덕성여대 가족아동학과 교수
조흥준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농림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교육혁신위원회 제1기(2003 ~ 2005)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전성은	전국 YMCA 연맹이사·경남 산청간디학교 이사
위원	강승규	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합 상임대표·우석대 교수
	고병현	광명시 평생학습원 원장·성공회대 교수
	김민남	경북대 교수
	김인세	대한마취과학회 회장·부산대 총장
	김봉진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원광대 대학교당 교감
	김희수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전남대 교수
	박도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고려대 교수
	성기영	수원 중앙기독교초교 교장
	신운표	제2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한남대 총장
	유혜령	한국교육인류학회 회장·영남대 교수
	윤기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이병호	서울체육고교 교사·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이영철	발달장애연구 세미나회 회장·우석대 교수

이재강	공군기술학교 교장·대령
임선희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 위원·충남대 교수
정근영	부산 유네스코 홍보위원·부산 구학초교 교사
조성용	리더쉽학회 부회장·산업교육학회 부회장
조영옥	전교조 경북지부장·경북 영주중학교 교사
최현섭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강원대 총장
한승동	정치개혁시민연합회 공동대표·대덕대학 학장

### 교육혁신위원회 제2기 및 제3기(2005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2005. 8 ~ 2006. 11)
	정홍섭	신라대 총장(2007. 2 ~ )
위원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억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동신대 부교수
	김성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
	김하주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
	박유희	인간교육학부모연대 이사장
	유현오	SK텔레콤 글로벌인터넷사업개발단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상선	성남 YMCA 부이사장
	이왕근	대한화학회 이사·전남대 교수
	이용학	부산지역 희망연대 교육위원장·전교조 부산지부 사립위원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종각	한국교육사회학회 회장·강원대 교수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중현	경기 양평 조현초교 교장
이효자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임동규	부산YMCA 사무총장
정태용	동양공업전문대학 학장 · 아주자동차대 학장
정진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 한양대 교수
조금세	부산 동아고교 교장
조미애	전북과학교사교육연합회 회장 · 전북기공 교사
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소장
채종화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공동회장 · 부산 경상대학 교수
최경희	이화여대 학생처장
최운실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 아주대 교육대학원장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기(2003. 7 ~ 2004. 6)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공석)	
위원	김종량	한양대 총장
	유재근	국립환경연구원 원장
	유향숙	인간유전체연구사업단장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희자	(주)오토피스정보통신 사장
	이기원	삼성전자 부사장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 당연직 : 과학기술부 차관(간사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기(2004. 6 ~ 2005. 6)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의장		대통령
부의장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간사위원	박기영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위원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
	손 욱	삼성SDI 상담역
	송하중	경희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성득	전자신문 사장
	윤대희	연세대 공과대학장
	윤송이	SK텔레콤 상무
	이세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이준승	이화여대 연구처장
	김영희	충북대 수학과 교수
	김선화	순천향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유승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이사
	이경희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애	인제대 자연과학대 학장

이영숙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허영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이현순	현대자동차 부사장
신미남	(주)퓨얼셀파워 사장
한미영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백원장	코리아텔레메틱스 사장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
김수동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임성진	전주대 국제학과 교수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회 운영위원
정현희	(사)과학교육진흥회 이사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기(2005. 10 ~ 2006. 10)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부의장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2005. 10 ~ 2006. 2)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2006. 3 ~ 2006. 10)
간사위원	박기영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2005. 10 ~ 2006. 3)
	김선화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2006. 6 ~ 2006. 10)
위원	조영화	KISTI 원장
	박성득	전자신문 사장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이희국	LG전자 사장(CTO)
	이중현	경북대 반도체공학 교수

김문겸	연세대 공과대 학장
윤송이	SK텔레콤 상무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이혜숙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신희섭	KIST 책임연구원
안진홍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이진숙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고영채	베어링포인트 대표이사
안동만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전공 교수
박봉규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교학처장
이현순	현대자동차 사장
남호현	희명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선영	서울대 생물과학부 교수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양지원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신연숙	서울신문 논설실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기(2006. 11 ~ 2007. 10)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부의장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간사위원	김선화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위원	허성관	광주과학기술원 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류병일	삼성전자 부사장
	김문겸	연세대 공과대 학장
	이인선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이혜숙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학민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소장
	임기영	전북대 자연과학대 학장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조교수
	안동만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함승시	강원대 NURI사업단장
	신창섭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진숙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임윤철	(주)기술과가치 대표이사
	박수경	KAIST 기계공학 조교수
이강인	프론티어 사업단장협의회 회장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유해영	단국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최정순	웅진그룹 인재개발원 상무	

박동현	(주)아미케어 대표이사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이병기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전공 교수
신연숙	서울신문 편집국 대기자
장병윤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기(2003 ~ 2004)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성경룡	한림대 교수·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위원	김달웅	경북대 총장
	김민남	동아대 부총장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서경대 석좌교수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박은경	환경정의 공동대표·대한YWCA연합회 회장
	박준경	KDI 부원장·KDI 선임연구위원
	손 욱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삼성SDI 상담역
	송인성	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전남대 교수
	윤정로	한국사회학회 부회장·KAIST 교수
	이정식	국토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
	장홍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과학기술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정보통신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기(2004 ~ 2006)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성경룡	한림대 교수·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위원	김진선	강원도지사·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태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주)씨앤에스 대표이사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경북대 교수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
	부만근	제주대 총장·21세기국토포럼 공동대표
	성창모	인제대 총장·효성기술원 원장
	송재구	광주시 부시장
	신방웅	충북대 총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이정호	부경대 교수
	설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희망연대 운영위원장
	박동윤	충남도의회 의장
	송기도	전북대 교수·駐콜롬비아 대사
	유기영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이수애	목포대 교수
정해걸	경북 의성군수·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기(2006 ~ 2007)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성경룡	한림대 교수 ·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2004. 4 ~ 2007. 9)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 광주대 교수(2007. 10 ~ )
위원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
	김영정	전북대 교수
	김정란	상지대 교수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태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 (주)씨앤에스 대표이사
	김휘동	경북북부 시군행정협의회 회장 · 경북 안동시장
	남수현	희망연대 상임대표 · 동의대 교수
	송재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 제주대 교수
	안승욱	경남지역혁신연구원 원장 · 경남대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이완구	국회의원 · 충남도지사
	임동철	충북대 총장
	임선숙	광주 여성민우회 대표이사 · 변호사
	최병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 · 국토연구원 원장
	홍덕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대구대 교수

◆ 당연직 : 산업자원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재정경제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과학기술부 장관 · 문화관광부 장관 · 농림부 장관 · 정보통신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2005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조한익	서울대 교수·대한적십자 혈액사업 본부장
부위원장	이인영	홍익대 교수·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위원	김두식	연세대 교수·한국생명공학연구협의회 회장
	신상구	서울대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이정애	전남대 교수·한국생명윤리학회 편집이사
	하권익	청담 우리들병원 명예원장·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동관	관동대 총장·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이동익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신부)·교황청 생명학술원 회원
	정규원	한양대 교수·서울대 의대 및 법대 졸업
	황상익	서울대 교수·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당연직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법무부 장관·과학기술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법제처장

### 국가안전보장회의(2003 ~ 2007)

구분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위원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 국민경제자문회의(2003)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위원 (원로경제인회의)	조 순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나웅배	스페코 고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위원 (거시경제회의)	이현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병주	서강대 교수
	김인준	서울대 교수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영철	고려대 교수
	박 철	한국은행 총재고문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송대회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위원 (산업통상회의)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재철	대한무역협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박태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배광선	산업연구원 원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덕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복지노동환경회의)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명자	서울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교수
	박은경	환경과문화연구소 소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일섭	서울대 교수
(외국경제인회의)	William C.Oberli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NobuyaTakasugi	서울일본클럽 회장
	Gomez Marcos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장

#### 국민경제자문회의(2004)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부의장	이규성	코람코 회장
위원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거시경제회의)	박 철	한국은행 총재고문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용선	조세연구원 원장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최흥식	금융연구원 원장
	박상용	증권연구원 원장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종현	BAH Korea 사장
(산업통상회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영선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곽성신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우성화	(주)티켓링크 대표이사
(부동산정책회의)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복지노동환경회의)	박순일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김영문	전북대 법학과 교수
	정진승	한국개발원국제정책대학원장
(외국경제인회의)	William C.Oberli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NobuyaTakasugi	서울일본클럽 회장
	Gomez Marcos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2005)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부의장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위원 (거시경제회의)	심 훈	부산은행장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전성빈	서강대 교수
(금융허브회의)	이중화	고려대 교수
	하성근	연세대 경제대학원장
	최운열	서강대 대외부총장
	최홍식	금융연구원장
(물류, 경제 자유구역회의)	이창용	서울대 교수
	홍승용	인하대 총장
	김명수	순천대 교수
	이부경	(주)시스네트 부사장
(산업통상회의)	강재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대외경제회의)	최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복지노동환경회의)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부동산정책회의)	하성규	중앙대 교수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외국경제인회의)	Wayne Chumley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Frans Hampsink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장
	Takasugi Nobuya	서울일본클럽 회장

###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부의장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위원 (거시금융회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운열	서강대 대외부총장
	전성빈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제민	연세대 교수
	전선애	전남대 교수
	전주성	이회여대 교수
	정규영	서울외국환중개(주) 사장
(물류, 경제 자유구역회의)	홍승용	인하대 총장
	김명수	순천대 교수
	강재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대외산업회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최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박희중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노재근	(주)코아스웰 회장
(사회복지회의)	박준우	상명대 교수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정우	인제대 교수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외국경제인회의)	Wayne Chumley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Frans Hampsink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장
	Eiji Ozaki	서울일본클럽 회장

### 국민경제자문회의(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의장		대통령
부의장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위원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거시금융회의)	최운열	서강대 대외부총장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전선애	중앙대 교수

	정규영	서울외국환중개(주) 사장
(물류, 경제	김형진	교통연구원 원장
자유구역회의)	김명수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교수
(대외산업회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최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박희중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사회복지회의)	박준우	상명대 교수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정우	인제대 교수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외국경제인회의)	William Oberli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Carl-Johan Hagman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장
	Tsuneo Iyobe	서울일본클럽 회장

### 국토정책위원회(2003 ~ 2006)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

위원	김대웅	영남대 교수
	김창석	서울시립대 교수
	노성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민경희	충북대 교수
	박전자	숙명여대 교수
	박정희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회장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박찬석	제17대 국회의원(대통합신당)
	박한규	전북대 교수
	안상진	충북대 교수
	오윤표	동아대 교수
	윤정숙	연세대 교수
	이내우	부경대 교수
	이정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태섭	충남대 겸임교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현영	건국대 교수
	임강원	서울대 교수
	임승달	한국농업전문학교장 · 강릉대 교수
	임재환	충남대 교수
	전택갑	전남대 교수
	정태학	서울대 교수
	정환용	전남대 교수
	최병선	경원대 교수 · 국토연구원 원장
	최주영	대진대 교수
	홍 철	인천대 총장 · 대구경북개발원 원장
	홍성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

---

## 국토정책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위원	김영숙	청주대 교수
	김재영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실장
	남영숙	한국교원대 교수
	노성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민경희	충북대 교수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소장
	소순열	전북대 교수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오윤표	동아대 교수
	윤정숙	연세대 교수
	이내우	부경대 교수
	이은희	서울여대 교수
	이재완	해양수산부 선임해운항만전문관 · 세광종합기술단 대표이사
	이정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이진숙	충남대 교수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임정순	경기대 교수
	전택갑	전남대 교수
	정영숙	대구대 교수
	정태학	서울대 교수
	진정화	연세대 교수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최병선	경원대 교수 · 국토연구원 원장

최주영 대진대 교수

허정도 한국농촌공사 상임이사·경남도민일보 사장

◆ 당연직 : 국방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농림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3 ~ 2004)

구 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장원석	단국대 한국과학경제학부 교수
위원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박종식	수협중앙회 회장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증양연합회 회장
	김재기	한국수산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김재욱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표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이행자	대한YMCA연합회 회장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소순열	전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조옥라	서강대 사회과학원 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 원장
장창익	부경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철주 중앙일보 논설고문  
박대석 전 KBS 대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 2007. 4)

구 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위원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	(수협중앙회장)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엄성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조희숙	생활개선중앙회 회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허기옥	한국여성농업인증양연합회 회장
	이상만	한국수산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박규석	한국수산물회 회장
	박재일	한살림 회장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송보경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정운천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명예회장

최정윤	부경대 명예교수
서도원	충북대 교수
김주숙	한신대 교수
이광호	KBS 보도본부해설팀 해설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7. 5 ~ 2007. 12)

구 분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김연순	한국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주숙	한신대 명예교수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규석	한국수산회 회장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송보경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표
	엄성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우정규	한국여성농업인증양연합회 회장
	이광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이병철	전국귀농본부 이사장
	이봉수	대통령농업특별보좌관
	이상만	한국수산업경영인증양연합회 회장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이주희	부경대 대학원장(부총장)	

이학영	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
조희숙	생활개선중앙회 회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 · 농림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한상완	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장
위원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장
	김혜경	도서출판 푸른숲 대표 · 북토피아 공동대표이사
	남태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서진원	한국비블리아학회 감사
	윤희윤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이사
	이상정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부회장
	이용남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정기용	기용건축연구소 대표
	정연경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허순영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 순천기적의도서관장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부교수

◆ 당연직 : 문화관광부 장관 · 재정경제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과학기술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정보통신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배순훈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부총장
위원	김국웅	한국광산업발전협의회 회장·우리로 광통신 회장
	김명자	국회의원
	김수룡	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
	안충영	중앙대 교수
	양수길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부회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계순	한양대 교수
	최명주	GK 파트너스 대표이사
	한민구	서울대 공대학장
	현명관	한나라당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선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 국제지역학부 부교수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통일부 장관·외교통상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정보통신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동북아시아위원회(2004)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	강교자	YWCA 연합회 부회장
	김명수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원장

김수룡	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
이영욱	미술평론가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계순	한양대 교수
정희선	덕성여대 사회과학부 교수
최명주	GK 파트너스 대표이사
한태규	주태국대사관 대사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 동북아시대위원회(2005)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
위원	강교자	YWCA연합회 부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목연수	부경대 총장
	박영규	국제디지털대 부총장
	백영서	연세대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백종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서영진	주히로시마 총영사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덕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영욱     미술평론가  
 정희선     덕성여대 사회과학부 경영학과 교수  
 조중표     외교통상부 1차관

---

### 동북아시아위원회(2006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이수훈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위원	고충석	제주대 총장
	김우현	경북대 명예교수
	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목연수	부경대 총장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백영서	연세대 교수
	윤덕희	명지대 교수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덕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이주흠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이혜경	배재대 교수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통일부 장관·외교통상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정보통신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구분	수석 부의장	인원	기간
제11기	신상우	국내 12,643 / 해외 2,297	2003. 7. 1 ~ 2005. 6. 30
제12기	이재정	국내 15,562 / 해외 1,631	2005. 7. 1 ~ 2007. 6. 30
제13기	김상근	국내 14,814 / 해외 1,977	2007. 7. 1 ~ 2009. 6. 30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 ~ 2006)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박은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기우	정의평화위원회
	이성림	성균관대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교수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홍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겸 배분위원장
	최병두	대구대 지리학과 교수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능후	경기대 부교수
	박은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성림	성균관대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교수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운영위원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흥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겸 배분위원장
	최병두	대구대 지리학과 교수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2005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송위섭	아주대 교수
위원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어수봉	한국기술대 교수
유길상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 선	송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원장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효수	영남대 교수
장영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전순옥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 위원
정진화	서울대 교수
조우현	송실대 교수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문화관광부 장관 · 산업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 ~ 2006)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한승헌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송상현	서울대 법학교수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천기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인령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무대학원장
김효신	경북대 법학대학 부교수

◆ 당연직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 법제처장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 법원행정처장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2004. 5 ~ 2004. 9)
	최병선	경원대 교수(2004. 9 ~ 2004. 10)
위원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권원용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영평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헬렌주현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의택	부산 외국어대 총장
	신환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이상은	아주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호철	한국소설가협회 고문

임승달	강릉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조재욱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
하인봉	경북대 경제학 교수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2004)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문화관광부 장관 · 농림부 장관 · 산업자원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2004 ~ 2005)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송기숙	근대문화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문화관광부 장관
위원	강연균	화가
	김중배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형기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장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석무	전남대 초빙교수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손 숙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오기수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원제무	한양대 도시대학원 SOC 교통학과 교수
	유성희	대한YMCA연합회 사무총장
	이경숙	교육부정책자문위 대학분과 위원장
	최관영	일건CNC건축사무소 대표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2006)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송재구	광주시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최 협	광주YMCA 이사장·문화관광부 장관
위원	김성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 위원
	김용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혜원	코리아헤럴드 부국장
	남상규	부국철강(주) 대표이사
	박경린	前 광주YWCA 사무총장
	손대현	문화관광부 정책심사평가 자문위원
	안소연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은우근	광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석정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혜영	전남대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 연구부장
	황영성	중앙미술대전 운영위원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	문순태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문화관광부 장관
위원	김상운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상임이사
	김필식	(재)빛고을장학재단 이사
	노은희	(사)광주·전남디자이너협회 이사장

승효상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
우운택	광주과학기술원 문화기술연구센터장
이강복	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임낙평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정기용	기용건축사무소 소장
천득엽	바이오하우징연구소 소장
김성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 위원
김혜원	코리아헤럴드 부국장
손대현	문화관광부 정책심사평가 자문위원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외교통상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산업자원부 장관 · 정보통신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 광주광역시장 · 전라남도지사

### 양극화 · 민생대책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김장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능후	경기대학교 부교수
	박은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유길상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 선	승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원장
이성림	성균관대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교수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운영위원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영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순옥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 위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홍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겸 배분위원장
최병두	대구대 지리학과 교수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과학기술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문화관광부 장관 · 농림부 장관 · 산업자원부 장관 · 정보통신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대통령
간사위원	박주현	민간간사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위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
이기숙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
이 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법무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농림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

### 정보공개위원회(2004 ~ 2005)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권형준	한양대 법학과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
부위원장		행정자치부 차관
위원	경 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서혜란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상운	(사)연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장낙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정보공개위원회(2006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권형준	한양대 법학과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
부위원장		행정자치부 차관
	경 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김태봉	변호사·광주YMCA 이사장
	배정근	한국일보 논설위원
	서혜란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당연직 : 법무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기획차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김병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위원	김범일	대구시장
	김상욱	충북대 교수
	김상희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효석	17대 국회의원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서삼영	한국전산원장
	원혜영	부천시장·17대 국회의원
	오재일	전남대 교수
	유일호	KDI 교수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성식	고려대 교수

이진순	숭실대 교수
이행봉	부산대 교수
장하진	여성개발원장 · 충남대 교수 · 여성가족부 장관
정용덕	서울대 교수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김병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정책기획위원장(2003. 4 ~ 2004. 6)
	윤성식	고려대 교수(2004. 6 ~ 2006. 6)
위원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범일	대구시장
	김상욱	충북대 교수
	김상희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효석	17대 국회의원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서삼영	한국전산원장
	안병우	한신대 교수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 동국대 총장
	오재일	전남대 교수
	원혜영	부천시장 · 17대 국회의원
	유일호	KDI 교수
	유희열	과기부 차관 ·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진순	숭실대 교수
	이행봉	부산대 교수

장하진	여성개발원 원장 · 충남대 교수 · 여성가족부 장관
정용덕	서울대 교수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서울시립대 교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윤성식	고려대 교수
위원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희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상욱	충북대 교수
	김효석	17대 국회의원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박천오	인사행정학회 회장 · 명지대 교수
	서삼영	한국전산원 원장
	송하중	경희대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교수
	양영철	자치경찰특위 위원장 · 제주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유일호	KDI 교수
	이기우	미 오레곤대 교수 · 인하대 교수
	이윤식	한국정책학회 회장 · 숭실대 교수

이효수	한국경제학회 이사·영남대 교수
이진순	숭실대 교수
이행봉	부산대 교수
원혜영	부천시장·17대 국회의원
전성빈	서강대 교수
정갑원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원광대 총장
정용덕	서울대 교수
정홍섭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신라대 총장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서울시립대교수
최태지	성균관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정동극장 극장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6)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윤성식	고려대 교수(2004. 6 ~ 2006. 6)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2006. 7 ~ )
위원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포스트서울포럼 대표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박천오	인사행정학회 회장·명지대 교수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교수
	양영철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제주대 교수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이기우	미 오레곤대 교수 · 인하대 교수
이윤식	한국정책학회 회장 · 숭실대 교수
이효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 영남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정갑원	균형발전위 자문위원 · 원광대 총장
정홍섭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 신라대 총장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서울시립대 교수
최태지	성균관대 무용학과 겸임교수 · 정동극장 극장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위원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 포스트서울포럼 대표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박천오	인사행정학회 회장 · 명지대 교수
	서거석	전북대 총장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세운철강 회장
	안병우	한신대 교수
	안성호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 대전대 부총장
	양영철	자치경찰특위 위원장 · 제주대 교수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이기우	미 오레곤대 교수·인하대 교수
이윤식	한국정책학회 회장·숭실대 교수
이효수	한국경제학회 이사·영남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정갑원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원광대 총장
정홍섭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신라대 총장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서울시립대 교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홍은주	문화방송 논설주간
정진성	서울대 교수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정보통신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  
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추천직 : 지방자치단체 4단체 협의회장

### 정책기획위원회(2003. 6 ~ 2005. 6)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2003. 5 ~ 2003. 12)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2004. 1 ~ 2005. 8)
위원	조재희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정책기획위원회 간사위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경애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김광철	동아대 사학과 교수

김명자	환경부 장관 · 서울대 초빙교수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 환경부 차관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김용기	경남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김용일	해양대 국제대학 교수
김은경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 부위원장 ·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김판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식	한국재활복지대 학장 · 국제재활협회 국가의장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호식	해양수산개발원 자문위원
두재균	전북대 총장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순천대 기초과학부 교수
박대환	조선대 외국어대 학장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승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박용옥	국방대 초빙교수
박준경	KDI 선임위원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

백경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서혜경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송하중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신현택	숙명여대 약학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안철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동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길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유희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위원
윤여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원배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윤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상천	영남대 총장
이선동	상지대 한의학과 교수
이수훈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이원덕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정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원	일본 릿교대 교수
이춘희	행복도시위원회 비서관
이희범	서울산업대 총장
임경순	포항공과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의관	통일교육원 교수
장하원	KDI 지식경제팀 연구위원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전방지	호서대 디즈탈비즈니스학부 교수
정기영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계명대 경영대 교수
정명채	농어촌대책 T/F팀장
정숙경	한국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정영식	행정자치부 차관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태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조승현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조형제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주보돈	경북대 사학과 교수
진동섭	서울대 사범대 교수
최 성	통일정보센터 소장
최 협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한덕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홍덕률	대구대 사회과학대 교수
홍성우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

#### 정책기획위원회(2004.11 ~ 2006.11)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송하중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위원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부교수
	고순희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수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교수
	김병식	동국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김상욱	충북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희	여성환경연대 대표
	김석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숙	광주교육대 조교수
	김용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유성	서울대 법학부 교수
	김응숙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

김장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김중수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김진영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김태희	(주)씨앤에스 대표이사
김하수	연세대 국립국어원 교수
김현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궁근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문국현	유한김벌리 사장
민병석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기홍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원훈	(주)기술과가치 고문
박재묵	충남대 교수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부만근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서재정	미국 코넬대 교수
성창모	인제대 총장
손태원	한양대 경영대 학장
손혁재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송위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방응	충북대 총장
신필균	한국 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 대표이사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오병수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진경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부교수
원석조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대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 건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부교수
이경희	한남대 법학과 교수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
이병기	서울대 공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이송희	신라대 사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이은주	제주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이재강	공군사관학교 부교수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정애	전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종원	일본 立教대 교수
이진순	승실대 경상대학 학장
이행봉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임계순	한양대 역사철학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기초교육원 원장
장세진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장의관	통일교육원 교수
장창익	부경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정대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정동철	우석대 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교수
정민자	울산대 생활과학부 교수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조 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조옥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조희금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지영선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진수미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최명주	이화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현정택	KDI 원장

홍석주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홍승용	인하대 총장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

### 정책기획위원회(2006. 11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김병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위원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부교수
	권경주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 균	고려대 교무처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 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 흥	호서대 안전시스템공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대래	신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석환	국무총리실 공보수석비서관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용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김응숙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
	김장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김진경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시인
	김진영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김태만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김하수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헌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김현희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남궁근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민병석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영	순천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박기홍	(주)포스코 경영기획실장
박동현	미즈하라(MIZUHARA)(주) 대표이사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서강목	한신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서재정	미국 코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부교수
손태원	한양대 경영대 학장
송재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웅	국제치과의사회 국제본부이사
오병수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오진경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유순신	You & Partners 대표이사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육아정책개발센터 자료개발연구팀장
윤기봉	중앙대 기계공학부 교수
윤일규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 건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부교수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병기	서울대 공대 교수
이상경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
이송희	신라대 사학과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대외 부총장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정애	전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원	일본 立教대 교수
이종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이행봉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의관	통일교육원 교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정동철	우석대 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교수
정민자	울산대 생활과학부 교수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정연현	동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정창덕	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조교수
정태석	광주은행 은행장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조옥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조용국	(주)캐피탈 파트너스 고문
조희금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진수미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최명주	골든키엠파트너스 사장
최병길	금호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조교수
최현섭	강원대 총장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석주	한국투자공사 사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황명선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황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3)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한준호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위원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한덕수	산업연구원 원장
	이영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장홍순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윤현덕	송실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이가형	(주)어필텔레콤 대표이사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차관·과학기술부 차관·산업자원부 차관·정보통신부 차관·노동부 차관·건설교통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국세청장·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4)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최홍건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위원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장홍순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쌍수	(주)LG전자 부회장

박기석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신미남	(주)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오거돈	부산시 부시장
남상규	부국철강 대표이사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5)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최홍건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위원	장지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장홍순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쌍수	(주)LG전자 부회장
	박기석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신미남	(주)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남상규	부국철강 대표이사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6)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염홍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

위원	장지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신미남	(주)퓨얼셀파워 대표이사
	박기석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남상규	부국철강 대표이사
	장인화	동일철강 대표이사
	한이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운우	삼성전자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현정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재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서승모	IT 벤처기업 연합회
	윤홍근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회장
	강항원	안흥개발 고문
	김태희	(주)씨앤에스 대표이사

###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노준형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위원	신미남	(주)퓨얼셀파워 대표이사
	구분탁	(주)인바이오넷 대표이사
	장인화	동일철강 대표이사
	강항원	안흥개발 고문
	김태희	(주)씨앤에스 대표이사

이운우	삼성전자 부회장
신현철	SK에너지 대표이사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안희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이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백종진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한미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서승모	IT 벤처기업연합회
윤홍근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회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고현욱	경남대 교수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차관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과학기술부 차관 · 문화관광부 차관 · 산업자원부 차관 · 정보통신부 차관 · 노동부 차관 · 여성가족부 차관 · 건설교통부 차관 · 기획예산처 차관 · 중소기업청장 ·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2기(2003)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김재봉	전 시도의회협의회 부회장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손병두	한국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이현희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필식	전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우서	연세대 교수
하선규	부산YWCA 사무총장
이영미	전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달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원중	충청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북도 전주시장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3기(2004 ~ 2006)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박재창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공원식	경북 포항시의회 의장
	박응격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강실	(사)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이사
	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이현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형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전상경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김행기    충남 금산군수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4기(2006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박재창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고계추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
	고현석	전 전라남도 곡성군수
	김주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나소열	충청남도 서천군수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상무이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황한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신중대	경기도 안양시장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 당연직 : 행정자치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 법제처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기(2003 ~ 2005)

구분	성명	소속 · 직위 · 경력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자연과학대 지구환경과학부(해양학) 교수
위원	강규석	심원학술재단 이사장
	고창실	제주일보 비상임 논설위원
	공이송	동신대 객원교수
	김강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연대와협력위원회 위원장
	김경량	강원대 농촌사회교육원 원장
	김경희	충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수	실로암복지재단 이사장
	김두희	경북대 명예교수
	김미선	국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삼룡	원광대 제5대 총장
	김성구	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승묵	변호사
	김웅배	목포대 총장
	김정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주영	(재)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희경	(사)경남여성회 회장
	김희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과 기획위원회 위원장
	류창우	영남대 제9대 총장
	문국현	유한김벌리 대표이사
	박광섭	충남대 법과대학 학장
박성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 대한탁구협회 · 레슬링협회 부회장	
박재묵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박종식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박효숙	(사)광주여성의전화 상임이사
배은하	충북 제천 배론성지 주임신부
서원명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정의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신혜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
오흥숙	부산YMCA 이사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유지나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제2대 이사장
이균범	동신대 총장
이기영	동아대 인문학부 사학과 교수
이문교	제주관광대 초빙교수
이병해	경상남도 교원단체연합회 회장
이삼열	승실대 인문대 철학과 교수
이상훈	충북일보 대표이사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수영	경기개발연구원 고문
이영자	한국여성학회 회장
이영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 교수
이원락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회장
이종만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이태훈	대한암협회 인천지부장
이필원	(사)한국노사문제연구원 이사장
이학영	시인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희원	인제대 의과대학 부속 서울 백병원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임숙경	임숙경법률사무소 소장
임승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장성효	중앙일보 영어신문본부장
장희익	서울대 명예교수
전성환	아산YMCA 사무총장
전형준	현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사무국장
전호영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공동의장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공기술센터 부장
정대연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정용하	부산대 정외과 교수
정진승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지영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최정철	(주)신화컨설팅 대표
최태길	밀양대 교수
최형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하선규	부산YWCA 사무총장
하성룡	충북대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한경호	세기농촌신교회 회장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한지현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홍덕률	대구 KBS TV 시사토론 프로그램(화요진단) 진행자
홍청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4기(2006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2006. 1 ~ 2007. 7)
	윤서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2007. 8 ~ )
위원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김정옥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희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감사
	박오순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소장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이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이민부	한국교원대 지리학과 교수
	이은희	서울여대 생명환경디자인전공 교수
	이태훈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원장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형식	전 담양군수
	한경구	국민대 사회과학대 교수
	허동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 교수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과학기술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농림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정창영	연세대 총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김기문	중기협 회장·(주)로만손 대표이사
	박기남	상지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순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분한	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장
	서은경	전북대 물리학과 및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정주	코리아 리크루트(주) 대표이사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박영주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
	원성삼	전국대학취업실장협의회 회장(2007)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학기술부 장관·국방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중소기업청장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2006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한덕수	재정부총리·국무총리
위원	김용구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공동의장
	김기문	(주)로만손 대표이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경식	(주)CJ 대표이사 회장·대한상의 회장
	송보경	서울여대 바롬교육부 교수
	이정환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 회장
	표완수	와이티엔(YTN) 대표이사 사장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홍보수석비서관

## FTA국내대책위원회(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간사위원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FTA국내대책위원회 민간간사위원
위원	김기문	(주)로만손 대표이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경식	(주)CJ 대표이사 회장·대한상의 회장
	송보경	서울여대 바롬교육부 교수

이정환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 회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소장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농림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정보통신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005 ~ 2007)

구분	성명	소속·직위·경력
위원장		국무총리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2005. 4 ~ 2007. 4)
	서의택	민간위원장·부산대 석좌교수(2007. 4 ~ )
위원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국토지리학회 회장
	김병모	고려문화재연구원 이사장
	김수삼	한양대 안산캠퍼스 부총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김정현	공주대 교수·시민자치문화센터장
	김진애	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승효상	미건축가협회 명예회원
	신환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심명필	인하대 환경토목공학부 교수
	안건혁	서울대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온영태	경희대 건축공학학과 교수
이규방	국토연구원 초빙연구원
이상은	아주대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장
임승달	강릉대 교수
임주환	전 한국통신학회 회장
제해성	아주대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국제협력위원장
조문영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석원	공주대 총장
하인봉	경북대 교수
한길석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 당연직 : 재정경제부 장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자치부 장관 · 문화관광부 장관 · 농림부 장관 · 산업자원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

# 6

## 노무현 대통령 연보 1946. 8. 16 ~ 2002. 12. 19

### 1946 ~ 1987

1946. 8. 16	출생(경상남도 김해시 진영)
1959. 4. 25	대창초등학교 전교회장
1959.	김해 진영 대창초등학교 졸업
1960.	'우리 대통령 이승만' 작문에 항의 백지동맹 주도
1963.	김해 진영중학교 졸업 김지태 장학금 수여
1966.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53회) 삼해공업(어망회사) 입사
1968. 3. 8	육군 입대
1971.	육군 상병 만기제대(을지부대)
1973.	권양숙 여사와 결혼
1975. 3.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1977.	대전지방법원 판사 재직
1978. 5. 5	변호사 개업(현 법무법인 부산)

1981. 1. 22	부산일보 생활법률상담 연재(1981. 1. 22 ~ 1982. 6. 15)
10.	미 문화원 방화사건 변론 후 법률상담 연재 중지
1982. 6. 15	부림사건 변호인단 선임, 변론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 시작
1984.	미 문화원방화 사건 첫 공판, 변론
	노동법률상담소 개소(변호사로서는 최초)
	부산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부산 KNCC 인권위원회 위원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11. 25	‘민주제 개헌을 향하여’ 초청강연
1986. 3. 5	개헌 서명 및 성명서 발표
3. 24	노동자 폭행 항의 성명서 발표
5.	개헌촉구 시국선언, 이후 전국으로 각계각층 시국선언 확산
8. 28	성고문 범시민폭로대회 개최
10. 27	부마항쟁계승 시민대회 개최
11. 17	진성일 열사 추모제 개최
1987. 2. 7	고 박종철 군 국민 추도회 가담 후 연행(총 798명 연행)
2. 11	2.7 국민 추도회 가담자 33명 구속 130명 즉심, 노무현 변호사는 구속 기각
2. 12	4차례 구속신청 진상 조사 - 노무현 변호사 4차례 연속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대한변협과 부산변협 진상 조사
2. 13	2.7 고 박종철 군 국민 추도회 관련 구속자 인권유린 관련 조사
6.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6. 10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부산시민대회 개최
6. 26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 개최
6. 27	이태춘 열사 국민운동본부장으로 장례식 거행
6. 28	‘폭력종식과 인권회복을 위한 특별미사’ 후 5천여 시민 평화행진, 부산 가톨릭센타에서 즉석 ‘부산시민 시국토론회’ 개최
7. 3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 개최

- 8. 26 대우조선 분규, 분향소 앞 연좌농성
- 9. 대우조선 분규 관련 구속(변호사 업무 정지처분)  
대우조선 분규 관련 구속에 항의 3일간 단식 농성
- 9. 2 민주화실천 및 후보단일화를 위한 부산시민대회 개최
- 9. 12 대우조선 분규 관련 검찰 송치, 구속적부심 청구 및 석방
- 9. 14 노동운동 탄압저지 및 구속자 석방촉구 결의대회 개최
- 10. 20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본 부산본부와 전남본부 공동성명 발표
- 10. 30 거국중립내각수립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
- 12. 공정선거감시운동본부 부산본부장

## 1988 ~ 1989

- 1988. 4. 9 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지구당 창당대회
- 4. 12 민정당 일당독재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단결본부 발족식 및  
시국토론회 초청강연
- 4. 28 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당선
- 6. 15 변호사 업무 정지 해제  
민주당, 노사특위위원장에 노무현 의원 임명  
민주당 노동위원회 상임위 배정  
새세대 육영회 이익 환수와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  
양심수 전면 석방 단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질의  
부산일보 파업 관련 노조 격려 방문 및 고문변호사 위촉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결성 참여  
야3당 노동관계법 합동공청회 사회자로 참석  
부산 연합철강 정상화 집회 관련 진상조사단으로 참석
- 9. 9 군사문화 종식과 백색테러 추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참석

1988. 9. 17	노동위 국정감사 활동 (국제그룹 등 부산기업 정리, 연철분규, 현대엔진 등)
10~11월	제5공화국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활동
10. 22	대한교육보험 노조 부산지구협의회 결성 총회 참석
12. 26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격려 연설
1989.	국회 노동위원회(간사) 활동
	부산 항운노조 분규에 대한 적극 진상조사 요구
1. 22	김해민주청년회 창립총회 및 노무현 의원 초청강연회
3. 17	의원직 사직서 제출(지지자들 철회 서명 운동함) 동구 지구당 당직자 20명, 사퇴 반려 농성 돌입 부민협, 부민련 노 의원 사퇴 반려 요구 사퇴 철회 및 사퇴서 반려 마산 창원지역 노사분규 진상조사단 참가
10. 28	참교육을 위한 국민 걷기대회

## 1990 ~ 1991

1990. 2. 3	3당 합당 규탄대회
2. 7	반민주야합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
2. 18	노동운동탄압분쇄결의 및 서울지역 임금인상투쟁본부 발대식
2. 27	민주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3. 3	3당 야합 규탄 및 민주당 창당 지지대회
3. 31	참교육 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 발대식 및 전교조 탄압분쇄투쟁 결의대회
	5공 특위위원 의원직 해임(교섭단체 소속의원이 아니라는 이유)
4. 21	국민연합 결성대회

- 5. 12 민주당 창당 지지 및 민자당 분쇄를 위한 대전시민대회 참석
- 6. 10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및 6월항쟁 계승 국민대회 참석
- 6. 15 노사안정과 노동법 학술심포지엄 토론자  
(동아일보사, 고대노동연 공동개최)
- 7. 9 방송관계법 개악 저지대회
- 7. 13 민자당의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 9. 12 중앙재해대책본부,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경기도 고양군 현장 방문
- 10. 13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과 군정 청산 국민대회 참석,  
대정부 공개질의서 낭독
- 1991. 1. 11 민주당(부설) 지방자치대학
- 1. 22 지방자치 학교(민주당 동구 지구당)
- 1. 22 부산일보 노조 창립 3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 2. 8 민주당 민생위원장 임명
- 2. 13 광개토건설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 관련 기자회견
- 3. 9 지방의회 선거 경북대책본부 지부장
- 4. 11 민주당 조직강화특위 위원
- 4. 27 강경대 열사 조문  
강경대 열사 폭력 살인 규탄 집회 참석
- 5. 6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 변사 사건 진상조사단(단장)
- 5. 19 민생파탄 폭력살인 규탄 및 노정권 퇴진 시민대회 연사
- 9. 16 신민·민주 야권 통합(통합협상 대표)
- 9. 17 통합민주당 대변인
- 10. 11 제5회 인촌상 시상식 참석
- 10. 12 한반도의 군축 및 핵 관련 토론회 토론자(민주당 주최)
- 10. 13 부산시민의 날 및 동구청 개청 기념 구민체육대회
- 10. 26 민주당 '부산지역 신발업계 도산 사태 실태조사단' 단원 선임
- 11. 28 한겨레신문 사옥 완공 기념식 및 축하연 참석
- 12. 20 쌀 수입 저지 및 추곡수매 보장을 위한 농민대회 참석

## 1992 ~ 1995

- 1992. 3. 3 부산 동래을 첫 연합공천 관련 기자회견
- 3. 7 깨끗한 선거 실천을 위한 5대 방침 선언 기자회견
- 3. 24 제14대 총선(민주당, 부산 동구) 낙선
- 5. 30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당헌당규소위원회 위원 선임
- 7. 29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8. 20 민주개혁정치 모임 창립대회 상무위원 선임
- 9. 5 연기군 등 관권부정선거 규탄 및 한 전군수 양심선언 국민대회 연사
- 10. 제14대 대통령선거 청년특위 위원장 선임
- 11. 물결유세단 단장
- 11. 7 민주당 임시전당대회
- 11. 28 제14대 대선 대구 두류공원 유세 찬조 연사
- 12. 제14대 대선 TV 방송 찬조 연설
- 12. 4 조선일보 왜곡보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
- 1993. 1. 12 민주개혁정치모임 수련회 참석
- 2. (가칭)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설립 준비위 구성
- 2. 3 부산 동구지구당 개편대회
- 2. 23 민주당 부산시지부 개편대회 지부장 선임
- 3. 11 민주당 전당대회 최연소 최고위원 당선
- 3. 29 부산 열차 참사 진상 조사단 단장 선임
- 9. 28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개소
- 9.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의 전략에 관한 토론회
- 11. 5 민주당 개혁정치모임 지구당위원장 수련회 참석
- 11. 10 제12기 민주대학 지방자치 연수과정
- 11. 30 쌀개방 저지와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참석
- 1994. 1. 13 한국정치학연구소(조세형) 목요토론회 토론자
- 4. 15 부산지역 정책연구소 개소

5. 28	부산지역 정책연구소 창립총회 및 기념정책 토론회
6. 10	민주당 시·도지부 사무처장 및 지구당 사무국장 연수
7. 14	시민공청회 ‘올바른 노사관계 어떻게 해야 하나’
7. 15	전국 지방자치 유관연구소 및 단체 합동 세미나
9.	월간 ‘참여사회’ 를 ‘자치시대’ 로 전면 개편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영유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9. 8	새시대와 청년의 자세 강연
10.	『여보 나 좀 도와줘』 출판(새터출판사)
11.	학교급식시설을 위한 자치단체조례(안) 발표(지방자치실무연구소) 독일 에베르트 재단 초청 제1차 해외연수(지방자치실무연구소)
12.	1995년 4대 선거 출마자를 위한 지방자치 정책토론회 운영 (강원일보 주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주관)
12. 10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사회자 생활정치 현장 리포트 발간(대륙출판사, 지방자치실무연구소)
1995. 2.	선거 조직관리 S/W ‘리더메이커’ 개발 자치단체장의 지역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 세미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정치현실과 지방자치제의 과제 세미나(지방자치실무연구소)
2. 24	민주당 임시전당대회 참석(민주당 부총재 선출)
3. 6	우리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 결성대회(공동대표)
3. 18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강연(마창시민연합 주최)
4.	6.27선거에 관한 국민 정치의식 조사(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일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일본지방자치종합연구소와 공동주최) 개정선거법 해설과 새로운 선거운동 토론회(지방자치실무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주택정책 세미나(지방자치실무연구소)
4. 30	동구 지구당 대의원 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

1995. 4~5월 '6.27선거 이렇게 치릅시다' 선거실무 전국순회교육  
(지방자치실무연구소)
5. 지방자치시대의 참여민주주의와 지역활동 토론회  
(지방자치실무연구소)
5. 9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출마 선언
5. 12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출(부산시장 전당대회)
6. 27 부산시장 선거 낙선
7. 15 '구당과 개혁을 위한 모임' 결성
8. 8 제23회 신문로포럼 월례조찬회 강연
8. 28 민주당 전당대회
9. 유성구 학교급식시설 지원 예산안에 관한 시민단체와의  
공동기자회견(지방자치실무연구소)
9. 21 통합수입기구를 구성하고 정개런 등과의 통합논의
9. 27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과 운영방침 토론회  
(젊은연대 주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소회의실)
11. 지역경제개발 정책대학 운영(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 지방자치론』 발간(의암출판사,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 공약』 발간  
(사계절출판사,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지방자치의 성패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발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수완』(대륙출판사, 지방자치실무연구소)

## 1996 ~ 1998

1996. 1. 3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1. 19	종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
2. 10	민주당 시국강연회 연사(서울 명동, 종로, 양천) 민주당 종로지구당 사무실 개소식
3. 9	민주당 종로지구당 창당대회
3. 15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대사 접견
3. 27	4.11총선 승리 민주 대축제
4. 11	제15대 총선 출마(민주당, 서울 종로) 낙선
9. 23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준비위 결성 기자회견
11. 10	국민통합추진회의 창립대회
1997. 3. 7	하로동선 음식점 개업
3. 25	통추 '정당파괴, 정계대개편, 신정치주체' 2차 시국강연회
3. 27	국민주방송설립을 위한 제3차 토론회 (방송개혁국민회의와 시청자연대회의)
6. 30	SBS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
9. 3	S/W '우리들3.0' 개발
9. 25	『의원님들 요즘 장사 잘 돼요?』 수필집 공저
11. 11	21세기 푸른정치모임 개소식 및 초청 토론회
11. 13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기자회견 / 부총재
11. 18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울산 선거대책회의 공동의장 선임
11. 21	김대중 후보와 공동 부산기자회견
11. 26	수도권 특별유세단(파랑새유세단) 단장
11. 29	파랑새유세단 발대식(명동)
12. 3	대선 TV 방송 찬조연설

## 1998 ~ 2001

- |       |        |   |
|-------|--------|---|
| 1998. | 1. 6   | 새정치국민회의 '노사정 협의 대책위원회' 위원 선임                                |
|       | 2. 9   | 새정치국민회의 '부당노동행위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                                |
|       | 3. 21  | 부산 위천공단 조성 관련 기자 및 사회단체 간담회                                 |
|       | 4. 10  |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 기자회견   |
|       | 7. 3   | 새정치국민회의 종로지구당 개편대회  |
|       | 7. 9   | 아트선재센터 개관식 참석   |
|       | 7. 21  |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서울 종로) 당선                                    |
|       | 7. 28  | 보안사 민간인 사찰 배상 대법원 판결  |
|       | 7. 31  | 현대차 파업사태 관련 새정치국민회의 노사중재단 현대차 노사 방문                         |
|       | 8. 25  | 현대자동차 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
|       | 8. 26  | 새정치국민회의 예산결산특위 위원 선임  |
|       | 10. 24 | 결식학생돕기 자선음악회 참석(한국학원총연합회 주최)                                |
|       | 12. 3  | 부산시지부 개편대회 참석   |
| 1999. | 2. 4   | 김대중 대통령 단독 면담   |
|       | 2. 6   | 새정치국민회의 경남도지부장 내정<br>동남지역정책특별위원회(동남특위) 위원장 선임               |
|       | 2. 9   | 16대 총선 부산·경남지역 출마 기자회견                                      |
|       | 2. 12  |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 심완구 울산시장과 공동 기자회견                            |
|       | 3. 12  | 부산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                                   |
|       | 3. 24  | 김우중 회장과 회동  |
|       | 3. 25  | 부산 자동차산업 다시 살리기 시민대토론회<br>(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와 삼성차협력업체 비상대책위 공동주최) |
|       | 7. 3   | 영덕자치경영연구소 개소식 참석  |
|       | 7. 7   | 국회 대정부 질의   |
|       | 7. 12  | 부산 경제활성화대책회의 - 고위 당정회의                                      |
|       | 7. 13  | 삼성차 관련 간담회 참석   |

	8. 18	녹산국가공단 활성화 대책위원회 결성식
	8. 24	부산 북·강서을 출마 기자회견
2000.	2. 28	삼성차 관련 긴급 대책회의 참석
	3. 18	민주당 북·강서을 지구당 후원회(당권 도전 공식선언)
	4. 14	제16대 총선(부산 북·강서을) 낙선
	4. 25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 삼성차 해결 관련 감사패
	4. 27	‘지역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강연(누리문화재단 초청)
	5. 24	대권 도전 공식선언 기자간담회
	6.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창립총회
	8. 7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2001.	1. 12	신지식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1. 18	폭설피해 등 재해대책법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
	2. 23	부산항 선진화를 위한 특별토론회
	3. 26	해양수산부 장관 퇴임
	3.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최고위원
	5. 22	대우차 살리기 공청회(인천부평 대우차공장 - 계란사건)
	5. 23	국민정치연구회 월례 포럼 강연
	6. 6	노사모 창립 1주년 기념 강연
	7. 3	제3차 전국지구당 여성특별위원 연수 ‘국민의정부의 성과와 현안’
	7. 20	‘자치경영연구원’ 부산본부 설립 제7차 전국지구당 여성특별위원 연수 ‘국민의정부의 성과와 현안’
	10. 10	당·정 분권 관련 기자간담회
	10. 18	제2차 전국지구당 핵심 당원(지역장) 연수 강원대 특강 ‘한국과 동북아의 새로운 도전’
	10. 25	원광대 행정대학원 특강 ‘가치의 시대를 열자’
	10. 30	동국대 행정대학원 특강 ‘역사적 요구와 지도자’
	11. 19	제9차 전국지구당 핵심 당원(지역장) 연수

2001. 11. 30	‘국민통합연대 경남본부팀’ 간담회
12. 10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기념회 및 후원회(대선출마 공식선언)

## 2002

2002. 1. 17	노무현과 네티즌의 만남
1. 18	제17차 전국지구당 핵심 당원(지역장) 연수
1. 24	MBC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2. 3	제주 발족식
2. 22	민주당 국민경선 등록
3. 9	민주당 국민경선(제주)
3. 10	민주당 국민경선(울산)
3. 16	민주당 국민경선(광주)
3. 17	민주당 국민경선(대전)
3. 23	민주당 국민경선(충남)
3. 24	민주당 국민경선(강원)
3. 30	민주당 국민경선(경남)
3. 31	민주당 국민경선(전북)
4. 5	민주당 국민경선(대구)
4. 6	민주당 국민경선(인천)
4. 7	민주당 국민경선(경북)
4. 13	민주당 국민경선(충북)
4. 14	민주당 국민경선(전남)
4. 20	민주당 국민경선(부산)
4. 21	민주당 국민경선(경기)
4. 27	민주당 국민경선(서울)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4. 30	김영삼 전 대통령 만남
5. 1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5. 15	새시대전략연구소 초청 강연
	부산시장 후보 선출대회
5. 17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6. 1	부산시장 후보 지원 연설
7. 5	대한상의 초청 강연
8. 29	주한 미대사 라플레어 면담
	반부패국민연대 토론회
9. 5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5주년 기념대회
9. 7	학벌 없는 사회 토론회
9. 10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참석
9. 12	대구 상안공장 방문
	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초청 강연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간담회
	대구 한국섬유개발원 방문
9. 30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10. 3	MBC '100분 토론'
10. 10	전북지역 당직자 간담회
	전주 방송토론회
10. 12	KBS '심야토론'
10. 13	광주·전남 국민참여운동본부(국참) 출범식
10. 14	교통방송 토론회
10. 16	YTN 토론회
10. 17	제3회 세계지식포럼
	대한간호정우회 초청 강연

2002. 10. 18	SBS 방송 토론회
10. 20	개혁국민정당 발기인 대회
10. 22	민주당 정치개혁안 성명 발표
10. 23	교육정책 토론회(교총 주최)
10. 24	노풍대폭발 전야제 참석 대전방송 토론회
10. 26	PD연합회 간담회
10. 27	대구 국참 발대식
10. 28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
10. 29	청주방송 토론회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10. 30	개미나라 인터뷰
11. 2	부산 국참 발대식 부산 사회단체 여성단체장 간담회 부산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
11. 3	서울 국참 발대식
11. 4	한양대 채용박람회 방문 대구MBC 토론회 울산방송 토론회
11. 5	재향군인회 초청 토론회
11. 6	여성연대 초청 토론회
11. 7	천안지역 택시기사들과의 간담회 KBS 국민포럼 토론회
11. 8	인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발대식 핵심공약 발표회 대전 KBS, MBC 방송 토론회
11. 9	경기 선대위 발대식 교육방송 난상 토론

11. 10	경남 선대위 발대식 경남지역 공약 발표회
11. 11	법률지원단 발대식 전북 선대위 발대식
11. 12	IT 포럼 초청 강연 민주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불교방송 토론회
11. 13	전농대회 참석
11. 14	인터넷 방송 토론회
11. 16	경북 선대위 발대식 대구 방송 토론회
11. 18	대선자금 공개협약 체결식
11. 20	중앙당 후원회
11. 21	여성연대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 기독교 목회자 초청 토론회 문화예술인 간담회
11. 22	후보단일화 토론회 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정책 간담회
11. 24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현판식
11. 25	후보 단일화 확정
11. 27	대통령 선거 운동 시작 전국위원장단 회의(대전)
12. 19	대통령 당선



# 참여정부 주요 일지

## 정 치

**【1일】** 이인제 민주당 의원 '정치공작의 희생양'이라며 경선에 불복하고 민주당 탈당

**【2일】** 신갑식 의원 등 대구시 달서구 의원 6명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민주당에 입당

**【3일】** 이인제 의원 자민련 입당 공식 선언

**【3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진위 공방 벌어짐

**【4일】**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대선 지출내역 공개. 한국 정당이 자발적으로 대선 지출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8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청년기술인력 확보와 병역 수급계획 조정 등을 거쳐 1차적으로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현행 2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힘

**【9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대표단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들고 일어난 것은 반미감정이라기보다는 주권국가로서의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당연한 운동"이라며 "(한·미관계는) 그동안의 의존적 관계를 상호협

력적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밝힘

●노 후보는 대책위의 소파 개정운동 서명 동참요구에 "정치 지도자가 서명이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일을 풀자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영합하는 자세일 수 있다"며 "그 대신에 나는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새로운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중용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미관계를 책임 있게 변화시키겠다"고 말함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등이 펼치고 있는 희망돼지저금통 분양사업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각 지역 시·도 선관위에 강력한 단속 지시

**【12일】** 민주당과 국민통합21, 정책 협상 타결.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지원유세 참여 합의

**【16일】** 이명박 서울시장 대선 개입.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수도권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 밝힘

**【17일】** 대전 동부경찰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유세에 참석한 뒤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3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힘

**【18일】**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밤, 국민통합21 정몽준 씨,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선언

**【19일】**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 당선.

노 후보는 1,201만 2,945표(48.9%)를 얻어 1,144만 1,116표(46.6%)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

**【19일】**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가 선거 막판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갑자기 철회한 데 반발해 국민통합21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탈당 선언

**【2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7천만 온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원칙과 신뢰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20일】** 노 당선자, 동작동 현충원 참배로 당선자 공식 일정 시작

**【20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당선자 확정 공식 발표

**【20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정계 은퇴

**【23일】** 노 당선자, “총리가 안정된 국정을 하도록 중심을 잡고 대통령은 개혁의 과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의 대통령과 안정과 균형의 총리라는 개념을 맞추고 싶다”고 밝힘

**【23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 청와대 회동. 정권 인수인계 외 북한 핵문제 등 남·북, 한·미관계 외교 현안 논의

**【24일】**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선 무효소송 제기. 이에 대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제기 취소와 지도부 즉각 사퇴 요구

**【24일】** 노 당선자, “다면평가”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평가를 통한 인선은 정당 역사상 처음이며, 인맥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인사 관행을 깨뜨리는 시도. 당선자가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도입한 방식임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인수위원장에 임채정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분야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 분야에 김대환 인하대 교수 등이 임명됨

**【26일】** 노 당선자,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 참석해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제가 채택된다면 준비기간이 1년가량 되는 만큼 2007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힘. 당선자는 또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며 “각당이 준비를 끝내고 나면 반드시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더라도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협상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싶다”고 밝힘. 당선자는 특히 “인사에 관해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이런 청탁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청난 타격을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마무리

**【27일】** 성경룡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위원, 민주당 중앙선대위 연수에서 “소수파인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5년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역량 있는 국정 엘리트들 최소 2천 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 국방 통일 법조 경제 교육 환경 노동 복지 언론 등 각 분야에서 개혁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발굴해 각종 정부위원회나 정무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

**【29일】** 한나라당·민주당, 각각 당 개혁특위 본격 가동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본격 출범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국방부·유엔사령부, 금강산 육포관광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 시 유엔사의 사전승인은 받되, 국방부가 전화 등을 통해 북한 쪽에 간단히 통보하기로 합의

**【3일】** 김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을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4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지난달 29일 채택한 북핵 사찰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냈다고 4일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

**【4일】** 노무현 민주당 후보, “대통령에 당선되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관계를 다지고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노 후보,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을 일본·독일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 부시 대통령을 지칭해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6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반미시위를 의식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을 협상의제로 채택. 소파의 개정이 아닌 운용 개선만 합의하고 종결

**【9일】** 스키드미사일 15기를 신고 인도양을 항해하던 북한 배가 예멘 동쪽 960km 해상에서 스페인 해군 함정에 의해 정선당한 뒤 미국 해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

**【10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 김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어린 소녀 두 명의 죽음에 대해 가장 깊은 사과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함

**【11일】** 미국, 북한 화물선 소산호를 나포·억류한 지 이틀 만에 국제법상 권한이 없다며 풀어 줌

**【12일】** 북한,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의무 사항인 중유 제공을 중단한 데 맞서 핵시설 가동과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14일】**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평화적이고 냉정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19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 “차기 한국 대통령에 선출된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뜻을 표시한다”며 “한·일관계는 종래에도 점차 중요해져 왔지만, 앞으로 노 당선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노력해 가고 싶다”고 말함

**【20일】** 부시 미국 대통령, 노무현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 당선을 축하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줄 것 요청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일본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

**【23일】** 북한, 원자로 봉인 제거와 감시카메라 철거

**【24일】** 김대중 대통령,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게 하고 피해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핵무기는 안 된다”고 밝힘

**【24일】** 노 당선자,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3국 대사들과 면담. 당선자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국들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

**【27일】** 노 당선자, 성명을 통해 “북한은 최근의 핵관련 조치들을 철회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태를 더 악화시킬 일체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27일】**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준비에 이어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또한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핵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을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준비가 곧 완료될 것이라고 밝힘

**【29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경제 붕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맞춤형 봉쇄’ (테일러드 컨테인먼트) 정책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

**【31일】** 노 당선자, 기자회견담회에서 “미국의 ‘맞춤

형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에 관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당선자는 이어 "미국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물이불이는 정치적 주장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원칙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민도 이 자세를 지지해 줘야 한다"고 설명

**[31일]** 북한이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 두 사람이 3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의 핵 감시체제 기능 중단

**[31일]** 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북한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이란 것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고 밝힘

**[31일]** 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러시아의 소리 방송' 과 한 인터뷰에서 민족 공조를 우선시 하는 사람과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며 "노무현과도 이러한 원칙에서 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박 대사는 "이회창이 낙선되고 노무현이 당선된 남조선(남한) 선거 결과는 민족의 화해와 긴장완화를 바라는 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고 밝힘

**[3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 핵문제는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 그는 "노 당선자가 취임 뒤 직접 미국을 방문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힘

## 경 제

**[8일]** 남북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 26~30일 사이에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하기로 하고, 착공식에 앞서 개성~문산 사이(경의선) 임시도로를 열기로 함

**[25일]** 취업사이트의 조사 결과 졸업을 앞둔 4년제 대학생 중 취직자리를 찾은 사람은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남

**[28일]** 남북, 제2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양쪽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고, 해양사고 때 서로 협력하며, 상대방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자유로운 통신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해운합의서' 를 채택하고 가서명

**[30일]** 재정경제부, 인천항 내항 전 부두 51만 4천 평과, 올 1월 1일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지정된 부산항 신선대부두 배후 용당 땅(3만 8천 평) 중 2만 3천 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힘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한 데 대해 유감 표명

**[31일]** 노 대통령 당선자,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 노사문제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들도 변해 갈 것인 만큼 기업들도 변화를 수용해 달라"고 제안.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아) 편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정치가 바뀌고 있듯이 다른 분야도 합리적으로 바뀌어 가도록 도와 달라"는 말로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 촉구

## 사회 · 문화

**[3일]** 세계박람회기구(BIE), 모나코 그리말디포럼에서 열린 제132차 정기총회에서 5개 유치신청 국가 가운데 중국 상하이 가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발표. 여수는 탈락

**[4일]** 미8군 기지의 미국대사관 차고지 밑에서 기름 유출돼 오염된 것이 발견됨

**[6일]** 중국이 한국인 목사 1명과 북한인·중국인 등 탈북지원 관련 7명에 대해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7일]**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반미시위 확산.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까지 진출하기도

**[10일]** <연합뉴스>, <중앙통신>과 수신계약을 체결. 앞으로 북한 관영 <중앙통신> 기사를 실시간

으로 제공

**【14일】** 주한미군 궤도 차량에 깔려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을 요구하며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대적인 촛불 시위

**【23일】**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 개통

**【27일】** 미국 종교단체 연구소 클로네이드, 복제아기 탄생 발표. 세계가 윤리 논란에 휩싸임

## 정 치

**[1일]**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세 개 신문을 통해 발표한 새해 공동사설에서 “현 시기 조선(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며 체제 결속과 ‘민족 공조’ 강조

**[2일]** 김대중 대통령, 퇴임 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동고동계’라는 말의 사용도, 모임도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 쪽에 전달

**[2일]** 노 당선자, 민주당 하례식에서 당·정 분리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당·정 분리 원칙을 지키며 당선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라고 한다”며 “당·정 분리의 핵심은 공천권과 당직 임명권인데, 공천은 먼 훗날 이야기이고 당직 임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당·정 분리 원칙 유지를 재확인

**[2일]** 노 당선자, 인수위 간사단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일상적이고 일률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받아 봤지만, 2중·3중 보고의 폐단이 드러나는 등 실효성이 없다”며 “인수위가 주요 의제를 설정한 뒤 해당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하자”고 제안. 24개 정부 부처별로 진행돼 온 관행

적인 업무보고 대신 주요 의제별로 부처 간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로 함

**[3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함께 하며 국정 현안 논의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70명의 1차 실무인력을 발표한 데 이어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등 30명의 전문위원과 행정관 등을 추가로 발표. 실무진 100명은 직급별로 △전문위원 44명 △행정관 39명 △실무요원 17명 등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25명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한테서 인터넷을 통해 장관 등 고위 공직자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 인사제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

**[6일]** 정부, 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14~17일 서울에서 열자고 북쪽에 제안

**[6일]** 노 당선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건전한 채찍질과 협조 당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치개혁 실현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0대 국정 의제 발표. 10대 국정 의제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

통합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 △교육 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등 포함

**【8일】** 노 당선자, 새 정부 청와대 인선. 문희상 민주당 의원을 새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유인태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각각 내정했으며, 김원기 민주당 고문에겐 대통령 정치 자문역을 맡기로 결정

**【8일】**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개인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중도 좌파, 노무현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다”며 노 당선자에 대한 이념 공세에 나서기 시작

**【9일】** 통일부, 북측이 전화통지문으로 9차 장관급 회담을 21~24일 서울에서 열자고 수정 제의해 왔다고 밝힘. 핵문제로 긴장된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는 계속 유지됨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노 당선자의 10대 국정 과제를 구체화할 태스크포스팀 구성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으로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 평가를 통과한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 새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기초해 공정한 룰 대로 간다는 대전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힘

**【10일】** 청와대 비서실에 보존되어 온 각종 대통령 기록물들이 10일부터 정부기록보존소로 옮겨지기 시작. 대통령 통치사료가 정부기록보존소로 옮겨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11일】** 노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구체적 정책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선 공약을 토대로 △타당성 △실현 과정의 문제점 △우선순위 등의 검토에 주력하도록 인수위에 지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실현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제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하승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이정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등이 참석

**【13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2004년부터 교원의 정원과 보수 등 처우가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관리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14일】** 노 당선자, “일부 정부 부처가 인수위에 대해 입법 절차 및 예산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불평”이라며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입법이나 예산을 고려해서 정책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놓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지적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선일보>의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와 인수위 연루 가능성’ 보도와 <동아일보>의 ‘인사청탁 줄대기’ 보도와 관련해 두 신문에 정정보도 공식 요구. <조선일보> 보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을 내기로 결정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1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킴. 공병부대의 파병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결정

**【16일】** 노 당선자, 지방 특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면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모색해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16일】** 국무총리실,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 및 장관에 대한 임명제정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5개 항의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17일】** 노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해 확실한 지휘

권을 확보한 뒤 조직 개편과 인사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말해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힘

**[18일]** 노 당선자, 이규택 한나라당·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와 함께 만나 "국정이 국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3권분립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회 존중과 초당적 국정운영 의지를 밝힘

**[18일]** 노 당선자, <한국방송>에 출연해 정치개혁과 인사원칙,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설명. 당선자는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도록 해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식으로 과반수 정치세력이 총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을 시사하는 한편 일부 세력의 색깔 공세에 대해선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라, 세계 경제 12~13위권인 당당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뿐"이라고 일축

**[21일]**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서울서 시작

**[21일]** 노 당선자, '노 당선자가 일본 외상에게 북한에 중유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

**[22일]** 노 당선자 한나라당 방문. "한나라당과 합치되는 공약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며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만나서 상의하고 절충해 나가면 여소야대라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 요청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특권층의 부정부패 등 '반칙문화'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우선 엄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의. 구체적으로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 사회지도층 윤리강령 제정 △자제 감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

**[24일]**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 종료. 공동보도문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교류·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등 합의 내용 발표

**[27일]** 대법원, 한나라당이 낸 대통령 당선무효소송과 관련해 전국 80개 개표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관할 법원별로 전국 동시 실시했으나 하자 발견 못함

**[27일]** 노 대통령 당선자,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와 지방문화가 5년 뒤 반전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며 "다음 정부를 지방화 시대 또는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규정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재정이양을 하겠다"고 밝힘

**[27일]** 김 대통령, 임동원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파견

**[27일]** 노 대통령 당선자, 그동안 신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관례적으로 받아 오던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기로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6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참석할 국민들을 희망자 중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하기로 결정

**[28일]** 대선 재검표 결과 별다른 부정 의혹이 발견되지 않아,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내·외에서 비판받음

**[28일]** 노 대통령 당선자, 일부 신문사들이 자전거와 비데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신문사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힘

**[30일]** 재검표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사퇴. 박희태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

**[30일]** 김 대통령, 현대상선의 4천억 원 대북 지원설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힘

**[30일]** 정보통신부, 해킹·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과 협의해 사이버 방위팀을 만들겠다고 밝힘

**[30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억

원 가운데 2,235억 원을 대북사업에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정부, 한·중 회담 시작. 미·일·중·러 등 주변 나라들과 연쇄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위한 노력

**[3일]**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현안은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계획을 일반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라며 “불가침은 현안이 아니며, 북한이 기왕에 약속한 것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5일]** 미국 상원의 중진 의원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초래했다”며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마련 중인 북·미 중재안에 미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

**[5일]** 한·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두 나라는 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함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핵시설의 감시장치 복원과 사찰관 복귀 등 필요한 안전조치 협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 등을 촉구하는 대북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그러나 원자력기구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음

**[6일]**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 이후 한·미·일의 본격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책 논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티콕) 회의를 계기로 시작

**[6일]** 북한과 중국은 1986년 탈북자 강제 송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탈북자 처리에 관한 비밀협정

을 체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7일]**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존중해 북한이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

**[7일]** 한·미·일 세 나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티콕) 회의 종결. 미국, 대북 대화 용의 언급

**[9일]** 정부, 미국 일부 언론이 최근 한국에서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을 ‘반미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항의 편지를 보내는 등 외신에 적극적으로 대처

**[10일]** 북한,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으며,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제거한다면 북·미 사이의 별도 검증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

**[10일]** 노 당선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한국이 침략받았을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지만 북한 핵문제까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11일]**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대사, 미국이 북·미간의 모든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

**[13일]** 김대중 대통령, 모리 요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라며 “대화를 통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밝힘

**[1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북한은 국제적인 핵 안전조치를 따라야 하고 국제사회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 원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13일]** 노 당선자,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만나 1시간에 걸쳐 북핵문제 등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 후보자는 면담 후 “유익했다. 느낌론(켈리 차관보가) 생각보다 대화를 솔직하게 하는 편이었다”고 소감을 밝힘

**[14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2차대전의 에이(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함께 안치된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

**[14일]** 정부, 성명을 통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근 국가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전범 범죄자에게까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 중국 역시 “중·일 간의 정치적인 기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항의

**[14일]**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하면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힘

**[16일]** 북한, <평양방송> 대담 프로를 통해 지난 10일 ‘정부성명’에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밝힌 제안을 ‘건설적인 평화발기’라며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공화국의 정부 성명에 천명된 제의를 심사숙고해 옹계 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북한은 이 성명에서 미국이 대북 적 대정책과 핵 위협을 중지하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북·미 별도 검증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16일]** 노 당선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힘

**[17일]** 노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거의 배제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

**[23일]**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개최가 러시아의 반대로 연기됨

**[24일]** 노 당선자, 미국 <시애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라는 것은 점차 그것이 강화되었을 때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더라도 거기서 제재 문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밝힘

**[25일]** 김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 “최근 러시아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계속 협조해 달라”고 말함

**[30일]** 노 대통령 당선자, <엔에이치케이방송>과의 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하는가’란 물음에 “제재를 가하거나 심지어 무력 사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

## 경 제

**[1일]** 산자부, 지난해(2002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108억 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

**[2일]** 노 당선자, 인수위 회의에서 “동북아 시대 전략의 개념을 점검하고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정부의 비전으로 생각을 모아 보자”며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된 특별 연구를 지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 기능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에 더는 문제삼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

**[7일]** 재정경제부, 상속·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증권집단소송제, 조흥은행 매각 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실무보고자료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7일]** 2000년의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항공기 운항이 꾸준히 증가.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모두 69편의 항공기가 남북한 사이를 운항해, 2001년의 50편보다 38% 늘어났다고 밝힘

**【8일】** 노 당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

**【8일】** 건설교통부, 경기 포천의 한탄강댐과 경북 군위 화북댐을 올해 초 착공하는 등 2011년까지 11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힘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정위 특별감사를 요청

**【9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출자총액제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완화 조치도 재검토하는 등 재벌개혁 기초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 보고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미국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의 “그들(새 정부)의 목표는 사회주의”라는 발언과 관련해 전경련 쪽에 진상 파악과 후속 조치를 요구. 대통령의 경제개혁과 관련한 기업의 반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무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기사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김각중 전경련 회장이 사과를 해 오며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13일】** 북한의 경제계획을 작성하는 국가계획위원회, 앞으로 자체적인 평화적 ‘핵 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13일】** 건설교통부, 충청권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해 땅값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1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에 따라 시작된 대북 식량차관 40만 톤 수송 완료

**【15일】** 노 당선자,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

**【16일】** 충청권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토지거래종합전산망이 처음으로 본격 가동됨

**【16일】** 북한, 22~25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쪽에 제의

**【17일】** 노 당선자, 주한 미국·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공동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힘

**【17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박창련 북쪽 위원장, 남쪽 위원장인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귀측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한 쌀 40만 톤에 대한 수송이 15일 모두 끝났다”라며 “이번의 쌀 제공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힘

**【18일】** 한·러, 올해 한국 어민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 정부 쿼터량을 지난해보다 3천 톤 줄어든 2만 2천 톤으로 함의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노 당선자가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낸 뒤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체제로 통합하는 ‘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에 경인운하사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로 결정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사 계열분리제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밝힘

## 사회·문화

**【1일】** 미국은 북한 핵 위기와 관계없이 올해도 북한에 예년처럼 인도적 식량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5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에 대한 추가 원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0만여 명에 대한 공급식량이 다음 달 초 바닥날 것이라고 밝힘. 〈인디펜던트〉는

한국이 두 달 전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뒤 식량 보급을 중단했으며,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뒤 역시 식량공급을 중단했다고 보도

**【7일】**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에 있는 모든 사찰(59 곳)에 전통적인 색깔과 무늬를 입히는 '단청 불사'를 다음 달부터 진행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힘

**【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2004년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음주·무면허 사고 때 보험사가 사고 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의결

**【8일】** 유럽연합, 미국과 일본 등의 지원 감소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950만 유로(116억 원)어치의 식량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

**【17일】** 감사원, 복권 발행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비용 증가·사행심 조장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49개에 이르는 복권사업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통보

**【19일】** 2002년 말 현재 경기도 인구 1천만 명 돌파

**【22일】** 남북, 적십자 3차 실무접촉을 끝내고 5개항이 담긴 합의서 발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올 4월 착공하고, 다음 달 20~25일 금강산에서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합의

**【22일】** 건교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탈북자, 일본군 위안부 등 소외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게 됨

**【28일】** 백신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 한국인이 국제기구 선출직 수장에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

# 2

## 2003

### 정 치

**【3일】** 노 당선자,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주도 세력이 국회에서 해명하고 국회의 처분에 따르자는 '2단계 해법' 제시

**【4일】**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현대는 개성공단 등 7개 사업을 북쪽으로부터 30년간 보장받는 계약을 했고,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할 때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힘

**【5일】** 서울지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윤규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일시 해제. 정 회장 등은 5~6 양일간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

**【7일】** 노 당선자, 내각 인선 방향과 관련해 “내각은 개혁성이 중요하며, 그것이 인선의 핵심”이라 말함

**【11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새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

**【13일】** 노 당선자, 보수언론의 '한·미관계 엇박자'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과 이견이 있더라도 북핵 위기를 반드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고 밝힘

**【14일】** 김 대통령,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히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인 제가 지겠다”고 밝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 출범 직후 취재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 새 정부는 정례브리핑제도를 신설하고,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로 직접 정부 소식을 전달함. 특히 현재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적 기사실 운영을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결정

**【23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 대표직 사퇴. 대표직은 정대철 최고위원이 자동 승계

**【25일】** 참여정부 공식 출범. 노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

**【26일】** 국회, 한나라당 단독으로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킴

**【27일】** 참여정부 새 내각 출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 변호사,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두관 전 남해군수, 정보통신부 장관에 진대제 삼성전자 대표 등 18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조각 단행

**【28일】** 청와대, 의례적인 언론사 창간 인터뷰를 없애는 대신 정기적으로 춘추관에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밝힘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핵 억제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의 해 · 공군력 증강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

**【2일】** 정부, 주한미군의 차적 관리를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주한미군 측에 통보

**【3일】**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노 당선자의 고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노 당선자가 한 · 미동맹 관계의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면서 재조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긴밀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전력 생산을 위해 핵시설 가동을 재개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밝힘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의. 북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는 1993년에 이어 두번째

**【19일】** 노 당선자, 북핵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한(미국의) 무력 공격은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전 검토 자체도 반대한다”고 밝힘

**【24일】** 국방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25일】** 노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첸치천 중국 부총리,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상원의장 등과 잇달아 만나 북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 논의

**경 제**

**【2일】** 재경부, 러시아에 빌려 준 경협차관의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협상 시작

**【2일】** 국내 민간 부문의 해외 간접투자액이 2년 새 2.8배 증가함. 2002년 114억 달러 기록

**【2일】** 벤치기업 지정기준의 강화로 2002년 12월 말 현재 벤치기업 숫자는 전년보다 23% 줄어든 8,778개로 집계됨

**【2일】** 현대석유화학을 엘지화학과 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에 매각. 석유화학 구조조정 1단계가 일단락

**【2일】** 국세청,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주점과 무면허 사업자에 대한 일제단속 나섬

**【2일】** 건설교통부, 전국 243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87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발표

**【3일】** 노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상속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출자총액 제한 제도, 집단소송제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3일】** 엘지필립스엘시디, 경기도 파주지역에 대규모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힘

**【3일】** 대통령직 인수위, 인천 송도지역을 정보기술(IT)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곳에 유치할 중점 업종으로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집적회로(칩), 자동차 전장품 등 카 일렉트로닉스, 모바일 통신기기, 바이오(생명산업) 등 5개를 선정했다고 밝힘

**【3일】** 공정위,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 제공과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3일】** 재경부, 한 · 칠레 양국 정부가 정부 · 투자

기관의 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와 정부 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

**【5일】** 산업자원부, 조선업계의 건의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5일】** 통일부, 협력기금 대출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자율을 내리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10일】** 국세청, 법인세 신고 때 기업주와 임직원의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등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 10만 1천 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결정

**【10일】**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다중채무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섬

**【11일】** 무디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 북핵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라 추가조정 시사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추적권을 상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11일】** 한국무역협회,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7위로 올라섰다고 발표

**【11일】** 산업자원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29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강제 10부제에 들어가고, 주유소와 백화점 등의 조명 사용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

**【13일】** 정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상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축소를 위해 다각적인 협상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

**【14일】**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던 전경련, 여론 흐름이 변하자 수용을 검토하기로 결정. 자체 개혁 목소리도 등장

**【16일】** 산업자원부, 차량사용 제한조치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

**【17일】** 검찰, 에스케이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등 그룹 차원의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18일】** 세계경제포럼의 조사 발표, 정보통신기술 환경 및 활용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9만 2천 원으로 조사됨

**【21일】** 개성공업지구 사전답사단 경의선을 이용해 방북. 경의선 임시도로 처음으로 이용

## 사회 · 문화

**【1일】** 미국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

**【2일】** 서울시, 4월부터 시내 일부 간선도로에서 굴절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2일】** 노 당선자의 필통이 '아름다운가게' 2호점 개점 기념으로 열린 경매에서 100만 원에 팔림

**【2일】** 지난해의 금연운동 영향으로 남성 흡연율이 9.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됨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는 2010년엔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 원에 육박하고 65살 이상 노인 진료비가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특히 75살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3년 3.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령사회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봄.

**【3일】** 대법원, 사회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 발표. 개헌을 전제로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검토하되, 특히 참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

**【3일】** 서울행정법원, 수업거부 시위 학생의 제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4일】** 산업자원부,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252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등 동해안 두 곳과 서해안 두 곳을 방사능 폐기장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

**【5일】** 현대아산·관광공사 직원 등 육로관광 사전 답사단이 처음으로 금강산 육로 통과. 금강산 육로관광 시대 열림

**【5일】** 47%의 여성이 자신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 여론조사기관은 “고졸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학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설명

**【10일】** 보건복지부, 오는 6월 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

**【11일】** 노 당선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지만,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휴경지가 늘어나고 보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틀에 따른 간척사업 목표(농업용지로 활용)에 문제를 제기함

**【13일】** 노 당선자, 양대 노총 방문. 대통령 당선자가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당선자는 민주노총에서 노동부 개혁 등을 요구받고 “모든 문제를 노동자 편에 서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귀담아들 수 있는 사고와 여유를 가진 사람을 기용하려 한다”고 답변하고,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여론의 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경제계가 세지만 향후 5년 동안 사회적 불균형과 가치 주장자들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힘

**【13일】** 노 당선자가 권 여사에게 결혼 30돌을 기념해 선물한 커플링 인기. 대통령의 선물 이후 같은 디자인의 판매량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4일】**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시작

**【14일】** 남북,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상봉에 육로를 이용하기로 합의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50대 남자의 방화로 120여명 사망, 138명 부상

**【19일】** 김 대통령,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20일】** 남쪽 이산가족 461명,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쪽 상봉단 99명을 만남. 첫 육로 상봉

**【20일】** 우정사업본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우표, 소형 시트, 우표첩을 만들어 25일부터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epost.go.kr)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힘

**【21일】** 정부,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2000년 도시철도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전철 및 전국 지하철 전동차 6,300량의 낡은 내장재를 교체하기로 결정

**【23일】** 육로 시범관광을 진행했던 금강산, 본격적인 일반인 육로관광 시대 시작

# 3

## 2003

### 정 치

**【1일】** 노 대통령, 3·1절 축사에서 “개혁은 멈출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무엇보다 정치와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설 땅이 없을 것이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

**【1일】** 청와대, 언론개혁 일환으로 신문 가판 구독 중단.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가판 구독 중단 이어짐

**【2일】** 노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시체제 강화. 친인척들의 거주지 별로 각각 전담 경찰관을 두고 출입자 등을 점검

**【3일】** 노 대통령, 17개 부처 차관과 외청장 등 34명의 차관급 인사 단행

**【3일】** 정부, 국정문화 쇄신. 신임 장·차관들의 언론사 인사방문 관행을 폐지해 언론사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일방적인 보고 형태로 진행되던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전환

**【4일】** 노 대통령, 첫 국무회의의 주제.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재난관리청 신설 등을 제안하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함.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단기처방에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

가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

**【4일】** 노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언론자유는 거의 성취됐고, 이제 자본과 광고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 대통령은 이날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힘

**【5일】** 노 대통령,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과 관련, 정보 수집은 필수적이겠지만 부처 출입제도나 언론사 출입제도는 실패를 파악한 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국정원은 정부 각 부처에 1~7인의 ‘조정관’과 80여 명 규모의 언론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음

**【6일】** 노 대통령, 취임 뒤 외부인사들로부터 국정 의견을 수렴하는 첫 상대로 범개혁 진영의 원로들을 택해 오찬 간담회 진행

**【6일】**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검찰 인사에 대해 반대 건의서를 올리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에 “소신에 따라 장관 직을 수행하겠다”며 강행 의사 밝힘

**【7일】** 노 대통령,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내 정치문제와 관련한 보고는 일절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함

**【7일】** 노 대통령,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방안 발표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검찰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 밝힘. 이에 일부 평검사들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라며 집단 반발.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7일】** 노 대통령,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개혁 구상 발표. 시장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은 당사자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밝힘

**【8일】** 노 대통령,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다른 어떤 과제보다 정부 개혁이 중요하고, 공직사회가 스스로 개혁돼야 다른 부문을 개혁하는 사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정부 개혁의 중요성 강조

**【9일】** 노 대통령, 평검사들과의 공개토론 진행. 대통령은 검사들의 인사권 이양 요구에 대해 “현재의 검찰 상층부에 불신을 갖고 있으며 과거의 관행에 조금이라도 덜 물든 사람들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전달받았으나 이용호 게이트, 옷로비 사건,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 관련자가 들어 있는 등 납득할 수 없었다”고 검찰의 구태를 지적. 검사들이 또 그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때문이라고 반박하자 대통령은 “검찰 중립은 정치인들이 지켜 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일축했고, 강 장관은 옷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 정치권보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로 수사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

**【9일】**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 이후 평검사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으며 청와대는 검찰의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결정.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에 언론들은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항명’을 설득과 타협을 통해 포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과 대국민 직접설득의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통치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분석

**【9일】**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북 송금문제에 대해 “경제거래이며 우리(북) 쪽이 현대 쪽에 넘

겨 준 것은 받은 것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특검제에 대해 반대 입장 밝힘

**【10일】** 노 대통령,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대해 외교안보팀에서 관계장관들과 협의해 판단할 것을 주문

**【10일】** 운영관 외교부 장관, 비밀주의에 익숙한 외교통상부에서 20여 명의 직원들과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즉석 토론. 토론에 참여한 북미국의 서기관은 “회의기록을 하려다가 토론을 하게 돼 당황했다”면서도 “부내 다른 부서 관계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함. 대통령의 토론방식이 각 부처와 사회로 확산

**【11일】** 노 대통령,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미래상황의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각 부서의 대응태세 강조

**【11일】**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에 김종민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에 정진규 인천지검장을 각각 승진시키는 등 검사장급 이상 42개 보직 가운데 38명에 대한 인사 단행. 서열 파괴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과거 문제된 사건 처리에 대한 문책이 반영됨.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심분 참작하고 지역 안배에도 신경을 썼다”고 밝힘

**【12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북 송금사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자금 조성 문제는 가감 없이 밝히되, 외교적 신뢰를 고려해 송금 부분은 여야가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

**【12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기업 표적 수사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새로 짜여진 검찰 지휘부에서 그런 순서를 짠을 리 없지 않냐”고 일축하며 “경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 대통령은 또 국정원에서 청와대를 정치적으로 도와줄 것을 의심하는 질문에는 “한꺼번에 다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국정원과 청와대가 뒷문으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북핵, 경제, 외교, 안보 등 정책 관

련 보고만 받고 정치 보고는 일절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혀 과거 안기부를 권력의 시녀로 이용했던  
정치세력을 안심시킴

**【12일】** 노 대통령, 지방화 프로젝트가 명확히 마련  
돼 단계적으로 실천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 완  
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 수도권 규제 완  
화가 지방의 발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게 하  
라고 지시

**【12일】** 청와대, 노 대통령의 ‘보고 간소화’ 지시에  
따라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을 보  
고라인의 3대 기본 축으로 삼되, 보고 내용에 대  
해 문희상 비서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14일】** 문화관광부, 청와대에 이어 기자실 폐지 및  
브리핑 제도 시행

●이창동 장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위해 공개되  
지 않던 정책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지시

**【14일】** 노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법안 서명. “순서  
의 문제이지, 결국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공포하기로 결  
정했다”고 밝힘

**【14일】** 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산중공업 사태가 정부 개입으로 해결된 것을 비  
판하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갈등의 조정이야말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라고 반박하  
고, “앞으로도 시장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는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겠지만 집단 간 이해관계  
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14일】** 정부, 올해 300만 섬 규모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

**【15일】** 국방부, △현역병 복무 단축 △기무사 축소  
△장교인사 개혁·연구개발 투자비 증액 등의 계  
획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업무보고

**【17일】** 노 대통령, 김중빈 대검찰청 차장의 업무보  
고에서 자신의 일부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아  
온 나라중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  
다면 전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잘못이 있  
다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 대통령은 이어 국  
정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찰 수사 불응에 대해 특권계층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는 한편 한총련 수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른 검찰의 전향적인 자세  
요청

**【18일】** 노 대통령, 국정 현안에 대해 정대철 민주  
당 대표와 격주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정  
함

**【18일】**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사무  
처장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겸임하도록 결  
정.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및 재난관리 종합조정  
체계의 뼈대 마련

**【18일】** 북한, 6·15공동선언 3돌을 맞아 남·북·  
해의 동포가 함께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을 치르  
자고 제의

**【19일】** 국정홍보처, 부처의 브리핑 제도 활성화 등  
취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19일】** 감사원, 회계시스템의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된 24개 기관을 표본을 선정해 두 달  
동안 회계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12개 기관의  
직원들이 8억 5천만여 원을 횡령하고 22억 4천만  
여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감사원  
은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9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1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  
구하고 횡령·유용액 전액을 회수하도록 조치

**【20일】** 노 대통령,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 “특히 이번 전쟁(이라크)이 북핵문제 등 남  
북관계 현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  
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미  
국의 노력 지지 표명.

●국가안전보장회의, 500~600명 규모의 공병단  
과 150명 규모의 야전 의무부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병하기로 결정

**[21일]** 노 대통령, 여야 지도자와 이라크 파병에 초당적 협력 요청

**[24일]**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해 2조 1천억 원을 지방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 노 대통령,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찰은 앞으로 절대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을 담은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

**[24일]** 노 대통령, 미국이 이라크전 이후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과, 추측성 익명 보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

**[25일]** 국회,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

●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요구하고 파병의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로 돌림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외사 표명

**[27일]** 국정홍보처, 출입기자제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 장·차관의 주 1회 이상 브리핑 의무화 등을 논의

**[27일]** 노 대통령, 인권위의 이라크전 반대 의견 표명과 관련 “인권위의 고유 업무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힘

**[28일]** 국회,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처리 무산

**[29일]** 노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에게 언론과의 긴장관계 거듭 강조하며 언론과 정부의 모범적인 관계 주문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북한, 미그기를 출격시켜 정찰활동을 벌이던 미군 정찰기와 추격전 벌임

**[5일]** 북한, 미국이 위협을 계속하면 정전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이라고 <르몽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힘

**[6일]**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고, 미국과 쌍방 채널을 통해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고 밝힘

**[10일]** 유엔, 이라크 침공 수정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이라크 주재 직원들에게 15일까지 철수할 것을 지시

**[10일]** 북한, 동해상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10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지지 표명과 의료지원 요청

**[13일]** 노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18일]** 미국, 이라크 최후통첩. 이에 따라 정부는 현지 동포 보호와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분야별 대책 마련

**[20일]** 미국, 이라크 공격 단행

**[20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오늘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슬픈 날”이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 단행에 유감 표명

**[21일]** 유럽연합, 공동성명 통해 북핵문제를 논의할 특별 외무장관 회담 소집

**[28일]** 일본, 북한 정찰 첩보위성 2기 발사

## 경 제

**[4일]** 공정거래위원회,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 거래 조사 방침 밝힘. 거대그룹에 대한 3년 만의 조사

**[7일]**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험성에 외국인들이 5개월간 7,300억을 순매도해 종합주가지수가 500 중반대로 밀려남

**[9일]** 국세청,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 900 곳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발표

**[10일]** 재정부 주요 업무보고, 수도권 정책의 큰 뼈대를 ‘제한적 개발’로 바꾸며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힘

**[12일]** 남북, 4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3월 말 동시에 재개하기로 합의

**【16일】** 청와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해외 투자자와 고위 정책담당자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한국 경제의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

**【21일】** 한국은행,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1만 달러 돌파했다고 발표

**【26일】** 통일부, 남북경협을 추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착공식을 개발계획 확정에 앞서 조기에 하기로 결정

**【27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 운용방향’ 확정. 장기대출을 활성화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3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연간 20만 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제도 마련

**【11일】** 행정자치부, 재난방지 시스템 기획단을 발족하고, 8월에 재난관리청 신설하겠다고 발표

**【12일】** 노 대통령, 각 부처에 오보성 기사와 왜곡 보도에 사안별 대응 조치 내용을 함께 보고할 것 주문.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

**【14일】** 정부,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검토

**【15일】** 남북 노동단체, 노동절 행사를 북한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

**【21일】** 정부, 제6차 4·3위원회를 열고 1,063명을 이 사건 희생자로 추가하기로 결정

## 사회·문화

**【1일】**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3·1절 행사 진행. 2박 3일간 진행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에는 북측 인사 105명이 참가

**【4일】**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1,151명, 조선일보 거부 선언

**【5일】** 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빚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인과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

**【6일】** 노 대통령,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11일】** 노 대통령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정부의 개인워크아웃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개인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유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두루뭉수리한 보고는 곤란하다”며 강하게 질타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새 취재시스템에 대해 “브리핑 제도 실시에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취재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기자의 취재 요청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취재 지원실을 마련하고, 공보관은 업무에 정통하며 유능한 인물로 임명하라”고 내각에 지시

**【2일】**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회 국정연설. 대통령은 △정당개혁 △정치자금 제도 개선 △지역구도 타파 등 3대 정치개혁 과제의 기본 뼈대를 제시하며 의원들의 ‘결단’을 요청하는 한편 견제받지 않는 언론 권력의 위협성을 언급하고 정부 권력을 동원한 인위적 언론개혁 대신 정부와 언론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선언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킴

● 노 대통령은 파병 표결 직전 국정연설에서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의안 처리 요청

**【4일】** 국방부, 이라크에 파견될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 명칭을 각각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로 결정

**【7일】**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 무산. 정세현 통일부 장관, 어려울수록 남북 간에 대화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할 것을 촉구

**【7일】** 노 대통령, 신문의 날 리셉션 참석. “진정한 의미의 언론 자유를 기자들에게 돌려줄 때”라며 사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강조. 정부가 권력을 갖고 언론개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언론개혁은 언론과 시민에게 맡길 것이며, 5년간 일관되게 그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힘

**【7일】** 노 대통령, 국무회의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국민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 매주 화요일의 정례 국무회의는 법정 국무회의와 테마 국무회의로 나뉘어 토론이 요구되는 과제는 테마 국무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테마 국무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7일】**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좌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두고 일부 부처에서 여전히 ‘귀순’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 ‘탈북·피난’ 등의 좀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

**【8일】** 정부, 공무원 보수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올

해 중반까지 보수기준과 판공비, 부처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정확히 공개하는 한편,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기반 정착을 위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과주의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9일】** 국정홍보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공보관 회의를 열어 이들 부처의 기자실을 없애고, 중앙브리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9일】**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 노 대통령은 “갈등 사안 22가지가 있고, 어떤 것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방폐장 선정 등). 다음 국무회의에 갈등과제를 제출해 해소책을 논의할 것”이라 밝힘

●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 호주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중재·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

**【14일】** 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일반부처 정책과 국정조정은 총리실이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 노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새 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기획단의 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동의를 구할 것이며, 제대로 준비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함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실장급을 인선하며 상설 가동체제 완성.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 조정력 강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업무 시작

**【14일】** 국정홍보처,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이래 취임 초기까지의 발언을 모은 책 『요즘 많이 궁금하시죠』 발간

**【15일】**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핵 위기 해소 측면에서 결의안의 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며, 이번 경우에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표명

**【15일】** 노 대통령, 24개 핵심 갈등과제 선정. “24개 갈등 현안은 장관이 재임 중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력

도 뒤따라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17일】** 노 대통령, 북핵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이지 모양새나 체면이 아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비판론 반박

**【19일】** 노 대통령, 주한미군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우리의 자주국방으로 다 할 수 있고, 그 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지적.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에 대해 여론이 들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힘

**【19일】** 북한,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자고 남쪽에 제의

**【21일】** 노 대통령, “참여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함

**【21일】** 통일부, 지난 19일 북쪽의 평양 장관급회담 제의에 대한 공식 수락 의사를 전했다고 밝힘

**【22일】** 노 대통령,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를 구분하고 대응방안을 보고하라고 한 것은 언론과 대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보도를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23일】** 노 대통령, 북핵 3자 회담에 대해 시작은 3자로 했으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다자회담으로 발전할 것이며 회담 참여 명분보다 실질적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 외교부 당국자들이 그간 3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바로잡음

**【24일】**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한나라당 2곳, 개혁국민정당이 1곳에서 당선. 국회 의석수는 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101석으로 재편

**【24일】** 대통령 재산 공개. 대통령 자신과 권양숙 여사, 장남 건호 씨의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552만 4천 원. 재산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 중 가장 가난한 것으로 드러나

**【27일】** 제10차 장관급회담 시작.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인 동시에 북쪽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직후 열린 회담

**【28일】** 청와대, 대통령 관저 앞뜰인 녹지원을 문화인들의 공연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결정

**【29일】** 제10차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통일 대축전 등 원칙 합의

## 통일 · 외교 · 안보

**【4일】** 노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 고자 하는 우리 입장을 재차 설명.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외교적 해결' 약속

**【8일】** 50년 만에 한·미동맹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1차 회의의 시작. 미군부대 이전, 작전통제권 이양, 소파개정 등에 대해 논의

**【10일】** 한·러 국방장관회담,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러시아에도 큰 관심거리”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11일】** 노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힘

**【16일】** 정부,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찬반 투표 불참

**【18일】** 북한 외무성, 북·중·미 3자 회담에 참석 뜻을 밝힘과 동시에 영변 핵시설의 사용 후 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

**【23일】** 북한이 3자 회담 첫날인 23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

**【24일】** 북·중·미 3자 회담. 일정 채우지 못한 채 종결

**【30일】** 미국 국무부, '2002 전 세계 테러유형 보고서'에서 북한을 6개국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경제

**【1일】** 해양수산부, 대통령에게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부산 신항과 광양항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해양과학기술(MT)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보고

**【3일】** 정부, 카드채 부실 우려에 따른 고객들의 현금화(환매) 요구에 시달리는 투신권에 5조 원대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

**【6일】** 생명공학기업인 엘지생명과학, 신약 '팩티브'가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정식으로 신약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국산 신약이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7일】** 노 대통령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고 지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

**【8일】** 노 대통령, “금강산 관광사업의 가능성을 보면 지금은 욕먹는 사업이지만 장래에는 복덩이가 될 수 있다”며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 일부 사업이라고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

**【23일】** 노 대통령, “금리정책 등 경기조율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힘

## 사회 · 문화

**【3일】** 4·3추모식. 고건 총리, “정부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평화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4일】** 노 대통령, 동티모르에서 순직한 고 민병조 중령의 아버지 민귀식 씨 등 10명의 유가족을 만나 “사랑하는 자식들을 전쟁에 보냈는데, 또 다른 군인들을 파병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

**【7일】** 노 대통령,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 실시 논란과 관련 “기존 정책이 폐기된 바 없으며,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 확인

**【8일】** 국세청,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포함한 세정개혁혁신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골프장과 룬살롱 등 향락성 접대비를 세금계산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 세정개혁 논의

**【10일】** 문화재청,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해 온 『삼국유사 권 1~5』를 국보 306-2호로 승격 지정하고 통도사 소장 ‘금동천문도’와 용흥사 소장 ‘삼불회괘불탱’, 안중근 의사 숭모회 소장 ‘안 의사 유묵’은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힘

**【17일】** 조선적십자회, 남측에 쌀과 비료 지원 요청

**【18일】** 환경부, 산업체에서 많이 쓰이면서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정하고 배출허용치를 설정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2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 반국가단체’ 규정은 삭제가 바람직하고 ‘고무·찬양죄’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제한되어야 하며, 국외와 연관성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경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22일】** 국방부,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줄이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24일】** 문화재청, 한국전쟁 때 미군 양민학살 사건의 현장인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를 등록문화재로 지정

**【28일】** 영화 <아리랑>, 분단 뒤 처음으로 5월 중 남북 동시개봉

**【29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출산휴가를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기간에 포함시킨 중앙인사

위원회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남녀차별조항으로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에 시정 권고

**【30일】** 간접차별도 남녀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채용 시 여성의 키 제한, 대출 대상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것 등이 간접차별에 해당됨

## 정 치

**[1일]** 노 대통령, 문화방송 '100분 토론' 출연. 일부 보수신문이 독점적 권력행사 등 더 이상 특권을 누리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

**[3일]** 노 대통령, 차관급 공직자 워크숍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통제가 행정의 투명성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통제와 시민고발, 시민쟁송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

**[4일]** 북한이 50년 만에 '인민생활국채'를 발행해 전국 판매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로동신문>을 인용해 보도

**[7일]** 노 대통령, 공무원·청와대 홈페이지 가입자 등 500만 명에게 전자우편으로 공개편지를 보내 국민들에게 잡초를 뽑는 농부의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 줄 것을 호소

**[7일]**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이미 해 오던 경협사업은 핵문제 해결과 함께 계속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힘

**[9일]** 노 대통령, 국정원 조직개편. 2차장 산하의 대공정책실 폐지 등 국내담당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부처·언론 등의 상시출입 관행 폐지. 동북아 경제 중심 프로젝트 지원부서 등 국익 증진을 위한 해외정보 수

집 역량 강화 기구는 강화

**[9일]**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지침 확정. 향후 각 부처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거주 위원 10%, 여성 위원 30%, 시민단체 추천위원 20%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12일]** 지은희 여성부 장관, 6월 중 호주제 폐지 정부법안을 제출할 것과 연내에 1인1적 또는 가족부 방식의 호적제 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18일]** 노 대통령, 부패방지위원회의 윤리강령안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

**[19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향후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을 초과한 금전·선물·향응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 위반할 경우 직급에 따라 언론에 공개되거나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됨. 환경부, 감사원 등 각 부처별로 윤리강령도 잇따라 발표

**[19일]** 노 대통령 남북경추위 재개와 관련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다른 남북 문제에 영향받거나 분위기를 타지 않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힘

**[22일]** 노 대통령,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벌어진 한총련 학생들의 현장대응 및 사후처리 방안을 두고 참모진들과 의견 차이 토로. 대통령은 "망월동 묘지 뒷문으로 들어갔지만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서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엄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참모들은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며 민주적인 신문조차도 이를 경호에 구멍이 뚫리고 대통령이 500m를 걸어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힘. 대통령은 “국외에서 볼 때 한국이 ‘개관’ 이구나 생각이 들어도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내 소망”이라며 “오늘 외교관들과 자유롭게 담소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만만하게’ 보였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함

**【26일】** 노 대통령, 보좌진들에게 “참여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 만큼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뒤집지 말고, 소신을 갖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의명분을 갖고 원칙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참여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라고 강조

**【28일】** 국정홍보처, 9월 1일부터 각 부처의 출입기자단체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중앙청사 내 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홍보처 내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노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베이징 3자 대화가 유익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 아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11일】** 노 대통령, 6박 7일간의 방미 일정 위해 출국

●노 대통령, 뉴욕으로 가는 특별기 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제거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상황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12일】** 노 대통령,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 금융시장이 에스케이 사태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이 사태를 계기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더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

**【14일】** 한·미 정상회담, 북핵 평화적 제거와 동반자관계 지향에 합의.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향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노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설명

**【16일】** 노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저자세 논란과 관련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불안 해소 문제를 잘 협의해 합의의 얻기 위한 마당에 미국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한국의 일부 의견에 따라 입바른 소리나 하고 나쁜 소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며 “한·미 간 우호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속에만 넣어 두고 미국에 대해 좋은 관계는 다 덮어 버리고 나쁜 관계만 말했다면 또 다른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 친미·반미의 이분법적 사고 경계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2003년 반부패 세계회의’ 개막. 노 대통령 개막연설에서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

**【31일】** 한·미 연합사령부, 미국이 2004부터 3년 동안 110억 달러(14조)를 들여 주한미군에 초고속 수송선, 무인정찰기 등을 배치하는 대대적인 전력 증강에 나선다고 발표

## 경 제

**【2일】** 신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신문고시’ 제11조 개정.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같은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됨

**【5일】**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취업하는 북한 노동자

의 월 기준임금이 임금 50달러와 사회보장비 15달러로 확정됨

**【7일】** 노 대통령,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면 서민 생활이 불안해지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부동산 값 안정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우라”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과세지표 현실화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

**【9일】** 대통령 정책실 사회통합기획단, △구액 현금거래 보고제 △고소득자의 보험료 관리 강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간이과세자 범위 축소 등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11일】** 건교부, 6월 중순부터 투기과열지역 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키로 결정

**【12일】** 노 대통령, 경제5단체장과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등 방미사절단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관치금융은 없으며 시중은행 인사에 정부가 관여하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 밝힘

**【16일】** 재정부,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로 나뉘어 있는 시장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한국거래소로 합치는 등 증권·선물시장 개편 방안 확정 발표

**【1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평양서 개최

**【23일】** 제5차 남북경추위, 6월 중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 행사와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 남쪽은 차관 형식으로 쌀 40만 톤을 올해 안에 북쪽에 지원하기로 함

**【23일】** 한·러 정부, 우주기술협력 협정 체결. 우주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

**【28일】** 건설교통부, 하반기 이후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중 20%를 장기 임대형 국민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택지개발업무지침 시행하기로

**【29일】** 일본 정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 간 교섭을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31일】** 노 대통령, 청와대를 찾은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에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

## 사회·문화

**【5일】** 노 대통령,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임기 5년 안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상응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힘

**【6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규명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 보고서는 4·3 강경진압의 최종 책임은 이를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으며, 4·3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미국 군사 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힘

**【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

**【19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 중단 압력을 받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은 이미 1조 4천억 원이 투입돼 물막이 공사가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이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힘

**【20일】**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당정 간에 6월 초까지 ‘신구상 계획단’을 만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새만금 문제를 다루라”고 지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 중단을, 농림부는 지속을 주장하며 토론

**【26일】** 보건복지부, 항생제나 주사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병·의원 가운데 개선 권고에 불응하는 곳은 현지 실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27일】** 당정,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행자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기로 합의

**【29일】** 법무부, 이중처벌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과 개방형 감호시설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개선안 발표

**【30일】** 경제·사회 분야 장관 회의, 직원 재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 장려금,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실시 등 서민 생활안정대책 발표

## 정 치

**【1일】** 국방부, 서해상에서 북측 어선에 경고사격. 국방부에선 북측 어선이 침범했다고 규정했으나 북측은 남쪽 군함이 북쪽 영해를 침범했다고 규정

**【2일】**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중심의 권 위주의 정치로부터 국민 중심의 참여 정치로 전환 중이며, 이런 변화가 일부에선 혼란으로 비치지만 나는 이를 과도기적 현상으로 본다”고 지적

**【3일】** 정부, 국무총리 주제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가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매주 수·토요일 두 차례 진행기로 결정. 국정현안 조정과 사회갈등 조정에 총리 주도로 내각이 적극 대처하기로 함

**【3일】** 북한 해군사령부, 남쪽 군함이 북쪽 영해를 잇달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남쪽 군 부가 서해교전과 같은 상황을 조작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

**【3일】** 이장희 교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서해5도 주변의 3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 하고, 나머지 수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3일】** 정부, 주한미군 주둔 편의를 협의할 ‘미2사 단 주둔여건 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주한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를 다양화해 이 견을 조정하기로 결정

**【3일】** 정부와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북쪽에 지원하기로 한 쌀 40만 톤의 재원을 남북협력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조달하기로 합의

**【3일】** 국정홍보처, 3월부터 4월까지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발언한 내용을 담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발간

**【6일】** 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정보원,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노력과 국회 존중과 당정분리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등,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밀실인사, 공작정치의 폐해는 참여정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

**【8일】**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한 반전평화의원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유사법제 법안은 전쟁 금지와 무력행사 포기를 천명한 일본 평화헌법 9 조를 전면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

**【11일】** 노 대통령, 3급 이상 중앙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인터넷 대화’를 열고 “대통령과 공무원의 직접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정부의 개혁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

**【12일】** 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개 특별법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

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13일】** 노 대통령, 전국 세무관서장과의 오찬에서, 각 부처의 '공식·비공식 개혁주체'를 만들 것이며, 국정원·검찰·국세청이 아닌 도덕적 신뢰와 공정한 인사권을 가지고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밝힘

**【14일】** 2002년 9월 남북공동 착공식 이후 9개월 만에 경의선·동해선 연결 행사 진행. 경의선은 9월, 동해선은 연말까지 완공예정

**【17일】** 노 대통령, 청와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치안사범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

**【19일】** 정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훈령 발표. △주요정책 결재 내용 △주요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주요사업의 계약서, 진척상황, 중간평가, 최종평가 △예산·기금 현황 및 집행상황 △연중 예산 집행계획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됨

**【19일】** 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흥은행 노조의 매각반대 파업을 포함한 최근의 노동쟁의와 관련해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졌으나, 최근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

**【20일】** 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국정원 방문. "이제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끝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스스로 개혁해 달라"고 당부

**【20일】** 고영구 국정원장, △탈권력화 △탈정치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탄생 △포괄적 안보 등 새 개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

**【21일】** 노 대통령, 계통대에서 군 장성 127명을 상대로 특강 진행.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 것"이라고 주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기 중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며 "다만 장기적인 국가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미국과 협의해 천천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22일】** 노 대통령, 대북송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며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 나온 부분은 새로 조사하면 된다"고 밝힘

**【23일】** 노 대통령, 전국 근로감독관 상대 특강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공권력 투입은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 대통령은 또 "법과 원칙이 곧 공권력 투입과 같은 말은 아니다"라며 "파업사태를 협상하고 종결하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

**【24일】** 대북송금 특검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3인을 추가 기소하며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뒤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힘

**【25일】** 대검 중수부, 대북송금 수사결과 발표. 현대는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4억 달러를 정상회담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정부는 1억 달러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한나라당, 특검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특검 거듭 주장. 두번째 특검법안 국회 제출

**【25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과 '법무부 고위직 개방직화 방안'을 의결. 법무부 내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권을 주고 검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법무부 일부 고위직도 개방직으로 바뀌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6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이 국회에 새로 낸 대북송금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힘

**【26일】** 노 대통령, 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 36명과의 오찬에서 "검찰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끊으라"고 강조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를 뼈대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청한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은 부결

**통일 · 외교 · 안보**

**【2일】** 폴 윌포워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 노 대통령 예방하고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한국은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말한 부시 대통령의 의견을 전함

**【5일】** 제2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 한강 이북에 주둔하는 미군 2사단을 두 단계로 나눠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6일】** 노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위해 출국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유사법제 관련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명. 이에 가와구치 장관은 "일본이 그동안 준수해 온 전수방위, 평화헌법, 비핵3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변명

**【7일】** 한·일 정상회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대화에 계속'에 비중을 둔 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엄정한 단속'을 언급

**【8일】** 한·일 정상 공동성명. 한국의 평화번영 정책 지지와 일본의 북·일 국교정상화 상호지지. 자유무역협정 교섭 시작을 위한 노력에 합의

**【9일】** 노 대통령, 일본 <티브에스> 방송국 주최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실과 다르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면 적대감이 생기고 잘못 충돌해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함

**【9일】**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 과거사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주력하자고 호소

**【9일】** 북한 관영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로서도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며 핵 억제력 보유논리를 처음으로 언급

**【9일】** 노 대통령, 일본 공산당 가즈오 위원장에게 "한국은 현재 공산당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민주국가로서 문제다. 내가 일본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일본 공산당과 한국과의 교류를 용인할 뜻을 내비침

**【12일】** 한·미·일, 하와이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티콕)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다자간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17일】** 한·중·일 3국, 캄보디아에서 외교장관 회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5자 회담 등 다자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아세안 10개국, 성명을 통해 한·중·일·미·러 5개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

**【18일】**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여하는 23개국, 캄보디아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결정을 반복할 것을 촉구

**【23일】** 일본 정부,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2단계 대북 압박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성·청 간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작업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24일】** 미국 국무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 미국의 2002-2003 기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상호관계를 맺을 때 구체적이고 입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함

**【25일】** 미국과 유럽연합, 연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국제원자력기구 규정 위반을 규탄하고 북핵 폐기를 촉구

**【26일】** 찰스 캠펠 주한 미8군사령관, 서울 전쟁기념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미 두 나라의 용

산지와 미2사단 재배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일부 감소될 것"이라며 한·미관계가 조정기에 돌입하고 있음을 시사

**【27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 유엔안보리 순번제 의장국인 러시아 유엔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해상·공중 봉쇄 방침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해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경고

**【2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2003년 말부터 주한미군 2사단 일부 병력과 용산 미군기지의 서울 남쪽 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

## 경 제

**【1일】** 노 대통령, 재계총수 26명과 오찬. 대통령은 재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재계의 요구사항인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고, 재계 인사들은 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6조 원의 투자계획과 해외홍보 계획으로 화답

**【3일】** 건설교통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 5개 시·군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5·23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

**【4일】** 정부,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 성과와 비전' 발표. 원유관세율 인하, 3천만 원 이하인 부급생활자의 소득공제율을 상향, 중소기업의 최저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

**【8일】** 북한은 주민들이 일용품 등을 사고 팔아 온 암시장을 양성화해 개인들의 상행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의 초기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

**【11일】** 국세청, 5·23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충청권에서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벌여 투기 혐의자 600명을 가려내고 탈루 세금 423억 추정

**【13일】**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 새 도시를 연결하는 영종도 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13일 주간사인 영국 에이엠이시(AMEC)와 체결

**【13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에스케이그룹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 3년 선고. 재벌그룹의 변칙 증여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재벌그룹의 변칙 주식거래를 통한 2세 상속 관행에 제동이 걸림

**【13일】** 현대아산 정몽헌 이사회 회장과 북쪽 아태 평화위 송호경 부위원장, 금강산 남북 사업자 접촉. 사스로 중지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16일】** 민주당과 정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8%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 검토.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인력난 해소와 인력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 '중소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

**【18일】** 서울지검, 부동산 회사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포탈한 부동산 매수인 1,383명을 모두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힘. 부동산 거래에서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수인이 모두 입건돼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19일】** 국세청,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하거나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옷돈을 받고 판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 209명을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발효. 이동전화 쪽지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보낼 때도 제목에 '광고' 표시 의무화

**【2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를 45년 만에 최저치인 1.25%에서 1%로 낮춘다고 발표

**【27일】** 노 대통령, 경제주간지 <포브스>의 한국어 판 발행과 관련해 스티브 포브스 사주 겸 편집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해도 해소돼야 한다”며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제도 등의 수정 필요성 제기

**【27일】** 최저임금위원회,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0.3% 인상한 한 달 56만 7,260원으로 심의 의결

**【28일】**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발의 구체적 시행방법을 담은 ‘개발규정’과 ‘기업창설 운영규정’을 각각 발표. 2002년 11월 발표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련법의 후속조치로 향후 남북 경협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30일】** 북한 개성 현지 1단계 지구에서 남북 정치·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착공식 열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경과보고에서 “1단계 100만 평의 착공식을 갖는 것은 개성특구 2천만 평의 본격 건설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라며 “남쪽의 기술 및 자본, 북쪽의 저렴한 임금과 우수한 노동력을 결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공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

**【30일】** 노 대통령, 김진표 재정경제부총리, 도널드 존스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해 향후 1~2년 안에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등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힘

**【30일】** 정부, 미국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힘

## 사회 · 문화

**【1일】** 교육부,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소절 개발을 위해 지정된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배움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을 목적으로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5일】** 한림대박물관, 경기도 가평에서 고조선계 널무덤을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 고조선 멸망 뒤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옮겨 갔다는 중국사서 <삼국지>와 우리 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기록을 실제로 입증하는 고고학적 실마리를 최초로 확보

**【9일】** 환경부, 무분별한 국토 개발과 남획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 위기종’과 ‘보호종’으로 이원화돼 있는 분류체계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통합하고 500종으로 크게 확대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놓여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세우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과 본인 부담금 상한제 등을 농어민에게 우선해 적용하는 등 특별 농어촌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16일】** 교육인적자원부, 4년제 국립대에 200명의 여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특별 증원해 배정

**【18일】** 국세청, 기업들이 한 번에 30~50만 원 이상 접대를 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출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세무 부조리 근절 대책 발표

**【20일】** 정의용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차기의장으로 선출

●국제노동기구, 집행 이사회에서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

**【20일】** 정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청소년 보호대책 관련 회의에서 음란 메일 방지 등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

**【20일】** 외교통상부, 지난 7년 동안 시행해 온 한·중 국제결혼 양해각서를 7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힘. 한·중 결혼절차 간소화

**[22일]** 삼성 이승엽 선수,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개인 통산 300호 홈런 기록

**[22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사회차별을 없애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로 결정

**[22일]** 노동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23일]** 문화재청, 옛 조선총독부 청사(전 국립중앙박물관) 철거 후 사용해 온 서울 경복궁 구내의 현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에 10월부터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조성한다고 밝힘

**[24일]** 경찰혁신위 수사제도 분과위,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방안 발표. 피의자를 밤늦게까지 조사할 때는 반드시 주무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밤샘조사를 할 때는 신문조서에 연행 일시와 대기시간·장소, 조사 개시 및 종료 시간, 취침·휴게 시간 등을 명기해야 함

**[24일]** 언론과 재계에서 노동쟁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우려와는 달리 노동부가 공개한 통계치에서 노동쟁의 건수, 참여노동자 수, 근로손실일수 등 각종 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됨

**[24일]** 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불법조회 행태를 막기 위해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7일이 지나도록 검사장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담당자 이름을 법무부에 통보한다고 밝힘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탐색'이란 주제로 연 교육정책포럼에서, 한국의中等교육 이수율은 95%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2.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남

**[25일]** 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현재 생계비의 83%에 그치는 1급 참전 상이용사에 대한 보상을 2008년까지 생계비 10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힘

**[25일]** 헌법재판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29일]** 남북 적십자사, 2003년 추석계 현재의 100명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400~500명 수준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

## 정 치

**【1일】** 국회, 한나라당 주도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통과

**【2일】** 노 대통령, 국회에 편지를 보내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 1,77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힘. 이 밖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 △증권 집단소송제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 요청

**【3일】** 사회 각계 원로 10명, 시국선언 발표를 통해 여야 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전국정당 건설 촉구

**【3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

**【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자치정부의 입법권과 조직·인사 자율권 및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대폭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

성 확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후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발표

**【4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첫 공판 열림

**【4일】** 감사원, '군 검찰 등 수사활동비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육군본부 법무감실이 군 수사활동비 등 2억 3,845만 원을 수사관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변칙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법무감에 징계를 결정하라고 통보

**【6일】** 대검, 대북송금 특검팀에서 불거진 현대건설 비자금 150억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7일】**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안영근 김영춘 등 한나라당 의원 5명 한나라당 탈당 공식 선언. 신당 창당 논의 본격화

**【7일】** 노 대통령, 3박 4일 일정의 중국 방문 위해 출국

**【9일】** 제11차 남북 장관급회담 서울에서 시작

**【9일】** 서울행정법원, 국회 예산 중 예비금이나 위원회 활동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을 때 지출 내역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12일】** 제11차 남북 장관급회담 종료.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6개 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15일】** 국회, 한나라당이 새로 제출한 대북송금 특

검법을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킴. 청와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 천명

**[15일]** 노 대통령,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작금의 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논란은 정파 간의 소모적 정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진솔하게 진실을 밝혀 정치개혁의 계기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은 이어 “여야 모두 지난 2002년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하자”고 제안

**[15일]** 한나라당, “정부와 여당이 불리해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어들이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제안을 즉각 거부

**[18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조직권 등 8개 분야의 지방 관련 기능 313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94개 기능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넘기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 발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선거의 투표연령을 현재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추고 선거 180일(대통령 선거는 1년) 전부터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정치개혁안 발표

**[21일]** 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핵과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 표명

**[21일]** 노 대통령,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법정 선거자금과 함께, 각 정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이후 사실상 대선에 사용한 각종 정치자금과 정당의 활동자금, 대선 잔여금을 모두 여야가 함께 공개할 것을 제안. 대통령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조사하되,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별검사도 좋고, 검찰도 좋다”고 말함. 한나라당, 제의를 거절

**[22일]** 국회 국방위,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2개월, 전문연구요원의 근무기간도 1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의결

**[23일]** 민주당, 정당 사상 최초로 대선자금 세부 내역 공개. 개인·법인 후원금 74억 5천만 원. 예금거래명세표와 희망돼지 모금통장 사본,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23일]** 중앙인사위원회, 공직 문호를 넓히기 위해 현행 개방형 직위 가운데 외부 임용이 낮은 직위 등을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조정지침’ 마련

**[25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퇴직연금 단계 추진 등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확정해 정부로 이송

**[27일]** 정부, 9월 1일부터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론 등을 기사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 국정신문>(가칭)을 창간하기로 결정

**[28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쓰레기매립장 설치, 시·군 통합 등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한·미·일 3국,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고위 협의회를 열고 북핵 공동 대응책 논의. 미국 백악관, “다자틀 속에서의 외교가 최선의 외교적 방법”이라고 강조

**[3일]**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을 미국으로, 다이빙귀 부부장을 러시아로 파견하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중재노력 펼침

**[3일]**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국간 협의 틀을 4자 회담으로 할 것을 미국 쪽에 간접 타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5일]** 중국,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환영

분위기 고조. 상하이시는 시의 상징탑인 '동방명주' 내 '세계의 명소' 코너에 지난해 한·일 월드컵 당시의 '붉은 악마' 응원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을 설치.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은 노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룸

**[7일]** 노 대통령, 나흘 일정 중국 방문

● 노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의 협력 성과를 기초로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여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모두 11개 항목으로 된 한·중 공동성명 발표

**[9일]** 미국 상원,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정착하기 쉽게 해 줄 '북한난민구조법' 통과시킴

**[10일]** 일본, 북한 감시할 정보수집위성 2기 발사. 지난 3월 발사된 2기의 위성과 함께 총 4기의 위성으로 북한 전역 감시

**[14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 촉구

**[18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한이 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있던 폐연료봉을 재처리 중이라는 최근의 보도에 관해 "가장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국제사회가 관심을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20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공공요금 부과위, 주한미군 전기요금을 14년 만에 인상, 적정화하기로 결정

**[20일]** 노 대통령, 방한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블레어 총리는 "북핵문제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북핵이 국외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특히 다자 회담에 북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함

**[24일]** 한국과 미국, 하와이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 회의, 미군이 담당한 판문점 공동경

비구역의 경계 임무를 2005년 초반까지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합의

**[25일]**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미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하루 동안 중국 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과 회담을 열고, 다음 날 한국·러시아·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 회담이 9월 15일 이전에 각국 외무차관급이 참석해 열릴 것이라고 밝힘

**[25일]** 노 대통령,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북핵문제에 대한 뉴질랜드의 한국 입장 전폭적 지지 확인

**[27일]** 노 대통령, 정전협정 50돌 기념행사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생의 길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할 경우,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30일]** 외교통상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운영개선 특별대책반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에 대한 이용부담금을 지난해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해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경 제

**[2일]** 제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회의의 시작

**[4일]** 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사문제 해결의 첫번째 조건은 기업의 투명성"이라며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하다"고 밝힘

**[7일]** 재정경제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시행될 경우 해당 구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고 특정 규제가 풀리게 됨

**[8일]** 정부, 전국을 중부권과 서남권, 동남권, 수도권, 강원·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 추진하기로 결정. △중부권(대전·충남·충북)은 전자·바이오 등 첨단산

업 육성과 물류·유통 분야 △서남권(광주·전남·북)은 중국과 연계한 물류·관광, 광·문화영상 △동남권(부산·울산·대구·경북)은 기계·부품·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해양물류, 전통문화의 세계화 전략 △수도권(인천·경기)은 지식산업 집적지로 △강원·제주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 중심의 육성 전략 마련

**【10일】** 건설교통부, 향후 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건물에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하도 상가에는 불을 사용하는 음식점 설치를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대책' 시행계획 발표

**【10일】** 한국은행, 금리 0.25% 인하 발표. 소비·투자·생산 부문의 침체가 뚜렷하고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

**【11일】** 국회 재경위, 에어컨, 프로젝션텔레비전 등의 특소세와 연간 1,500만 원 이하 공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특소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킴

**【14일】** 정부,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최초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한 대책으로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 발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내용

**【15일】** 건설교통부, 서울 금천·동작·양천·은평·중랑구, 부산 북·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와 용인시, 강원 춘천시 등 11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17일】** 강원도, 애완동물특구 등 지역특구 예비 신청서 제출.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 전략에 따른 첫 사례

**【21일】**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예정지와 주변지 개발을 제한하고 토지보상 기준도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확정. 입법 예고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재정경제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은' 예산을 축소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의결

**【24일】** 노 대통령,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개최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혁과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28일】** 노 대통령,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방문. "(우리 사회는) 집단이익과 갈등으로 모든 영역이 발목 잡혀 있다"고 진단하고, "서로 제 밭 그릇을 챙기다 모두 주저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함. 또한 "기업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무조건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투명경영을 하면서 노동자와 대화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

**【28일】** 농림부, 농정추진현황 보고. 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해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쌀 소득으로 가계비 충당이 가능한 6헥타아르 수준의 전업농 7만 호를 육성하기로 결정

**【31일】**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회의. △남북 4대 경협합의서 조약비준안 정식 발표 △수출입·조선무역은행을 청산결재은행으로 지정 △남북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해 합의

## 사회·문화

**【1일】** 국세청, 국무회의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 보고. 2004년부터 적격영수증 의무화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쉽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 청계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2차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를 2010겨울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강원도 평창, 3표 차로 뒤져 겨울올림픽 유치 실패

**[3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발표

**[4일]** 국가인권위원회, 운전면허 적성시험에서 탈락한 장애인 5명이 낸 진정사건과 관련해 '신체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권고

**[4일]** 한명숙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연료를 많이 쓰는 100여 개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밝힘

**[4일]** 정부·학계 공동, '고령화 기획단' 신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낮은 출산이 계속될 경우 기존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뀌어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분야에 두루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단을 꾸리기로 결정

**[4일]** 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정치화, 강경화되고 있다고 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의 향상을 외면해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만이 법과 원칙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

**[6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총 529명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고 대회 개최식과 폐회식 때는 남북이 함께 한반도기를 앞세워 입장하기로 합의. 남북동시 입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아오모리겨울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네번째. 북한의 선수촌 입장과 시상 때는 인공기가 게양될 예정

**[6일]** 건설교통부,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획단이 지하철·철도 분야 89개 개선과제를 담은 안전대

책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40개 예산사업에 모두 3조 1,1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힘

**[7일]**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

**[8일]** 보건복지부,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

**[9일]**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4,793만 명으로 세계 26번째 수준. 남북한을 합친 인구는 7,100만 명으로 세계 17위

**[14일]** 노동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작업환경 개선 등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고시

**[14일]**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형인 부안군의회 의장, 산업자원부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기반공학사업 유치신청서를 전국 지자체 중 단독으로 제출

**[14일]** 부패방지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가 선발과정의 특례 매매, 부실한 복무관리 등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

**[15일]** 서울행정법원,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켜 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집행정지결정.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농림부는 고등법원에 항고

**[15일]**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교수임용실태 감사에서 모든 대학에서 위법·부당 사례 발견하고 각 대학에 중징계 지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하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권고

**[16일]** 정부, 국정과제 회의에서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2%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함

**【17일】** 대법원·대검찰청 ‘형사 사법절차 개선안’ 발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법정에서 곧바로 풀려나게 됨

**【18일】** 정부와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내리기로 합의

**【18일】** 보건복지부, 가족해체 현상으로 생겨나는 각종 어린이·노인·여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긴강가정 육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

**【18일】** 정부, 원전수거물 관련시설 관계장관 회의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을 한 부안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위도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위도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결정

**【18일】** 노 대통령,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하라”고 지시

**【20일】** 노동부, 시간강사 등 시간제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받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24일】** 산업자원부, 전북 부안군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핵폐기장) 적합 터로 결정. 부안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 계속 이어짐

**【25일】** 대검 공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간부 152명 가운데 79명의 수배를 해제하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

**【28일】** 노 대통령, 전북 부안의 위도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되, 관계 장관들이 방송 등에 출연해 투명하게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29일】** 건설교통부,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공론조사’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이러한 방식의 공론조사는 아직 국내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으나 정확한 표본 추출과 자료 제공, 공정한 토론을 통해 엄정하게 진행하면,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31일】** 노 대통령 방사성 폐기장 유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위도 주민 대책과 관련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주민들을 설득하는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 현지시찰 등을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국민 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정부가 국정 주도의 힘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타율적으로 끌려다니면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능이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우려 표명

**【4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계동 현대본사 사옥에서 투신 자살

**【4일】** 노 대통령, 정몽헌 회장의 자살소식에 애도를 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정 회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경제사업이 고인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4일】** 북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죽음과 관련, 애도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할 방침 밝힘. 현대아산 쪽에 애도 조전을 보내 북측에서도 추도회 열 뜻을 전함

**【6일】** 여야 의원 23명,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비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8일】** 북한,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유지에 따라

남북 대화와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9일】**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대북 화해·포용정책 지지 75.1%, 금강산 관광사업 계속 유지 의견은 80.0%인 것으로 조사됨

**【11일】** 청와대, “앞으로 비방 의도가 명백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겠다”고 선언.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청와대 내부 정보 누설자 2, 3명 압축’ 보도 등 악의적 보도·오보를 한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

**【12일】**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에서 후보자를 사법고시 합격 기수대로 내부에서 고르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반발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대법관 후보제청 자문위원직 사퇴

**【13일】** 대법관 선임 진통 확대. 구태를 따르는 대법원의 추천 내용에 반발해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퇴. 7명의 부장판사를 포함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연판장을 돌리는 등 사법부 개혁 촉구

**【13일】**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올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자문서관리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함. 문서 생산에서 유통, 보존까지 모든 처리 과정이 완전 전자·자

동화되어 종이 서류가 사라질 전망

**【13일】** 법무부, 검찰 조직의 핵심 운영 원리인 '상명하복' 규정을 없애고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감사의 항변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

**【14일】** 국회의원 154명, 일제에 부역해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의 행적과 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

**【14일】** 정부,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년 주민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전자투표제와 전자선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전자정부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전자정부 일정표 발표. 9월부터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인터넷으로 시범 발급하기로 함

**【15일】** 2003년 광복절. 노 대통령, 자주국방 천명.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그간 한·미관계의 재설정에서 미국 정부도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고,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가겠다"고 선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지도 밝힘

**【17일】** 노 대통령,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사와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결하더라도 국민들이 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퇴임 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18일】** 대북송금 특검팀, 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 구형

**【18일】** 국회 정보위원장, 그간 인권문제 등 논란이 되던 '테러방지법안'을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국정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법이 될 것이며 국가인권위, 민변, 시민단체 등에게 법안내

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힘

**【18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가급적 올해 안에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19일】** 노 대통령, 8월 15일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유감 표명. 이 사건으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선언했던 북한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 두 시간 만에 참석 통보

**【19일】**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됨. 대법원 제청과 관련된 진통 일 단락. 대법원은 기존의 구습을 따랐던 대법관 제청을 유지하는 대신 헌법재판관에 서열(기수) 지명을 파괴하며 비교적 젊은 여성 재판관을 지명해 변화하는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

**【22일】** 법무부, 검찰 229명 전보 인사. 이번 인사 결정엔 처음으로 평검사들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됨

**【22일】** 국방부, 국군의 날 열리는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부작용이 노출돼 폐지하는 대신 3군 사관학교의 4학년 생도 전체가 혼성팀을 구성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힘

**【28일】** 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내부로부터 개혁도 일어날 것이고, 권력이 있는 만큼 견제도 필요하다"고 지적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들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북·미,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국에 통보

**【13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이 지난 주 가오슝항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 '베개봉'에서 신경가스 제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인산 화학물질

약 150배를 강제로 하역시켰다고 보도

**[15일]**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니혼게이지아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현상 동결을 하고 △사문화된 북·미 기본 합의를 부활시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막으며 △농축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세 단계로 나누고, 북한의 대응에 따라 미국이 북한체제 보장 조치를 취하자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

**[18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여야 대표에게 베이징 북핵 6자 회담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중 간에 뭇을 나눠 회담을 성공시킨다는 일종의 합의가 있다”며 “중국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

**[27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중·미·일·러 6개국이 참여하는 첫 6자 회담 베이징에서 시작. 전체회의와 개별 양자대화 등 진행

**[27일]** 이수혁 한국 6자 회담 수석대표, 6자 회담 기조연설에서 단계적이고 균형적인 상호조치로 핵문제를 풀어야 하며, 북핵이 해결되면 북한의 경제개발에 기여하겠다는 민족적 입장을 밝힘. 또 핵문제 해결을 통해 북한이 여러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자는 청사진을 제시

**[29일]** 첫 6자 회담, 차기 일정 확정하지 못한 채 폐막. 북한의 핵 폐기 의사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 교체를 추구할 의도가 없다는 의사 확인. 북핵문제를 가지고 6자라는 다자 간 논의구성체가 처음으로 마련됨

## 경 제

**[5일]** 정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타계함에 따

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 보장을 요구할 경우, 이를 경협사업 계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함

**[8일]** 고흥 우주센터 건설 기공식.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발사장을 갖춘 나라가 됨. 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주기술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이라며 우주기술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

**[8일]** 통일부,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발표시점에 맞춰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한 회계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힘

**[11일]** 정부, 오산·아산·김포·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을 투기지역에 추가

**[14일]** 정부와 민주당, 당정협의를 통해 판교 새도시를 서울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 판교에 건설될 주택호수를 애초 1만 9천 가구에서 2만 9천 가구로 늘리기로 하고 이 중 6천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지역 거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함

**[15일]** 통계청, ‘연령대별 고용 동향’ 자료 발표. 노동력 고령화 심화.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현상 나타나

**[22일]** 권기홍 노동부 장관, <시비에스라디오>에 출연해,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노동자들이 주5일제 실시로 월차 휴가가 없어지고 휴가수당과 월차수당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총액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금 저하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22일]** 정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대회’를 열고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텔레비전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자, 바이오 신약 및 장기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

**[23일]** 건설교통부, 철도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철도 시설과 운영 부문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

사로 분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선박 건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6위, 1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는 세계 3위

**[27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한·중·일 세 나라 간 항공자유화, 부산 신항 조기완공 등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이정표)을 확정 발표. 화물 연대의 운송여부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자동차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등록제도 조기에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됨

**[28일]**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그간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던 간접교역을 직접교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교역 협의를 위한 통로로 중소기업사무소를 북한 지역에 개설하는 등 9개 항의 공동합의문 채택

**[28일]** 재정경제부,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자기 조세 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 개정안' 마련

## 사회·문화

**[1일]** 보건복지부, 현역 사병,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3일]** 산업자원부,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평가결과와 참여한 위원의 명단 공개. 17개 항목 중 14개 항목서 우수 평가받음

**[7일]** 한국과 대만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1명,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요구

**[12일]** 병역기간 2개월 단축법안 국회 통과. 10월부터 육군 24개월 복무 시행

**[13일]** 노 대통령,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

동운동과 함께 생활 향상, 근로조건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노동운동을 도울 수가 없는 상태”라며 “민주노총이야말로 대규모 기업들로 돼 있으며,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두 배, 세 배를 받는 사람들이 뭉쳐서 노동운동을 앞장서 밀고 나가고 있다”고 지적. 대통령은 이어 “사회 빈민층 서민들의 주거문제, 사회안전망, 건강보험 등 생활안정에 관한 문제들을 노동운동이 주장해야 하는데 지금 운동이 그렇지 않다”고 비판

**[19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21일]**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라는 대회 슬로건으로 11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 남북 선수들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 공동입장은 역대 네 번째

**[25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 촉진을 위해 6살 이하 영·유아 보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결정

**[25일]** 43개국 163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자격의 시민 380명, 6자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험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호소'를 발표. 이 '호소'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개인한테서 지지 서명을 받아 발표한 것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국제평화기구(IPB)와 피스보트 등의 단체와 김근태·이부영 의원 등이 참여

**[31일]**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 화제를 몰고 온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의 참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기간 불참국의 참가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풍성한 대회로 마감. 한국 종합 3위

## 정 치

**【1일】** 대법원,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대법원 쪽 실무자 3명과 청와대 쪽 실무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힘

**【1일】** 청와대, 개방형 브리핑제의 실시에 따라 메시지 중복 방지 등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주요 부처 홍보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정책홍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

**【2일】** 노 대통령,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한다”며 “언론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

**【3일】** 국회, 한나라당 단독으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해임 사유는 한총련 시위

**【4일】** 민주당의 신당추진모임, 독자적인 신당 창당을 선언

**【8일】** 노 대통령, 언론과의 긴장관계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참여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정당하고 차분하게 언론과의 관계를 정립해 갈 것”이라 강조. 대통령은 “언론과 맞서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그만 양보

하고 타협하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지만 나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17일】** 노 대통령, 민주당 내분 사태와 관련해 “힘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정치질서로 변화하는 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며 “새 정치질서가 구축되는 데 일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역구도의 해소, 좀더 투명한 정치,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상향식 정치가 될 것”이라고 밝힘

**【17일】** 제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에도 한 달 이내에 군 직통전화 설치하기로 합의

**【18일】**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요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

**【18일】** 여야 의원 207명. 군 의사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19일】** 정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의에서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 다목적 헬기 사업은 현재 육·해·공군에서 운용하는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조 원을 포함해 총 15조 원이 들어갈 예정인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사업

**【19일】** 정부,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른바 '3대 국책사업' 중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구간은 속행,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은 결정 유보, 경인  
운하 사업은 사실상 폐지로 결론 내림

**[20일]** 민주당 신당파 의원 37명, 탈당계를 내고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 5명과 함께 '국민참여통합  
신당'으로 국회에 교섭단체 등록

**[23일]** 노 대통령, 민주당의 분당에 대해 "이런 현  
상이 한국에서 민주세력의 분열이나 약화로 갈 것  
으로 보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새로운 구조로 바뀌기 위  
해 일부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24일]** 정부, 이라크 전투병 파병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현지조사단 파견

**[26일]** 서울지법, 대북송금 관련 6명 모두 유죄 인  
정, 전원 집행·선고유예 결정.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지만 남북 정상회담 등 긍정적인 평  
가가 유효하다고 밝힘

**[29일]** 노 대통령, 민주당 탈당

## 통일·외교·안보

**[1일]** 6자 회담의 중국 수석대표인 왕이 외교부 부  
부장, '핵문제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 뭐냐'는 기  
자들의 질문을 받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주요문제"라고 대답

**[2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유에스에이투  
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1994년 핵위기 때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이른 과정을 얘기하며 북한과 미국  
이 둘 다 약속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상황이 다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지적

**[4일]** 국방부, 한국 쪽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  
적을 받아 온 폐탄약 처리에 대한 합의각서를 4년  
만에 손질해 불평등 조항을 개정했다고 발표. 국  
방부와 주한미군, '한국 내 탄약비군사화 시설 건  
설,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

**[9일]** 국방부,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이라크 전  
후의 치안유지 차원에서 전투병 파병을 타진했으  
며, 정부는 국제정세의 동향과 국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발표

**[17일]** 칠레 상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법안 표  
결을 '우리만 처리할 수 없다'며 한 달 연기하기  
로 결정. 칠레 상원의장은 "한국 국회가 법안처리  
의 진전을 위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라며 한국 국회의 행동 요구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47차 총회에서  
"북한은 국제 비확산 의무에 반하는 행동과 선언  
을 재고하고 기구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19일]** 미국, 한국과 터키, 파키스탄에 최고 4만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

## 경 제

**[1일]** 행자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발표.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시행

**[1일]**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난해 여행수지 적  
자는 37억 7천만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 중 5위였다고 밝힘

**[2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몰려 있는 공단지나 외국인 선호 주거지역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인 제도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과 대책'을 발표

**[5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아파트 재건축  
물량 중 60% 이상을 중소형으로 할당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강화 등  
을 내용으로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과 '세계 개  
편안'을 각각 발표

**[7일]** 현대아산, 10월 중 개성공단엔 1만 평 규모  
의 시범공단을 착공하기로 북한과 합의

**[8일]** 정부, 남북한 간 상업용 항공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밝힘

**[14일]** 금융정보분석원,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기준 금액을 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고객주의 의무제도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14일]** 건설교통부, 비사업용 자동차번호판에 시·도 명칭을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제식에 관한 고시를 바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또 주민이 신축 건물 층수·용도제한을 할 수 있는 '주민 협정구역제도'를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15일]** 재정경제부, 만기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

**[17일]** 건교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 한국형 고속전철 개발. 이로써 한국은 세계 5번째로 고속전철 차량에 대한 설계·제작기술 보유하게 됨. 한국형 고속전철의 최고속도는 시속 350Km

**[18일]** 노 대통령,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경기부양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성장 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경기부양책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밝힘

**[22일]** 공정위, 신문고시가 정한 연간 신문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치를 제공한 <중앙일보>의 신충주지국 등에 시정조치. 신문고시 개정 이후 공정위의 첫 제재

**[29일]**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4기가 플래시메모리 개발

## 사회·문화

**[1일]** 대한변호사협회, 2002년 한 해 동안 국내 인권상황을 부문별로 종합해 평가한 630여 쪽 분량의 『인권보고서』 발간. △국가보안법의 존속 △고문·도청 등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관행 잔존 △비

정규직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른 사회적 빈곤층의 생존권 위협 △현행 한·미 행정협정(소파)과 같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존속 등을 인권 개선 과제로 선정

**[2일]** 국무조정실, '복권 발행·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4년부터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복권 수익금 중 70%는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서민 임대주택 건설, 국가 균형발전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

**[2일]** 건설교통부, 간선급행 버스체계 도입, 버스중앙차로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방안 마련

**[4일]**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개혁방향'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 노 대통령, "개선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논의가 예상되지만 이를 놓고 내년까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올해 말까지 논의에 최선을 다해 내년에는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4일]** 법무부,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호적 대신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5일]** 정부, 반국가 단체로 규정됐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등 입국이 금지된 해외 민주화 운동 인사 50명에게 추석 고향 방문 허용. 송두울 교수, 윤이상 씨의 부인 이수자 씨, 광동의 한통련 의장, 고 이응로 화백의 조카 이희세 씨 등이 포함됨

**[9일]** 전북 부안에서 방패장 반대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 부안군수 집단 폭행. 청와대,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단하되,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계속 대화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함

**[9일]** 국립보건원, 싱가포르에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양성반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스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싱가포르  
입국자에 대한 사스 검역 시작

**【11일】** 세계무역기구 5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칸쿤에서 한국 농민 이경해 씨가 시위 중 농업 관세 철폐와 WTO에서 농업 부분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자결

**【13일】** 사상 최고풍속을 기록한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관통하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항만 크레인 등이 쓰러지는 등 피해 속출. 정부 긴급 관계장관 회의 열고 '개산 예비비'를 우선 편성해 적극 지원하고 요건이 충족되는 곳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

**【15일】** 법무부,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2002년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한 데 따른 이행 입법조치임

**【15일】** 미국과 영국의 국제홍보전문가협회가 66개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촌지 거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언론은 31위권에 속해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5일】** 정부,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1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모든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함

**【16일】** 중앙재해대책본부, 태풍 매미로 입은 인명 피해는 사망 106명, 실종 20명 등 126명이며, 재산피해는 2조 7,123억 원으로 잠정 집계

**【16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일본 대중문화 유통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계획 발표

**【18일】** 법원, 22일 귀국 예정인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18일】**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국내 첫 우주망원경인 '원자외선 영상분광기'(FIMS 펌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힘. 펌스는 과학위성 1호에 설치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8억여 원과 장애유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36억여 원을 포함하는 장애아 교육 예산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확정됐다고 밝힘. 국고에서 장애아동 특수교육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

**【22일】** 송두율 교수, 37년 만에 귀국

**【24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송두율 교수의 처벌 논란과 관련해 "송 교수가 설사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정치국원보다 더 높은 북쪽 인사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는 견해 밝힘

**【25일】** 노동부, 장애인 노동자, 건물 경비원 등과 18세 미만 노동자들도 전액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26일】** 국내 최초의 우주관측 위성인 과학기술위성(STSAT) 1호,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발사

**【26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자료에서, 사립대 90%가 이사장의 친인척이 대학이나 법인에 근무하는 이른바 '족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8일】** 노동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입법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 예정

**【30일】** 노 대통령,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찬.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선의 분배라고 생각하는 만큼 노동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 줄 수는 없다"고 설득

# 10

## 2003

### 정 치

**【1일】** 노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쉽사리 흔들렸고, 그때마다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안보역량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10년 안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 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낙관적인 전망과 확신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대화 국면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3일】**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조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 정부에 분야별 1차 보고

**【3일】**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진행. 정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의 편지에 따라 정계 재편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당정분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강조

**【4일】** 청와대, 비서관실별로 토론편모임 시작. 토요일마다 토론후하고 학습하는 날로 정해 소관 업무에 따라 주제토론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학습활동. 토론된 내용들은 비서관실별로 취합돼

청와대 내부통신망의 ‘업무혁신 공유방’에 게재

**【8일】** 대검 중수부, 이상수(민주) 최돈웅(한나라)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3명을 에스케이해운이 조성한 비자금에 받은 혐의로 소환한다고 밝힘

**【8일】** 청와대, 이라크 파병반대 시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며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 착수

**【10일】** 노 대통령,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에스케이 비자금 수뢰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물겠다”고 밝힘

**【11일】** 노 대통령 노사모 회원들에게 친필 편지. “많은 사람들이 이기고, 지고, 환호하고, 낙담하는 가운데도 나라와 국민은 언제나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며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정국 돌파의 의지를 보임

**【12일】** 정부, 노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계기로, 주요 국책사업을 포함해 국정 운용 주요 정책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부패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점검하기로 함

**【13일】**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제 도

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또한 재신임에 대해서는 “정지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 사슬을 끊고 도덕적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 과감히 몸을 던져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밝힘

**【14일】** 대통령 ‘재신임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재신임이 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견 철회

**【15일】** 국무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참여정부의 3대 개혁 특별법안을 심의해 의결

**【16일】** 국회 본회의장에 처음으로 한글 명패 등장. 한글 명패 사용을 제안한 통합신당 44명의 의원을 포함한 114명이 한글 명패로 교체

**【17일】** 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처음에는 찬성하더니 다시 반대해 시끄럽고 복잡해진 것이며, 야당의 반대는 너무 뜻밖이었다”고 말함

**【17일】** 제12차 남북 장관급회담, 북핵 공방 끝에 형식적인 공동보도문만 채택하고 종결. 제13차 장관급회담의 개최 일정만 합의

**【18일】** 정부, 이라크 파병 결정

**【18일】** 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번에는 파병 원칙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듬어 나가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며 “백지상태에서 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은 특히 “해당 부처에서 파병부대의 성격 등과 관련해 추론을 내릴 경우 파병 과정을 1·2단계로 나누는 의미가 없다”며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체 추론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

**【20일】** 고건 국무총리,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파견 부대의 성격은 평화·재건 지원부대의 성격을 갖되, 자위적 차원의 기능은 부수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21일】** 대검 중수부, 최동운 한나라당 의원이 에스케이 쪽에서 100억 원을 직접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힘

**【22일】** 통일부, 각급 학교에 통일교육 과정을 두도록 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22일】** 통합신당 창당준비위, 신당의 당명을 열린우리당으로 확정.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의미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국회 안에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

**【24일】** 국방부, 2003년 8월 말 현재 한국전쟁 기간 북한에 억류돼 신원이 파악된 국군 포로는 1,155명이고, 이 중 아직 생존해 있는 포로는 496명이라고 집계

**【24일】** 정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2020년까지 각각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도시로 만들기로 확정

**【27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에스케이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이어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

**【27일】** 송광수 검찰총장, 한창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을 비판

**【27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진행

**【28일】** 사법개혁위원회,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족. 노 대통령은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사법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계 스스로 방향을 잡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시대의 큰 흐름과 방향에 잘 맞추어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

**【30일】** 대법원,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를 전국 9개 법원에 설치하고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31일】** 노 대통령, 제주 4·3사건과 관련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

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

**【31일】** 정부,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2차 정부합동 현지조사단 출국

**【31일】** 청와대 출입기자 300명 돌파. 개방형등록제 등 취재시스템 개선 결과로 173개사 309명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북한, 외무성 담화. 8천여 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계속 나오게 될 폐연료봉들도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재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로써 사실상 핵무기 제조단계로 넘어감

**【6일】** 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담 참석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

**【7일】** 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의 기조발언. 한국 주도로 2002년 정상회의 때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보고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역설하고, 2003년 12월 서울에서 동아시아포럼(EAF) 창립총회를 열 것이라고 밝힘. 한편 노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7일】** 한·중·일 세 정상,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세 나라 안보대화 강화 등 14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통상·투자·금융·안보·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8일】** 제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용산기지 이전 조건 등에 대한 의견 접근에 실패

**【8일】** 노 대통령,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은 잘될 것으

로 본다”며 “북핵문제는 크게 보아 해결될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호언장담

**【16일】** 북한 외무성, <중앙통신> 기자와의 대담에서 “우리(북)를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가 ‘선택포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로서도 자위적인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게 된다”면서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밝힘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 구성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라크 결의안이 여러 차례 수정과 진통 끝에 통과

**【1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대책을 취해 나갈 것이며,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실물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거듭 밝힘

**【19일】** 노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 위해 타이 방콕으로 출국

●노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진행. 후진타오 중국 주석, 북한에 대화 촉구. 노 대통령,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에 대해 축하

**【20일】** 노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진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다자 틀 안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2차 6자 회담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포함해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신중 추진 등 네 항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 부시 미국 대통령,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감사를 전함

**【20일】** 노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진행. 2005년 타결을 목표로 연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발표문 발표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진행. △무역·투자 자유화 △테러대책 △구조개

혁 등의 내용으로 '미래의 동반자 관계에 관한 방  
콕 선언' 채택. 각국 정상들, 6자 회담 재개 촉구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미 행정부가  
다자틀 안에서의 안전보장을 떠들고 있는 것은 핵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전  
환과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공정한 세계  
여론을 오토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사> 기  
자와의 대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의한 '서면 안전보장' 방  
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25일]** 29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우방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북한 핵문제의 핵  
심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관계가 결여돼 있는  
것이라며 중재 노력을 할 뜻을 밝힘

**[31일]** 호르헤 로드리게스 칠레 경제장관, "한국  
국회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을 올  
해 안에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힘

## 경 제

**[1일]**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과 노동규정'  
발표. 월 최저임금은 50달러, 사회보험료 7.5달러  
등 1인당 월 57.5달러로 결정

**[1일]** 건설교통부, 부산시 해운대·수영구와 대구  
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5일]** 건설교통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제2영동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

**[6일]** 공정거래위원회, 6개 그룹 2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한 결  
과 6,844억 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9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31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8일]** 노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발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1천 명 규모의 개  
발협력단을 파견키로 하고, 우선 내년 하반기에  
500여 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힘. 또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신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내년 회의에서 공동  
선언 추진을 제안

**[12일]** 정부, 2005년까지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3년 안에 공식 협  
상을 시작하기로 결정

**[12일]** 남북, 3차 경제협력제도 실무회의에서 양  
쪽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  
의서'를 채택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

**[14일]** 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투기지역 지정 기준 이상으로 상승해 후보  
에 오른 33곳 가운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등 12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16일]** 노 대통령,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질서, 투명하고 책  
임 있는 기업지배구조, 편리하고 건전한 금융시스  
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시장개  
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대기업 진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 밝힘

**[19일]** 노 대통령, 방콕에서 열린 미국 기업인들과  
의 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화업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  
에 해결하겠다"고 밝힘

**[21일]** 노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진행.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  
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양  
국 전문가 회담을 열기로 합의

**[23일]** 국세청, 에스케이(SK)해운 법인세 조사 결  
과 소득금액 4,06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등 1,499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인  
손길승 회장과 이승권 사장을 검찰에 고발

**[23일]** 노 대통령, 고축통 싱가포르 총리와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  
한 협상을 2004년 초에 시작해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키로 합의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조지 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명의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공동선언문’ 발표

**[29일]** 정부,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발표.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한편, 두 채 이상 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크게 올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로. 1단계로 2004년 7월 부가되는 재산세부터 과표 기준을 현행 건물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2단계로 2005년에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을 법으로 50%까지 높이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도입함

## 사회·문화

**[2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 한 시즌 최다홈런 아시아 신기록(56호) 수립

**[3일]** 정부, 부안지역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반대위쪽과 조건 없는 대화에 합의

**[6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분단 이래 최대규모인 1,100명의 남쪽 민간인 참관단이 육로로 평양 방북, 통일 농구대회 등 참관

**[6일]** 건설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4년 8월부터 음주·무면허 사고 땀 책임보험 가입자도 최고 200만 원 부담

**[7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문 신구독자 10명 중 8명이 고가 경품이나 무가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15일]** 정부, 제주 4·3 보고서 공식 확정. 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명시

**[17일]** 경향·국민·문화·세계·한겨레·대한매일 등 6개 신문사, 신문공동배달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배달제를 확대하기로 합의

**[19일]** 노동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교원 정원을 4,945명 늘리기로 결정

**[24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을 고쳐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26일]**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비교연구’ 보고서를 내어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65살 이상의 인구 비율이 68%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

## 정 치

**【2일】**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멈칫거리지 않고 소신껏 수사 하길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의 전모를 드러내고,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3일】** 대검 중수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인 요구를 잘 알고 있지만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며 삼성 등 5대 기업에 한정해 확대하겠다고 밝힘

**【3일】** 개혁당의 김원웅, 유시민 의원 열린우리당 입당

**【4일】** 법무부, 검사 직급 폐지와 단일호봉제 도입 방침 확정

**【4일】** 노 대통령, 방송사 보도국장과 〈연합뉴스〉 편집국장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언론이 서로 협력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도록 노력하자”고 당부

**【5일】** 노 대통령, 각계 원로 13명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만행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나는 구태와 잘못된 관행을 깨끗이 청산해 다

음 후배들이 다시는 흠탈길을 걷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

**【5일】** 한나라당, “민주당 쪽 대선자금 수사는 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시늬에 그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대선자금 쇼에 조연으로 출연해야 하느냐”며 검찰수사 협조 거부 뜻 밝히는 한편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규명을 위한 새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함

**【5일】** 박관용 국회의장, 네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구당을 모두 폐지하고 다음 총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9일】** 이라크 현지조사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 귀국. 이라크 치안 상황이 불안하며, 진후 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10일】** 국회,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공조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10일】** 2002년 대선자금 수사에 불리해진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추진하자 검찰이 공식 반발하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나서는 한편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박탈은 부당한 행정권 제약”이라며 강력 반발

**【10일】** 노 대통령, 4당 총무와의 간담회에서 분권

형 대통령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지급과 같은 왜곡된 정치구조가 해소된다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정치권과 타협하겠다”고 말함.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협의할 것을 밝히고 ‘경제·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

**[11일]** 노 대통령,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추가파병 규모는 3천 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기능 중심과 독자적 지역담당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되 △지역담당의 경우도 재건 지원 중심으로 하며 △치안은 이라크 현지 경찰과 군이 담당하고 △한국군은 이를 양성·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11일]** 열린우리당 공식 창당. 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잘못된 정치 구도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정치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당부

**[14일]** ‘테러방지법’ 국회정보위 통과.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초안에서 테러 발생 시 군병력에 부여한 경비경찰권을 빼고 시설보호 및 경비 업무만 담당토록 했으며, 군병력 지원 절차도 대통령이 결정하되,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만약 국회가 요청하면 즉시 철수하도록 규정

**[18일]** 원내 3당, 국회의원 정수를 273석에서 299석으로 증원키로 합의

**[18일]** 법무부,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가 모든 검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검찰에 대해 실질적인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18일]**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 총무,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될 때 함께 가서 사병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함

**[19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집시법을 강화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 집회에서 집단적인 폭행이나 폭력사태가 빚어질 경우 나머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고, 장기간의 집회 독점을 막기 위해 집회 15일 전부터 이틀 전 사이인 13일 동안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

**[19일]** 노 대통령, 한국청년회의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촛불시위도 있었고, 한·미관계에서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미국에 종속적이지 않다”며 “한국이 6자 회담을 전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하겠지만 북·미 관계를 보이지 않게 적절히 조율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 이어 “5년 안에 해결을 못해도, 다음 정부는 (자주국가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 테니, 자주국가의 체면을 살리는 일은 내게 맡겨 달라”고 밝힘.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시기가 말로 한·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미국에 대해 조금 속이 상하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손을 꼭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

**[21일]** 노 대통령, 격해지는 불안 핵폐기장 시위 사태와 관련해 “우선 질서와 평온을 회복해 정상 상태가 된 뒤 대화를 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설득과 대화가 이뤄지고 나서 주민투표를 하면 그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힘

**[21일]**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고 행정부의 관련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각 당 총무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23일]** 한나라당,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을 거부하는 정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 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은 일제 거부 반응

**[25일]**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거부 의사 밝힘

**[26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단식. 한나라당 원외투쟁 강행. 정기국회 중단

**[27일]** 한나라당, 27일 노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

**[28일]** 노 대통령, <S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진단,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투표 방법이 용납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 한다”고 밝힘

## 통일 · 외교 · 안보

**【4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 부협의회단 미국으로 출국

**【10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 한국의 이 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많은 병력을 파견하는 걸 보고 싶지만 한국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함

**【14일】**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나누며 환담. 클린턴 대통령 “북·미 불가침조약이 필요하며,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

**【17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국의 이라크 추가병력 파견 및 2억 6천만 달러의 재건 비용을 제공하기로 한 노 대통령의 결정에 럼스펠 드 장관 사의 표명, 국내 10개 군사임무 한국군으 로의 전환 합의

**【19일】** 중국 정부,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들이 대규모로 한국 국적 회복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

**【2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 수로 공사를 1년 기한의 일시중단에 들어간다고 미국 뉴욕 케도 사무국이 공식 발표

## 경 제

**【3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정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토지공개념 방안 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집값 동향에 관 계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4일】** 한국, 유엔이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준비 성 평가순위에서 13위, 온라인 정치참여지수에서 12위 차지. 전자정부지수란 정부 웹사이트 운영 수 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계량화한 것

**【8일】**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종료. 개성

공단 기반시설 착공과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등 개성공단사업을 본격화하고, 남북 직 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

**【9일】** 재정경제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 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률 개정 안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11일】** 농림부,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과 자유무 역협정, 쌀 재협상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향 후 10년간 119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대규 모 ‘농업·농촌 지원계획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함

**【13일】** 정세현 통일부 장관, “직교역 확대 등 남북 경험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사무소를 개성공 단 내에 건설할 공단 개발사무소 건물에 두기로 했다”고 밝힘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는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9%는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중국 등 외국보다 개성공단을 투자처로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

## 사회 · 문화

**【3일】** 연세대에 김대중도서관 개관

**【3일】** 여성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8층에 수유실 겸 임신부 휴게실 설치. 정부 청사에 출산 여성을 위한 수유실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

**【5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한국 거대언론 비 판. ‘한국에선 때로 명예훼손에 가까운 기사를 실 을 만큼 부러울 정도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지 만, 언론자유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언 론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3분의 2 를 점하면서 여론을 거의 독점하는 조·중·동 3 개 신문에 집중된 신문업계의 현실과 사장 임명권 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두 개의 주요 전국방송망 을 통제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조·중·동은 노

무현 대통령과 공개적인 전쟁을 벌인 족벌언론들  
이며,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변하  
지 않은 채, 과거처럼 보수진영의 입장을 반영하  
고 있다. 권력과 조·중·동 간의 관계가 건전했  
던 적은 결코 없었다' 는 내용

**【6일】** 남북, 5차 적십자 회담에서 금강산에 이산  
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향한 진전

**【10일】** 건설교통부, 공원에서 오물을 버리거나 애  
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18일】**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 인도적 지  
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엔기관을 대표해 2004  
년 대북지원사업비로 약 2억 2천만 달러 등 전 세  
계 21개국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마련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

**【19일】**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전북 부안, 격렬 시위  
확산. 군 예술회관 건물 일부가 불에 타고 청소차  
6대가 전소되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를 점거해 차  
량 통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19일】** 금강산 관광 5돌 기념행사. 금강산 온정각  
문화회관에서 남북 공동으로 열림

**【19일】** 노 대통령, 영화인들과 만나 “스크린쿼터  
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만, 영화인들이 계속 주장한다면 당장 밀어붙이지  
는 않겠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가  
자”고 말함

**【23일】** 재정경제부,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와 운용에 관한 지  
침을 확정했다고 밝힘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  
한제 도입하기로. 일반진료비를 제외하고 건강보  
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비가 6개  
월간 300만 원이 넘을 경우 이를 내지 않아도 됨

**【28일】** 국가인권위,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

나치게 제약한다”며 반대의견 발표

**【30일】** 이라크에서 한국인 2명 피살. 사망자는 미  
국 전기회사의 하청업체인 서울의 오무전기 소속  
이상원, 임대식 씨

## 정 치

**【1일】** 외교통상부, 이라크 한국인 피살과 관련해 “정부는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모든 폭력과 살상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구호, 재건복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별 대응 내용과 기관별 역할분담 등을 담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2일】** 대검 중수부, 노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일】** 대검 중수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한나라당의 대선 잔금이 최소한 선관위 신고액인 29억 원의 2~3배에 이른다고 밝힘

**【2일】**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넘김. 16대 국회가 헌법 제54조 제2항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로 명시해 둔 법정처리기한을 지킨 것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02년이 유일

**【3일】**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혁신안 발표. 사법시

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른 임관 당시의 서열을 10년 동안만 적용하고 10년 뒤부터는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자료로 이용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엔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결정. 이는 지난 8월 대법관 선임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임

**【4일】** 국회,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재의결. 한나라·민주·자민련 공조. 재적의원 273명 중 209표 찬성

**【5일】** 노 대통령, ‘대전·충남 시도민과의 만남’에서 “지역구도 시대는 정말 극복돼야 하고 진보와 보수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넘어가는 합리적 실용주의 시대로 간다”며 “그 시대를 대표하고 이끌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정권을 잡는다”고 말함

**【6일】** 검찰, 박주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총 6명의 의원에게 구속영장 청구. 그러나 한나라당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뜻이 없음을 밝힘. 열린우리당은 ‘방탄국회’라고 비판

**【6일】** 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열고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공포.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언제나 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시스템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힘

**【6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에서 “특검수사 전까진 계속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며 검찰 수사 지속 의지를 밝힘

**[9일]** 검찰, 2002년 11월 이회창 전 후보의 법률 고문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에서 100억 원, 엘지에서 150억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최돈웅 의원이 에스케이에서 받은 100억 원까지 합치면 드러난 액수만 350억 원에 이른 셈. 서정우 변호사 긴급 체포

**[9일]** 검찰, 엘지그룹이 한나라당에 150억을 전달한 과정 설명. 2억 4천만 원짜리 상자 62개와 1억 2천만 원짜리 상자를 2.5톤 트럭에 가득 싣고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전달함. 이른바 '차떼기' 라는 말이 등장한 계기

**[10일]** 검찰, 한나라당이 삼성에 현금 40억 원·채권 112억 원 등 152억 원을 수수한 것 확인. 한나라당은 당초 삼성에 300억 원을 고압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10일]** 한나라, 대선자금 수사가 서정우 변호사 구속 등 이회창 전 총재로 번지자 '일단 지켜보자'며 돌연 특검 추진을 보류

**[11일]** 서정우 변호사, 현대자동차그룹에서도 100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네받은 사실 진술. 전달 방식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한 '차떼기' 로 밝혀짐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 제공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

**[12일]** 검찰, 대선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영장 청구

**[14일]** 노 대통령, 4당 대표 회동에서 "불법자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내가 쓴) 불법 선거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14일]** 대검 중수부, 창신섬유에서 1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안희정 씨 구속

**[15일]** 김혁규 경남도지사, 도지사직을 사퇴하며 한나라당 탈당. 열린우리당 입당 예고

**[16일]** 노 대통령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

련해 "성역 없이 수사를 받겠다"며 검찰에서 필요한 경우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

**[17일]** 한나라당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재추진. 특별검사 임명

**[17일]** 노 대통령, 국회에 편지를 보내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자금 부활 등의 방향으로 정치자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정치자금도 일체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함

**[19일]** 노 대통령, 노사모의 대선 1돌 기념행사에서 "불법자금을 모으는 데 앞장선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만세를 부르며 희희낙락했던 사람들, 지난 선거 때 또 불법을 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운운하며 잘못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노사모와 시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펼쳐 일어서 달라"고 호소. 대통령은 또 "내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특권과 기득권, 반칙으로 (세상을) 주무르던 사람과 돈과 조직, 막강한 언론의 힘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며 "여러분의 자원봉사로 '차떼기' 불법자금의 힘을 물리쳤고, 수천억 원씩 든다는 대선자금을 수백억으로 줄였다"고 말함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결. 소방방재청 신설 무산,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현안이 돼 온 다른 조항도 함께 폐기됨

**[23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맡은 3천 명의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확정

**[24일]** 노 대통령,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비서관·행정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바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잘해 보겠다"고 말함

**[24일]** 노 대통령, 영등포구 문래동의 영세민 가구를 방문해 쌀, 연탄, 겨울 속옷 등을 전달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6개월째 계류되어 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 국회 본회의로 넘김

**[28일]** 3개 부처 개각. 과학기술부 오명, 건설교통부 강동석, 기획예산처에 김병일

**[28일]** 대검 중수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관련자 8명을 구속·기소

**[29일]** 대검 중수부, 민주당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최도술·안희정·이광재·여택수 씨 등이 받은 불법자금 액수는 40억 원대에 달함

**[30일]** 국회, 비리 혐의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강하게 비판

**[30일]** 대검 중수부, 10대 기업 가운데 한 기업이 10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과 거액의 현금을 한나라당에 몰래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자금 전달 경위 및 채권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고 밝힘. 한나라당 대선자금 규모는 5대 기업에서만 500억 원을 상회

**[30일]** 노 대통령,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나는) 언제나 고단하게 걸어 왔지만,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 낼 것"이라며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딛고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대통령직을) 해 나가겠다"고 밝힘.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겠다"고 밝힘

**[30일]** 정부, 대규모 지진 피해를 본 이란에 모두 100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

**[31일]**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 하겠다고 밝힘

## 통일·외교·안보

**[4일]** 한·미·일 3국,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정책 협의회를 열고 북핵문제를 논의

**[9일]** 노 대통령,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과 정상회담.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에너지 개발, 정보통신 현대화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세계평화에 불가결하다는 점도 강조

**[13일]** 바그다드 함락 8개월 만에 후세인 잡힘

**[15일]** 동아시아포럼(EAF) 창립총회.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공동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함

**[16일]** 동아시아포럼(EAF) 창립총회, 포럼 사무국 설치, 역내 금융협력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발표문 채택

## 경제

**[1일]** 국세청, 각종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봉급생활자들의 2003년 연말정산 안내 내용을 발표. 연봉 3천만 원에 4인 가족인 경우 지난해보다 세 부담을 20% 정도 덜게 될 것이라고 설명

**[1일]** 검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대해 임원 2명을 배임혐의로 기소. 세금 없는 대물림에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주목

**[2일]** 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철도의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확정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

**[2일]** 재정경제부, 소규모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침. 내년부터 2010년 말까지 만 63~69살의 농민이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

**[3일]** 행정자치부,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액(과표)을 가감하던 현행 방식을 바꿔,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과표를 올리고 내리는 시가 가감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

표. 보유세 정상화의 계기 마련

**【9일】** 북한의 대남 수출액이 대중국 수출액을 넘음. 북한의 대남 거래성 반출 규모가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것은 1988년 7·7선언 이후 15년 만에 처음

**【23일】** 산업자원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대대적으로 개정하기로. 주거용 전기 사용자의 경우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단전 조치는 당하지 않게 됨

**【24일】** 농림부,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젓소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기타 양·염소·사슴 등 되새김질(반추)동물의 검역을 중단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 시킴

**【29일】** 공정위, 공기업 대상의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5개 공기업이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밝혀 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27억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도권 시·도와 급행버스 도입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급행버스 도입 대상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21개 노선을 선정

**【16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전체회의 열고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킴

**【22일】** 노 대통령,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관통 구간 건설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직접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제시한 '사패산 터널 백지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점을 사과하며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정부 사정을 설명. 이에 법전 스님은 총무원장에게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국정 수행에 잘 협력해 주라"고 지시해 수년간 끌어 온 문제 해결

**【24일】** 미국,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6만 톤의 곡물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29일】** 국회 예결위,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관련 예산 항목 자체를 삭제

## 사회·문화

**【4일】** 서울행정법원, 민변의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수사기록 공개가 국방·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입을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검찰의 세부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

**【8일】** 남극 킹 조지섬 세종과학기지에서 총 8명의 연구대원이 실종되었다가 7명 구조 1명 사망. 사망자는 전재규(27) 연구원

**【10일】** 산업자원부, 핵폐기장 선정 과정에서 부안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혼란과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부지 확보 방식을 도입해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 유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힘. 부안군은 심사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

**【12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

# 1

## 2004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신년사에서 “2004년을 지역주의 정치, 부패 정치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실시되는 17대 총선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 표명

**【1일】**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는 나라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2004년 새해를 ‘병든 정치를 수술하는 해’라 이름 짓고, 그 수술 날짜를 ‘4월 15일’로 정했다”며 선거를 통한 정치개혁 호소

**【1일】** 민생·경제 현안 법안 등 818건이 국회에 계류된 채 속제로 넘어오며 한 해 시작. 신용불량자 회생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요구권 등

**【2일】** 노 대통령, 입법·사법·행정·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인사 220명과 함께 한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올해를 변화의 속도가 최고가 되는 한 해로 만들어 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데 모두 세계기록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고 밝힘

**【6일】** 검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현역 의원 7명의 처리 방침에 대해 “이들 모두를 긴급 체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힘

**【7일】**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8일】** 국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무산

**【9일】** 검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의원 등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함.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역의원 다수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번이 처음

**【10일】** 법원, 국회의원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 발부. 도망친 한나라당 최돈웅, 박재욱 의원을 제외한 6명의 국회의원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줄줄이 구치소행

**【10일】** 노 대통령, “정(정치권력)·권(검찰)·언(언론)·재(재계)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뤄지는 부정부패의 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며 “이런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치적 목표”라고 강조

**【11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열고 의장에 정동영 의원 선출

**【12일】** 잠적했던 한나라당 최돈웅, 박재욱 의원, 각각 서울구치소와 대구구치소에 수감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법원이 지난해 기초의회 선거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처음으로 부과

**【14일】** 노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해로 만들 것을 제안

**【15일】** 제17대 총선에서 국민후보를 뽑아 당선운동을 펼치자는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공식 출범

**【16일】**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에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 임명

**【16일】** 신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참여정부의 자주의교에 대해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는 균형적인 실용외교”라 설명

**【18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던 정치인들, ‘돈선거와의 전쟁’에 나선 경찰에 되서리. 돈을 뿌린 후보들에게 무더기 구속영장이 신청됨. 경찰은 선거법 위반사범을 적발한 이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 등을 내걸고 부정선거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임

**【19일】** 정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발표. 200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60살 정년이 강제 적용되고,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임금조정 옵션제(임금 피크제)’ 도입도 검토됨

**【19일】** 부패방지위원회, 2003년 공공기관의 주요 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2003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만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19일】** 정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 인사들로 구성된 ‘공원기획위원회’ 꾸리기로 결정

**【20일】** 노 대통령, 병역기간 단축과 국방력 논란과 관련해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번 사병의 병역 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좀더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힘

**【25일】** 노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북악산 등반하며

“올해는 역동적인 한국을 만들어 보자”고 다짐

**【26일】** 국방부, 2012년 전략회를 목표로 3,500톤급 차기 중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7일】** 서울지검 특수부, 공금 38억 4천만여 원을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구속 수감

**【27일】** 노 대통령, 새해 첫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인력중심군에서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30일】** 민주당, 검찰의 한화갑 전 대표 수사에 맞서 ‘대정부 전면 투쟁’ 벌이기로 결정

**【30일】** 노 대통령, 민주당의 정부 공격에 대해 “최근 정국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필연적 흐름인 것 같다”며 “오늘 이 상황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함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우리 정부는 이에 유감 표명

**【1일】** 북한 신년사,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힘

**【2일】** 신장범 주칠레 대사,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미룬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

**【7일】** 일본 정부, 한국이 1월 중순 독도 관련 우표 발행에 대해 중단 요청

**【7일】** 문화관광부, 베이징에 정부의 문화·관광 해외홍보 기능을 통합한 ‘코리아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외 홍보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 공개

**【8일】** 일본 정부의 독도 우표 발행 중단 요청과 상

관없이 우정사업본부는 예정대로 우표 발행기로 개메꽃, 왕해국, 습새, 팽이갈매기 등 독도에 사는 식물과 새를 소재로 한 우표 4종을 56만 장씩 발행할 방침

**【10일】** 방한 중인 동티모르 대통령의 부인 커스티 구스마오 여사와 호세 라모스 홀타 외무장관, 경북대에서 동티모르어인 '떼뎀'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

**【14일】** 정부, 중국이 최근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고구려사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 관련기관과 학회 등의 공동 참여로 오는 2월까지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힘

**【15일】** 6~10일 동안 북한 영변 핵시설을 둘러본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특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보고

**【16일】** 독도 우표 발행. 일본 외상이 조세형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가운데, 독도 자연우표 94만 장은 3시간도 안 돼 매진

**【29일】** 일본 중의원,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외환·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경 제

**【2일】** 산업자원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1,943억 3천만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애초 목표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55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

**【4일】** 건설교통부, 관계부처 협의와 새도시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충남 아산시 배방면·탕정면, 천안시 불당동 일대 천안아산역 배후 새도시 107만 평(아산 배방지구)에 대한 택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힘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국 정부가 미국산 음악·영화 등 지적재산권의 무단복제를 막지 못했으며,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우선감시 대상

국으로 지정

**【8일】** 공정위, 2003년 4분기 신문판매 고시 집행 실적을 발표하며 "앞으로 법 위반이 중한 신문사와 지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9일】** 정부,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음식점에서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결정

**【11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2007년부터 10만 원권 지폐 도입 검토 시사

**【13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유럽 기업 및 단체들과 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을 돕기 위해 지난 5일 평양에 협력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힘

**【16일】** 정부, 미국에 첫 보복관세 추진.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 판정을 받은 미국의 '버드 수정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 일본 등 7개국과 함께 대미 보복관세 승인을 세계무역기구에 신청

**【18일】** 정부,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에 앞서 투자자에 대한 회사 쪽 배상책임을 현행 연대책임제에서 경중에 따른 비례책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집단소송제 관련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섬

**【18일】** 삼성, 참여연대가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이견희 회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이 삼성전자에 모두 200억 원을 배상했다고 밝힘. 주주대표소송제와 관련해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는 처음

**【19일】** 방송위, 논란을 빚어 온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방식 전환을 8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

**【24일】** 재경부, 소비자 피해 전국 인터넷상담망 개설. 인터넷에서 지도를 눌러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소비자 상담기구를 찾아 피해 구제를 위한 도움을 받게 됨

## 사회 · 문화

**[5일]** 미국 방문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방문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 115개 공항과 14개 주요 항구에서 시행됨

**[5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고 12개월 동안 일당 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4년 종합 자활지원 계획 발표

**[6일]** 노 대통령, 농민단체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담화. 대통령은 농업개혁의 필요성을 요청받고 공감을 표현하면서 "농업개혁은 비준안과는 별도로 추진하자"고 제안

**[7일]** 국가인권위, 화교 설문조사 결과 취업 단계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일]** 노 대통령, 열린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번 선거에서 모두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하는 만큼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총선은 여성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함

**[1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주요문답 사례' 게재. 50만 원 이상의 상품권 구입 땐 접대 상대에 대한 지출내역 기재해야

**[19일]**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연금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진국처럼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령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

**[20일]** 정부,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로 결정

**[20일]** 정부,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확정. 2005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시행되고, 2007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개념의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추진됨. 국공립 보육시설과 영아시설을 2003년 말 현재 1,694곳에서 3,461곳으로 늘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도 12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늘리기로 함

**[24일]** 경찰청,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운동능력 측정검사와 면허취득 제한 등이 폐지되고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면허제도 도입

**[26일]** 조류독감이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나옴. 농림부, 반경 3Km 안의 32농가 닭과 오리 54만 5천 마리를 도살·매몰 처분

**[26일]**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조류독감 백신 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28일]** 농림부,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중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의 고기와 관련 가공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29일]** 서울고법, 공사 중지 땐 공공복리 부정적 영향들이 우려된다며 농림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새만금 방조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

**[29일]** 정부, 로또복권 판매금액을 장당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

# 2

## 2004

### 정 치

**【2일】** 한나라당·민주당, 불법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

● 검찰 수사에 특검제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특검팀과 시민단체들 모두 반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석수로 특검 동침에 이어 청문회 동거에 들어갔나며 비판

**【5일】** 2004 총선 시민연대, '낙선명단' 66명 발표. 부패·비리행위·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등으로 선별

**【5일】** 노 대통령, 시민단체의 총선 낙선 및 당선운동에 대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국민의 정치참여 방식이 사회적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

**【6일】** 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 서해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 등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며 종료. 군사문제 직접 논의. 3년 5개월 만에 본격 군사 협상 재개

**【6일】** 강삼재 의원, 법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 이른바 '안풍' 사건의 자금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준 것이라고 진술. 사건 새

국면 맞음

**【8일】** 노·사·정,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 전격 합의. 7장 23절 55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약은 노동계의 임금안정과 사용자의 고용안정,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약속을 기본으로 구성

**【9일】** 국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무산. 다시 연기

**【9일】** 국회,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통과. 12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감정까지 합쳐져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재수감할 것이라고 밝힘

**【10일】** 노 대통령 총선 앞두고 개각.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현재, 노동부 장관에 김대환, 국무조정실장 후임에 한덕수, 국정홍보처장 후임에 정순균, 비상기획위원장에 김희상 등

**【10일】** 2004 총선시민연대, 43명의 2차 공천 반대자 명단 발표. 1차 명단 66명을 합쳐 총선연대가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후보는 109명으로 늘어남

**【11일】** 대검 중수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괴자금에 대해 다음 주 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대선자금 수사가 전직 대통령들까지 확산됨

**【12일】** 국세청,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3만 5천 개 기업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달 법인세 신고 때 제대로 하지 않

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결정

**【12일】** 검찰, 삼성에서 한나라당에 건네진 170억 원의 채권몰치 추가 발견

**【13일】** 국회 본회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가결

**【14일】** 노 대통령,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기업인들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수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그치고,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힘.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까지 과거를 다 물으면 국민에게도, 기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

**【15일】** 한명숙 환경부 장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 총선과 관련해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등이 공직에서 물러남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농민단체, 격렬한 반대 시위

**【16일】** 각종 비리사건과 연루된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공헌 씬씀이 커져. 2000년에 비해 2002년엔 47% 증가한 1조 86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전경련 발표

**【16일】** 경찰청, 42일간을 '선거사범 단속 2단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후보자들의 불법선거 집중 단속키로 함.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의 인원을 3,097명으로 늘리는 한편, 기동수사팀과 기동단속반을 새로 편성하고 선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

**【18일】** 노 대통령, 재신임 여부와 관련해 "그간의 허물 등 모든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국회의 석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총선 결과를) 재신임으로 보겠다고 지금 단언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의 평가로 겸허히 존중하면서 여러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또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맡겨 준 만큼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일 좀 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함

**【18일】** 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열림. 수상한 정치자금에 대해 금융정보원(금정원)에 계좌추적권을 주고, 금정원은 혐의 정보를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당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또한 5천만~1억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무조건 금정원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의 기능을 정책평가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회계검사를 각 부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 수행하기로 함의

**【19일】** 대검 중수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의 169억 원 과자금 외에, 100억 원대의 과자금이 추가로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힘

**【22일】**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산하단체장이나 협회장, 금융기관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의 낙하산식 인사를 규제할 계획"이라며 "일단 총원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힘

**【23일】**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파병부대 교전수칙 마련. 한국군 자이툰부대는 자위적 차원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발표. 자위권 차원의 사격도 차량의 경우 타이어를 사격하는 등 최대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교전수칙 설정

**【23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분권촉진대회에 참석한 것을 불법 선거운동이라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

**【25일】** 한나라당,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 중 노 대통령이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이 통과됨. 민주화 운동을 하다 30일 이상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게 됨

**【27일】** 3·1절을 코앞에 두고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보류되고 법안 내용이 수정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은 진정 역사정의 실현의 걸림돌"이라며 강하게

비판. 포털의 인터넷 투표들에선 90% 이상이 '친일 혐의자 또는 우호세력의 조직적 방해 탓'이라고 나타남

**【27일】** 국회 본회의, 지역구 의석 15명 증원 통과. 현행 227석에서 242석으로 늘어남

## 통일 · 외교 · 안보

**【9일】** 노 대통령, 방한한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대북정책 협조 요청

**【14일】** 제7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용산기지 이전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 마련을 위해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17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리언 러포트 주한 미군사령관 등 한·미 4자 고위급 협의회(2+2) 진행. 회담에선 6자 회담의 긍정적 성과를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미국 측은 남북 장성급회담을 전폭 지지하기로 함

**【19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 25일 개최되는 북핵 6자 회담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25일】** 2차 6자 회담 개막. 한국은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한은 김계관 부상, 미국은 강경파인 존 볼턴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 중국은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28일】** 제2차 6자 회담 의장 성명.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평화적 공존 의지와 핵문제 및 관련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3차 6자 회담은 6개월 이내에 개최하기로 합의

**【29일】** 존 케리 상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권하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 존 에드워드 의원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해

결방법을 제시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미국 정부를 비난

## 경제

**【19일】**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정계·재계·노동계·시민단체·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5%대의 경제성장률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등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발표

**【20일】** 이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서 중립성과 독자성이 대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라며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조

**【20일】** 건설교통부, 지난 2년간 토지거래에 대한 대대적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허위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하기로 결정

**【23일】** 건설교통부, 충남 아산시와 경기 분당구 등 21곳을 토지투기지역에,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에 추가

**【25일】** 한·칠레 양국 정부, 비준 절차가 끝난 자유무역협정을 오는 4월 1일 발효시키기로 합의

**【26일】** 재정경제부, 주택 부지와 공장 용지에 대한 토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요와 공급이 안정돼 투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투기억제 정책은 계속 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사회 · 문화

**【2일】** 국방부, 전국 142개 지역 3,522만 평에 대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 8개 지역 661만 평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설정

**【3일】** 미·러 등 16개국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에 한국이 개발할 우주인 생

활시설이 설치됨

**[6일]** 제주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구석기인 발자국 발견. 문화재청은 인류 발자국 100여 점을 비롯해 말, 코끼리(추정), 사슴, 새 등의 발자국 화석 수천 점과 동식물 화석 등을 확인

**[7일]** 미국서도 조류독감 발견. 정부, 미국산 닭고기 수입 전면 금지

**[12일]** 황우석 연구팀, 사람 난자 체세포로 줄기세포 복제 발표

**[14일]** 전북 부안 방폐장 건설 찬반 주민투표에서 반대 91%로 나타남. 산자부, 5월 말까지 부안군을 포함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방폐장 유치 신청을 다시 받기로 결정

**[17일]** 정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2·17대책). 수학능력 시험은 교육방송의 수능 강의를 들으면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며, 고교 내신 비중을 높이는 한편 모충수업제도 부활 및 교장을 포함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함. 이번 발표에 대해 언론들은 평준화, 특목고·자립고 확대, 수능 자격고사화, 우열반, 교원평가제 등 이른바 교육계 5대 현안을 모두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17일]** 노 대통령, “이공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며 이공계 지원 의지를 밝힘. 대통령은 “이공계 문제는 단순히 기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이공계로 승부하자는 진취적인 비전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임

**[18일]** 정부, 공적노인요양보장 기본체계안 발표. 2007년부터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뇌졸중,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간병·수발이 필요한 65살 이상 노인 질환자와 45살 이상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19일]**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 국내 개봉 영화 최초로 관객 1천만 명 돌파. 실미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684 북파부대를 만들어 훈련시킨 후, 쓸모가 없어지자 부대원들을 모두 사살한다는

내용

**[20일]** 노 대통령,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간접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25일]** 남북,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25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패총에서 5천년 전 신석기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슴 문양 발견

**[26일]** 환경부, 새집증후군 공식 확인. 새 아파트가 빌딩 증후군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밝힘

**[26일]** 국회 법사위,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통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성매매인 모집·알선·소개 역시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27일]** 남북 불교계, 4월 초부터 신계사 대웅전 복원공사 진행하기로.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조사하고 복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3

## 2004

### 정 치

**【1일】** 선관위, 총선 후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3명의 신고자에게 신고 금액의 50배인 500만 원씩 지급

**【2일】** 참여연대 발표. 16대 국회의원 가운데 28.7%인 88명이 각종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단죄를 할 수 있는 단초 마련

**【2일】** 노 대통령,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만 어떤 행정력도,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다고 맹세한다”며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발언하든 왜 시비를 거냐”고 밝힘. 이어 “야권이 알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박또박 받아쓰는 언론도 문제”라고 지적

**【3일】** 중앙선관위,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준수요청' 조치를 내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대통령 탄핵소추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결정

**【4일】** 정부,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주적 개념' 폐기 공식화.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정리한 '평화변영과 국가안보'에서 당면 위협에 전쟁 억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며,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 잠재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필수소요를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안보정책 설정

**【4일】** 노 대통령, 민주노총 요청으로 이뤄진 청와대 오찬에서 “제야 시절, 국회의원의 노무현이 아니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나는 변했다”며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있고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말함. 대통령은 노총의 건의에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끊임없이 대화하고 존중하도록 하자”고 답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

**【8일】** 대검 중수부, 불법 대선자금 수사결과 중간 발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823억여 원, 민주당이 113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

**【8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발의 움직임에 정면 비판. 탄핵 근거의 취약함을 지적하고 정치적 시비에 불과한 만큼 정면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힘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제헌 이래 처음.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

**[9일]**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일제히 '총선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성명 발표.

●헌법학자 70%는 여론조사에서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했으며 경제5단체도 성명을 통해 탄핵 발의 사태 비판

**[9일]** 세계 주요 언론, 한국의 탄핵소추 발의를 비중 있게 다뤘으나 가결될 가능성은 낮게 전망.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서울의 허튼소리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한국 야당 의원들을 비웃음

**[11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총선 결과를 존중해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또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이며, 이런 중대 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

**[11일]** 노사모 등 대통령 지지자들, 국회 앞에서 시위. 오전 500여 명이던 참가자가 저녁엔 1,200여 명으로 증가. 집회 중 백은중(51) 씨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짐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탄핵안 가결.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탄핵결의안 심리 시작

**[12일]** 대한민국 국민들 분노 폭발. 민중연대·민변 등 전국 223개 시민단체,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총칼 없는 쿠데타'로 규정함

●1만 5천 명의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16대 국회 장례식'을 치르는 한편 '탄핵 무효'와 '수구 기득권 세력 심판'을 외치며 촛불 시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에서 수천여 명이 몰려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인터넷에서는 글과 대화명 앞에 한국 정치 근조 리본(▶◀) 달기 운동이 급속히 확산됨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던 류아무개(51) 씨가 가결 소식에 흥분해 실신

●충남 천안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강아무개(47) 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려다 경찰에 연행

●충북 지방경찰청 5층 옥상에서 안아무개(42) 씨가 분신 기도하다 연행

●김아무개(44) 씨가 승용차를 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돌진해 기름을 차에 뿌리고 불을 지름

●국회 본청 옥상에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112 신고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 고아무개(60) 씨가 과도를 숨기고 난입해 경찰에 연행

●대구 민주당 대구지부에도 사무실에 최아무개(39) 씨 등 5명이 난입해 경찰에 연행됨

**[12일]**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이 잘 못됐다는 의견이 70%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여론조사에선 80~90%대에 육박함.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

**[12일]** 노 대통령, 애초 예정된 일정 모두 소화.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 국면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힘. 경남지역 혁신보고회의를 주재한 후 전동차 제조업체에 도착해 제작 라인을 시찰한 대통령은 오후 해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나 또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치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 대통령은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되기 직전 국무위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내용은 부당하나 인정하고 그에 맞춰 국정운영을 부탁한다"며 차질 없는 국정 수행을 당부함. 대통령은 이어 "아직 법적 판단과 국민의 판단이 남아 있다"며 "두 판단에 기대를 걸고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밝힘

**【14일】** 온 나라가 촛불시위. 13일과 14일 이틀 내내 광화문에 10만 이상의 시민들이 탄핵 반대 시위대가 모였고 전국 주요도시마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림. 시·군 등에서도 탄핵 규탄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탄핵 무효'와 '국회 해산'을 외침

**【1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탄핵 사태와 관련된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 반란'으로 규정

**【14일】** 헌법재판소,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18일 첫 평의를 열기로 결정

**【14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천안연수원을 국민에게 헌납하겠다고 밝힘

**【15일】** 법무부·행정자치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선은 천재지변 등 물리적 이유가 아니면 연기할 수 없다'며 총선 연기 불가 시사. 법무부는 '합법적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선거 관리업무를 신속·공정·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

**【1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지식인·예술인 단체들 잇따라 탄핵 항의 성명 발표

**【15일】** 경찰이 야간까지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자 시민단체들은 집회 형식을 문화행사 형태로 바꾸어 계속 진행

**【15일】** 교육인적자원부, 검정고시 과락제도를 폐지하고 시험과목을 줄이는 개정안 공포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의원들이 제출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은 일반사면을 할 때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데 법무부 안에서 아무 이견이 없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15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탄핵사태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인 우려 표명

**【15일】** 탄핵 여파로 정당 지지율 급변,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에서도 한나라당을 앞지르는 한편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지율 급락.

민주당은 민노당에 밀려 4위로 추락

**【16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 촛불시위와 관련해 "어제까지의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로, 주최 측 1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오늘부터 열릴 집회는 지난 14일 신고가 돼 있으며, 문화행사는 실외 집회라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힘

**【16일】** 만화작가 40여 명, 탄핵 항의 인터넷 만화 릴레이로 연재

**【17일】** 정치인으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처음으로 50배 과태료 부과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사조직이 1,411개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힘

**【20일】** 대한민국, 촛불의 바다. 서울 광화문에 30만의 시민이 운집해 촛불을 밝혔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0여 개 주요도시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에서도 35만 명이 촛불시위에 동참하는 한편 수십만의 시민은 인터넷으로 동참. 20일 하루 최소 80만 명이 촛불시위에 참여

**【23일】** 한나라당, 새 대표에 박근혜 씨 당선

**【26일】** 검찰,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인의 체포영장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

**【31일】** 한나라당의 특검법 발의로 진행된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광재, 양길승 씨와 관련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최도술 씨 역시 썬앤문 그룹 감세청탁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으며 대선을 전후해 모두 6억 1,1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만 확인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노 대통령, 3·1절 기념사.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와 관련해 "인기에 급급한 정치인 한두

사람이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 지도자 수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 대통령은 이어 “과거는 말끔히 청산되지 않았고, 새로운 역사의 대의도 분명히 서지 못했으며, 아직도 국회에선 친일의 역사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놓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함께 숙제를 풀어 나가자고 밝힘

**[2일]** 건설교통부, 4월 22~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아시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정부 간 협정 조인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힘. 이 고속도로는 한·중·일·러·인도·이란 등 31개국을 연결하는 55개 노선 14만 Km에 이르며 아직은 구상 단계라고 건설부는 설명

**[2일]** 부시 미국 대통령, 미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2차 6자 회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함

**[11일]** 미국 국방부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아흐메드 찰라비가 이끄는 정치조직에 다달이 수십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

**[13일]** 쿠웨이트,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의 몰락에 따른 대외 개방정책의 하나로 한국 등 34개국의 국민에 대해 비자를 즉각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

**[28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북한도 독도우표 발행.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정한 18세기 초반 조선팔도 지도와 한반도기호 디자인

## 경 제

**[2일]** 제8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시작

**[2일]** 통일부, 용수와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간선도로 등 개성공단 단지 내부 기반시설 건설비용 470억 원을 올해 안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2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이나 소속 임원이 3년 동안 3차례 이상 감독당국의 ‘경고’를 받은 경우,

제재 수위를 현재보다 한 단계씩 높여 가중처벌도 록 하는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2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긴급회의를 열고 고철, 철근, 골재 등 건설 원자재난과 관련해 관련 원자재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수도권 건설용 모래 부족 해소를 위해 경기도 용진군의 바다모래 채취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결정

**[5일]**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시범공단 1만 평에 10개의 남북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공단의 전력과 통신은 남쪽 사업자가 맡아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데에 합의. 실질적인 남북 경협이 초입기에 들어감

**[13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일본 업체인 엠비시오가 공동 소유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위성 ‘한별’ (공식명칭 MBSat)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됨

**[14일]** 재정경제부가 해외 투자기관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사한 ‘탄핵안 가결 후 해외 금융권 및 외신 반응’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해외 투자기관들은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며 경제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남

**[19일]** 정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영화·호텔 창업 땀 50% 세 감면

**[21일]** 미국 씨티그룹과 도쿄 미쓰비시은행 등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외환시장 위기 때 환율을 참여은행들의 투표(1행 1표)로 결정하는 ‘아시아 통화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24일]** 외교통상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2차 정부 간 협상 시작

**[24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광양시청에서 열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해 “광양만권 개발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1의 국정과제”라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이 합심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겠다”고 밝힘

## 사회·문화

**【1일】**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국내 최초로 고대 공동화장실 터로 추정되는 대형 구덩이 발견

**【7일】** 대법원, 20일부터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도록 조치

**【11일】** 기상청, 광역 단위로 내려졌던 대설·호우·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6월부터 시·군 단위로 발령하기로 결정

**【14일】**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가 한국영화사상 두번째로 관객 1천만 명 돌파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26일】** 감사원, 대학수능시험 출제·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수능 출제·검토위원 30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 등에 관련자 징계 및 선출규정 보완 권고

**【29일】** 유엔환경계획(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의 제주도서 개막.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120여 국의 정부 각료급과 국제기구, 엔지오 관계자 등 1천여 명 참가

**【30일】**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북의 지령을 받고 친북 저술활동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 선고

**【31일】** 법무부,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재돼 있을 경우 절차를 통해 국적 회복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불법체류자 역시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 1세와 배우자, 미혼자녀 등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이나 귀화 신청이 가능해짐

## 정 치

**【2일】** 제17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4일】** 당선운동을 벌일 예정인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지지후보 대상 제외자 1차 명단 185명 발표.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총선시민연대(낙천운동)의 낙천 대상자, 반환경인사 등이 포함됨

**【9일】** 대검 중수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 원대 과자금 추가 발견. 전 씨와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비자금 370억 원으로 늘어남

**【10일】**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와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각각 단독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

**【11일】** 노 대통령, 직무정지 한 달 만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 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큰 흐름이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잡힐 것”이라며 “(총선 이후) 제일 큰 변화는 부패정치, 지역정치라는 두 개의 고질이 청산되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함.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좌우이념 대결의 시대에서 지배구조 경쟁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좌우의 문제는 정치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거의 수렴돼 가고 있고, 아직

갈등이 있는 부분은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

**【12일】** 한국기독교청년회연맹(YMCA), 10개 분야, 50개 항목에 걸쳐 지난 4년간 각 정당의 활동과 현안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평가한 결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교육 및 청소년 분야에서 시민 권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13일】** 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미화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지역주의를 조장했다고 비판

**【15일】** 17대 국회의원 선거. 열린우리당은 탄핵 여파를 몰아 152석으로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했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개헌저지선 확보. 민주노동당은 10석을 확보해 약진했으며, 한나라당과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9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름.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됨

**【16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조경태(사하울)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권양숙 여사도 경남 김해의 김秉곤, 최철국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

**【17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당선자들과 잇단 오찬, 낙선자들에게 위로 전화

**[19일]** 김종필 자민련 총재, 총선 당선자 4명과 함께 평가회의 진행 후 “오늘로 총재직을 내놓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힘. 1961년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에 가담한 후부터 신민주공화당 창당(1978), 3당합당(1990), 자민련 창당(1995),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공조(1997) 등 43년 만에 정치생활 마감

**[19일]** 열린우리당 당선자대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즉각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결의

**[21일]** 기획예산처, 정부 산하기관의 공정한 인사와 경영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정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400여 개 산하기관 중 적용 대상 88개 기관을 확정. 기관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시스템으로 제어됨

**[21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다고 내세우기보다 모든 것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것과, 총선 결과에 대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하고 신뢰 주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

**[24일]** 정부, 북한의 용천 사고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기구를 통한 20만 달러 지원 등 120만 달러 상당의 긴급 대북지원 방침 발표

**[27일]** 남북 구호회담 진행. 북쪽은 시멘트와 철판 지붕재, 불도저 등 피해복구 자재·장비 지원을 남쪽에 공식 요청했으며 남쪽은 국내 재고물량과 수요량 등을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하기로 결정

**[28일]** 정부,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북한에서 요청한 13개 품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 긴급지원 100만 달러 이외에 추가될 이번 지원은 234억 규모이며 추가예산 편성 없이 남북협력기금과 민간·지방자치단체 등의 모금액으로 충당하기로 함. 100억 원 상당의 생필품과 의약품은 이날 인천항을 출발

**[30일]** 북한, 용천 참사 피해복구를 위해 남쪽이 제공하는 덤프트럭 등 일부 자재와 장비의 경의선

임시 도로를 통한 육로수송 수용하기로 결정

## 통일 · 외교 · 안보

**[4일]** 한·중·일 외무장관, 해마다 한 차례씩 정례 회담을 열기로 합의

**[16일]** 제60차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채택.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권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19일]** 터키 압둘라 귤 외교장관,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반기문 장관에게 “어느 곳에 파병하건 한국이 원할 경우 정보와 병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한국 외교부 장관의 터키 공식 방문은 1957년 수교 이래 처음

**[20일]** 체코, 1989년에 폐쇄한 북한의 대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21일]** 북·중 정상, 교류협력과 지도자 간 회담을 지속하는 등 4대 부문 합의. 중국 당국, 이례적으로 류홍차이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직접 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에 대해 설명

## 경 제

**[1일]** 우리나라 첫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148개 회원국 가운데 147번째로 자유무역협정보유국 대열에 합류

**[6일]** 국세청, 경기도 분당·하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6,607명 중 271명을 골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 이들은 아파트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함

**[7일]**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의 임차료와 지장물 철거비용을 모두 1,600만 달러(183억 원)로 합의

**【1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 생산량은 2002년 기준 세계 38위, 쌀 생산량은 12위, 농축산물 수입액은 13위인 것으로 조사됨

**【16일】** 이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총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힘

**【18일】** 재정경제부,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고 15%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 지원 대상은 투자액 1천만 달러 이상인 고도기술 수반 사업과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품·소재 산업에 적용됨

**【22일】** 남북,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약의 진행. 청산결제 거래 주체를 당국 아닌 기업으로 하고, 청산결제 한도를 3천만 달러 이내로 하는 등 12개 항목 합의서 채택

**【23일】** 정부,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 조성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 토지개발공사와 현대아산은 북쪽과 협의를 거쳐 공사 착수

## 사회 · 문화

**【6일】** 교육인적자원부,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보고. 국립대의 법인화와 국가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하는 내용 포함

**【10일】** 법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 소송을 낸 데 대해 “조망권은 사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결

**【12일】** 정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심의해 의결.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불연재 실내장식의 의무화됨

**【13일】** 문화방송 보도제작국 ‘조선일보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왜곡보도에 대응하기로 결정. 기자회견 역시 대표자 모임을 열고 보도제작국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

**【13일】** <부산일보> 기자들, 최근 자사의 총선 보도와 관련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취임 이후 만나는 수많은 독자와 취재원들이 부산일보의 불공정 보도를 비판하고 있어 낯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불공정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 모두는 제작 거부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부산일보>는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가 상당 부분의 지분 소유

**【18일】** 환경부,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앞서 주요 평가·조사 항목을 선정할 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협의 때 관련 전문가와 주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와 검토회의를 상설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힘

**【19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2단계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 실시

**【19일】** 경북공 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유물 9만여 점, 용산 새 박물관으로 이사

**【20일】** 국무회의, 30일부터 현역 사병을 비롯한 병역의무자의 민간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결정

**【20일】** 정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통과. 축구·농구에 이어 야구·배구·골프·씨름 등 4개 종목에 대해서도 스포츠 토도 발행

**【23일】**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 1,300여 명 사상, 주택 1,800여 채가 파괴된 대형 참사.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국제적십자연맹(IFRC) 북한대표부는 현지조사단을 급파.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각 정당을 직접 찾아가 협조 요청

**【25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북한 관련 민간단체와 시민단체들, 용천 사고 돕기에 적극적

으로 나서. 여당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동참하는 등 전 국민적 구호 운동으로 확산

**【25일】** 재정부, 담배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7월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소매점은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됨

**【27일】** 외교통상부,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 전사방식 여권을 발급하는 것에 맞춰 여권법 시행령 개정하기로 결정. 여권 유효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27일】** 삼성·엘지·현대자동차·에스케이 등 4대 그룹, 적십자사에 70~8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금 전달

**【28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보호를 권장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경의 이름을 딴 '직지상' 제정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출범

## 정 치

**[3일]**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재벌 소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 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데 합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3일]** 서울고검, 안기부 예산 유용 사건인 이른바 '안풍 자금'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해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승인 요청

**[3일]**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도 총리실이나 감사원처럼 다른 부처에 대한 복무상태 감사. 전·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도 대폭 강화됨

**[6일]** 국정홍보처, 정부정책 통합홍보시스템 도입. 정책을 수립한 후 홍보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에서부터 확정·발표·집행 전 과정에 걸쳐 국민여론을 반영해 홍보

**[7일]**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 종료. 장성급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함의

**[11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천정배 의원 선출

**[11일]** 행정자치부, 16개 부처 직제를 개정해 증원이 시급한 경찰과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3,068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결정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괴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추적 중인 206억 원을 모두 남편 전 씨의 추정금으로 대신 낼 것을 약속했다고 밝힘.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정형이 확정된 후 2003년 11월까지 전 씨가 낸 추정금은 모두 332억 3천만 원. 대검 중수부는 이와는 별도로 재산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둘째 아들 재용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50억 원을 구형

**[13일]** 법무부, '안풍자금' 856억 원의 국고환수를 위해 한나라당 9개 시·도지부 건물에 대해 가압류 승인. 법원은 당초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가압류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 신청 후 한나라당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외국계 회사에 매각해 이와 같이 조치

**[13일]** 서울중앙지법, 2002년 대선에서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575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차떼기)을 받은 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선고

**[14일]** 헌법재판소,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 기각. 노 대통령은 64일 동안 지속된 권한

행사 정지에서 벗어나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오찬을 하며 주로 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집무실에 머물며 그간 밀린 각종 현안을 챙김. 고건 총리와 만찬을 하며 미국, 이라크 상황, 6자 회담 등에 대한 보고 겸 대화 진행

●전날 밤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심판 결과를 기다린 시민들, 결과 발표에 일제 환호, 광주 급남로 가로수엔 탄핵 기각을 반기는 노란 풍선과 리본 2천여 개가 장식됐고 광주 시민들은 참여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와 함께 맥주 10만cc와 막걸리 등으로 잔치를 벌임.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자축했고 대구 노사모 회원은 국채보상운동공원에 모여 복귀 축하행사를 벌임. 천안지역 노사모 회원들은 부활을 알리는 삶은 계란을 삶고 노란 리본으로 가로수 장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4명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복귀는 국민의 승리'라고 밝힘.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마을 잔치. 네티즌 700여 명은 탄핵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16일】** 대검 중수부, 김중필 씨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삼성그룹에서 채권 1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고 발표

**【18일】** 노 대통령, 광주 민주화운동 24돌 기념식 참석.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고, 규칙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

**【19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취임. 언론개혁·친일규명법 개정에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힘

**【20일】** 노 대통령,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제. "주한미군 재조정은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인 만큼 의견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라"고 지시

**【20일】** 정부,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 과학기술부는 향후 5조 5천억 원의 국가 연구·개

발 예산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총괄 조정하게 됨

**【20일】** 국민통합21, 당 해산 결의

**【20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입당. 9월 분당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당적 상태로 지낸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당적을 가짐. 대통령은 신기남 의장에게 "당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는 현역 의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과 당 운영과정에서 (이들 지역이) 소외되기 쉽다"며 "그 지역의 인재를 중히 쓰고 전면에 내세워 당이 전국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배려하면 좋겠다"고 당부

**【21일】** 대검 중수부, 대선자금 수사 마무리.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본인들이 직접 자금 모금에 관여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 9개월간 정치인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기업인 13명을 형사처벌. 검찰이 밝혀 낸 불법 대선자금은 한나라당 823억 원, 노무현 후보 쪽 119억 원이며 대통령 측근과 대선 공신들도 구속하는 결과 얻음

**【21일】** 당정, 이종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합의

**【21일】**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후보지 평가 기준 등 의결. 8월 말 최종입지 확정 발표하기로 결정

**【22일】** 신행정수도 추진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중 7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잠정 설정했다고 밝힘

**【25일】** 고건 총리 사퇴

**【26일】**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금강산에서 시작. 남측 합참 작전차장과 북측 인민무력부 소장이 각각 수석대표

**【26일】**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부영 전 의원, 개인후원회를 해산하면서 잔여금 대부분을 사회시설에 기부

**【26일】** 노 대통령,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는 원융회통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가르침"이라고 강조

**[27일]** 감사원,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의 공적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횡령 등 77건의 위법·부당행위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 요청

**[27일]** 노 대통령, 연세대서 리더십 특강. 정경유착, 권언유착, 정언유착에 대해 “우리 사회의 조폭적 특권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의제를 설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조·중·동이라고 지적. “지도자의 제일 조건은 정직이며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술수”라고 강조

**[28일]** 대검 공안부, 17대 총선 이후 당선자 가운데 8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

**[30일]** 대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힘

**[31일]** 7개 시·군 10개 지역이 원전수거물 관리 시설(방폐장) 터 유치 신청. 부안까지 총 11곳 중에서 결정

**[31일]**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경총 등 양쪽 대표단 참가한 노사대표 간담회를 주재하고 ‘노·사·정 지도자회의’ 구성에 합의.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노사의 균형된,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 나가겠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문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31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17대 국회에 첫발을 디디며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밖에서 했던 것만큼 잘할 수 있을지 긴장된다. 국민들이 10명이나 뽑아 줬다”며 끝내 눈물

## 통일 · 외교 · 안보

**[4일]** 북·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부 간 협의 재개

**[4일]** 일본의 한 극우단체 회원들이 소형 배를 타고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나서자 정부는 독도 주변 해

역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감  
**[5일]** 북·일,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협의를 속개해 앞으로 교섭을 계속해 나간다고 합의. 일본 외무성은 “합의한 것은 없지만 원칙론뿐만 아니라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평가

**[14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업무에 복귀한 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 한·일, 북·일,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후진타오 중국 주석,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이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 보냄

**[14일]** 6차 회담 실무그룹회의 폐막. 3차 6자 회담 재개 확인과 실무그룹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합의

**[17일]** 부시 미국 대통령, 이라크로 주한미군을 차출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이해 구함

**[22일]** 북·일 정상회담 평양서 개최. 2002년 9월 평양선언이 두 나라 관계의 기조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수교 교섭 재개하기로 합의. 일본은 향후 1~2개월 안에 식량 25만 톤과 의약품 1천만 달러어치를 지원하고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대북제재법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힘. 고이즈미 총리는 피랍 일본인 북한 잔류 가족 8명 중 5명을 데리고 귀국.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중 탈영한 찰스 켄킨스(65) 씨가 미국 정부에 인도될 것을 우려해 그와 두 딸은 거부. 북한이 사망했거나 입국 사실이 없다고 밝힌 행불자 10명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재조사 약속

**[24일]** 한·러 외무회담, 북핵문제·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가스전 사업 등 주요 관심사 논의

**[28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전체대회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축하 메시지. 일 총리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처음. 일 총리는 참의원 회의에 출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독재자라는 어쩔지 무섭고 불안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차분하고 쾌활하며 농담을 던지는가 하면 머리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함

**[29일]** 노 대통령,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의

예방을 받고 “총리의 북한 방문은 훌륭한 결단이 었다”고 칭찬

**【30일】**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집권하면 한반도의 병력 감축 문제와 정전협정 대체 문제, 남북한 통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북한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경 제

**【3일】** 재정경제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고용중대 특별세액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4일】** 미국, 한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가 더 심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2002년과 2003년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음

**【7일】** 건교부,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국세청에 의뢰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펴기로 결정

**【10일】** 행정자치부,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12.3%) 등을 감안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힘

**【13일】** 남북 교역 과정에서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실액의 최고 50%까지 보전해 주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전제도 시행

**【16일】** 건설교통부, 2015년까지 신분당선과 경의선을 직접 연결하기로 결정

**【18일】** 남·북·중·일·러·몽골 등 동북아 6개국의 전력망을 서로 연결해 전력을 유통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북아 전력계통연계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서 개막. 북한 대표단은 “에너지 협조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력 실현에 이어 이제 실천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새로운 세기의 요구에 걸맞게 각국 당국이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강조

**【20일】** 정부, 독도 개별 공시지가를 2억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2000년 이후 지가 변동이 없었지만 정부의 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짐

**【25일】** 노 대통령, 재계 회동.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시장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히.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겠다고 단언

**【27일】** 입주 신청을 마감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경쟁률은 8.7 대 1. 15개의 시범단지 유치에 130여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함

## 사회·문화

**【1일】**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환영사에서 용천 지원과 관련해 “(남쪽) 각계에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원에 힘입어 2~3개월 안에 복구를 끝낼 것”이라 밝힘

**【1일】** 법원,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에 담배 유해성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

**【3일】** 이라크 주둔 미군이 조직적으로 이라크인 포로를 학대하고 여성 포로에게까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보도. 신문은 미 육군이 낸 53쪽 분량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

**【4일】** 감사원, 기업금융 신용평가시스템 운용실태 특별감사 예비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대출을 신청한 136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해 기업은행 등 73개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힘

**【6일】** 법무부, 교도소 근처 종합병원에 ‘수용자 전용병실’을 만들고, 교도소 안에 커피와 녹차 등 기호식품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등 재소자들의 처우와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운영하기로

결정

**[7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14만여 명 가운데 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직업상담원 등 상시업무 종사자 3만 2,800명을 별정직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7일]** 남북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남쪽 지역에서 6·15선언 네 돌 민족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

**[10일]** 박세리 선수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 시즌 첫 승을 올리며 데뷔 7년 만에 '명예의 전당' 입성 위업을 이룬. 아시아 최초이자 20대 최초의 입회

**[11일]** 대한적십자사, 용천 복구 지원 인원 및 2차 자재·장비를 가지고 출국

**[13일]** 당정,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 신용보증 한도를 3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

**[16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단오절의 세계 구전·무형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한·중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17일]** 대한적십자사, 용천 참사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쌀 5천 톤 북쪽 향해 출발

**[21일]** 서울 남부지법,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세 사람에게 무죄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

**[22일]**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제57회 칸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심사위원대상 수상

**[22일]** 서울시 개최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인권위에 제소하기로 결정

**[23일]** 법원, 집단행동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

**[24일]** 교육인적자원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범대·교대 출신자의 교원임용고사 지

역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

**[24일]** 일본 고법, 2차대전 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탄광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제척기간이 지나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28일]** 경남 마산에서 한국전쟁 중 군인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유골 125구 발견. 유골 주변엔 엠1 탄피 등 당시 사용 무기들도 확인됨

**[28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로버트 러플린 선임

**[31일]** 교육인적자원부, 강원 동해대의 재단인 광희학원이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불법 사용 428억 원의 회수를 결정하는 한편 이 재단이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광희특수전문대학의 설립계획 인가를 취소 조치함. 교육부가 이미 인가한 대학 설립계획을 취소하기는 처음

# 6

## 2004

### 정 치

**【3일】** 설악산에서 2차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일】** 정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과 외국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등 향후 한·미 동맹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다루기 위한 고위급 실무대책위원회 가동하기로 결정

**【5일】** 광역단체장 4곳 등 전국 114개 지역 재·보궐선거 실시

**【5일】**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서해상 함정 통제 및 물리적 행위 금지와 통신연락 △8월 15일까지 155마일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 위해 공동 노력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 위한 후속 군사회담 개최 등 4개 항을 채택하고 종료

**【5일】** 17대 국회 첫 본회의, 김원기 열린우리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

**【6일】** 민주노동당 새 대표에 김혜경(59) 의원 선출

**【6일】** 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개념이며, 상호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는 이미 세계의 보편

적 질서”라고 강조

**【7일】** 노 대통령, 국회 연설.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등 많은 개혁과제들은 국회가 주도해야 할 일이고, 저와 정부는 부패 청산과 정부 혁신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힘

**【8일】** 노 대통령, 새 총리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 지명

**【8일】** 행정자치부, 2005년부터 새마을금고 등 357개 인허가·승인 사무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로 넘기기로 결정

**【11일】** 친일진상규명 시민연대, 조사 대상자와 행위를 축소해 실효성 논란을 빚은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애초 취지대로 전면 개정한 시민단체의 초안 발표. 김희선 의원이 이 안을 전적으로 수용, 재발의하겠다고 밝힘

**【14일】** 남북 함정, 분단 이후 첫 무신 교신. 연평도 서남방 8.5마일 바다, 남측 함정에서 “백두산 돌, 백두산 돌, 여기는 한라산 돌, 감도는 좋은가?”라고 묻자 북측 함정이 “한라산 돌, 한라산 돌, 여기는 백두산 돌, 감도는 다섯”이라고 답변. 함정에선 일제히 감동과 환호

**【15일】** 0시를 기해 1962년부터 42년간 계속된 황성기 방송 중단. 남측 ‘자유 소리’와 북측 ‘구국의 소리’ 마지막 방송. 남북 각자의 선전이 아닌

민족공동변명과 통일, 평화 화해 협력을 말하며 남북 대결의 상징이던 선전방송 영원히 침묵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6·15공동선언 4들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과 북이 현재의 좋은 흐름을 계속 끌고 나가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을 국제토론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부위원장을 통해 전달. 노 대통령은 이에 “6·15공동선언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간접적으로라도 대화를 주고받기는 이번이 처음

**【15일】** 햇볕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02년 6월 한나라당 논평)던 한나라당이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 간의 물꼬를 텃고, 어느 정도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고 논평(2004년 6월) 하며 전향적인 자세 취함

**【16일】** 남북, 비무장지대 선거물, 초대형 확성기 등 철거 작업 시작

**【17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한번 합의된 것을 이렇게 돌아서서 뒤집으면 국가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며 “수십 년 동안 미루어 온 국가적 사업을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가려고 하는데,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또는 어떤 개혁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걸려서 좌절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힘. 실행정수도 특별법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합의해 처리된 바 있음

**【17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에 보잉사 등 외국 5개 업체가 제안서 제출. 국방부는 사업단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육군 등 8개 기관에서 선발된 64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 작업 진행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에 대한 1억 달러 비밀지원을 대통령으로서 승인했으며, 이를 후회

하지 않는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서 밝힘

**【21일】** 통일부, 장관 훈령인 ‘북한 텔레비전 영상 자료 취급규정’ 조항을 고쳐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북한 영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22일】** 국방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대급에서 사용하는 초소형 무인정찰기의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힘

**【23일】** 검찰,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출.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체포동의안 즉각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음

**【29일】** 국회, 불법선거 혐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9일】** 국방부, 미국의 스텔스 F-117 전폭기 00대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한반도 남쪽 공군기지에 전개돼 작전계획 숙지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

**【30일】** 이해찬 총리 취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등 주요 부처 개각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일본 중의원 상임위, ‘북한 선박 입항금지법안’ 통과시킴

**【6일】** 미국, 2005년 12월 말까지 이라크 차출 병력 3,6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통보. 실행될 경우 한국 주둔 주한미군은 2만 5천 명

**【7일】**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 기자들에게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 주권 이양을 위한 새로운 결의안 통과

**【17일】** 서울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철의

실크로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북측 대표인 박정성 북한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등 북측 대표 6명 참가. 유라시아 공동번영 전략으로서 철의 실크로드 구축 등 협력방안 논의

**【21일】** 23일 북핵문제 6차 회담 본회의에 앞서 실무회담을 시작하며 공식일정 돌입

**【23일】** 북핵문제 해결 위한 제3차 6차 회담 개막

**【26일】** 제3차 6차 회담, 다음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서 핵 동결 범위·기간·검증방법·상응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8개 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종결

**【28일】** 미군이 주도하는 이라크 점령당국, 예정을 이틀 앞당겨 주권 이양

## 경 제

**【3일】** 산업자원부, 국가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 방안 보고. 6개 국가산업단지를 올해 안에 '혁신 클러스터 육성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내년 부터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 등에 매년 1천억 원을 지원

**【3일】**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5일】**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의 선·동해선 도로 10월 말 개통 △개성공단관리기관 출범 △전력 공급 △광케이블 설치 등을 합의하고 종료

**【8일】** 한국은행, 200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발표.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33분의 1, 국민소득은 남한의 1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8일】** 인도네시아, 자국산 정보용지와 백상지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에 불만을 품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 인도네시아는 강제 조정 절차보다는 양자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9일】** 정보통신부, 노 대통령에게 'U-KOREA 추진전략'(IT-839) 보고. 휴대인터넷·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홈네트워크서비스·텔레매

틱스서비스·RFID(무선주파수인식)활용서비스·W-CDMA·지상파디지털TV·인터넷전화 등 8대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광대역통합망(BcN)·U-센서네트워크·차세대인터넷주소 체계(IPv6)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 차세대이동통신·디지털TV·디지털콘텐츠·지능형로봇 등 9대 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내용. 정보통신부는 이를 기반으로 2007년까지 소득수준 2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설명

**【9일】** 정보통신부의 IT839전략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 "U-Korea는 언제, 어디서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모두'라는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다"며 "중소기업이 반드시 이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11일】** 무디스, 북핵 협상 진전에 따른 긴장 완화를 이유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3)을 유지한 채 신용등급의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높여 발표

**【14일】** 감사원, 김제·울진·무안 신설 예정 공항 3곳에 대해 항공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렸다고 사업 착공 시기와 규모를 재조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건교부장관에게 주의 조치 통보

**【22일】** 현대아산, 7월부터 금강산 단일관광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

**【25일】** 농림부, 농업경영체 지원방안 마련. 2005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농민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농업회사 법인을 맡을 수 있게 됨. 비농민의 출자지분 한도도 75%로 상향 조정

**【30일】** 노사정위 33차 본위원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2005년부터 우리사주 조합이 결성된 모든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 사회 · 문화

**[2일]** 법무부, 성인 나이를 19살로 낮추고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생과 직결되는 130여 개 조항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결정. 46년 만에 성인 나이 조정이 이루어짐

**[3일]** 공정거래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0개 시민단체, '무가지 및 경품 안 받기' 범국민 캠페인. 청와대 등 93개 정부기관과 서울시, 10개 소비자 민간단체도 홍보용 전단과 스티커 등 배포

**[3일]** 보건복지부, 신용불량·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체납에 대해 월급 압류 등의 강제징수는 하지 않기로 결정

**[4일]** 노사정 첫 대표자회의.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5일]** 미국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93) 사망

**[9일]** 122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불량 만두를 생산한 18개 업체의 명단 공개. 12개 업체 제품을 회수 및 폐기대상으로 지정

**[10일]** 서울지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기한을 넘긴 중국산 김치로 컵라면용 스프를 만들어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11명을 불구속 기소. 라면 제조업체, 44만 개 컵라면 전량 회수

**[11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영화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 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과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힘

**[12일]** 성백엽 감독의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장편 경쟁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 2002년 이성강 감독의 <마리 이야기>에 이어 두번째

**[14일]** 부산경찰청,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

거나 반송처리해야 할 수입 냉동수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가 남·북·해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개최. 본대회에서 조국광복 60돌인 200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삼자는 내용의 '민족대단합 선언' 채택

**[16일]** 정부,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2만 7천 개 확정

**[16일]** 6·15공동선언 4돌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7명의 북쪽 대표단, 연세대 전자도서관, 에스비에스, 에스케이텔레콤 홍보관, 수원 삼성전자 공장 등을 방문. 방문지는 모두 북쪽의 요청으로 선택됨

**[19일]** 외교통상부, 이라크 추가 파병 공식 발표와 관련 이라크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선교, 취재, 구호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20일]** 이라크 무장단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를 납치·처형 협박함. 정부, 장재룡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현지대책반 급파

**[23일]** 이라크 무장세력,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 살해

**[23일]** 노 대통령,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런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힘. 대통령은 이어 파병 성격에 대해 “이라크와 아랍 국가에 적대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24일]** 남북, 2004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때 아리랑 음악에 맞춰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기로 합의

**[24일]** 국제출판인협회(IPA), 4년마다 치르는 출판인올림픽 2008년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

**【2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준하 씨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 그의 사망이 공권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30일】**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화수입추천을 규정한 영화진흥법을 없애고,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한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정 치

**【3일】** 노 대통령, 정부혁신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일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내각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

**【5일】** 검찰, ‘안풍’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1996년 선거 당시 민자당이 1,197억 원을 안기부 계좌에서 빼내 쓴 사실은 확실한데, 그 돈이 국가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사법부의 판단. 판결문에서는 (문제의 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6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립학교 교직원 임명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되며, 비리재단의 경우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전체 이사의 3분의 1까지 추천할 수 있게 됨

**【9일】** 국방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사업에서 핵심부품 개발 참여 제안서를 낸 외국 5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영국 이탈리아), 벨(미국), 유로콥터(프랑스 독일) 등 3개사를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힘

**【9일】** 노 대통령,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도내에 여러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지

만 의문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며 “전북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2일】** 서울시의원 등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13일】** 이해찬 총리, 행정수도가 이전될 경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옮기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이전 규모는 15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힘

**【14일】**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등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일】** 합동참모본부, 서해 연평도 서쪽 15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경고 함포사격을 받고 14분 만에 북상했다고 발표. 해군 함정은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대로 북측 함선에 세 차례 교신했지만 북측에서 대답이 없자 함포 2발을 경고 사격했다고 밝힘

**【16일】** 국방부, ‘14일 북측 경비선에 함포 사격 당시 북측에 세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북 함정이 응신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북측 어선은 세 차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내용을 송신했지만 남측 경비정은 중국 어선 너머의 북한 경비정에 사격한 것으로 확인. 국방부 이에 대국민 사

과.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 진상조사 착수. 노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19일】** 노 대통령, 우리 경비정이 북쪽 경비정의 응답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남북 간에 서해상 교신 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는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작전상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정확해야 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발표도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

**【21일】** 서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표류하다 뒤따라 내려온 선박에 의해 북으로 예인. 이 과정에서 남북 교신 정상 가동

**【14일】** 정부 합동조사단, 서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 중국 어선이 있던 점으로 미루어 북한의 송신을 ‘기만교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무시하고 보고를 누락한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

**【26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이 국가 정체성 혼란을 논하며 청와대에 이념 공세를 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 달리 답변할 것이 없다”고 일축하며 “유신헌법으로 고시 공부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덧붙임

**【27일】** 동남아에 머물던 탈북자 450명 중 230명이 아시아나항공 특별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28일】** 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김승규 전 법무차관, 국방부 장관에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 임명

**【29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른바 ‘탈북자’들을 대량 남조선에 끌어간 행위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도전이며, 우리 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 행위”라고 발표

**【30일】** 노 대통령, 2기 의문사위의 활동보고를 받고 “민주화 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 침해 행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문사위의 조사대상 논란에 일침

**【30일】** 서울중앙지법, 증여세 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채용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억 원 선고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취임 기자회견에서 육군 출신이 독식하던 국방부와 합참에 해군과 공군 출신의 인력들을 확충할 것이라 밝힘

**【30일】** 노 대통령, 제51회 국정과제회의 주재하고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구축을 위한 30개 중점과제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 2008년까지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1만 곳이 육성되고, 대학 공학 교육은 기업 수요에 맞춰 개편되며,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10곳 육성함

**【30일】** 당정,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 제11차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남북 외무장관 회담 진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제연합과 아세안지역포럼 등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 채택

**【2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대북 국교 정상화 추진에 대해 “1년 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되도록 이른 쪽이 좋다”고 밝힘

**【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3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러 외무회담을 진행한 후 노무현 대통령 예방하고 4일 방북해 백남순 외무상과 만나는 등 북핵문제 등 남·북·러 현안 조율

**【8일】** 부시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반기문 외

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가 안보보좌관, “북한이 핵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사찰을 받고 진정한 핵폐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될지 북한은 놀랄 것”이라 말함

**【14일】** 정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외교단지 조성 계획 설명

**【16일】** 미국 국무부, 20일 열리는 한반도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싶다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박길연 대사와 한성렬 차석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20일】** 존 볼턴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반기문 장관과 이수혁 차관보를 만나 북한 핵문제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에 대해 한국의 협조 요청

**【21일】** 한·일 정상회담 제주도에서 열림. 북핵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

**【21일】** 미 하원, 2004 북한인권법안 구두 표결로 통과

**【23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10차 회의, 미군기지 이전문제 합의

**【24일】** 노 대통령, 방한 중인 압둘라 2세 빈 알후세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두 나라의 정보·병참·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가가치가, 북한 경제에선 연간 6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17일】** 오시마 쇼타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장,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원칙 초안(오시마 초안) 발표

**【18일】** 재정경제부, 주택 또는 투기지역 지정 뒤 6개월이 지나고,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함

**【22일】** 중소기업청, 공공기관의 수요 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별 경쟁제도와 저가 입찰가격 조사제도 등의 보완책이 포함된 개편안 발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중소기업들의 단체수의계약제도 40년 만에 손질

**【26일】** 국세청, 새 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투기 단속 결과 모두 496건의 투기혐의 사례 적발. 불법 사실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는 검찰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

**【31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기본골격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 경 제

**【7일】** 정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8일】** 건설교통부, 행정수도 유력 후보지인 연기·공주와 그 주변 지역은 물론 충청권 전역에 정부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

**【11일】** 한국은행,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3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까지 9년 동안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남북에 각각 10만 4천 개, 75만 5천 개가 새로 생기며, 남한 경제에 연간 24조 4천억 원의 부

## 사회·문화

**【1일】**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버스중앙차로제, 환승제도 도입

**【1일】** 동명왕릉, 사신총 주변 고분, 강서삼묘 고분군 등 북한 평양 일대와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북한에 있는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는 이번이 처음

**【1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재정지원방안 발표. 2006년부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손윤규 씨 등 감옥에서 숨진 3명의 비전향 장기수에 ‘의문사 인정’ 결정

**[5일]** 제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노사정위의 이름, 성격, 참여주체, 의제, 업종별 협의회 설치 여부 등 다섯 가지 개편 쟁점 사안을 선별. 노동계는 시민단체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 보임

**[6일]** 민주화보상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한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 2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

**[7일]** 여성부, 성별 영향 분석평가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힘.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경험을 고려해 반영

**[7일]** 공정위, 신문 신고포상제 실시 추진

**[9일]**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6개 종합 일간지의 지국 211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인 160곳이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21일]** 서울고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울 교수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에 무혐의 처리하고, 황장엽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들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송 교수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23일]** 미 국무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 5만 톤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힘

**[27일]** 감사원, 재경부·공정위 등 소비자 문제를 담당하는 9개 기관에 불합리한 각종 약관을 고치고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을 요구.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신용카드사 약관의 지나치게 작은 글씨,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등을 불합리한 약관으로 지적

**[29일]** 농림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발표. 2008년부터 정육점에서도 닭과 오리는 반드시 포장해서 팔아야 함

**[29일]**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업체에 정보를 빼주고 대가로 주식을 싼값에 제공받는 등 부당이익을 챙긴 33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 요구

**[29일]** 경남 창녕군에서 가야시대의 왕과 왕비릉으로 추정되는 2기의 대형 석실무덤(쌍분) 발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포함된 종합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폐기 조치

## 정 치

**【2일】** 해군, 충무공 이순신함이 함대공미사일 SM-2 발사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SM-2는 마하 2.0의 중거리 유도탄, 함정의 대공 방어를 위해 2단계 한국형 구축함(4,200톤)의 1번 함인 이순신함에 처음 장착

**【3일】** 행정자치부, 9월 시행될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일】** 3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15차 장관급회담 끝내 무산

**【5일】** 여야 의원 125명,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공동 발의.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 그간 '미수복 지역'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던 북한에 대해 법적 실체 인정함

**【10일】** 노 대통령,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토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힘

**【10일】** 여야 의원 35명, 신문사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1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새 행정수도

예정지로 충남 연기·공주 확정

**【11일】** 노 대통령, 군 지휘관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군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밝히는 자세를 갖고 정리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15일】** 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것"이라며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특위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 제의

**【16일】** 노 대통령, 분리형 국정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각 부처 및 대통령 비서실로 하여금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각료 임면 제청권을 실질화함

**【17일】** 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해 "국가권력이 국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 국가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히되, 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방법과 시기, 수준 등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

**【18일】** 감사원, 공직자 기강 점검을 통해 비리공무

원 25명 적발

**【19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선친의 일본군 징역과 관련해 사퇴.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장 의장직 승계

**【20일】** 중앙인사위, 2004년 뽑은 42개 개방형 공무원직 가운데 민간인은 14명(33.3%)으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의 30% 이상 외부임용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힘

**【22일】**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예산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의 사업성 기금 1,117개에 대해 통합 요구하는 한편 행사부엔 '지방기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지방기금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기금 설치와 운용을 억제하도록 권고

**【24일】** 통일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펼치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북지원 민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

**【27일】** 정부,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예산과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평택지원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30일】** 부패방지위원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 대우를 하는 등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

**【31일】** 국가균형발전위,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발표. 2006년부터 첨단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31일】** 당정,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 업무를 통합 관리할 '국방획득청'(가칭)을 신설하기로 함의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외교통상부, 북핵 실무그룹회의 논의차 방한한 중국 외교부 닝푸쿠이 한반도문제 담당 대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중국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사 기술을 그 이

전 상황으로 복원시킬 것을 중국 당국에 요구

**【5일】** 주한 미8군사령부, 이라크로 이동배치될 장병을 실은 항공기 두 대가 경기 오산 비행장을 이륙해 쿠웨이트로 향했다고 발표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미군을 위한 대량 유류 지원 전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주한미군이 유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낡은 송유관인 국방부 소유 한국중단송유관(TKP)에서 민간시설인 남북송유관(SNP)으로 교체

**【1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힘. 이혜찬 총리, 제3국 역사교과서의 우리 역사 파악 지시

**【20일】**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에 서명하고 협상 종결

**【22일】** 정부, 미군 재배치 평택 터 확정

**【23일】** 한·중 외무차관급 회담.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왜곡이 더는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24일】**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브뤼셀에서 치모 세비치 폴란드 외교장관 접견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우리는 충분한 지혜를 갖고 서로의 관심사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경 제

**【2일】** 건설교통부, 목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11월부터 목조건물이 5층까지 허용됨

**【13일】** 제6차 경제민생 점검회의, 민생안정대책 발표. 잠재적 빈곤층에게 정부비를 반값에 공급하고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2천만 원 한도에서 전세

반환자금 대출 시작. 이번 대책은 차상위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춤

**【13일】** 한국, 대만 항공협정 체결

**【13일】**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 정책권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금감위 강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유회사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 착수

**【17일】** 행정수도 탈락 2개 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4일】** 재정경제부,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유지 효과를 인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발표. 남한 기업인의 재산권 상속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27일】** 정부, 공장 설립 행정절차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창업 및 공장 설립절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30일】** 노 대통령,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선입견을 갖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해득실을 적절히 따져 국가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004 고용동향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12위인 것으로 나타남

**【31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도 무산

**【31일】** 대법원, 개인회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과 절차를 담은 규칙·예규 확정. 본격적인 운영 준비 시작

## 사회·문화

**【3일】** 문화관광부,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와 민·관 합동 긴급대책반을 꾸리기로 결정

**【5일】** 국가인권위, 육군본부가 순직자로 인정하고도 7,439명의 유족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발표

**【5일】** 정부, 아테네올림픽방송 북쪽에 중계해 주기로. 아테네에서 서울로 전송된 영상을 타이콤 위성을 통해 평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북쪽에 중계

**【10일】** 감사원, 농림부가 친환경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폐지와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시행 일정을 예상보다 2년 늦추는 바람에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1,599억 원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힘

**【11일】** 북한, <중앙텔레비전> 등 북측 영상을 무단 사용한 일본 방송사에 저작권료 요구

**【12일】** 민족문제연구소,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의 자료를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협정 이전 일본 기업에서 6,60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특별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 이 문서에는 한·일협정 전후의 한·미·일 세 나라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독도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13일】**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막. 남북 동시입장

**【15일】** 8·15 남북공동행사 무산

**【15일】** 정부, 참여연대와 일부 노동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

**【16일】** 환경부,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

**【16일】** 보건복지부, 각종 의약품 심사 및 사용범위 등에 관련한 주요 결정에 소비단체 참여를 늘리기로 결정

**【16일】** 국가정보원, 옛 안기부 관련 각종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부 인사와 민간 인사가 참여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

을 통한 발전위원회(가칭) 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국방부 역시 군 의문사 등 과거사 규명을 위한 별도기구 구성을 검토

**【17일】**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의 사업장별 공개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정부안 확정 발표

**【17일】** 당정,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 추진키로 합의

**【17일】** 노 대통령, 기자회견 창립 40돌 행사에 참석해 “언론이 과거 박해에 맞서 싸울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스스로의 절제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17일】** 노 대통령,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남자유도 이원희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노고를 치하

**【18일】** 아테네올림픽 한국축구, 56년 만에 8강 진출

**【20일】** 서울중앙지법, 아내를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에 대해 첫 유죄 판결. 판결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

**【24일】**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보안법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24일】** 법원 부동산 경매, 기간입찰제로. 응찰자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뿐 아니라 경매 브로커의 횡포도 근절

**【26일】** 환경부와 환경단체들, 고속철 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벌이기로 합의

**【31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총·학장을 상대로 대학구조개혁방안(시안) 설명.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에 확정 발표하게 될 이 안은 2009년까지 9만 5천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들의 통합과 연합을 재촉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유인책 제공함

## 정 치

- 【1일】** 제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최
- 【2일】** 노 대통령, 공직자가 퇴직 뒤라도 재직기간 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 【2일】** 열린우리당 의원 26명 미국 상원에서 처리를 앞둔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2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
- 【5일】** 노 대통령, <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2580’ 500회 특집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은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국민주권 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힘. 대미 관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줄하는 편”이라며 “이대로 5년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자주국가의 역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30종 지정
- 【10일】** 정부, 감사원 의견을 수용해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
- 【13일】** 노 대통령, 대통령 참석 외부행사 및 정부

주관행사에 기업 동원 등 민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

**【15일】**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가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임)하는 등 처벌 기준 강화

**【16일】** 지방분권위, 국정과제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보고. 2005년부터 시범 실시

**【18일】**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2차 사찰단이 입국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핵 평화활동 4원칙 발표

**【19일】** 국방부, 대민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던 재난 관리제도를 전쟁 이외의 작전 차원에서 군의 기본 임무로 변경하기로 결정

**【21일】** 부패방지위, 국가청렴위로 개칭

**【21일】** 서울시가 일부 구에 17일 진행된 행정수도 이전 반대집회에 예산을 지급했다는 관제 데모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됨

**【22일】**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 주둔지인 에르빌 도착 완료. 평화재건작업 시작

**【23일】** 국회, 가전·레저용품의 특소세 폐지 등 23개 법안 통과

**【23일】** 국회의 ‘쌈짓돈’이라는 예비금 사용처 첫 공개

**【24일】** 수도이전 반대 관제 데모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 예산 공식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밝힘

**【29일】** 남북 당국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국방부, 군 사이 긴장완화 위해 남북 체육교류 추진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 함정과 항공기에서 발사해 잠수함을 공격하는 신형 경어뢰 ‘청상어’를 개발해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통일 · 외교 · 안보**

**【9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한국 정부에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우방국들을 열거하며 한국을 빠뜨린 데 대해 사과 뜻 전달

**【1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리창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 접견

**【15일】**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이해찬 총리를 방문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보안법을 폐지 하라고 권고

**【16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미국 관료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모지 참배

**【19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사임. 후진타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승계

**【21일】** 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유전 개발과 송유관 건설사업에 한국 참여, 가스 공급협정 체결 추진 등을 합의.

**【27일】** 뉴욕 방문 중인 최수현 북한 외무성 부상, 폐연료봉 8천여 개를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고 밝힘

**【28일】** 미 상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연간 2,400만 달러까지 예산 허용

**【30일】** 미국 대선 첫 텔레비전 토론에서 북한 핵 문제로 격렬한 공방. 민주당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의 북핵문제 접근법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주장

**경 제**

**【1일】** 한국 · 대만, 12년 만에 항공노선 열림

**【1일】** 당정, 에어컨과 프로잭션텔레비전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 합의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혁신 아시아센터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

**【6일】** 정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 · 관 동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꾸려 국가 에너지 정책들을 심의 · 조정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위원회는 20년 단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비상 에너지 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심의 조정함

**【7일】** 철도청, 열차용 블랙박스 개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

**【8일】** 통일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 7개 기업에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

**【9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연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

**【15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부동산정책회의,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향 결정

**【18일】** 정부,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결정. 국가의 핵심기술을 외국에 매각 또는 이전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일】**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노 대통령, 자원 외교 진행. 누르스ultan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단독 ·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자원협력 합의.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우라늄 등에 대한 공동개발 협정서 체결

**【20일】** 삼성전자, 세계 최대 용량의 60나노 8기가 바이트 낸드형 플래시메모리와 80나노 2기가바이트급 디디알2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

**【23일】** 통일부, 10월 중 개성공단지원사업단 발족,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1개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을 정규 담보로 인정

**[30일]** 남쪽에서 30여 개 업체가 과다경쟁을 벌이고, 북쪽 기관끼리 실적 경쟁이 겹치면서 7월 말 중단됐던 북한 모래의 해상 수입이 두 달 만에 재개

## 사회 · 문화

**[1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2일]**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형사사건으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조건 없이 현금 보상을 받고, 상해의 치료비나 빼앗긴 금품 피해 등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됨

**[8일]** 북한 양강도 김형직 군 월탄리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

**[10일]** 프랑수아 데스쿠에트 주한 프랑스대사,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프랑스의 나치 청산을 설명하며 한번은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10일]** 방폐장 터 선정 추진일정 중단. 향후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1986년부터 16년간 논란이 된 방폐장 사업의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는 전환점 맞음

**[11일]** 김기덕 감독의 <빈집>, 베니스국제영화제 감독상.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이후 두번째 감독상

**[11일]** 남북 역사학자 학술회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

**[12일]** 문화올림픽 '세계문화오픈(WCO) 2004' 서울대회 개막

**[13일]** 북한, 양강도 김형직 군 월탄리 인근 폭발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 북한 주재 영국대사관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기로 결정

**[20일]** 국가보안법 존재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

법학회 등 1천여 명의 교수를 아우르는 학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이른 폐지를 촉구

**[20일]** 국방부, 국가정보원에 이어 경찰도 자체 과거사위를 만들기로 결정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경찰, 시행에 맞춰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

**[23일]** 대법, 성매매 업소에서 숨진 여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

**[2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논란이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생활기록부,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의 새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합의

**[25일]**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해 단식을 벌인 강의 석 씨(18), 학교 쪽과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 데 합의

**[30일]** 국방부에 설치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조사 대상에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과 북파 공작 특수부대원들이 병영을 이탈한 '실미도 사건'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 정 치

**【1일】** 노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며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과 정보역량 강화,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3일】** 이해찬 총리, 개천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낡은 생각과 이념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따라잡고 주도할 수 없다”며 “지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

**【7일】** 정부,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국가정보 공개와 관련해 총리 주재 국무회의 열어 중요 기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법 등에 따라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국회에서 국가 기밀자료 누출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

**【7일】**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청도 관제 데모 동원 확인됨

**【14일】** 남북 군장성급회담에서 국제상선공통망과 직통전화를 통해 선박을 구조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교신. 북한이 민간 선박 구조 처리를 요청하고, 남측 해군은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구조

**【15일】** 국방부, 이라크 파병 1년 연장안 확정

**【20일】** 노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이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관철되는 시대가 온다면 힘없는 지역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수도권은 각별히 국가 전체를 이끌어 가는 지역으로서 국가적 안목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힘

**【20일】**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법 등 4대 개혁법안과 부수법안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0여명, 북한 개성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며 초당적 지원을 약속

**【21일】** 헌법재판소,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헌이라고 판결. 판결문은 ‘관습헌법’ 때문이라고 규정. 관습헌법이 등장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 학계와 사회, 새로운 이론에 대해 충격받음

**【21일】** 현재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중단. 특별법에 따른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화됨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현재의 ‘관습헌법 위반 위헌’ 결정에 대해 “정상적인 헌법기관에 의한 사법권능의 행사가 아니라 자의적

이고 부당한 정치적 결정"이라 비난.

**【22일】** 법학계, 현재의 인적구조 개선 지적. 충북 지역 의원, 헌법재판관 탄핵 주장

**【22일】** 현재의 '관습헌법론'에 힘받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4대 개혁법 강행 땐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고 주장

**【25일】** 노 대통령,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실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26일】** 정부,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의결. 일정기간 견습 근무 후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공무원에 특별채용하는 '인턴 공무원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

**【28일】** 국회 대정부 질의, 한나라당 의원이 이해찬 총리에게 한나라당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하자 이 총리, "국민이 잘 알듯이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 원을 받은 당인데, 어떻게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응수

**【30일】** 강원 철원 등 5곳 재·보궐선거. 열린우리당은 강원 철원군수 1곳에서 당선. 한나라당은 경기 파주시장과 경남 거창군수 2곳, 민주당은 전남 강진군수와 해남군수 2곳에서 당선

**통일 · 외교 · 안보**

**【4일】** 미 하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5일】** 미사일 확산 방지의 정부 간 조직인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회의 서울서 개최

**【6일】** 한·미 양국, 주한미군 감축 시 전자·자주포·장갑차 등 전투장비는 놔둔 채 유사시 즉각 사용하기로 결정

**【6일】** 한·미, 주한미군 1만 2,500명의 감축 일정을 2008년으로 연장해 확정

**【6일】** 미국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수색팀, 미 상원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2005년 이라크 침공 당시 이라크는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핵프로그램 재개를 추구하지도 않았다고 결론

**【7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마레크 벨카 폴란드 총리, 유럽연합 차기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융커 총리 및 로마노 프로디 집행위원장과 한·유럽 등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 북핵문제 및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노 대통령, "한국은 베트남의 오랜 고난의 역사를 보며 동질성을 갖고 상호 존경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빛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과

**【11일】** 프랑스의 세계적 증권사 크레디리오네 아시아의 한국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가 사회개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좌편향 평가는 틀렸다고 지적

**【13일】** 이해찬 총리, 헝가리에서 열리는 2004 진보 정상회의의 참가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

**【18일】**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 측은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대화 입장 재확인

**【23일】** 한·미 양국, 동맹 관계의 새로운 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

**【2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비정부기구 등 탈북자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조직을 엄벌하겠다고 밝힘

## 경 제

- 【1일】** 9월 수출입 실적 호조. 하루 평균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 【7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한·미 자유 무역협정은 장애물이 있어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 【7일】** 남북, 실무장교 접촉. 경의선·동해선 임시 도로 통행과 관련해 통행시간 준수 등 개선방안 협의
- 【10일】** 건설교통부, 2005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
- 【11일】** 북한, 개성공단 보험 규정과 금강산 부동산 규정 발표
- 【13일】** 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에너지 자원 외교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하라”며 “인프라, 플랜트 수출의 경우 일반적 지원과 더불어 자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어 “해외진출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투자 장애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이를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
- 【15일】** 건설교통부, 학교 주변지구, 주택가 등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지역 지정
- 【20일】** 개성공단을 운영할 관리위원회 개소식과 시범단지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 열림
- 【22일】** 한국은행 발표, 우리나라 연간 수출실적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 돌파. 연말까지 2,500억 달러 돌파 예상
- 【26일】**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을 잇는 ‘제3차 세계한상대회’ 제주도에서 개막
- 【28일】** 중국,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7% 인상

## 사회·문화

- 【1일】** 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자 10여 명을 최고과학자로 선정해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최고과학자 국가관리 방안’ 추진
- 【1일】** 검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기로 결정
- 【3일】** 외교통상부, 병역의무 대상자에게도 5년짜리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
- 【4일】** 과학과 국제 문제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의 54차 총회 서울서 개막. 군축, 동북아, 핵무기와 비확산체제 등 논의
- 【6일】** 검찰, 불법 사설대학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약식기소했다고 발표
- 【7일】**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 【7일】** 당정, 사립학교법에 개방형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혁법안’ 추진키로 합의
- 【8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
- 【10일】** 한통련, 첫 공식여권 입국. 2003년 입국은 여행증명서를 받아 방한
- 【13일】** 당정,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대입 3불정책이 강제성을 갖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는 지원예산 삭감 등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 【14일】** 노 대통령,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망각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는 역사 정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런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대통령은 또 “요즘은 옛날 독재정권을 돕거나 독재정권 편에서 인권탄압과 독재에 방관하던 단체들도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한껏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 【18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교수 재임용 때 심의 의무화

**【18일】** 유럽 순방 중인 이해찬 총리,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19일】** 노 대통령, 화곡동의 다가구 임대주택을 방문, 입주자들을 격려하며 “10년쯤 뒤에는 꼭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도록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잘 관리하도록 해야겠다”고 밝힘

**【20일】** 당정, 1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북파공작원 보상금 지급 범위를 9,500만~2억 8천만 원까지로 확정

**【20일】** 동아투위 출신의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일제 식민당국 및 유신독재권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누렸던 조선·동아”라며 친일언론들을 강도 높게 비판

**【23일】** 일본 니가타 강진 30명 사망·실종

**【26일】** 수원지법, 첫 내부고발자 불이익 배상 판결

## 정 치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 미국으로부터 환수

**【3일】** 노 대통령,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의 대안과 관련해 “현재의 결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1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자이툰부대 주둔 기한 연장은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힘

**【18일】** 이해찬 총리 “인기에 영합해서는 나라 발전이 온전히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은) 고집스러운 정도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남은 3년 동안 대중융합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25일】** 국회 본회의, 경찰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오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등 처리

**【25일】**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안희정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강금원·이상수 씨 역시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26일】**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재계 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발하며 공정거래법 강력 지지

**【29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강력 추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한나라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위헌 시비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부시, 미국 대통령에 재선

**【5일】** 북·일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자민당 5단계 대북 경제제재 조치 승인

**【8일】** 미군, 이라크 중서부의 저항세력 거점도시 팔루자에 대해 진격 시작

**【11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사망. 정부, 이해찬 국무총리 이름의 조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식 조문사절단 급파

**【12일】** 노 대통령,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3개국 순방

**【13일】** 노 대통령, LA 연설. 북핵문제에 대해 대북 무력행사나 봉쇄 등 강경책에 관해 명확한 반대입장 밝힘

**【20일】** 한·미 정상회담. 6자 회담 조속 재개, 북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 등을 재 확인

**【22일】** 제1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 활화, 대테러 등 민간안보 강화, 부패척결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문 채택

**【23일】** 노 대통령, 한·미관계에 대해 “좀더 대등 한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힘

**【29일】** 한·중·일 정상회담.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환율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28일】** 노 대통령,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제8차 아세안+3 정상회의의 참석과 영국·프랑스·폴란드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

**【29일】** 동아시아 공동체 대장정 시작.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 대통령, 회의를 더욱 발전시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제안. 정상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200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20년을 목표로 한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함께 유럽연합에 견줄 만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 현실화

**【29일】** 정부, 동남아의 평화·안보·협력을 규정 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기로 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증액하는 한편, 아세안 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를 2005년까지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

**【30일】** 주한미군사령부, 광주공항에 미 방공포여단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힘

## 경 제

**【4일】** 당·정·청 협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2005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9억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기로

**【6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논의

**【7일】** 당·정·청 합동 경제 워크숍. 2005년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기로 협의

**【10일】** 농림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통 관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진 네덜란드 감자 사료와 함께 이 사료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검역 중단 조치 내림

**【11일】** 한국은행, 콜금리 운용 목표를 연 3.25%로 0.25% 낮추기로 결정

**【11일】**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확정. 전국 모든 주택의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 50%로 통일하고 부동산에도 처음으로 합산 과세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

**【17일】** 노 대통령,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관계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석유탐사와 에너지, 철도 및 항만시설 건설사업 등의 브라질 민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 장려하기로 합의

**【17일】** 농림부, 주요 협상국들이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조건으로 10년 뒤 의무 수입량을 41~45만 5천 톤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

**【17일】** 중국의 북한 투자, 지난해에 비해 40% 급증

**【18일】** 미국 농무부, 확정적이진 않지만 두번째 광우병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25일】** 국세청, 2001~2003년치 연말정산에서 사실 관계를 속이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해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직장인 34만 명을 적발, 이들에게서 세금 4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힘

**【28일】** 나노입자를 값싸게 대량으로 제조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됨

**【29일】** 한·싱가포르 정상, 양국 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 이로써 싱가포르

한국의 두번째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이자 아시아에선 첫번째 체결국이 됨. 북한 경제특구 생산품에 대해서도 내국 제품에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개성공단 제품의 국외 판로 확보에 중요한 선례가 됨

**[29일]** 한·중 정상회담. 노 대통령, 중국의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 이에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답변

**[3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양측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2005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년 안에 완료하고 2007년엔 협정이 공식 발효되도록 하기로 합의

## 사회 · 문화

**[1일]** <뉴욕타임스> 한국 기독교 해외 선교에 대해 “무슬림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중국 정부에 맞서 탈북자들을 개종시켜 남한으로 빼돌린다”며 ‘무리한 열정’이라 지적

**[2일]** 국정원 과거사규명위 발족

**[5일]** 노 대통령, 과거사 문제와 관련 “내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 완결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임기 동안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9일]** 정부, 이르면 2005년 3월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기로

**[11일]** 당장,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1억 원 범위 안에서 일정한 액수는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 변제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14일]** 라젠드라 프카차우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약체(IPCC) 의장,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면서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

**[15일]** 정보통신부, 친북 사이트 31개 사이트의

접속 차단

**[16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18일]** 경찰, 민관 합동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공식 발족. 민청학련, 남민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0대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

**[19일]** 광주 동부경찰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수사. 6개 고 8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21일]** 공정거래위원회, 8개 신문사 211개 지국 상대로 직권조사. 83%인 175곳에서 불공정 행위 적발. 특히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사 지국이 전체 위반 지국의 90.5% 차지.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

**[22일]** 국회 국방위 2005년부터 상병 기준 3만 5,800원인 사병 월급을 6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

**[25일]** 북한 <로동신문>, 남한 정부의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비판

**[26일]** 강화도 섬 안 왕릉 2곳에서 고급 청자, 옥장식 등의 고려 왕실 유물 무더기로 발굴

**[28일]** 재향군인회가 조달청, 한국전력 등 정부부처 및 공기업과 해마다 1천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사업과 청소용역 등에서 독점적 특혜를 누려 온 것으로 밝혀짐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외공간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재외 한국인 유학생이 사상 최대인 18만 7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2~3년 전에 비해 5배 이상의 증가폭

**[29일]** 일본 최고재판소, 위안부 등 피해 한국인 35명이 낸 보상청구 기각

**[29일]** 감사원,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 신용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4천여 명의 신용불량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새롭게 금융대출을 받은 사실 적발

**[30일]** 산자부 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키는 커지고 얼굴 길이는 작아지는 등 한국인의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영국 동포간담회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누구든 강행할 수 없다”고 강조

**【3일】** 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핵 6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적어도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또는 6자들 속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별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제 입장”이라고 밝힘

**【8일】** 노 대통령, 유럽 3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라크 에르빌에 주둔한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 대통령은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며 자이툰 방문 이유를 설명. 장병들을 둘러본 대통령은 부대원들이 건설한 자이툰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현지인 12명의 손을 일일이 잡고 위로

**【17일】** 서울중앙지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12·12, 5·18사건 수사 및 공

판기록 사본 5만여 쪽을 청구인 쪽에 전달

**【17일】** 정부, 2005년 2월까지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마련하기로 방침 정함

**【27일】** 정부,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

**【28일】** 정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여성인권 대사에 임명하는 등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할 7명의 대외직명대사를 임명

**【29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판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를 그만둔 전판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을 퇴임 직후 2년 동안 중앙법조윤리협회에서 제출받아 감시하는 방안에 합의

**【29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49년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55년 만. 2005년 3월부터 발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감

**【31일】** 국회 본회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2005 회계연도 예산안 의결. 신문법과 자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 등도 통과. 과거사법과 국가보안법은 처리 무산

## 통일 · 외교 · 안보

**【6일】** 한·프 정상회담.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새로 시작하기로 합의

**【8일】** 북한이 송환한 일본인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항의. 호소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일 교섭에 커다란 장애가 생겼다”며 대북 지원 중단 뜻 밝힘. 일본 경찰청은 유골에 대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테이코 대의 한 강사가 요코다의 유골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북·일 관계에 먹구름

**【14일】** 유골 논란과 관련 일본에서 대북제재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경제 제재라는 카드는 보여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 착수하면 큰 일”이라며 우려 표명

**【14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 노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방문과 관련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 표시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골은 메구미의 남편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일본 대표단에 전해 준 것으로 남편이 다른 사람의 유골을 넘겨 줬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일본의 감정 결과가 정치적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제재가 발동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힘

**【16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유골의 재검사를 촉구했으나 일본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답변

**【18일】** 한·일 정상회담. 북핵 6자 회담 조기 개최, 대북 제재에 대한 신중한 대응 등 논의

**【21일】** 중국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우방 귀 상무위원장을 만나 노 대통령의 친서 전달. 북핵문제 적극 조율 요청.

**【23일】** 북한 <중앙텔레비전> 가짜 유골 주장과 관련해 “자그마한 신의도, 도의도 없이 행동하는 일본과 6자 회담에 마주 앉는 것이 힘들게 됐다”고 주장

## 경 제

**【1일】** 한·중 제8차 쌀 관세화유에 협상 타결 실패

**【2일】** 한·영 정상회담. 생명공학, 정보기술, 창조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3일】** 한·폴란드 정상회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 경제협력 협정, 관광협력 협정, 청소년·체육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

**【7일】** 규제개혁기획단,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 받아야 했던 교통영향 심의와 건축 심의를 통합하는 등 대형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 발표

**【12일】** 통일부, 개성공단 왕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 기한을 5일로 단축하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12일】** 공정거래위원회, 6개 그룹 12개 계열사가 출자총액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의결권 제한과 지분 매각,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13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에 관련한 혐의가 있는 신문사들에 대해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직권조사 시행 방침은 분명하다”고 선언

**【14일】** 삼성전자와 소니, 양해각서 체결. 두 회사 소유의 특허를 상대방에게 공개하기로 합의

**【15일】** 중부 내륙지방을 남북 세로축으로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완전 개통

**【15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리빙아트 공장 준공과 첫 제품 생산 기념식 열림. 이날 개성에서 생산된 두 종류 냄비 1천 세트는 몇 시간 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특설 매장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됨

**【16일】** 노 대통령, “자유무역협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힘

**【16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 협상 공식 개시 선언

**【16일】** 한국형 고속전철, 시속 350km 시험주행 성공. 세계 네번째로 초고속 주행에 성공

**【17일】** 한국은행 발표. 대외 순채권 1천억 달러 돌파. 외환 보유액 1,959억 7천 달러로 2천억 달러 돌파 눈앞에

**【27일】**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을 2005년 3월 20일까지 선정하기로 결정

**【30일】** 정부, 쌀의 의무수입 물량을 지금의 배로 늘리고 수입쌀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시판하는 조건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동안 연장하기로 최종 방침을 결정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30일】** 케이티·조선체신회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5년 2월부터 개성 직통전화 개설

**【31일】** 건설교통부, 경기 고양 삼송지구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4곳 268만평을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사회 · 문화**

**【1일】** 불교 세계화에 공헌한 승산 스님 입적

**【1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전국 확산

**【2일】** 정부, 3개월간 차상위계층에 정부미 40% 할인 공급

**【3일】**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청의 특별 단체협상, 파업 일보 직전 타결

**【5일】** 일본, 이르면 2006년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 지문 채취와 사진촬영을 할 방침이라고 밝힘

**【7일】** 환경부, 향후 5년간 영화관과 음식점에서 지하철과 버스까지 실내공기를 관리하겠다고 밝힘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한 2003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조사에서 한국 고교 1학년생들의 정규수업 시간이 30.3시간으로 세계에서 두번

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9일】**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때 훈장을 받은 친일파 1,500명의 이름과 직업·훈장명이 들어 있는 일제의 서훈 공문서를 발견하고 조사 착수

**【10일】** 보건복지부,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이 한 차례로 통합되고 5대 암 검진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금액도 검사비의 20~3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고 발표

**【16일】** 대법원,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작성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정. 공판중심주의 실현

**【17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2004년 10대 연구'에 선정

**【17일】**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 여성문제뿐 아니라 가족정책까지 업무 확대

**【18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시민 5천여명,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촛불 집회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단식농성단 1천여 명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 법률에 혼용된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안 의결

**【26일】** 동남아 강진 해일 발생. 사망자 4만여 명 육박

**【30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2005년부터 건강보험료 적게 내면 세무조사 들어감

**【30일】** 소방방재청, 동남아시아 대규모 지진해일을 계기로 국내 지진 경보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 정함

**【31일】** 정부, 동·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숨진 한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소속 경찰관 2명을 타이 푸켓에 추가로 파견

# 1

## 2005

### 정 치

**【3일】** 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운영에는 각론만이 아니라 총론이 필요하다”며 “선진 한국으로 가는 종합적·체계적 전략지도를 만들자”고 말함

**【4일】** 노 대통령, 교육부 장관 겸 교육부총리에 이 기준, 행정자치부 장관에 오영교, 농림부 장관에 박홍수, 여성부 장관에 장하진, 해양수산부 장관에 오거돈, 법제처장에 김선욱 임명

**【4일】** 정부, 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5년 예산 배정 및 자금 계획'을 확정

**【4일】** 부패방지위원회, '2004년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전년에 비해 청렴도 개선. 공무원에 대한 금품과 향응 제공은 조사대상자 중 1.5%(2003년 3.5%)로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이전해야 하는 중앙 행정기관 확정해 국회 '신행정수도 위원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보고

**【5일】** 공정거래위,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내부 인사혁신을 위해 전 국장 직위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인사개혁 착수

**【5일】** 오영교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식에서 “구명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껌 하나 팔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30여 분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고객만족 행정에 대해 강조

**【6일】** 행자부, '2004년 정부혁신관리평가' 결과 공개. 49개 부처 가운데 관세청·조달청·국세청·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가 혁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7일】**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취임 사흘 만에 자진 사퇴

**【9일】** 중앙인사위원회,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간부 직원들에게 팀원 선택권을 주는 '내부 스카우트제'를 다음 달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힘

**【10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과 관련한 특별법을 다음 달까지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하기로 결정

**【11일】**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공동 출자로 설립돼 운영되는 '제3섹터 법인'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체 38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29개가 누적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적인 결손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12일】** 외교통상부, 남아시아 지진·해일 발생 이

후 접수된 한국인 소재 미확인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DNA 채취 작업 등의 신원 확인작업 시작

**【13일】** 국방부, 현재 69만여 명인 군 병력을 2008년까지 4만여 명 줄여 6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

**【13일】** 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우리 경제도 이제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며 “오는 2008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 밝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업 사이, 기업 사이,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라며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며 “1월 중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함.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응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지금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

**【15일】** 외교통상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교문서공개심의회를 열어 외교부가 작성하거나 접수한 뒤 30년이 지난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

**【17일】** 행정자치부,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통일 등을 뼈대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17일】** 외교통상부, 40년 만에 제6~7차 한·일 회담 청구권 협상 관련 문서 공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협정 체결로 확보한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 달러 가운데 극히 일부의 돈만 민간 보상에 사용하고 피해자 보상금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챙긴 것으로 밝혀짐

**【17일】** 노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 쪽 공동위원장으로 한승헌 변호사를 위촉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대신 단말기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를 하는 전자투표 방식을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

**【17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부터 복수차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18일】**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평택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단지를 건설한다고 밝혔

**【20일】** 북한, 북쪽 관할 해역에서 침몰한 남한 화물선 구조를 위해 남한 쪽이 요청한 해경 경비구난함의 관할 해역 진입과 경비행기의 비행을 허가. 북한이 남한 쪽의 요청을 받고 남한 해경의 배와 경비행기 진입을 허용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20일】** 국가정보원, 대통령에 업무보고. 주요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국가정보관’(NIO, National Intelligence Officer)으로 임명하는 등 2단계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20일】** 국방부, 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 왔던 국방부 주요부서 자리의 40% 안팎을 오는 2009년까지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국방부 본부 현역 편제조정(문민화) 계획’을 확정·발표

**【21일】** 국무조정실, 정부 정책을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19단계로 나뉘 공산품처럼 관리하는 ‘정책품질 관리제도’ 도입

**【2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건설될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시의 이름을 ‘행정도시’로 결정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 일부 금융기관은 서울에 남도록 하되, 통일부는 옮기기로 하는 등 이전할 행정기관의 범위를 16부 4처 3청으로 확정

## 통일 · 외교 · 안보

**【5일】** 북한, 남아시아 지진 · 해일 피해 복구 동참. 긴급 구호자금 1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북한 <중앙통신>이 보도

**【12일】** 중국의 탈북자 수용시설 실태 현장조사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베이징에서 탈북자 수용시설 내의 인권문제 등에 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려다 중국 당국의 제지를 받음

**【16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알제리와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등 아프리카 4개 나라를 순방. 케냐를 뺀 3개 나라 방문은 수교 이후 대한민국 외교 장관으로서의 처음

**【17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알제리 방문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 면제협정과 항공협정에 서명

**【18일】** 서울중앙지법, 한강에 독극물을 흘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8일】** 미국인 10명 중 7명 꼴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과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방침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과 캘리포니아의 지식네트워크사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발표

**【1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참여하는 다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20일】** 부시 미국 대통령 2기 정권 출범. 취임사에서 “온 세계에서 독재를 종식시키겠다”고 발언

**【25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리비아 방문.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와 북핵문제와 에너지문

제 협조하기로 결정

**【25일】** 한 · 일 국교 정상화 40돌을 기념하는 ‘한 · 일 우정의 해 2005’ 개막행사가 도쿄에서 열림

**【25일】** 일본 정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문서로 한국 정부에 통보

## 경 제

**【1일】** 노 대통령, 2005년 신년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은 더욱 촉진시켜 성장을 이끌도록 하고, 뒤쳐진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게는 폭넓은 지원을 해서 더불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밝힘

**【1일】** 수출액 연간 2,500억 달러 돌파. 산업자원부, 2004년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수출액은 2,54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1.2% 증가했고 수입은 2,244억 7천만 달러로 25.5% 증가했다고 잠정 집계

**【2일】** 재정경제부,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3일】** 정부,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 도입 발표

**【3일】** 정부와 한국토지공사, 개성 주민들에게 연탄 2만 톤과 난로 1만 개 지원

**【4일】** 정부,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책 발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전력요금도 산업용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10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 DMB) 시험방송 시작

**【11일】**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후보양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주

요 설계 변경 때는 사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14일】** 통일부, 금강산 등 북한지역 관광객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방북 승인 때 신원조사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

**【14일】** 건설교통부, 단독주택에 물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 첫 공시

**【16일】** 금융감독원,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국외 송금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70여 건을 적발하고 오는 21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16일】** 기획예산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지원 분야는 △ 청년실업 대책 △ 사회적 일자리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등 크게 세 가지이며 이에 따른 예산 1조 4천억 원 배정

**【17일】** 노 대통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3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골라 창업과 시설투자에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17일】** 유엔 밀레니엄 개발 보고서, 부자나라의 빈곤국 원조를 국민총생산(GNP)의 0.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발표

**【18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의 규제 7,900여 건 가운데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1천 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는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확정

**【21일】** 정부, 2005년 부분별 물가대책 발표.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새학기 등록금과 학원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결정

**【3일】** 정부, 남아시아의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 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해찬 국무총리 파견

● 법무부와 노동부, 3일 지진·해일 피해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각종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3일】** 민족평화축전조직위원회, 광복 60돌을 기념해 고구려 우표 2종을 1,001장씩 발행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

**【4일】** 정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와 민·관 종합지원 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앞으로 3년 동안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 500만 달러는 긴급 구호금으로, 4,500만 달러는 복구 지원금으로 지원

**【4일】** 건설교통부, 시민단체들과 시화호 남쪽 간석지(간척지+개펄)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자연매립선 및 생태축 유지 △수질오염 우려시설 배제 △자연생태를 이용한 도로 개설 등 철저한 친환경 개발 △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 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참여보장 등에 합의. 건교부는 시화호 주변 시민·환경단체들과 지난해 1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뒤 25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 도출

**【4일】**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4일 현재 확인된 외국 국적 사망자 수는 한국인 12명을 포함해 360명으로 집계

**【5일】** 정부, 상반기 안에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설립 추진. 20년 장기 학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학자금 대출을 근거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추진

**【5일】** 정부, 극빈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방침에 이어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용 회복을 돕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10일】** 외교통상부, 외교관과 관용을 시작으로 위·변조를 막은 사진 전사 방식의 새 여권 발급. 5월부터는 일선 구청에서도 일반인에게 발급

**【10일】** 대법원, 국회의 호주제 폐지에 발맞춰 호적을 대신할 각 개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담은 1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형태의 새 신분등록제를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확정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일부터 민주화운동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민주화운동사로 원문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힘

**【11일】** 보건복지부, 4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살 이상 노인 일자리 3만 5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2005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발표

**【11일】**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우법 시행령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중 기본연금이 5%, 부가연금이 7%씩 각각 인상됐다고 밝힘

**【11일】** 한국정신대연구소, 대전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일본군 군인군속자료를 조사한 결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78) 씨의 실명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힘.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11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종교 지도자 및 시민사회와 학계·재계 인사 117명,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냄

**【12일】** 교육인적자원부,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12일】** 장하진 여성부 장관, 서울 명륜동 성균관을 찾아 최근덕 관장과 20여 분 동안 가족제도, 보육 정책, 여성의 사회 진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여성부 장관이 유림의 대표격인 성균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전통가족의 좋은 점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고, 최관장은 이에 "여성의 사회 진출은 대세이니 보육 정책에 힘써 달라"고 당부. 여성부와 성균관은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대립해 온 바 있음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과 관련해 대법관 인선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개정된 내규의 철회를 촉구

**【13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공식 승인

**【14일】** 재정경제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15만 명에 대해 자원봉사 등의 방식을 통해 빚을 갚면해 주고, 취업이 안 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대출자들도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신용불량자 지원대책 발표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결식 어린이 부실 도시락' 파문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

**【16일】** 대검찰청, 범행을 자백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량을 깎아 주는 이른바 '유죄협상제도'(폴리마게닝)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

**【16일】** 중앙인사위원회,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9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힘. 합격자에게 요구했던 학적부, 성적부 등 학력 관련 자료도 일절 받지 않기로 함

**【17일】** 서울행정법원,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에서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민간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아래 두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냄

**【19일】** 한·일 협정 관련문서의 공개로 피해 배상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히로시마 고등 법원이 2차대전 때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들의 피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19일】** 교육방송·교육인적자원부, 올해 3월부터 <교육방송> 수능강의를 개인정보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발표

**【20일】**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과 관련해 기존에 공산주의자로 규정돼 있던 서훈 제외자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주력했거나 적극 동조한 자”로 최근 개정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그동안 좌익계열이라는 이유로 서훈이 보류됐던 몽양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 113명에 대한 서훈이 추서될 수 있는 길이 열림

**【23일】** 정부, 오래되어 시설이 낡은 학교, 군인아파트, 낡은 하수도 등을 민자 유치를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로 결정

**【23일】** 문화재청장, 경복궁 1차 복원사업의 하나로 광복절 때 정조 글씨를 따서 모은 새 광화문 현판을 바꿔 걸기로 확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 구 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한글 현판임

**【25일】** 교육인적자원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고교에 남아 있는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2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2006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 2

## 2005

### 정 치

**【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총리 소속의 국민고충 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행정옴부즈맨으로 바꾸는 내용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

**【2일】** 광복 60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행사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국무총리 산하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3일】** 민주당 새 대표에 한화갑 의원 선출

**【4일】** 국방부, 『2004 국방백서』 발간. 북한 주적 표현 삭제

**【6일】** 노 대통령, 설 귀향길 메시지에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물가와 집값 때문에 서민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함

**【6일】** 청와대,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이달 말 신설하기로 결정

**【12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 북한의 6자 회담 불참 선언과 관련해 남북 교류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14일】** 국방부, 재검토하기로 했던 2조 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기(E-X) 도입 사업을 재추진키로

#### 결정

**【16일】** 포터 고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추구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체제 생존에 있다고 증언

**【17일】** 청와대,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복수후보 공개

**【18일】** 노 대통령, 전국 공무원들에게 정부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냄

**【18일】** 국방부, 기동형 헬기를 우선적으로 생산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국회와 정부 승인을 거친 뒤 9월까지 국내외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초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

**【22일】** 노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홍보가 빠진 정책은 완결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홍보 관리의 중요성 강조

**【23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 회담 복귀 촉구

**【24일】** 여야 행정도시 정부 이전기관 12부 4처 2청으로 합의

**【25일】** 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국회 국정연설에서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의 역할분담 호소. 정치인들에게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역

주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경제 부문에선 “선진 경제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정보기술,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힘.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언론인들에게는 “선진 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더 변해야 한다”고 강조

**[26일]** 2004년 8월 이라크 에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 1진 병력 2천 명 가운데 300여 명, 전세계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환

## 통일 · 외교 · 안보

**[5일]** 노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 회담 조속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10일]** 북한, 핵보유 선언과 더불어 6자 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

**[14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등과 만나 북핵 제어방안 논의

**[14일]** 미국, 6자 회담 미국 측 대표로 크리스토퍼 힐 주미대사 임명

**[16일]** 송민순 외교차관보 방중. 북핵문제 긴급 협의

**[19일]** 북한,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이제 미국과 1 대 1 양자회담을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힘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에서 6자 회담 조건부 복귀 시사

**[2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구두 친서와 연료 공급 증대 등 6자 회담 참여 시 중국이 제공할 조건을 전달

**[2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현 의회에 상정.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논평을 내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조례안의 즉각 폐기 촉구

**[24일]** 외교통상부,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과 관련 우리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공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

**[26일]** 한·미·일 3국 6자 회담 수석대표 서울에서 6자 회담 재개와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협의, 북한의 조속한 6자 회담 복귀 촉구

**[27일]** 중국의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와 <중국청년보>, 서울을 그동안 써 왔던 ‘한청(漢城)’ 대신 ‘서우얼(首爾)’로 표기하기 시작

**[28일]**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로 규정

## 경 제

**[2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제도 개선안 발표. 개성공단 등 북한 특구지역 소재 자산도 정규 담보로 인정되며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투자할 때에도 정부로부터 장기저리의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됨

**[2일]**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분야 규제 개선방안 확정.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비자로 3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항공사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 시행

**[10일]** 농림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도움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 6조 원으로 상향. 결합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엔 1년간 적용을 유예기로 결정

**[16일]** 교토의정서 발효. 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섬

**[17일]**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 보유외

환이 2천억 달러를 넘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 대만, 한국 등 4개국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고작 39억 달러

**【18일】** 주식시장 시가총액 사상 처음으로 500조 돌파

**【20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6천m급 심해탐사를 위한 무인 잠수정 개발. 11월 동해에서 시운전

**【22일】** 한국은행 쪽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발언으로 세계 주요 외환시장이 요동쳤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2일 일제히 보도. 이들 외신은 한국은행이 보유 외환을 기존의 달러 중심에서 다양한 통화로 바꾸겠다는 국회 보고 소식에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고 전함.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위상 확인

**【23일】** 금융감독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빼내 국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기업과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 또 이 과정에서 불법 국외 송금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은행 점포와 직원들도 대거 제재하기로 결정

**【24일】**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무인 위성관제소 가동

**【28일】** 종합주가지수 증가 기준으로 1000 돌파

**【28일】** 농림부, 식량안보를 위해 쌀 600만 석을 시가로 구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쌀의 목표 가격과 산지 가격의 차이를 메워 주는 소득보전율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 사회·문화

**【2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 당시 병적기록을 보여주는 문서 공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임시군인군속계(臨時軍人軍屬屆)'에 따르면 일제시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로 창씨개명한 박 전 대통령은 1940년 4월 1일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 입학. 문서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1942년 10월 1일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뒤 1944년 12월 23일 보병 소위로 임관해 1945년 3

월 만주국 육군 보병 제8단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음

**【3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 KAL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정수장학회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등 우선 조사대상 사건 7건을 선정 발표

**【3일】**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정

**【3일】** 정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구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3개월간 실시하고 조사에 필요할 경우 공사를 일시적·부분적으로 중단하기로 함. 지울 스님 100일 만에 단식 중단

**【4일】** 법원, 환경단체 등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농림부 장관이 2001년 5월 원고들의 사업계획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4일】**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추진준비위원회, 협약 초안을 공개하고 반부패투명사회협약 국민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협약 확산에 노력하기로 함의.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6일】** 정부 새만금사업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

**【11일】** 국방부, 2004년 자살한 장병은 모두 66명으로 집계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정부안을 확정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청사진을 만들어 새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14일】**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하기로 결정. 식품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1일】** 농림부,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 【22일】** 정부 국무회의, 몽양 여운형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서훈 확정
- 【23일】** 국가인권위, 경찰의 밤샘조사에 대해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에도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과 휴식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 등이 포함된 밤샘조사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
- 【24일】** 교육인적자원부, 일정한 교육 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
- 【25일】**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언론사 소유지분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
- 【27일】** 정병준 목포대 교수, 2차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1951년 9월 8일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영국 정부의 지도 발굴

## 정 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안 등 통과

**【2일】** 노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해와 포용”이라며 “나와 뜻이 다르거나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대통령은 “과거에는 인권을 위해 투쟁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없으며, 명실공히 국민이 다스리는 국민주권시대”라고 말하며 “규칙으로 선거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패자는 다음 심판의 시기에 다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도리”라고 강조

**【3일】**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

**【7일】**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인한 국정부담 등의 이유로 사퇴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 대통령에게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 보고, 수도권을 동북아경제 중심 권역으로 키우는 동시에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 관리’에 초점을 맞춤

**【8일】** 노 대통령,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 국방을 위한 역량 강화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 등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밝힘.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참여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의사에 반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함

**【13일】**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범정부 대책반 구성

**【1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한덕수 임명

**【15일】** 한덕수 부총리, 취임사에서 “선진국가로 가는 개방 일정을 지속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탈락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와 보호를 정책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1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의 본부-팀제 조직 개편안 의결. 1948년 정부수립 뒤 이어져 온 연공서열의 공무원 사회를 통째로 뒤엎는 대

대적인 조직 개편

**【18일】**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공포

**【22일】** 노 대통령, 3사 졸업식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는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

**【24일】** 행정자치부, 팀제 도입 뒤 처음 벌인 본부장·팀장 인사에서 국·과장 7명을 무보직으로 발령하고 계장 6명을 팀장으로 발탁하는 서열 파괴 인사를 단행

**【25일】** 열린우리당 김맹곤, 이철우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당, 원내 과반 의석 무너짐

**【2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과 처제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휘말려 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28일】** 통일부, 북한이 27일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조류독감 발생 사실을 밝힘에 따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제기관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북쪽에 피해상황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되 북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약품과 장비를 지원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및 관계 국가와 협력한다 등 3단계 대처방안 발표

**【30일】** 정부와 14개 시·도지사, 이해찬 국무총리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통일 · 외교 · 안보**

**【1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부장 방한, 정부와 북핵의견 조율. 6자 회담 조기 재개방안 협의

**【1일】** 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을 비롯한 사과·반성·배상·화해의 한·일 과거사 4단계 해법 제시

**【2일】** 북한, 외무성 비망록 통해 조건과 명분 되면 6자 회담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힘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찰 재개 허용과 6자 회담 복귀 등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 채택

**【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

**【3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부장,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대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 북핵 해법 등 논의

**【4일】** 외교통상부, 독도문제와 관련해 3월 11~13일 추진하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 무기한 연기

**【6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정보의 질에 의문 표시, 미국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 촉구

**【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국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일관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며, 정부는 국토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9일】** 리언 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포동 2호나 그보다 큰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1~2개를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8천 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이것은 가장 최신의 정보기관 평가”라고 밝힘

**【10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 위원 대부분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총무위는 이날 8 대 1 찬성 다수로 조례안 가결

**【10일】**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페렌치 듀르차니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수교 16돌을 맞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 관계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11일]** 일본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한 2005년도 <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사 발행)가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등 식민 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왜곡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드러남

**[15일]** 정부, 서울에서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위한 5차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한국의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 수준보다 감축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데 합의

**[16일]** 조제프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

**[16일]** 북한 외무성,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6차 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16일]** 정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기 촉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가시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독도 방문 등 일반인의 접근 확대에 초점을 맞춤

**[17일]** 정부, △독도 영유권 확고히 수호 △시대착오적 역사왜곡 바로잡기 △일제 피해자 해결 노력 △일본의 국제사회 움직임 주시 △동북아 평화 동반자 관계 지속 등의 대일 정책의 방향과 지침을 4개 기초와 5개 대응방안으로 정리해 ‘한·일관계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성명문’ 발표

**[20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과 북한의 조속한 6차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기존 방침 재확인

**[20일]**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예방

**[20일]** 리빈 주한 중국대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와 과거사 왜곡 등에 대해 “일본은 항상 가해자로서 역사를 똑바로 인식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할 것이 있으면 하고 주변국인 한국, 중국, 동남아 나라들의 양해를 구해야 진정한 경제대국, 정치대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신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함

**[21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이 6차 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23일]** 노무현 대통령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제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하지 않겠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힘

**[2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확한 선택이며, 중국은 앞으로 계속 대화를 권하고 촉진시켜 각국과 공동 노력을 통해 6차 회담을 회복하는 데 건설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함

**[25일]** 고이즈미 총리, 가까운 시일 안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힘

**[25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한·일 외무장관 회담 등 외교 채널을 모두 열어 놓겠다” 발인. 한·일 외교 갈등 해소 조짐 보임

**[25일]** <아사히신문>, 노 대통령이 시마네현의 조례와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며 ‘조용한 외교’ 정책을 바꾼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그러나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표현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가볍게 보아 넘기려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신문은 또, 노 대통령이 지난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 비판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 역사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후 고이즈미 총리나 일본 정부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지적

**[26일]** 에번스 미 의원, 미국 하원의원 14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7일]** 노 대통령, 한·일관계를 언급하면서, “한

## 경 제

반도 미래를 보면 동북아 평화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당장의 외교적 성과보다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 될지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노 대통령,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서) 특별한 제안이 없으면 예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함

**[27일]**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관의 아가와 나오유키 공보 공사, 25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 정부는 이에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를 신설하기로 결정

**[28일]** 남북한 불교계, 러·일전쟁 때 일본에 약탈당한 뒤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온 임진왜란 승전비인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아 원래 있던 자리인 함경북도 길주군에 복원하기로 합의

**[29일]**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혀 파문

**[3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의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

**[31일]** 북한 외무성,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 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균축회담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

**[31일]** 정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돌입. 김삼훈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기자들과 만나 “주변국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구실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세를 형성함

**[4일]** 청와대, 대체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경내 비서동 건물 가운데 하나인 여민3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일]** 한국전력 개성공단에 시험전력 송전. 57년 만에 남북한 전기가 다시 연결됨

**[8일]** 손목시계 제조업체 로만손, 개성공단에 8일 공장 착공식. 5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5억 8천만 원을 개성공단 공장에 투자

**[8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국내 19개 신문사의 지국 5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감. 또 4월부터 시행되는 신문판매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 최대 50배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

**[10일]** 관세청,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표시를 붙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성 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 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시행

**[17일]**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민으로 향한 중인 조셉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콩고 경제재건 및 자원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

**[18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등 경제협력 사안은 독도 문제와 관계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23일]**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210만 평과 주변지역 6,780만 평을 확정 발표

**[25일]** 한국통신, 개성공단 전화번호 확정.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전화를 할 때는 ‘089-남쪽 국내번호’로, 남쪽에서 개성공단으로 할 때는 ‘001-8585’에 이어 개성공단에 설치된 전화에 부여된 4자리 숫자를 누르면 통화가 가능해짐

**[27일]** 외교통상부, 한·미 통상 현안 점검회의에

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힘

**[28일]** 방송위원회, 지상파 디엠비(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에스비에스>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 세 곳, 비지상파 텔레비전 사업군에서는 <와이티엔디엠비> <케이엠엠비> <한국디엠비> 등 세 곳을 각각 선정

**[30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2007년까지 유럽연합(EU) 등 최대 50개국과 자유무역협상 진행하기로. 우선적으로 일본,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고 멕시코, 러시아, 중국 등과는 협상 추진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2005년 안에 23개국과 협상을 벌이거나 협상을 타진할 계획

### 사회 · 문화

**[4일]** 6·15 공동선언 5돌을 맞아 통일행사 계획을 논의할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금강산에서 공식 출범

**[6일]** 교육인적자원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해 역사 관련 학회와 기관 대표, 교수, 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교과서 분석팀을 꾸려 장·단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7일]** 북한 거주 여운형 선생 친딸, “우리 아버지를 제멋대로 평가하면서 혼장을 주려 하는 것은 당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건국훈장 대통령장 거부

**[11일]**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소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 촉구 및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노동기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20일]** 전국 곳곳에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

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름

**[23일]** 일본이 한국이 전쟁의 혼란에 빠져 있던 틈을 타 독도 분쟁을 처음으로 일으킨 사실이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를 통해 확인

**[28일]** 건설교통부, ‘신도시 계획기준’ 준비. 향후 개발되는 100만 평 이상의 새도시에는 납골당,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생활에 필요한 혐오시설 설치 의무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

**[28일]** 이혜찬 국무총리,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계층”이라며 “필수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

**[30일]** 저소득층엔 무료 암검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 대상을 연인원 1,34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직장의료보험 4만 원, 지역의료보험 5만 5천 원 이하면 무료 검진 대상

## 정 치

**【1일】** 노 대통령, 행자부 장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변화는 세계 일류 정부의 기준으로 볼 때 늦다”며 “지금의 정부 경쟁력 36위로는 안 되며 최소한 세계 10위에 들어가도록 하자”고 말함

**【1일】** 행자부 업무보고,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자치부와 같은 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도 추진

**【2일】** 열린우리당 새 의장에 문희상 의원 선출

**【4일】** 노 대통령,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에 추병직 차관 임명

**【4일】** 한나라당, 대통령 측근 및 권력 핵심인사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 제출

**【6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하기로 함

**【7일】**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 59명,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

**【10일】** 노 대통령, 독일과 터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

**【11일】** 북한, 조류독감 퇴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지원 문제를 협의할 실무협의를 오는 20~22일 사이에 열자고 공식 제안. 2004년 7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재개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3차 회의가 평양에서 열림. 이른바 ‘주공전선’으로 선포한 농업 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29.1% 늘리기로 결정

**【13일】** 법무부의 민간 감찰위원회, 첫 회의에서 사건 무마 혐의로 감찰을 받아 온 한 일선 지검장의 보직 변경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힘

**【16일】** 터키를 방문 중인 노 대통령, 동포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국민인데, 상당히 유식한 한국 국민인데, 말하는 걸 보면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내게는 제일 힘들다”며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

**【19일】**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이른바 ‘안보 장사’를 하던 언론이 이제 한·미동맹을 흔들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새로운 안보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하며 불안감 조성하는 언론 비판

**[19일]** 노 대통령,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해 “야당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요구하면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

**[21일]** 노 대통령,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과거의 기득권을 바꾸고,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며 검찰 비판.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라고 제안

**[26일]** 국회 본회의, 고위 공직자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9건의 안건 처리. 여야가 합의했던 과거사법은 처리 무산

**[27일]** 청와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종합판해설서』 발간

**[27일]** 국정홍보처, 정부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힘. 각 부처의 실무자가 언론보도를 △진전비판 △정책참고 보도 △오보 △문제제성 보도 등 네 종류로 분류해 내부 인터넷망에 올리면, 국무조정실과 국정홍보처가 이에 대한 대응을 종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28일]**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에 대한 3차원 영상 지도를 제작해 배포

**[30일]** 4·30 재보궐선거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해 미국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핵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편견에 사로잡힌

적개심이라고 강하게 비판

**[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망. 노 대통령, 교황청에 조전을 보내는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조문단 파견

**[7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일본 외상에게 “일본 공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추가된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관련 기술을 삭제할 것을 거듭 요구

**[7일]**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뼈대로 한 개혁안 처리의 시한을 설정하는 데 반대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의 연내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이 상당한 타격을 받음

**[8일]** 일본 방위청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실험 이듬해인 1994년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8일]** 노 대통령, 독일 방문에 앞서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태도는 인류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라고 밝힘

**[11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제3차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의제로 공식 상정

**[12일]** 독일 순방 중인 노 대통령, 독일 연방 하원 인사들을 위해 연 만찬에서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방식을 존경한다”고 말해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 대통령은 “독일은 종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또한 이웃 나라들과 협의를 거쳐 편찬하고 있다”며 “독일의 이런 노력이 주변국과 화해를 이뤄 냈다”고 독일의 과거청산 노력을 칭찬

**[13일]** 노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맞게 고치는 첫 관문이 있고, 독일이 상임이사국으로 선택되는

두번째 관문이 있다”며 “한국은 첫 관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 하지만, 독일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 두번째 관문에서는 돕겠다”고 밝힘

**【14일】**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정부는 미리 밝힌 대로 기권

**【18일】** 노 대통령, 8박 9일 동안의 독일과 터키 방문을 마치고 귀국. 이로써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영국, 폴란드, 프랑스 방문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유럽연합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마무리

**【18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05’ 내용에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를 한미연합사가 받아들여 작전계획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18일】** 북한, 영변 5mw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추출을 의미하는 연료봉 제거 작업에 들어감. 핵무기를 늘리겠다는 북한의 공언이 현실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짐

**【18일】**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힘. 미국의 북핵 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대한 첫 언급

**【20일】** 노 대통령, 주바티칸 한국대사관을 통해 새 교황에 선출된 베네딕토 16세에게 축하 전보를 보냄. 축전에는 축하 뜻과 함께 인종 및 국경을 초월해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가져다줄 것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김

**【2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불거진 동북아 역사 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공식 출범

**【22일】** 이혜찬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대한 반성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며, 또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22일】** 리언 러포트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

군 사령관, 22일 한·미동맹 ‘이상설’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가 균열되거나 약화되지 않았다”고 주장

**【22일】** 아시아·아프리카 정상들이 비동맹운동과 제3세계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반동회의’ 50돌을 기념해 인도네시아에 다시 모여 반동정신의 21세기적 의미를 되새기는 정상회의 개최

**【25일】** 북한 외무성, 미국이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을 밝힘

**【28일】** 미국 정부, 북한을 비롯해 이란, 쿠바,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6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지난해까지 포함돼 있던 이라크 제외

**【2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6자 회담에 대해 “얼마나 지속할지는 우리들(북한을 뺀 회담 참가국들)의 합의에 달렸다”며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는 참가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위험한 인물’ ‘폭군’이라고 표현

**【29일】** 렌잔 대만 국민당 주석과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륙·대만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을 촉진하기로 합의. 양안문제 청신호

## 경 제

**【1일】** 3개 수도권 단체장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들, 각 지역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도지사 특별선언’을 공동으로 발표

**【4일】**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안의 공항물류단지 30만 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 평 등 모두 63만 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6일】** 노동부,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안’ 발표.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한편 취업을 지원하는 ‘웬스톱 서비스’, 취약 노동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등 정부의 고용안정 관련 서비스 대폭 혁신

**【7일】**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러시아 쪽에 지급한 인수 계약금 62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310만 달러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

**【11일】** 재정경제부,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2년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12일】**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은 “철도청이 편법·줄속으로 유전사업을 추진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짓고, 당시 철도청장인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

**【13일】** 경기도, 평양시 외곽 시범경지에 남북 공동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합의. 지자체의 남북 교류는 2004년 전라북도에도 이어 이번이 두번째

**【14일】** 노 대통령, 국내 정계 및 재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론’과 관련해 “정상적 영업이익은 많건 적건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정부는 국부 유출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

**【14일】** 터키를 방문 중인 노 대통령, 아메트 네지데트 세제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하반기 터키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보내 줄 것을 약속. 터키 대통령은 이에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 자이툰 부대가 파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터키 쪽에서 변함없이 지원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

**【18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크기를 줄이고 색깔도 바꾼 새 5천원권 지폐를 내년 상반기에 발행한다고 발표. 1천원, 1만원권도 순차적으로 교체

**【18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진행 중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부조사와 관련해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논평 발표

**【19일】**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 사이 자율계약을 전제로 위성이동 멀티미디어방송(디엠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

## 사회·문화

**【3일】** 이해찬 총리, 제주도서 열린 4·3위령제에 참석해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과거 정부들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르게 밝혀 내 공적은 더욱 높이고 잘못은 분명히 사죄하면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

**【4일】** 교육인적자원부, 일부 의·치의학 대학의 부정 학위 수여와 관련해, 전국 63개의 의·치의·한의학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4일】** 강원도에 큰 산불. 낙산사 전소.

**【5일】** 정부, 산불이 난 강원도 일대에 ‘재난사태’ 선포.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

**【5일】** 미국,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의 혈청형을 파악하고 인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실험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

**【7일】** 정부, 큰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강원도 양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주민들에게 특별위로금이 제공되는 한편 △인력과 장비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수도 등의 복구 지원 △용자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짐

**【7일】** 교육인적자원부, 지난해 9월부터 대구·광주·경북교육청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초·중학생 대상의 방과후 온라인 자율학습 체제인 ‘사이버 가정학습’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

**【8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기검사’에 대한 유용성 놓고 사회적 논쟁

**【8일】** 북한 국가수의방역위원회, 남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조류독감 퇴

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제공해 줄 것을 남쪽에 공식 요청

**【11일】** 강만길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장, “광복 60돌 기념사업의 하나로 남북이 공동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12일】** 국가인권위, 경찰청·소방방재청·법무부·건설교통부에 ‘키와 몸무게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의 폐지를 권고

**【14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 한국의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을 소개하면서 “남한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자였던 김일성의 과거 항일운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도. <르몽드>는 ‘남한, 슬픔과 연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제 식민지 수탈, 4·3 제주 민중항쟁, 이승만 및 박정희 독재정치 등 한국의 과거사 질곡과 최근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적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15일】** 산업자원부, 군산·경주·영덕 등 세 곳의 자치단체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터 적합성 조사를 희망함에 따라 터 적합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힘. 산자부는 △고준위인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 분리 처리 △방폐장 유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에 의한 방폐장 유지 여부 최종 결정 등 지난번 부안사태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조건에 힘입어 자발적 적합성 조사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

**【18일】**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철도공사 사무실 등 12곳에 대해 압수수색 벌임

**【22일】** 보건복지부, 고질적인 건강복지제도 민원 30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육아휴직 기간 중엔 실제 받는 보상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소액의 공적연금을 받은 사람이 경로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정 치

**【3일】** 노 대통령,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혁신 토론회에서 “공무원이 공기업에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어 놓고 외부 인사 채용하면 개혁 잘했다고 한다”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냐. 공무원은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공무원들이 증명하라”고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

**【3일】** 국회 본회의, 과거사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4개 안건 처리.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꾸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신고도 가능. 소득세법 개선으로 알선수재, 배임수재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취득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과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과정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며 “북한은 타당성 없는 주장에 계속 매달리지 말고 하루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

**【4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소법 개정안을 전면 부정하고 사개추위와 절충을 시도했던 김승규 법무부 장관까지 비판

**【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검찰 쪽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형소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

**【9일】** 당정,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에 견줘 10% 가량 늘리는 등 앞으로 5년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연평균 9~1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들에 휩쓸려 정부 정책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함

**【11일】** 정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예정지역 2,212만 평(73.14㎢)과 주변지역 6,769만 평(223.77㎢)의 규모를 최종 확정해 발표

**【11일】** 당정, 5년 동안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세 차례의 당정 협의를 모두 마침. 복지 및 국방 분야의 예산 지출을 9~10% 수준으로 크게 늘리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는 2% 이하로 억제하는 게 핵심. ‘성장’ 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철학이 담긴 셈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의 핵 포기과 미국의 북 체제 안전보장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

**【12일】** 국회 의사국, 4일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

을 정부에 이송.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음

**【13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미국 언론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로 지목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의 상황에 대해 “지하갱도는 있다. 그러나 아직 핵실험의 징후는 없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힘

**【15일】** 노 대통령, 강금원·이학수 삼성 부회장·강유식 엘지 부회장·김동진 현대차 부회장·박찬범 금호아시아나 사장·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성완중 경남기업 회장·임승남 롯데건설 전 사장·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김영춘 서해중건 회장 등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단행

**【15일】** 노 대통령, 석가탄신일을 맞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며 “상대를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힘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 △국민참여 재판 시행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등 3개의 사법제도 개혁안 의결

**【16일】** 정부,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 차관급 회담 진행. 10개월 만에 남북 당국 간 대화

**【18일】** 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25주년을 맞아 광주 국립 5·18묘지에서 치른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가 국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주체로 등장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며 “198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한 시민사회가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

**【19일】** 남북,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에서 6·15 공동행사에 남쪽에서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제15차 장관급회담을 6월 21~24일 서울에서 재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 발표

**【20일】** 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함

**【25일】** 정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46곳 중 한전과 대한주택공사 등 177곳을 이전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

**【27일】** 정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제로 서울·인천·경기·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 지사 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를 지방으로 옮기되 한전 본사에 자회사 등 산업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을 묶어 이전하기로 확정 발표

**【30일】** 안상수 인천시장, 북한에서 제공한 고려항공기를 이용해 평양 방문. 광역단체장이 북쪽 항공기로 방북하기는 이번이 처음

**【31일】**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며 “동북아 정세 전체를 살펴며 향후 방향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함

**【31일】** 러일전쟁(1904년) 발발부터 해방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될 대통령 소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출범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북한 외무성,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험한 사람’ ‘폭군’으로 지칭한 데 대해 부시 대통령을 ‘불망나니’라고 비난. 부시 대통령의 집권기간에는 핵문제 해결이나 북·미 관계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2일】** 리언 러포트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선제 공격할 계획은 없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말함

**[5일]** 북한, 북핵 6자 회담의 복귀 조건으로 6자 회담과 별개의 북·미 양자 회담을 개최할 것과 북한의 주권국가 인정 등 2개 항을 요구

**[5일]**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6자 회담과 별개의 북·미 양자 회담 개최 및 주권국가 인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두 조건 모두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

**[5일]** 러 하원의원들, 대화 촉구 위해 평양 방문. 이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자세는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6일]** 노 대통령,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의 새로운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과거에 행한 사죄와 반성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 달라라는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다케베 쓰토무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후유시바 데쓰조 공명당 간사장 등 연립여당 간사장들을 만나 “지난 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불안하나마 균형점을 갖고 유지되어 왔으나, 참여정부 출범 뒤 일본 쪽이 야기한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압초에 걸려 어려워지게 되었다”며 “이 압초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양국 관계는 또다시 압초에 걸리게 돼 있다”고 밝힘

**[7일]** 한·중·일 3국 외무장관, 일본에서 한·중·일 3자 위원회를 열어 중국 쪽이 제안한 3국 역사 공동연구 방안을 세 나라 실무진이 검토하기로 결정

**[8일]** 한·중 정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과 관련한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조속한 6자 회담 복귀를 촉구. 두 정상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 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지체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9일]** 조지프 바이든과 갈 레빈 의원 등 미 민주당의 상원 중진의원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

재의 6자 회담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

**[9일]** 노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새로운 상임이사국을 선출하려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아시아를 대표해서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아시아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결격사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

**[9일]** 2차대전 전승 60돌 기념관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노 대통령,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두 나라 사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1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주권국임을 인정한다”고 발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6자 회담 틀 안에서 협상을 해 왔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계속 말해 왔다”고 거듭 밝힘

**[11일]** 북한 외무성, “영변 원자력발전소에서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이 끝났다”고 밝힘

●정부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과 관련해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상황 악화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 6자 회담 관련국들의 회담 재개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힘

**[12일]** 노 대통령, 4박 5일간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귀국

**[12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한은 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기아, 강제노동수용소를 갖고 있는 점에서 형편없는 체제”라며 “우리는 그곳에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할.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다”며 북핵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점을 함께 강조

**[13일]** 미국,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를 방문하고 북한과 직접 접촉

**【21일】** 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북한 핵 개발 저지 압력을 강화하도록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지난 13일 미국 뉴욕 북·미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는 미국 쪽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때가 되면 우리의 입장을 뉴욕 접촉선을 통해 미국 쪽에 공식 전달하게 될 것”이라 밝힘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도쿄대 동북아연구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침략의 정당화”라며 강력하게 비판

**【24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북핵 6자 회담과 관련해 “최근 며칠 사이에 북·미 양쪽이 적극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것은 양쪽이 대화와 담판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증거로 본다”고 말함

**【27일】** 한국과 유엔이 공동 주최한 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참여와 투명성을 지향하는 국정관리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나흘 동안 일정을 모두 마침

**【29일】** 프랑스, 유럽연합(EU) 헌법 부결

## 경 제

**【5일】** 통일부, 남북관계 소강 상황에도 사회분야 교류와 남북 협력사업은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92.4%가 증가했으며, 2005년 1사분기에만 11개사가 남북교류협력 기업으로 승인됨

**【8일】** 외환위기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국의 위기를 경고한 것으로 드러남.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이라는 회고록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주일 뒤면 한국이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일하고 현실적인 길은 사흘 안에 국제통

화기금과의 합의를 통해 신뢰 회복에 필요한 경제·재정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힘

**【10일】** 노 대통령,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 “한국의 경우 한때 외국 자본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외국 자본이 투자하게 되면 많은 기회와 일자리가 생겨나고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법이 도입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힘

**【10일】** 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영빈관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사이를 일반적 경제·통상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16일】** 노 대통령, 기업인들과 참석한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생협력의 이미지가 구축되면 재벌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고, 정부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시내전화 요금과 피시방 전용회선 요금을 째짜미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에 각각 1,159억 7천만 원,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또 피시방 전용회선 담합에만 가세한 데이콤에는 14억 천만 원을 부과

**【26일】** 재정경제부,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내년부터 같은 금융회사에서 하루에 5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거래 내역이 당국에 보고됨

## 사회·문화

**【1일】** 산악인 박영석 씨가 1일 새벽 4시 45분(한국 시각) 북위 90도의 북극점을 밟는 데 성공. 이로써 박 씨는 세계 최초로 지구 세 극점(남극점·북극

점·에베레스트 정상), 히말라야 8천m 이상 14좌,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르는 '산악 그랜드슬램' 완성

**[9일]** 일본 정부, 2차세계대전 때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 가운데 일본 기업에서 안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0여 기를 한국 쪽에 우선 반환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11일]** 북한 작가 홍석중(64) 씨의 장편소설 『황진이』를 남쪽 영화사에서 영화화하기로 양쪽이 합의. 또한 홍석중 씨의 조부인 벽초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궏정』을 낸 남쪽의 사계절출판사 역시 저작권자인 홍석중 씨와 『임궏정』 출간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에 합의. 이는 남북의 첫 저작권 계약

**[13일]** 노 대통령,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32만 명에게 편지.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정책의 교육 근간을 지켜 가겠다는 의지 밝힘. 대통령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법을 찾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17일]** 미국 언론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989년에 비해 긍정적 인식은 43%에서 57%로 늘어난 반면, 부정적 인식은 52%에서 19%로 33%나 줄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를 주도한 이성형 애팔래치아주립대 교수는 “군사정부 퇴장, 한국의 개방·자유화, 집회·시위 축소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19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 핵이식 방식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논문 게재

**[21일]** 법무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비난해 온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에게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벌금을 물리고 '추방령'을 내림

**[22일]** 남쪽이 지원하는 비료를 수송하기 위해 북

쪽 항구를 출발한 백두산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울산항에 들어옴. 북쪽 화물선의 남쪽 항구 입항은 1984년 9월 말 남쪽 수재민을 돕기 위해 쌀과 시멘트 등 구호물자를 싣고 인천항과 북평항(동해항)에 들어온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짐

**[24일]** 국가인권위원회, 11개 국립대의 정보시스템 운용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개인정보가 미흡한 경북·부산·서울·서울시립·전북·제주·충남·충북대 등 8개 대학에 시정권고 조치

**[24일]**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새 국적법 시행,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 1,692명으로 잠정 집계

**[26일]** 한·중·일 공동역사편찬위원회, 4년간의 집필 끝에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 출간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 심문 받을 때 포승과 수갑 등 계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

**[27일]** 행정자치부,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윗옷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와이셔츠나 니트웨어, 티셔츠를 입을 수 있으며, 바지도 정장바지뿐 아니라 면바지를 입어도 됨

**[29일]** 일본 시민단체, 도쿄에서 한·중·일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이 함께 만든 공동 역사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 출판을 기념하는 심포지엄 개최

**[29일]** 세계신문협회(WAN) 서울 총회 개막. '혁신을 통한 기회포착, 성공의 열쇠'를 주제로 6월 1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80여 나라 1,500여 신문 발행인과 편집인 등이 참가

## 정 치

**【2일】** 임대소득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 헌법재판관이 도덕성 문제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헌법재판소 설치 뒤 처음

**【2일】** 검찰, 유전개발 의혹 수사 중간발표. 각종 의혹에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며 이광재 의원에 대한 내사 중지 결정

**【4일】** 노 대통령,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식'에서 "우리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국토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힘

**【6일】** 노 대통령,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공동체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제3차 제주평화포럼에서 "북한이 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의 안전과 번영,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13일】** 노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5돌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제 남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랬을 때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도 더욱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미 밝힌 것처럼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대통령이 발언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북·미 수교를 뜻한다'고 언급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해외대표단, 공동선언 발표일을 공동 기념일로 정하고 6·15 공동위원회를 통일애국운동 기구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5개 항의 민족통일 선언문 발표

**【15일】** 수도권이전반대 시민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대전·충남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미국과 협의를 거쳐 7월 중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함. 또 남북 장성급회담을 재개하는 것과 함께, 남쪽이 지난달 개성 차관

급회담에서 제의했던 8·15 11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도 동의

**【18일】** 노 대통령, 정동영 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보고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긴 시간 성의 있게 대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좋은 징조”라며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함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 “6자 회담 참석이 문제가 되면 북한이 불리해지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크고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촉구

**【22일】**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11차 8·15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및 광복 60돌 기념 고위급 당국 대표단의 서울 방문 △장성급회담 재개 △북관대첩비 반환 및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조사 및 발굴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문제 등 논의

**【23일】** 노 대통령, 권호웅 북한 내각참사를 비롯한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일행과 청와대에서 면담.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유의하며, 이른 시일 안에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후 김정일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할 것을 당부. 북측 인사가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24일】**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폐막. 이산가족 화상 상봉, 면회소 설치, 국군포로 생사 확인 등 12개 사안에 대해 진전된 합의 도출

**【24일】**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76곳의 지방 이전 확정. 한국전력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내려보내는 등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 계획 완성

**【28일】** 소록 개각. 신임 법무부 장관에 천정배, 신임 환경부 장관에 이재용 임명

**【2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6월 처리 무산

**【29일】** 정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포괄적·구체적 협력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실무 수준의 준비를 계획. 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과 백두산 관광 등 이른바 ‘7대 신동력 사업(철도 현대화,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공동 영농단지 개발, 공유하천 공동이용)’ 준비에 착수

**【29일】**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통일 · 외교 · 안보**

**【1일】** 우리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어선 신평호를 놓고 해상 대치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2일】** 정부, 일본 정부와 신평호 사태에 대해 외교 협상으로 마무리. 일본 측은 대치 중이던 순시정들을 철수하고, 한국 측은 신평호의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사실 및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기로 함의

**【3일】** 북한 외무성, “보도를 보면 미국 대통령 부시가 지난 5월 3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최고수뇌부(김 위원장)에 대해 ‘선생’이라고 존칭했다”며 “우리는 이에 유의한다”고 밝힘

**【3일】**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와 엄격한 사찰 수용에 대응해 대북 안전보장과 에너지 지원, 정치·경제적 혜택을 주는 일괄 타결이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

**【3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지금의 일본을 격정스럽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바른 역사인식을 갖기는커녕, 역사의 어두운 면을 지우려 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

**【4일】** 한·미 국방부 장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주최로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북한의 정권 붕괴 등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를 계속 보완·발전시키되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는 않기로 최종 합의

**[6일]** 리처드 홀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끝났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최근 한·미 간의 현안과 관련해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함

**[6일]** 북한, 미국 뉴욕의 유엔대표부에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

**[7일]**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 제49 전투비행단 소속 F-117A 나이트 호크 스텔스 전폭기 15대와 장병 250여 명이 지난 주 근산 공군기지에 배치 완료됐다고 밝힘

**[8일]** 백악관 매클렐런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6자 회담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내놓은 제안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은 6자 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시켰다. 그러나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는 없었다"고 말함

**[8일]** 노 대통령, 주한미군 고위장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한·미동맹 관계에 여러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피할 수 없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를 감당하는 동안 한·미 양국 군 지휘부 모두 매우 힘든 과정을 잘 겪어 냈고, 변화를 잘 관리했다"고 밝힘

**[9일]** 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11일]** 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 강조. 200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이견 없다고 밝힘

**[13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전물자를 추도하는 방법은 일본 스스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적절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지하라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

**[14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게 여전히 올바른 방향이고 최선의 정책"이라 확인하며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강조

**[1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북한이 (6자) 회담에 되돌아오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북한은 (회담장에서) 핵프로그램 폐기를 논의할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

**[20일]** 노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산하에 교과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 일본 총리는 논란을 빚어 온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제3의 추도시설 건립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긴밀히 협조한다는 데 뜻을 같이함

**[21일]** 미국 정부, 북한이 핵무기를 전략 폐기할 경우 미국 단독 또는 한국·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북 지원 패키지 제공 등의 '중요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밝힘

**[30일]** 미국 뉴욕에서 북핵 세미나 열림. 6자 회담 참가국 주요 관리 모두 참석. 북한은 이 세미나에서 6자 회담 복귀의사 밝힘

## 경 제

**[11일]** '동북아 협력과 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열린 제3차 제주평화포럼,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 촉진 △에너지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안이 쏟아지며 풍부한 논의를 마치고 폐막

**[14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귀국 및 체포. △(주)대우 등 네 계열사의 41조 원 분식회계 혐의 △

10조 원대의 사기대출 혐의 △25조 원대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에 대해 조사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해외로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

**【16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41조 원 분식회계와 10조 원 사기대출, 200억 달러 외환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21일】** 경제협력기구 2005년 회원국 농업정책 관찰·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업보호 수준은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4위인 것으로 나타남

**【24일】** 미국, 두번째 광우병 발견

**【26일】** 금강산 관광 방북자 10만 명 돌파. 1997년 1천 명, 2000년 7,280명, 2003년 1만 5,280명, 그리고 2005년 6월 10만 돌파

## 사회 · 문화

**【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6·15 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남쪽 대표단의 규모를 애초 합의한 숫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여 줄 것을 요청

**【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의 방북단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북한이 대규모 방북단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이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성의와 진정성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

**【5일】**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미국 캔자스시티 카우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메이저리그 데뷔 12년 만에 통산 100승 고지에 오름

**【6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5돌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남쪽 민간 대표단 규모를 애초 계획의 절반 이

하인 300명으로 하기로 북측과 잠정 합의

**【7일】** 금강산 관광사업 100만 명 관광객 돌파

**【7일】** 이해찬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은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아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선 이 점이,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7일】** 공안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았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대검찰청 공안부로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특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사 41명을 대상으로 노동운동 특강

**【9일】** 한국 축구대표팀, 난적 쿠웨이트를 4 - 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 본선 6회 연속 진출’ 확정

**【14일】** 6·15 남북 공동선언 5돌을 기념해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이 10만여 명의 평양시민들의 환호 속에 김일성종합경기장에서 개막. 남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40명의 대표단 파견

**【17일】**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난치병 환자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배양 관련 논문을 상징화한 그림이 <사이언스> 17일치 표지에 게재됨

**【23일】**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조직 개편.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가족이 있는 직장인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가족간호 휴가제와 아버지가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버지 휴가제 등의 새 가족정책 발표

**【23일】** 미국,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

**【24일】** ‘경계를 넘어서’란 주제로 열린 제9차 세계여성대회 폐막

**【25일】** 과학기술부, 황우석 서울대 교수를 연간 연구지원비 30억 원을 받는 ‘제1호 최고과학자’에 선정

**【25일】** 노 대통령, 노사협력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

협화자는 것”이라며 “타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쟁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지, 밤낮없이 밀도 끝도 없이 싸움만 하고 끝장 보자는 것이 투쟁은 아니다”라며 타협을 이뤄 내는 노동운동 강조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입원환자들의 식비가운데 80~90%에 건강보험 혜택 △3~4인용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암 등 10가지 중증질환군은 값비싼 항암제에도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합의

**【27일】** 1700년 전 백제인들이 유교 경전 『논어』의 내용을 옮겨 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간(글씨를 쓴 나무쪽) 발견

## 정 치

**【1일】** 노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북핵문제가 풀리면 정보기술(IT), 사회간접자본(SOC), 관광협력 등 남북의 동포가 서로 협력하며 양쪽 모두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분열한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무엇보다 남북 간 분열을 극복해야 하며 그 출발은 신뢰”라고 밝힌 뒤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하고, 작은 약속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5일】** 노 대통령,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야당과의 연정 문제 공개 제안. 대통령은 이 글에서 현행 권력구조가 안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성을 지적하고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된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정을 하며 여소야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연정 이야기

를 꺼내면 ‘야합’,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비난부터 하는데, 매수하고 협박하고 밀실 야합하는 공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들의 생각은 옛날 그 시절에 머물러 있어 비정상적”이라고 설명

**【6일】** 한나라·민주노동·민주 야 3당은 대통령의 권력구조 불균형 해소(연정) 발언을 애써 외면하며 경제 등 다른 문제를 핑계로 논의 거부

**【6일】** 노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 거부에 대해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로 문제 제기. 대통령은 글에서 “재미삼아 속셈을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구경꾼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내용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에 관한 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속셈’이니 ‘승부수’니 ‘스타일’이니 하는 이미지 이야기나 게임의 논리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움 표시.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며 “지금도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제안

**【11일】**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연정 제안)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경제'를, 민주노동당은 '이념'을 이유로 거부

**【12일】** 정부,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 건설 대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중대 제안 공개

**【12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서 한국 최대 함정인 1만 4천 톤 규모의 대형 수송함(LPD) '독도함'의 진수식이 열림.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로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 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고속상륙정 2척, 상륙군 720명 등을 실을 수 있음

**【17일】** 노 대통령, 제헌절 5부요인 초청 만찬에서 "입법부의 위상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라 전제하고 "입법부에 많은 문제가 남아 있으며, 개별 국회의원들도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기득권에 구속돼서 법 제도나 구조적 개선 등이 충분치 못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비판

**【19일】** 대북 직접송전 방식을 통한 전력지원을 뼈대로 하는 '중대 제안'의 실행준비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북 송전 추진기획단' 구성

**【20일】** 남북은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회담을 열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쪽 함정 간 무선통신을 원활히 하도록 다음 달 13일부터 통신연락소를 운영하기로 합의

**【21일】**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자신에게 축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재정 평통 수석부의장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는 추태를 보임

**【25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측생의 각오로 성역 없이 조사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힘

**【25일】** 노 대통령,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담은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

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임

**【25일】** 삼성과 중앙일보, 안기부 녹취록에 관련해 대국민 사과

**【28일】** 여론 독과점 기준 마련, 공공성 강화, 편집권의 보장 등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발효

**【28일】** 노 대통령, 그동안 몇 차례 밝혀 왔던 '연정론'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면 한나라당이 응할 리가 없을 것"이라며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힘

**【29일】**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엑스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 미림탐장 공운영 씨 집에서 불법도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120분 분량 녹음 테이프 274개와 각 200~300쪽 분량의 녹취 보고서 13권을 압수했다고 밝힘

**【29일】** 노 대통령, "연정, 대연정 하나가 대연정만 사람들이 받아들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고 말함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미국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 준수 의지 △핵을 포기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완전한 사찰 수용 △다자간 안전보장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 △장거리미사일 포기 등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설명

**【8일】** 정부, 영국 런던 도심의 연쇄 폭탄테러에 대한 성명 발표. “무고한 시민을 목표로 한 테러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간적인 잔혹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힘

**【9일】** 북한 <중앙텔레비전>, “6자 회담 단장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계관과 미 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2005년 7월 9일 베이징에서 만나 7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11일】**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 제4차 북핵 6자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겠다고 주장. 한 탈북자 단체는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

**【12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김 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목표”라며 “6자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12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 서울서 개최. 정부의 ‘중대 제안’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한·미 정상 회담 및 외무장관급 전략대화, 한국인 비자 면제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진행

**【12일】** 북한의 내각과 교육 관계자들이 11일과 12일 양일간 북한 주재 영국대사관을 찾아 영국의 폭발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시. 테러 반대 의지 보임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봉헌. 다만 ‘개인 자격’이라고 밝힘

**【19일】** 외교통상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6자 회담이 26일부터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를 위한 것”이라며 “군축, 인권, 납치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것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1년 남은) 임기 중에 북핵과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싶다고 밝힘

**【24일】** 4차 6자 회담 개막 이틀 앞두고 남북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25일】** 북·미, 회담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1시간 20분가량 양자 협의를 열어 각자의 입장을 타진. 북·미가 6자 회담 개막 전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26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조어대) 팡페이위안(방비원)에서 제4차 6자 회담 공식 개막. 북한과 미국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서로 촉구하며,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루자고 강조하는 등의 강한 협상 의지를 피력

**【27일】** 제4차 6자 회담 개막 이틀째. 북한은 기조 연설에서 핵 폐기에 대응한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에 의한 안전보장과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 제공’을 밝히는 등의 시각차를 보임. 한국 측 수석대표 송민순 차관보는 ‘말 대 말’, ‘행동 대 원칙’에 따라 상호 조율된 조치가 병행 또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북한의 핵 폐기 공약과 △다른 관계국들의 관계 정상화 및 안전보장, 경제 지원을 제시

**【28일】** 북·미, 28일과 29일 이틀간 양자 접촉을 벌였으나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함

**【28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라오스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제4차 6자 회담에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 경 제

**【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문제 삼은 삼성그룹 계열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냄

**【6일】** 문화관광부, '문화강국 2010' 육성 전략 보고. 문화부 장관은 "콘텐츠, 창의성(크리에이티비티), 문화(컬처) 등 3C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끌어 내고 지역불균형 및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2010년까지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총 매출 규모를 225조 원, 총 고용 규모를 383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힘. 이 전략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등 3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국제수준의 문화산업시장 육성 △문화산업 유통구조의 혁신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1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남북 경제협력의 상시적 상담 창구 및 기구로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오는 9월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달 열린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오는 25~27일 개성에서 열기로 함. 특히 이번 회담에선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쉬운 것부터 협의를 추진하며, 남쪽은 북에 경공업을 지원하고 북측은 남쪽에 자원개발을 제공하는 등 상호보완적 경협방식이 처음으로 제기됨. 이 회담으로 남북은 명실상부한 '상호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

**【11일】**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12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에프타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기구

**【15일】** 이해찬 국무총리, 인천항만공사 창립식에서 "이전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었으나 지금은 공동으로 사업하자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는 (북한에도) 경영 마인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사회주의로서는 큰 변화"라고 평가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개성과 백두산 등 북한 관광사업 확대 발전 운용키로

**【19일】** 통계청 조사 발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5월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20일】** 당정, 택지개발로 개발이익을 얻은 이들에게 도로·학교·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거둬들이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함의

**【22일】** 중국 정부, 위안화 2% 평가절상을 전격 발표. 또 6년여 동안 고수해 온 고정환율제(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바스켓의 여러 외환에 연동시키는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힘

**【22일】** 노 대통령, 시중 여유자금에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쏠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며 개인 예금 8천만 원을 주식형 펀드 8개에 1천만 원씩 나누어 투자

**【30일】** 남북,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사흘째 협의를 열어 군사적 보장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0월 말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열기로 함. 또 경의선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선은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각각 남북한을 잇는 철도의 연결구간 공사 실패를 공동 점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6개 항의 합의서를 체결

**【30일】** 케이티(KT), 미국 상무부에 개성공단으로

의 통신장비 반출 승인 요청

**[31일]** 보건복지부,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세필 박사)가 신청한 '바이오 장기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생명윤리법상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이래 복지부가 개별적인 배아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 승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

## 사회 · 문화

**[1일]** 김진표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비춰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

**[4일]** 노 대통령, 논술 강화를 뼈대로 한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의 3불정책에 역행하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지난주의 가장 나쁜 뉴스"라며 우려 표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육 문제는 부동산과 나란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직접 챙길 뜻을 시사

**[4일]** 교육인적자원부, 지난달 30일 2005학년도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경북대와 상주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등 국립대 10개가 통폐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일]** 당정,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서울대의 2008 학년도 입시기본안을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서울대가 이를 강행하면 예산 감축, 법학대학원 제외 등 행정·재정적 제재하기로 합의

**[7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의 축을 학교 바깥에서 학교 안으로 옮긴다는 2008학년도 이후 새 입시개혁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울대 등과 협의를 통해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

**[7일]** 영국 수도 런던 시내 중심가의 아침 혼잡시

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4건의 폭발사건이 잇따라 발생

**[10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203개 4년제 국·공·사립대학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정부의 '3불'(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대검찰청,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피의자의 가족 등도 변호인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

**[1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대학이 고교 선생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선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경우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2008학년도 이후 입시에서 대학은 교사들이 평가한 내신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새 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직후마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입시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2008 학년도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해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학생을 데려다 키우겠다"며 "결코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남북, 광복절을 계기로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경의선 인근 군사분계선 남쪽 지점에서 남북 광케이블 연결식 진행. 남쪽 한국통신 관계자와 북쪽 체신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이날 연결식을 통해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해주·서울 전화선이 끊긴 뒤 처음으로 남북 통신망이 다시 이어짐

**[19일]** 남북 역사학자 20여 명, 평양 부근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21일]** 대법원, "여성도 중증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5명과 청송 심씨

해령공파 여성 3명이 낸 종회 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22일】** 국정원 과거사위,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헌납의혹 조사결과 발표. 1962년의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따라 발생했으며, 중앙정보부가 재산 헌납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됨. <경향신문> 강제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구속했다 풀어 줘도 비판적 논조에 변화가 없자 김형욱 중정 부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1966년 강제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 내림

**【28일】** 감사원,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별다른 적정성 검토 장치도 없어 과다 산정된 요금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

## 정 치

**【1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 밝힘

**【1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과 관련해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특수도청 조직인 '미림' 팀 팀원 등 모두 43명을 조사대상자로 추려 내 이 가운데 35명을 조사했거나 조사 중이라고 밝힘

**【4일】** 행정자치부,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 뒤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치경찰법안 입법예고

**【5일】** 국정원, '과거 불법감청 실태 보고'에서 "국정원은 국민의정부 들어서도 '단' 규모의 감청조직을 계속 유지했다"며 "1998년 5월부터 2002년 3월 사이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해 불법감청에도 일부 사용했다"고 밝힘.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도청을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국정원이 과거 관행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함께 감청업무 절차가 강화되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도청 논란이 거세지면서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힘. 국정

원,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8일】** 노 대통령, 도청 파문과 관련해 "우선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그것을 믿기 어려운 구체적 의혹이 있고, 믿기 어려운 징표들이 있다고 할 때 그때는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9일】** 열린우리당, 지금까지의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 행위와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안 발의. 야당들은 특별검사법안 공동 발의

**【9일】** 노 대통령, 야당 쪽의 특검 주장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제도가 우선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무원칙한 특검 주장은 곤란하다"고 지적.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인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라며 "그동안 도청은 짐작만 되고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과거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힘

**【10일】** 남북한,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통신연락소의 정상 가동을 위한 예비조치로 남북 연락소끼리 시험통신 실시

**【14일】** 14~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할 북쪽 대표단이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쪽의 국립묘지인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15일】**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 일반 형사범과 공안·선거사범 등 1만 4천여 명 특별사면. 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제 제한을 받고 있는 420만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

**【15일】** 노 대통령, 광복 60돌 경축식에 참석해 과거사 청산에 대해 “우선 피해당하고 고통 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16일】** 8·15 민족대축전에 참석한 북쪽 대표단,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을 하고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함. 김 전 대통령은 “거듭된 초청에 감사드리며, 좋은 시기에 연락을 드리고 기쁘다”고 화답

**【17일】**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8·15 민족대축전 북쪽 대표단을 만나 “8월 말에 재개될 4차 6자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핵문제의 고비를 넘어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노 대통령은 또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근 각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과 북이 상호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16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현재 국내 이동전화 통신망은 감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전국 200여 개의 이동전화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감청은 가능하다”고 말함. 진 장관은 또 비동기 아이엠타-2000 이동통신(WCDMA) 등의 신기술에서도 추가설비로 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힘

**【18일】** 노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용

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명

**【18일】** 당정, 주택에 이어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현행 6억 원인 과세기준도 크게 낮추기로 함의

**【18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감사의 이름을 공개

**【18일】** 남쪽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쪽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감사에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위해 접촉을 하자고 전문문을 보냄

**【19일】** 검찰, 옛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정원 청사를 압수 수색해 감청에 관련된 통신장비 1점 압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은 처음 있는 일

**【21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정부 2년 반을 평가하면서 “잘한 점을 꼽으려면, 잘못된 선거 문화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상당부분 고쳐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 기구들을 국민의 기구로 다시 돌려놓음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함. 이어 “가장 미진했던 부분은 지역구도 문제로, 지역구도가 제대로 타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부를 운영해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지적

**【22일】** 노 대통령, “앞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에 적합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안보와 테러, 재난,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위기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통합형 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23일】** 천용택 전 국가정보원장, 자신의 국정원장 재직 때 불법도청이 있었다고 시인

**【24일】** 노 대통령, “1997년 대통령선거 때의 김대중·이회창 후보를 이제 와서 대선자금 문제로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 많은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라며 “결코 과거사를 적당히 얼버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

한 수준에서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끊임없이 이걸 다시 반복하고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함

**[2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를 활용해, 감청 대상이 아닌 전 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바꾸는 방법으로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국정원 자체 조사결과 드러남

**[26일]** 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흔들기가 이미 시작됐다”며 “한나라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론에는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반대하는 판소리를 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함

**[26일]** 실험민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 1차 개성 시범관광단, 첫 개성 시범관광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국방부, 일본 방위청이 2005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일본 무관 아라키 후미히로 대좌를 국방부로 소환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것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

**[4일]**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수석 대표 회의를 마친 뒤 북한대사관 앞에서 “모든 나라가 핵의 평화적 활동 권리가 있고, 우리가 패전국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며 “우리의 정당한 입장은 모든 회담 참가국의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으나, 유독 당신들이 아는 한 나라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해 비판

**[7일]** 북한이 공동문건 4차 초안에 대한 수용 불가 뜻을 거듭 밝힘에 따라 6자 회담의 휴회를 공식 결정.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6자 회담 휴회가 결정된 뒤 “북핵 폐기의 범위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특히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

**[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제4차 6자 회담이 결론을 짓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공동문건을 완전하게 타결 짓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많은 부분에서 참가국들 사이에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10일]** 애덤 어렐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 제4차 6자 회담 결과에 대해 “공동성명 초안이 4차까지만 나온 것 자체가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몇 주 안에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23일]** 미국 국무부, 6자 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세 번의 접촉을 가졌다고 밝힘. 첫번째 북·미 접촉은 워싱턴이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내용은 “6자 회담과 관련해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한이 답신을 보내왔고, 22일 세번째 접촉을 했다고 덧붙였다

**[23일]**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본체와 관련부품, 설계도를 보냈다”고 말함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9월 12일에 시작되는 주에 제4차 6자 회담 2단계 회담을 열자고 제의

## 경 제

**[3일]** 당정, 판교 새도시에 공급될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평당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값을 대폭 낮추기로 함. 또 낮아진 분양값만큼 늘어나는 시세차익은 채권입찰제를 부활해 거둬들여 서민용 주택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함

**[4일]**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서울 양천구와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서구, 용인시, 창원시 일부 지역 등 12곳이 새로 지정됨

**[8일]**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이 7년 동안 2,8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남.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두산건설 시절에 2,884억 원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며 “지난 3년 동안 87억 원의 분식회계를 털어냈고, 남은 2,797억 원은 올 상반기 결산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자진 공시

**[11일]** 건설교통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 산업자원부,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퍼뜨리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고유가 후속 계획 발표

**[18일]** 현대아산, 오는 26일과 다음 달 2일, 7일 세 차례에 걸쳐 개성 시범관광을 실시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

**[18일]** 남북,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농업협력의 방향과 초기단계 사업의 기본 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22일]** (주)한아해운의 한아12호와 현준해운(주)의 서현호 등 모래운반선 2척이 남북한 간 선박운항 승인을 받아 22일 오후 5시께 평택항을 출발해 23일 새벽 북쪽 해주항에 입항. 남쪽 국적의 선박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순수 상업적 물자 운송을 위해 북쪽 항만에 입항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수도권 택지 공급방안 확정.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송파와 경기 용인 등 ‘강남권’ 국공유지 200만 평을 내년부터 택지로 우선 개발.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해마다 900만 평씩 모두 4,500만 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2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50%로 단일화해 중과세하기로 함. 대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2주택 대상에서 빠지로 했으며, 그외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기로 함

**[28일]** 한국석유공사, 원유 매장량이 20억 배럴로 추정되는 나이지리아 심해 2개 탐사광구(OPL321, OPL323) 낙찰에 성공했다고 밝힘

**[29일]** 북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최근 개인비리 혐의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을 문제삼아 9월부터 금강산 지역에 입장하는 남쪽 관광객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하루 600명으로 줄인다고 현대아산에 통보

**[29일]** 정부, △핵융합기술(2025·2026년) △유비쿼터스 사회기반시설 구축·관리기술 및 미래도시관리기술(2010·2013년) △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2012·2017년) △초고성능 컴퓨팅기술(2010·2012년) △인공위성기술(2011·2017년) 등의 21개 사업을 미래 국가유망기술로 선정

**[31일]** 정부, 종합부동산세 대상율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 안정 △부동산 거래 투명화 △주택시장 안정 △토지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국회 통과 후 2006년부터 적용

## 사회·문화

**[3일]** 서울대 황우석·이병천 교수팀, 수컷 아프간하운드 귀 피부세포에서 떼어 낸 체세포를 일반 개에서 채취한 난자의 핵을 제거한 자리에 이식해 복제 수정란을 만든 다음 대리모 개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아프간하운드 두마리를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복제하는 데 성공했

다고 밝힘

**[3일]** 국가보훈처, 60돌 8·15 광복절을 맞아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과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 등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해 일제강점기에 3·1운동과 항일운동 등을 벌인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해 건국훈장 등 서훈을 추서한다고 밝힘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교원단체들과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9월 중 반드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하고 1년 안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단일안이 나오지 못하면 교육부안을 포함한 2개의 평가방식을 시범실시 대상 학교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4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 방식의 개복제가 과학잡지 <네이처>의 부분 표지기사로 실림

**[10일]** 정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 중앙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착수

**[12일]** 민족문제연구소,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인촌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 당시 경성방직 사장 △문명기·최창학 등 광산 부호 △민영휘 일가 등 일제 귀족 가문 △경남 진주부의 정태석 등 친일 인사 100여 명과 친일단체 명단, 헌납 내역 등을 공개

**[16일]**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터의 유치를 신청. 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 5, 6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치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면서 “월성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가 포화상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유치 신청을 했다”고 밝힘

**[16일]**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위원회, 백범기념관에서 ‘겨레말큰사전 보고대회’를 열고 모두 5개 항의 사전 편찬요강을 확정해 발표

**[19일]** 교육인적자원부, 2009년부터 약학대학을 ‘2+4 체제’의 6년제로 바꾸는 약대 학제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2+4 체제’는 대학 일반학과에서 2년 이상 기초·교양 교육을 받은 학생이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약대에 들어간 뒤 4년 동안 본격적인 전공·실무 교육을 받는 방식

**[21일]** 정부,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관실,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등 재난 및 전시대비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21일]** 교육인적자원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교사는 교단에서 영월히 추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24일]** 통계청,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 발표. 출산율 1.16명으로 사상최저치로 떨어짐

**[26일]** 금강산 호텔에서 1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열림

**[26일]** 1962년 한·일협정과 베트남전 문서 공개. 일본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라며 “크기가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함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3,090명의 명단 발표

**[30일]**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 및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문제 출제로 논란을 빚어 온 대입 논술고사와 관련해 그동안 문제가 된 네 가지 본고사형 출제 유형을 금지하는 ‘논술고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

**[31일]** 금강산 면회소 착공

**[31일]**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채택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0.4% 정도로 나타남

## 정 치

**【5일】** 국방부, 국방개혁 입법안 마련. 육군의 경우 휴전선 155마일을 소총부대로 틀어막는 '인의장막식' 방어 개념이 사라지고 경량화·기동화 부대로 변화. 1·2·3군사령부 체제를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 체제로 통합·전환하고 군단과 사단을 대폭 감축하면서 전방에 1개 기동군단을 추가 창설해 전략적 융통성을 확보하는 등의 구조개편.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명인 군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304만 명에 이르는 예비군도 절반인 150만 명으로 감축. 작지만 효율적인 강한 첨단군대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7일】** 국무조정실, 공무원 교육과정 세분화와 능력·성과 저조 공무원 퇴출 등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해찬 총리에 게 보고

**【7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청와대에서 면담. 의견 차이만 확인

**【7일】** 육군, 대대급 부대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첨단장비 레이저 훈련체계로 모의전투를 벌이는 '과학화 전투훈련체계'를 강원도 홍천·인제 일대 훈련장에 구축했다고 밝힘

**【8일】** 한덕수 부총리,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개막사를 통해, 2006년 내년 재무장관 회의에 북한을 옵서버 형식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

**【8일】** 국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진행

**【8일】** 기획예산처,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호화청사와 낭비성 축제 등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추진키로 결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호화청사를 짓는 경우 교부세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등의 내용 검토

**【8일】** 중앙인사위원회,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파견공무원의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기업 선정 및 채용심사에 관한 권한을 해당 부처에 위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8일】** 행정자치부,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도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 5급 승진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8일】** 노동부, 책임·성과 중심의 팀체제로 조직 개편. 공공노사관계팀장·고용전략팀장·퇴직급여보장팀장 등 일선에 여성 사무관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여성 인력을 전면에 배치

**【8일】** 국방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가운데 협의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120만여 평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힘

**【12일】** 감사원,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국회와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13일】** 김중빈 검찰총장, 안기부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해 녹음테이프 내용 공개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힘

**【13일】** 정부,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한 사람이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

**【14일】** 유엔 총회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아직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고 있어 마음이 좀 풀린다”면서 귀국 후 우리나라의 유엔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

**【1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장관급 본위원회회를 열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비교적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신속하게 사법처리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

**【20일】** 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기분 좋은 국무회의입니다”라며 북핵 4차 6자 회담 타결에 대해 흡족함을 표현.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을 국민이 받아 준 것이 회담의 신뢰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민에게도 사의를 표시함.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 운송, 통신 인프라 등이 중요하므로 한국 정부가 체계적인 협력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

**【22일】** 서울 남부지법,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이 MBC를 상대로

낸 안기부 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며 MBC의 이의 신청을 기각

**【22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많은 언론 광고가 건설업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발언

**【25일】** 기획예산처,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나아가 갈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전문위원회(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27일】** 노 대통령, 중앙언론사 경제부장과 오찬간담회에서 “정치세력을 좌파, 우파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대결적 세력인가 아니면 정책 노선을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세력인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나에게 통합적 진보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제일 바람직한 것은 높은 보장수준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나라”라며 “거기에는 규모가 작은 나라, 다당제, 타협 모델을 성공시킨 정치가 있다”고 설명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국가나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대리해 맡는 정부로법인 정부법무공단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안제정안’ 의결

**【29일】** 노 대통령,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보내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

**【30일】**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현 11명 규모로는 향후 6자 회담과 북핵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직 확대를 결정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와 관련해 “하루빨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위문 편지를 보냄

**【6일】** 북한, 최근 4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를 13

일 오후부터 하자고 중국 쪽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8일]** 정부, 제4차 북핵 6자 회담 2단계 회의가 13일부터 베이징에서 속개된다고 공식 발표

**[8일]** 미·일 양국, 북한이 △일단 현재 핵개발 계획의 폐기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등 3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평화이용 목적 핵개발 계획'을 용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

**[9일]** 노 대통령, 중미 순방과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해 출국. 대통령은 기내에서 59회 생일을 맞음

● 노 대통령, 멕시코 국빈 방문.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폭스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 대통령의 노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두 나라는 이날 형사사법공조조약, 세관상호지원협정, 정부혁신분야협력약정 등을 체결

**[11일]** 노 대통령,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 형성에 중미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중미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의 첨단기술 분야 진출 강화와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려워진 일본 정부, 오는 2007년 이후 자국의 유엔분담금 삭감을 위한 결의안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

**[12일]** 일본,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 압승

**[13일]** 제4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

**[13일]** 노 대통령, 중미 방문을 마치고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

**[15일]** 노 대통령, 제60차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1세기 국제질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중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 번영의

질서가 돼야 한다"며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 관련해 "민주성·책임성·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15일]** 노 대통령,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에서 "이제 북·미수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동북아가 새 질서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17일]** 노 대통령, 9박 10일의 중미 2개국과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

**[19일]** 제4차 6자 회담 2차 회의 타결. 6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 조선(북) 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체제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6개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제5차 6자 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막 날짜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19일]** 한국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6자 회담 타결 직후 프레스센터를 찾아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이제 우리를 위한 역사로 만드는 길을 열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힘있게 밝히며 회담 결과에 대한 만족은 물론 회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압축적으로 표현. 미국 측 대표인 힐 차관보 역시 "우리는 모두 승리했고 오늘은 위대한 날"이라며 만족감 표현

**[20일]** 남북자 문제를 제기해 6자 회담의 걸림돌 역할을 했고, 6자 회담 타결 이후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일본, "북한과 일본이 정부 간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

**[30일]**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된 소송은 7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법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 경 제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6일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6일]** 정부,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와 과세형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7일]** 개성지역 시범관광 3회 마무리. 1,500여 명의 관광객이 선죽교, 왕건릉, 박연폭포 등 고려의 500년 도읍지를 둘러봄. 전문가들은 관람요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

**[9일]**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각국 대표들은 세계 및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제주선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공식일정을 마침. 각국 정상들은 최근의 고유가가 석유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뿐 아니라 투기세력의 개입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고 공동 대응한다는 데 합의하는 한편 석유시장 동향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APEC 차원에서 공동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결정

**[9일]** 대법원,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 조례에 학교급식 때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9일]**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본단지 1차 부지에 입주할 20개 업체를 최종 선정

**[11일]** 노 대통령, 본격적인 증미 세일즈 외교 진행  
●오스카르 베르헤르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력발전소 건설사업 입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전소 건설·운영·배전에서 한국은 최고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한국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

●엔리케 볼라노스 니카라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빈손으로 성장을 일군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교류를 통해 니카라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마르틴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 확장 사업계획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했으며, 에스코바르 엘살바도르 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사 설치를 희망함

**[12일]** 코스타리카를 국빈방문 중인 노 대통령, 중미지역의 경제통합 등을 도모하는 중미통합체제(SICA)의 8개 회원국 정상들과 회의를 갖고 경제협력방안을 협의

**[12일]** 삼성, 지난해 세계 처음으로 8기가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16기가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

**[13일]** 기존 전력 케이블보다 크기가 3분의 1이나 작으면서 5배 이상의 전력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고온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 한국전기연구원 조전욱 박사팀에 의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13일]** 관세청,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중량을 속여 들어오는 등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예고

**[20일]** 공정위, 반도체장비 제조 계열사인 세메스(주)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2천만 원, 조사 방해 과정에 개입한 삼성전자 직원 두 명에게 각각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26일]** 종합주가지수 1200선 돌파

**[26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아시아경제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규모

는 2010년대 후반에 EU 15개국과 비슷해지고 2020년대 초반엔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과 대등해질 것으로 예측됨. 2040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점유, 북미(23%)와 EU(16%)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

**[28일]** 세계경제포럼(WEF) '2005~2006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역대 최고인 세계 17위로 평가됨. 2004년 순위보다 무려 12단계 상승

## 사회 · 문화

**[1일]**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뉴올리언즈 지방 강타

**[2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결정

**[2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를 공개. 보고서는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 중 70% 정도가 사교육을 받아 사교육 감축 효과가 없으며,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교육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8일]** 김경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문재덕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가 열리는 중국 광저우에서 만나 2006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에 합의

**[8일]**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고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학과 졸업생들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

**[8일]** 지난 4월 산불에 전소된 낙산사 동종 복원 작업 시작

**[9일]** 중앙노동위원회,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대해 강제 중재안을 통보. 노사 양측은 정부안 수용. 노사가

자율교섭에 실패해 중재재정서까지 받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53년 이후 처음

**[12일]** 보건복지부,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한 이후 MRI 급여 청구자료, 각종 민원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힘. 15일부터 MRI 검사를 여러 번 이용해도 보험 적용

**[12일]** 중·저준위 방사선패기물처리장 유치신청을 낸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 영덕군 등, 방폐장 유치에 치열한 홍보전

**[24일]** 아역배우 박지빈(10) 군이 영화 <안녕, 형아>로 제1회 뉴몬트리를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국내 배우 중 최연소

**[25일]** 경찰청, 시위 진압용 기동대 차량의 철망을 모두 없애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

**[26일]**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6개 시장·군수·의회 의장·주민대표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갖고 연내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이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중

**[27일]** 북한의 청소년(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아쉽게 4강 문턱에서 좌절

**[28일]** 정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결정

**[30일]** 국가기록원, 1974년 제작돼 30년이 지난 비공개 기록물 4,298권을 재분류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등 1,543권을 공개하고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8권을 제외한 나머지 2,747권은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관련된 수사 기록물 등 정보사범 및 대공 관련 기록물이 본인 처 직계가족 등 이해 관계인에게 처음으로 공개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천명.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선진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대통령은 특히 “자주국방은 자주독립 국가가 갖춰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6일】** 감사원, 9월 한 달간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공공기관 비리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오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건설 공기업 47곳, 정부산하기관 82곳, 지방공기업 97곳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례 브리핑에서 “감세 조치는 그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의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

**【10일】** 유지담 대법관, 퇴임사에서 과거사에 대해 겸허히 반성. 유 대법관은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진정코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침묵했으면서, 정작 사법부에 대한 경청할 만한 비평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 이를 외면한 채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재판의 권위’라는 등의 명분으로 사법부의 집단이익을 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움직임에도 냉정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냥 동조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10일】** 김종빈 검찰총장은 10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450여 명의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시를 통해 “부패한 검찰의 이미지 개선이 가장 시급한데 이를 위해 접대골프와 접대술을 끊는 등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행해 나가야 한다”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대로 분수를 알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

**【11일】** 노 대통령, 참모들과 차를 마시며 독일의 대연정 성공과 관련해 프랑스의 좌우 동거정부나 독일의 대연정은 유럽정치의 수준을 보여 준 것”이라며 “독일의 대연정이 나아가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적어도 대연정 협상을 성사시킨 것만

으로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독일이 대연정을 이룸으로써 그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독일 경제의 현안을 풀어갈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

**[1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과거 독재정권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참혹한 피해를 준 일에 대해 반성한다”며 “검찰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법무·검찰의 책임자가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12일]** 노 대통령, 이태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종교·농민·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한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제안

**[12일]** 100톤급 선박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해경 경비정(P-135)이 취항식을 열고 해상테러 경계활동에 배치됨. 길이 30.3m, 폭 6.1m 규모인 이 배는 최고 속력 45노트로 운항할 수 있고 적외선 열상카메라 등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음

**[12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 천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중거운 벌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정신과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돼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14일]** 김종빈 검찰총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사표 제출

**[16일]** 노 대통령,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직서 수리.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서 최근 검찰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흔들리지 말고 천 장관이 중심이 돼 사태를 잘 수습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17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 이후 거세지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퇴 압력과 관련해 “이들의 공세는 우리 사회를 자유와 권리가 부인되고 비이성적인 색깔이 지배하는 암흑시대로 후퇴시키려는 태도”라고 일침.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을 겨냥해 “검찰을 시너 삼았던 세력이 그러면 안 된다”고 반문함. 천 장관은 이어 지휘권 행사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한 위치가 됐지만 수사 관행상 구속을 남발해서 생기는 폐해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며 “일체의 잔재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폐습인 구속 남발을 막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강정구 교수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천 장관은 또 검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거대 권력의 횡포에 단호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며 “그러나 어떤 기관도 국민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도 국민 의사로 선출된 권력의 통제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힘

**[18일]**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는 159개국 중 40위 차지해 2004년 47위에서 7단계 상승.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이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으로부터 투명사회협약에 이르는 일련의

반부패 관련 법제도를 마련한 덕분에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

**【19일】** 충청도의 신당 ‘국민중심당’ (가칭) 공식 창당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상정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의 회의실 점거로 처리하지 못함

**【21일】** 경찰 창립 60돌. 1945년 10월 21일 4,800여 명이 참여해 미군정청 경무국과 각 도 경찰부로 걸음마를 댄 경찰은 현재 14만 5천 명의 거대 조직으로 발전

**【22일】** 노 대통령, 군 스스로 국방개혁안을 만든 데 대해 각별한 격려를 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에 서 군 수뇌부와 골프 회동. 대통령은 운동을 마친 후 군 구조개혁 등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눔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타계와 관련해 북쪽에 조전을 보냄. 정부 당국자가 북쪽 인사의 사망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전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

**【26일】** 국세청, ‘2005년 법인 조사대상 선정 방향’에서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규모 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고, 지난해(3,950개)보다 다소 줄어든 3,800여 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힘

**【26일】** 10·26 재선거, 한나라당이 4곳 모두 승리

**【26일】** 제주경찰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20여 일 앞두고 각종 무술과 폭발물 관련 전문기술을 보유한 경찰관 30명으로 제주경찰특공대를 조직

**【26일】** 청원군, “내년부터 청남대 주변 문의문화재단지에 관아, 저잣거리, 박물관을 설치하는 등 2010년까지 청남대 주변 명소화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여정부 들어 개방된 대통령 휴양지가 충북의 주요 관광지가 될 전망

**【28일】** 대법원,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1,197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

**【28일】** 당·정 갈등 확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4·30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청와대로 돌림

## 통일 · 외교 · 안보

**【10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 당수에게 차기 총리 자리를 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독일에 첫 여성 총리 탄생. 독일, 총리 선출로 역사상 두번째 대연정 구성

**【10일】** 외교통상부·문화재청, “한·일 두 나라는 12일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을 치르고 비 철거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을 거쳐 이달 20일을 전후해 한국으로 반환해 올 것”이라고 밝힘. 북관대첩비가 일본에 강탈된 지 꼭 100년 만에 겨레의 품으로 돌아옴

**【12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신사 회관에서 북관대첩비 인도문서에 서명. 인도문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북관대첩비를 양호한 상태로 인도받았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승과 보관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인도할 것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음

**【17일】** 중·일 간 열릴 예정이던 외교당국자 회담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때문에 취소됨

**【18일】** 중국 정부, 23일 예정됐던 일본 외상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

**【18일】** 일본 외상, 한국 기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12월에 예정대로 방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함

**【19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미국에 체

포된 지 22개월 만에 법정에 세워짐

**【1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월말로 예정됐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당국 간 협의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본 방문을 추진하기에는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20일】**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당 창건 60돌인 지난 10일을 전후해 북한에 중유 1만 톤을 무상지원했다고 <도쿄신문>이 중국 해운업체 관계자의 말을 따 20일 보도

**【21일】** 노 대통령, 동북아 전략구도에 대해 “항간에 오래전부터 한·미·일 3국 안보체제를 만들어 중국에 대처하자는 입장이 있다”며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동북아 평화구조를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미래 미·일과 중·러의 대결적 전선을 전제로 동북아 전략구도를 운영하면 동북아에 항상 긴장이 감돌고, 경우에 따라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러를 포함해 동북아에 유류연합처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질서가 형성되면 미국은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

**【21일】** 한·미 양국,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 회(SCM) 회의에서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작권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두 나라 논의는 ‘연구’ 수준에서 ‘공식 협의’ 차원으로 전환

**【21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1개국의 국회의원 60여 명,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평화회의원 연대회의(PAPA)’ 창립총회 개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2차세계대전 이후 왜곡된 아시아의 역사·정치·사회·문화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 나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한 모임

**【23일】** 아시아평화 의원 연대회의(PAPA), ‘제주

평화선언’ 채택. 평화선언에서 “아시아 국가와 민족 간의 진정한 화해와 신뢰를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과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시각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 의원들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공동 전략과 행동 계획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4일】** 청와대, 21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대일 외교정책 지침 공개. ‘대일 외교정책에 관한 지침’은 “한·일관계에서 정치·외교 분야와 일반 교류·협력을 분리하고,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지침은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이전에 일본 쪽과 사전협의를 있던 것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최국으로서의 대일협력, 6자 회담 관련 한·일 협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11월 초순 협의·확정되는 날짜에 제5차 6자 회담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

**【25일】** 이라크전 시작 이후 31개월 만에 미군 전사자 2천 명 넘어섬. 이라크인 사망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한 민간단체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2만 6,690~3만 51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추정

**【27일】** 니컬러스 미국 국무부 정치차관,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 등,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해 잇단 비판. 이들은 일본이 중국, 한국 등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 설명

**【2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성렬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와 주미 한국대사관 위성락 공사가 워싱턴 시내 한 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사교 모임 열어. 남북 외교관들이 워싱턴에서 회동한 것은 처음

**【2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평양 방문.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은 장쩌민 국가주석 이후 4년 만의 일. 이날 북·중 양국

은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을 재확인

**[28일]** 일본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아스쿠니 참배를 반대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웃나라 정부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총리가 진지한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

**[30일]** 북·중 정상회담 종료. 북한과 중국의 관영 <로동신문>과 <신화통신>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친선관계’라며 대대적인 보도. 두 신문은 특히 북·중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보도에 집중

## 경 제

**[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총회에서 한국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 출원 심사 때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결정. 한국어가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공용어가 아닌데도 한국 특허문헌이 국제 특허의 규정으로 채택된 것은 국제특허 출원 건수와 기술 내용 면에서 한국의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4위, 국제특허 출원은 7위를 기록했으며, 국제특허 출원이 해마다 20%씩 늘고 있음

**[4일]** 법원, 1996년 삼성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씨 등에게 배정한 삼성에버랜드의 당시 사장과 상무였던 허태학·박노빈 씨에게 유죄 선고

**[11일]** 한국은행, 콜금리 0.25% 인상

**[13일]** 남북, 25일 개성에서 열리는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앞두고 남북이 미리 의제를 교환해 협의하기로 결정. 의제를 미리 교환해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13일]** 삼성전자가 첨단 70나노 공정기술을 적용한 512메가 디디아르(DDR)2 D램 개발에 성공.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1년 100나노, 2002년 90나노, 2003년 80나노에 이어 4세대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세계 처음 선보임으로써 나노급 D램 기술분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

**[28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4장 41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성공단에 회계검증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등을 담당

**[28일]** 남북 간 직접 거래와 투자를 지원하고 당국 간 상시적인 경제협력 협의 창구가 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개소식이 개성에서 열림.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별관 2층과 3층을 각각 쓰게 된다. 남북 당국이 한 건물을 사용하며 상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28일]** 남북 당국,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본회담을 열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연결 및 개통 △서해상수협력 등 기존에 합의했던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

**[30일]** 건설교통부,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하고 서민전세자금 대출 이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주거 금융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다음 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어 집 장만이 한결 수월해짐

## 사회·문화

**[1일]** 발리 폭발사고, 한국인 8명 부상

**[1일]** 청계천 복구 완성. 일반인들 나들이

**[2일]** 정부, 장기수 정순택(84) 씨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북한 적십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문점을 통해 정 씨의 시신을 북쪽 가족에게 전달. 통일

부는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 유해 송환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13일]** 경북 상주의 콘서트 현장에서 입장하려던 관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11명이 압사하는 사고 발생

**[5일]** 노동부, 10일부터 두 달에 걸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하 분원 51곳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

**[8일]** 파키스탄 강진. 3만여 명 사망 추산

**[10일]** 당정, 상주 압사사고와 관련한 협의회를 열어 공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체육관이나 경기장 등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관람객 1천 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안전관리인력 확보 방안이 포함된 재해대처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11일]** 국가청렴위원회,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구독해 주는 대가로 언론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정

**[13일]** <한국대학신문> 여론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한겨레>(39.7%)이며 다음으로는 <중앙일보>(12.3%)와 <동아일보>(9.8%) 순인 것으로 나타남

**[14일]** 200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결승. 서미정(전남도청), 남현희(성북구청), 정길옥(강원도청), 이혜선(한국체대) 등으로 짜여진 한국대표팀은 유럽의 강호 루마니아를 20 대 19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펜싱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사상 처음

**[17일]** 교육인적자원부, 분야별 특성과 대학원 및 지역 우수대학원 지원을 뼈대로 하는 ‘제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발표. 지역우수대학원 육성, 산학협력 활성화, 평가·관리체계 혁신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 △인문사회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등 3개 부문에 예산 지원

**[18일]**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강정구 교수의 구속사유는 △동종 범죄에 대한 엄벌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사법처리 의견 70% 상회 △반국가사범

처벌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 표명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셋째아이를 낳은 교육부 직원에게 출산준비물 세트와 보육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20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프랑스 파리에서 33차 총회를 열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

**[21일]** ‘국경 없는 기자회견(RSF)’의 2005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자유가 아시아에서 최고인 34위를 기록해 일본(37위)과 홍콩(39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23일]** 나이지리아 여객기 추락. 117명 전원 사망

**[24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설립 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사립대 통폐합은 적극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발표

**[25일]** 보건복지부, 200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6만 원에서 1만 원이 오른 월 7만 원을 받게 됨

**[26일]** 국가청렴위원회, 8월 한 달 동안 안산공단, 남동공단 등 경인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출신 노동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현지 브로커나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됨

**[27일]** 청와대에서 병영문화 개선대책회의 대통령 보고대회가 열림. 국방부의 개선대책위원회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등 획기적인 안들을 보고

**[28일]** 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박물관을 광복 뒤 여섯 차레나 이전해야 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막을 내리고 외국군이 주둔했던 용산에 민족 자존의 전당이 들어섰다”며 “새 박물관은 미군기지 이전 뒤 조성될 용산 민족역사공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힘. 첫날 2만

여 명이 관람했으며, 초대받은 외국인들은 아시아 최고의 박물관임을 실감했다며 극찬

**【28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타이 방콕과 서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내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법을 정비해 종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

# 11

## 2005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난과 연하장을 보내 신년 인사. 전직 대통령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에게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문

**【1일】** 김대중 전 대통령, “날씨가 좋아지면 평양을 가겠다”며 “평양에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편의를 도와달라”고 밝힘

**【2일】** 국가정보원, “2006년에는 국정원이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 정보기관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의 영문 약칭인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를 형상화한 새 로고를 공개

**【2일】** 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에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장관에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노동부 장관에는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각각 내정

**【4일】** 노 대통령,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것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당과 청와대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상 외로 논란이 증폭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양자 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서로 간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힘

**【4일】** 국민중심당, 자민련 합당

**【5일】** 노 대통령,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열린 정책고객관리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에 대해 “자기 정책을 변명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그건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안매체를 만들고, 제도매체가 의제화하지 않는 것은 의제화해야 하고, 잘못된 보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축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일 정세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이(나의) 정치적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8일】** 이해찬 총리, 서울대 특강에서 “한국 사회가 한꺼번에 발전하다 보니 의식과 제도 등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이를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한다”며 최근 움직임이 활발해진 뉴라이트를 겨냥해 “의식지체 현상 중의 하나”라고 비판

**【9일】** 6차 회담 5차 1단계 회의가 9일 공식으로 개막

**【9일】** 행정자치부,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14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치는 정치적 이상을 실천하는 과정이고, 정당은 정치 이념을 함께 하는 결사체”라며 “지금 열린우리당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시대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또 “멀리 내다보면서 자신의 정치노선과 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유·불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선과 정책으로 정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노선과 정책에 충실하면서 멀리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

**[15일]** 한나라당이 제기한 철도공사 유전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수사 종결. 야 4당과 보수언론에서 주장한 ‘오일게이트’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됨.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2004년 1월)에 이어 두번째 의미 없는 특검으로 기록됨. 이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된 결과로 이번 특검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무리한 의혹 부풀리기로 시작된 정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으며,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유전특검은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이 만들어 낸 대국민 사기극임이 입증된 만큼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은 지난 6월 이광재 의원에 대한 내사 중지결정을 내렸으나 야 4당은 특검을 강하게 제기했고, 여당은 못 받아들이л 이유가 없다며 수용한 바 있음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 심포지엄에서 “세계 차원의 신질서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흐름과 달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장애물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냉전”이라고 밝힘. 정 장관은 이어 “지난 60년 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던 유형, 무형의 냉전 장벽이 그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미 시효가 지난 낡은 대결과 분열의 논리를 극복하고 공존의 논의를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고 강조

**[16일]** 국회 본회의·고용보험법 개정안, 개발이력헌수에 관한 법 개정안,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

조치법 개정안 등

**[17일]** 한나라당, 당 혁신안을 중심으로 한 당헌 개정안을 추진. 대선후보 선출 선거인단의 당원대 비당원 구성비를 5 대 5로 하고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해 2002년 대선에서 패한 이후 3년 만에 열린우리당의 형식을 모방

**[18일]** 당정, 이라크 에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현재 3,200여 명에서 1천 명 정도를 줄이고, 올해 말 끝나는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함

**[24일]** 헌법재판소,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7 대 2로 각하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의 ‘북한 범죄정권’ 발언은 외교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급이며,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다시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금융제재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3일 <뉴욕타임스>가 지적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6차 회담 속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관련국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힘

**[4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연두 기자회견에서 신사 참배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한국과 중국 정부 비판

**[9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한·일 의원 추구대회 무산

**[9일]** 미국 국무부, 유럽연합(EU)이 지난 2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11일]** 5차 6차 회담 1단계 회의, 의장성명을 내고 종결. 한국 수석대표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참가국 사이에) 행동계획에 대해 많은 의견교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는 의견 접근을 본 것도 있다”고 밝힘. 6자는 초보적 상호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금융제재(북한 주장)· 위조지폐(미국 주장)’ 문제가 불거짐

**[12일]**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도시 부산에서 20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시작. 12일부터 17일까지 각종 사전행사가 이어지며 본대회인 정상회담은 18일 개막

**[16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 또한 두 정상은 “두 나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호협력 관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교장관 사이 직통전화 개설 △외교차관 사이 연례대화 창설 △외교·국방당국 사이 안보대화 정례화 △의회·정당·단체 사이 정기교류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를 넘어 외교·안보까지 동반자 관계로 확대

**[17일]** 한·미 정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6자 회담이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에 뜻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 미국 정부는 그간 한·미·일 동맹체제로 동북아의 세력 구도를 상정해 왔고 노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협력과 다자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음

**[1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국회 연설. “한반도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도”라며 “우리는 이전과 변함없이 남북 양쪽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신뢰구축, 그리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최종적인 실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국가원수의 우리나라 국회 연설은 1995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 이후 두번째

**[17일]** 유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공동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 우리 정부는 기권. 대북 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채택됐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결된 건 처음

**[18일]** 노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역사교육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힘

**[20일]** <아사히신문>, APEC 결산 기사를 통해 “고이즈미 총리는 18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한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지만, 노 대통령에게 12월 방일을 요청하지도 못했고, 중국으로부터는 2003년, 2004년에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물론 외무장관 회담마저 거부당했다”고 보도

**[2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의 인권유린 실태를 거론하며 “유럽연합 나라들이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싶으면 응당 미국의 중대 인권유린 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과 유럽연합 쪽을 싸잡아 비판

## 경 제

**[2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관련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발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되, 결혼 또는 60살 이상 노부모(여자 55살 이상)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2년간은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됨

**[3일]** 통일부, 개성공단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2004년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석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4일】** 서울중앙지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64)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이재용(38)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7일】** 당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사실상 확정. 수정안은 1999년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에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방안과 주5일 근무제, 중국 급부상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도권에 편중됐던 개발 구조를 전국 거점별로 광역화함. 철원·고성 등지에 평화도시가 건설되고, 북한의 경제특구와 연결되는 항만·철도·고속도로 등 통합 인프라를 구성하는 내용도 추가됨

**【7일】** 유엔 내부 보고서, 북핵 6자 회담이 성공해 한·미·일 세 나라가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3년의 3배 이상인 7%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정책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 개선이 미흡하지만 민간소비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물가도 안정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사정도 원활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콜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힘

**【11일】**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들도 홍보전. 현대·기아차는 의전용 리무진을 포함 424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베엠베(BMW)는 정상부인과 고위 관료들이 이용할 170대의 차량을 제공. 케이티(KT)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이번 APEC 행사에서 처음으로 시연하며 참가자들과 각국 기자들에게 500개의 단말기를 제공. 그 밖에 삼성전자, 엘지전자는 행사장 곳곳에 영상장비를 뽐내고, 한화는 전야제의 불꽃놀이를 담당

**【14일】** 국내외 400여 명의 정보기술업계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가운데 와이브로 서비스 세계에 첫선 보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에서 "내년 4월 상용화를 앞두고 이번 APEC에서 와이브

로를 보여 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시연은 한국이 향후 차세대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

**【15일】** 부산 해운대에서 백스코까지 운행하는 '와이브로 버스'에 탄 브라질 아브릴사의 비르질리우 아마랄 기술총괄사장은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우선 초고속 인터넷을 건너뛰고 와이브로를 채택할 것"이라며 "브라질에서도 한국 기술로 내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15일】** 산자부, APEC 투자환경 설명회 기간 중 6억 달러 외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15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경협사무소) 본격 가동. 남북 기업 간 사업 협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짐

**【16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 한국,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2001년 이후 개별 협상으로 42개국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미국·유럽연합·일본·한국 등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시장경제 지위를 요청한 바 있음.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좀더 손쉽게 해 놓는 등 차별대우를 해 제하지 않았어도 만족감 표현

**【16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 쌀 비준안 통과,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의견 교환

**【16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APEC 정상들의 특별성명인 '도하개발의제 특별선언문' 문안에 합의. 성명엔 도하 협상의 주요 걸림돌인 농산물 수출보조금과 관련해 선진국들이 이를 2010년까지 철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

**【16일】** APEC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북의 개성공단에 대한 대규모 투자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림.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해 첨단기술 및 인프라

를 활용하고, 개성공단에는 조립공장 설립을 통해  
저비용을 활용하자'는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임

**[17일]** 케이티(KT),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규정(EAR)에 따른 통신장비 반출 승인을 받음

**[19일]** 노무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을 열고, '한·러 경제·통상 협  
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 두 나라는 특히 △극  
동시베리아 유전·가스 공동개발, 송전선 신설 등  
남·북·러 전력 계통망 공동연구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사업 △한·러 과학기술센터 설립  
△한국우주인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에너지·자  
원 및 우주·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  
하기로 결정.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할린으로부터 한반도까지 에너지 자원을 수송  
할 프로젝트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한·러  
양자 테두리에서 그리고 3자 테두리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즉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

**[22일]** 정부, 규제개혁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새로 도입할 때 관련 법령  
에 부담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실시하는 등 부담금 개선 규제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

**[23일]** 국회, 쌀협상 비준안 통과시킴. 쌀 관세화  
를 10년 동안 추가 연장하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량  
(TRQ·저율관세수입물량)을 올해 22만 5,575톤  
에서 2014년까지 40만 8,700톤까지 늘리는 내용

**[28일]** 대한주택공사, 인천 동양 택지개발 사업지  
구에 후분양 방식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  
고 밝힘. 처음부터 후분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의 내년 평균 성장률을 2.9%로, 한국의 성장률을  
5.1%로 전망

**[29일]** 산업자원부, 2005년 무역규모가 5,4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로 무역액 5천억 달러를 넘어섬

**[30일]**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임

직원이 포함된 남쪽 기업인들이 개성의 남북경제  
협력협회사무소(경협사무소)에서 첫 집단 간담회  
를 열어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

## 사회·문화

**[2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방사능 폐기장)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 89.5%로 경주 확정. 1986  
년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된 현대사의 숙제가 21년  
만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된 역사적 순간

**[3일]**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 경주가 원전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됐음을 밝히고 "다수의 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확인됐고,  
투표결과에 국민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 입장"이라고 밝힘

**[3일]** 서울중앙지법, 관행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왔던 단순 마약복용과 음주운전 등 10개 유형 범  
죄에 대해 영장 발부를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

**[3일]** 한국인들은 책을 구입하는 데 거의 돈을 쓰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5  
년 3분기에 우리나라 가구의 '서적 및 인쇄물' 지  
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1만 397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지출(204만 8,902원)의  
0.5%에 불과한 수준

**[4일]** 문화재청, '조선시대 왕릉과 원' 53기에 대  
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했다  
고 밝힘. 조선 왕실 무덤은 왕과 왕비의 무덤인  
'능'(陵)과 왕세자와 왕세자비의 무덤인 '원'(園)  
으로 구분되며 현재 왕릉 40기, 원 13기가 수도권  
지역에 주로 남아 있음

**[7일]** 통계청이 유엔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국제  
통계연감' 자료에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년  
새 늘어났으며, 이런 연장속도는 세계에서 열번째  
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9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부터 지상파 텔레비전의 낮방송을 허용하는 1단

계 방송 운영시간 확대를 의결

**【9일】** 통계청 조사, 3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보충 교육비는 14만 9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어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으며, 이는 전체 교육비의 54.9%인 것으로 나타남

**【11일】** 법무부,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와 피의자의 유전자와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규정

**【13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가장 놀라운 발명품으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의 복제개 '스니피'를 선정

**【15일】** 수원지방법원, 친일파 이근호의 손자 이아무개(78)가 지난해 3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받은 경기도 오산시 궂동 대지 380㎡를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각하 결정

## 정 치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개인이 대한적십자사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만나 쌀 비준안 처리 이후의 농업대책과 관련해 “농민, 국회,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농정 3자 협의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속에 통과시킴

**【11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처리에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파업. 국회 파행

**【11일】** 변양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15일까지만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

**【11일】**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최

근까지 직접 수행했던 이진 전 행정관이 11일 대선 전후 시점부터 지난해 탄핵사태 전까지 노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여졌던 참여정부 초기의 비사들을 담은 『노무현, 왜 그러는 걸까? -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개마고원 펴냄) 펴냄

**【12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처리에 반발하며 등원 거부를 하는 가운데,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학교를 폐쇄시키겠다고 주장

**【13일】** 제1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3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개막

**【13일】** 국방부, 한국형 헬기 사업(KHP)에 참여할 해외 업체로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회사인 ‘유로콥터’ 선정. 미국의 벨 등은 탈락. 국방부는 오는 2009년 시제기 생산에 이어 2010년 초도 생산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 245대(육군 231대, 해군 12대, 공군 12대)의 기동형 헬기를 양산할 계획이며 유로콥터로부터 핵심기술을 최대한 이전받아 국산화율을 6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고 밝힘

**【14일】** 검찰, 국정원의 도청수사인 일명 ‘엑스파일’ 중간수사 발표. 삼성의 불법자금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

**【15일】** 대검 중수부, 행방이 묘연했던 수백억 원대 삼성 채권 가운데 24억 7천만 원어치의 채권이 한나라당에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15일]** 김원기 국회의장, 라디오 방송에서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수위를 넘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16일]** 17차 장관급회담에서 9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남북 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종·규모 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2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만든 각종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중국, 호주 등이 매뉴얼의 상세한 내용을 요청하며 관심 표명. 정부는 보안상황을 제외한 내용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

## 통일·외교·안보

**[1일]** 손 대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 회담 2단계 회의 불참 통보 사실 확인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조(북)·미 쌍방은 6자 회담 단장급에서 회담을 열고 금융제재 문제를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미국 쪽은 자기의 언약을 뒤집고 회담 자체를 회피하는 신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

**[4일]** 중국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때부터 해마다 열려 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힘.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원인이며 일본 외교가 동아시아에서 팽 당함. <산케이신문>은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의 존재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

**[8일]** 한·미 양국, 5차 한·미 사증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필요한 두 나라의 의지와 정책 등을 담은 ‘일정표’(로드맵)를 내년 초 6차 사증(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결정

**[12일]** 노 대통령, 제9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공동선언문’을 채택.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13일]** 북한을 ‘범죄정권’이라 부르고, 남한에 무기구매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던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 북한 <로동신문>이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라는 자는 예절도 없고 사리도 모르는 불한당이 분명하다”고 비난

**[14일]** 노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독일은 일부 영토까지 포기할 정도로 역사 인식을 철저히 청산했다”며 “독일은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 이웃의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대해 일체의 추모시설을 만들지 않았다”고 일본 비판

**[25일]** 북·일 양국, 베이징에서 정부 간 협의를 열고 △국교 정상화 △납치 △핵·미사일 등 현안별 3개 분과위원회를 내년 1월 말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

## 경제

**[1일]** 코스피지수 1300 돌파

**[1일]** 지상파 디엠비(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통

**[7일]** 공정거래위원회, 피시(PC)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끼워팔기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분리 및 동반 탑재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억 원을 물림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두 달 만에 콜금리 0.25% 인상해 3.75%로. 박승 한은 총재, “현재 민간소비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수출도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3.75%로 전달보다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 타이를 제외한 10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상품자유화 방식(모델리티)에 합의

**[9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노 대통령, 압둘라 아 마드 바다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통상 협력을 비롯한 두 나라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논의. 중소기업 협력 약정, 석유 공동 개발 협력 약정, 신재생에너지 협력 약정, 지질조사 협력 등 7개 분야 경제·자원 협력 약정 체결

**[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격려

**[13일]** 노 대통령·아세안 정상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협정’ 서명. 아세안을 고리로 삼아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도전이 본격 시작

**[13일]** 다자간 시장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 홍콩에서 개막.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에선 세계 무역기구 149개 회원국이 엿새 동안 △농산물·비농산물(NAMA·공산품)·서비스 시장 개방 △반덤핑 규범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보장 등을 논의

**[21일]** 국세청, 중부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중부세 대상자 7만 4,212명 중 94.8%인 7만 353명이 6,436억 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고 밝힘. 자신 신고율 95%

**[28일]** 정부,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열고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해 확정. 성장률 5% 내외를 달성, 일자리 35만~40만 명 창출에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설비자금을 올해 7조 1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9조 원으로 늘릴 계획. 이와 함께 증권계좌에 결제기능을 부여해 은행계좌처럼 송금이나 입금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법적 제도를 마련할 방침

**[28일]** 케이티(KT), 개성공단 안에 위치한 케이티 개성지사에서 ‘개성공업지구 남북통신 개통식’을 열어 명실공히 남북의 민간 전화를 연결시킴. 케이티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규정(EAR)에 따른 통신장비 반출 승인을 받은 지 40여 일 만에 개통

## 사회·문화

**[1일]** 일제강점기 이후 거의 100년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각종 ‘과거 사건’ 들을 규명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공식 업무 시작

**[2일]** 국방부,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 17권 1,700여 쪽을 언론에 공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자료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관한 국회동의 △한·월(베트남) 및 한·미 군사실무 약정서 △해외군무수당 관련 자료 등이 포함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과장됐다는 조사 결과 발표. 과거사위는 “두 사건 모두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돼 발표됐다”며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이 규정한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성격이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이들을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짜맞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힘

**[10일]** 200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모하마드 엘바라데이, 평화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터는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게 하고 △핵보유국도 핵군축을 향한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11일]** 정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권령 발동

**[12일]**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20돌. 현재까지 596차의 목요집회 진행

**[19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강제징집·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 진상조사 중간 결과 발표. 1980년대 전반기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해 최전방에 우선 배치한 일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확인. 과거사위는 또 보안사가 1982년 9월 6일 학원정보 수집 프락치 심사를 맡는 ‘전담 공작과’ (이후 심사과로 호칭)를 신설해 강제로 징집된 대학생들을 상대로 ‘순화’ 작업을 벌이고, 이 가운데 일부를 학원정보 수집에 프락치로 활용하는 등 이른바 ‘녹화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19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교육자 대표자회의가 개성에서 열림

**[21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며 원심 파기

**[21일]** 동해상에서 10일 동안 표류하다 동해해경 소속 함정에 구조된 북한 소형 어선의 선장 등 선원 6명이 판문점을 통해 귀국

**[23일]** 서울대 조사위원회,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됐다고 중간 조사 결과 발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

**[26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인권과를 내년 4월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형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6 법무부 인권 비전’을 발표

**[27일]** 노 대통령,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 중 사망한 두 농민과 관련해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27일]** 통계청·여성부, 생활시간조사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보다 매일 1시간 덜 자고 2

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과 봉사는 24살 이전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7일]** 법원,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 내림

**[29일]** 폭설로 큰 피해를 본 광주·전북·전남·충남·제주·경남·경북·강원 등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 정 치

**【2일】** 4개 부처 개각.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에 김우식, 통일부 장관에 이종석, 산업자원부 장관에 정세균, 노동부 장관에 이상수

**【3일】** 국정원 미래지향적인 새 로고 공개

**【13일】** 국방부, 3월 1일부터 전국 139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146만 평을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16억 4천만여 평에 달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5억 8천만여 평(전체 국토면적의 5.2%)으로 줄어들게 됨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 대가를 받는 등 몇몇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재 최고 5천만 원인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힘

**【17일】** 청와대, 설을 맞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 각계 주요인사, 소년소녀 가장 등 5천여 명에게 전국 8도의 명품살과 전통 민속주를 선물로 보냄

**【18일】** 노 대통령, 새해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미국, 일본, 유럽 각국들의 국가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복지예산 규모는 더욱 부족한 것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대

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함

**【24일】** 열린우리당 새 원내대표에 김한길 의원 선출

**【25일】** 노 대통령, 내외신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오기 정치, 역사와의 독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도 그 시기 시기에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큰 조류를 보고 가는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 있는 선택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며, 때론 어려움에 부딪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30일】** 국방부,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남북 합의에 따라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고 발표. 특별한 이유 없이 7개월 이상 중단됐던 남북 회담 재개

**【30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북한산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 한나라당은 이렇다 할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하기로 결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5년 12월 9일

이후 두 달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발 국회 공전이 종료됨

**【30일】** 국가보훈처, 민주화운동 인사 등이 문헌 국립 4·19묘지와 국립 5·18묘지, 국립 3·15묘지의 명칭을 국립 4·19민주묘지, 국립 5·18민주묘지, 국립 3·15민주묘지로 바꿔 이날부터 사용하는다고 밝힘

**【30일】**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57%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마디 사파리 이란 외무차관, IAEA이사회에서 한국이 이란 핵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공개적인 불만 피력. 양국관계 재검토 시사

**【3일】** 스콧 맥클렌턴 미 백악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금융제재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이 불법행동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4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북한 범죄정권' 발언은 외교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급이며,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다시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금융제재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3일 <뉴욕타임스>가 지적. 이 신문은 같은 날 사실에서 미 정부의 대북 협상 노력을 강하게 촉구

**【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연두회견서 신사 참배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한국과 중국을 강력히 비판.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주변국의 지적에 진솔하게 귀를 기울여 역사 인식에 좀더 정확한 태도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대응

**【9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북한 내 모든 식량지원사업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

**【16일】** 정부, 자베르 알아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이 15일 숨진 것과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쿠웨이트 현지에 파견

**【18일】** 북한 관영 <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0~1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 베이징에 쓰여있던 양국 정상회담의 접촉이 확인됨

**【18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뉴욕 유엔본부를 찾아 코피 아난 사무총장을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아시아 차례라는 공감대가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한국 정부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19일】** 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

**【25일】** 정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D)에 참관 형식의 '제한적 참여' 발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이 문제가) 어느 정도 민감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피에스아이 정식 참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올해 내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십수년간 미뤄 왔던 국방개혁도 이제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

**【31일】** 부시 대통령,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시리아와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처럼(민주주의가 없는) 세계의 또 다른 절반의 나라들을 잊어서 안 된다. 정의의 요구와 세계 평화는 이런 나라에서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의 폭정 종식을 추구하고 있다. 미래 미국의 안전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발언

## 경 제

**[3일]** 재정경제부, 결혼·부모부양 탕 증부세 합산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

**[4일]** 코스피지수 1400 돌파. 한국 증시, 새로운 역사 창조

**[4일]** 통일부, 지난해 12월부터 개성지역에 난방용 석탄 지원 증이라고 밝힘

**[5일]** 남북 교역액 10억 원선 돌파. 통일부는 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관광시설 확대에 따른 건설자재 반출입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7일]** 정부, 외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주거용 국외 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국외 투자 제한을 올해 안에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힘

**[9일]** 정부, 자영업 소득 투명화와 시민단체 기부 현실화. 부동산 관련 규정 강화 및 기업맞춤형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13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대중국 교역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수출 1위 수입 2위의 우리나라 중요 무역 상대국이 됨

**[15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쪽의 저작권사 무국에서 북한 창작물 47편에 대한 출판 저작권 협의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힘. 북한의 정상적인 저작권 양도를 받아 출판되는 북한 창작물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 저작권 교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17일]**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알기제도'와, '고객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고객 거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 등 국내 환경산업 부문 매출이 2004년 21조 4,275억 원으로 2000년 11조 5,362억 원에 견줘 9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폐수처리시설 수출실적은 2004년에 8,450억 원을 기록, 2003

년보다 45% 늘어남

**[19일]** 1995년 건설이 시작된 부산 신항만 개항. 세계 최대의 크레인 등 인천항의 8배 규모. 동북아 허브항을 놓고 중국 상하이항과의 경쟁 본격화

**[27일]** 정부,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시행하기로 결정. 이와 함께 4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 5년간 영화계에 지원하는 스크린쿼터 조정대책 발표

**[30일]** 기획예산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크게 늘려 총 52만 7천 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31일]** 정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국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 전국 평균 5.61% 상승했으며 종부세 대상은 2만 3천여 가구로 추정됨

## 사회·문화

**[3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적 및 인쇄물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1만 397원인 것으로 나타남

**[3일]** 서울중앙지법, 단순범죄 10개 유형에 대한 영장발부를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속영장발부기준' 발표. 이는 구속영장 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5일]** 문화재청, '조선시대 왕릉과 원' 53기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5일]** 복권위원회, 13종인 인쇄복권의 발행을 4월부터 모두 중지하고 새 복권 5종을 개발해 발행하기로 결정. 1969년 최초 발행한 주택복권은 역사속으로 사라짐

**[6일]** 교육부,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신입생 배정 거부 뜻을 밝힌 데 대해, "배정업무를 학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으며, 계속 거부할 시 구체적 사항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6일]**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출범. 근무평점제, 교원양성·연수체계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6일]** 청와대, 사학비리 전면조사 발표. 제주도 5개 고교 등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는 일부 사학의 움직임에 대해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대응키로 함

**[8일]**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여 결정한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원칙과 방향, 핵심적인 인권정책을 제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을 확정하고 정부에 권고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사실과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 보유 주장 불인정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 발표. 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황우석 교수의 2004년, 2005년 논문 취소 결정

**[11일]** 대검찰청,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방침 밝힘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2.4%에 그쳐 OECD 평균인 16.4%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15일]** 경찰청, 평화시위 문화를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시위 진압을 전·의경 대신 직업경찰이 맡고, 시위현장 근무에 나서는 전·의경 기동대원들에게 이음표를 착용하는 방안 발표

**[17일]**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선별 수용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은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유엔 사회권규약위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 포함된 정부 보고서를 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20일]** 교육부, 2차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의 흥

보 브랜드를 '인재강국 코리아(Creative Korea)'로 결정

**[19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67개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

**[21일]** 노 대통령,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영화 <왕의 남자> 관람

**[21일]**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설악산을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인증

**[22일]** 교육인적자원부, 도시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1,728억 원(국고 1,289억 원, 지방비 439억 원)을 투입해 현재 15개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22일]** 감사원, 23일부터 종교계 사학을 포함한 전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운영 실태는 물론, 학사운영 등 사학 운영 전반에 걸쳐 고강도 특별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힘. 감사원은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였으나, 학사운영 등 직무감찰까지 포함한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

**[24일]** 국방부,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강직성 척추염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선 병역면제 기준을 완화하되, 사구체 신염 등 병역 회피에 자주 악용되는 질병에 대해선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징병검사 판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

**[24일]** 문화재청, 서울의 문화유적 복원 및 옛 경관을 되살리기 위한 서울 역사도시 조성안 발표. 오는 10월 경복궁 들머리의 콘크리트 광화문이 38년 만에 헐리고 원래의 옛 문과 조망시설인 월대(오름대), 해태상이 딸린 광장이 2009년까지 들어서는 등 600년 고도의 경관을 되살리는 작업 착수

**[26일]** 교육부, 2006년 저소득층 4인 가구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 발표

**[26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은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실체를 왜곡하고 과장한 사건이라고 발표. 국정원 과거사위는 "중정이 관련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

하고, 사건의 범위와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  
고 설명

**【26일】**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  
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공식 출범

**【26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양극화 관련 의제로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29일】**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 씨 사망

# 2

## 2006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새로 선출된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협상해 등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야당을 상대로 이런 일방적인 협상을 벌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치하

**【1일】** 열린우리당, 국회에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며 정부 지원단도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차이퉁>(FAZ)이 보도

**【1일】**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재건축 개발이익 직접환수 추진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 회를 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법안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2일】**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등 사회적 대화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힘

**【3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

표 회담 접촉에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틀 일정으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 2004년 6월 3~4일 설악산 켄싱턴스타호텔에서 2차 회담이 열린 지 1년 9개월 만에 군 장성급회담이 재개됨

**【6일】** 사상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열림. 인사청문회는 2000년 국회에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인 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등에 처음 시작됐으며 2003년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으로 확대된 바 있음.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5년 1월 노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기 시작해 지난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임

**【8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통일 미래지도자 과정’ 신설

**【8일】** 국방부, 4월 말부터 자이툰 부대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

**【9일】** 감사원, 지자체 종합감사 결과발표에서 “지자체는 각종 비리와 편법·부당 행위의 집합소”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

**【9일】** 노 대통령, 사법개혁안 입법을 앞두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수십 년 끌어온 사법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정파적 이해관

계를 뛰어넘어 높은 사명감으로 국민의 편에서 마무리했다”고 치하. 개혁안의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공판 중심주의 확립, 국선변호사 개선 등으로 이루어짐

**【10일】** 노 대통령,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5개 부처 신임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임명장 전달. 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도 있어 아쉬움도 있다”며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잘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하면 좋은 약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

**【14일】** 정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차기 유엔 총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양극화 특별기획 게재.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첫번째 글에서 “감세냐, 증세냐 논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의제 설정”이라며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 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힘. 청와대는 이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며 “감세정책은 ‘비정한 사회’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세금을 줄여가지고서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15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참여정부 3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강연을 통해, “참여정부는 이제 지난 3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 과제인 양극화 문제 해결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힘

**【18일】** 열린우리당, 정당대회를 열고 정동영 의장 선출

**【20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합당

**【24일】** 3월에 열릴 남북 장성급회담 대표 직급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됨. 이 같은 조치는 북쪽

이 지난 21일 전통문을 통해 제안해 이루어짐

**【24일】** 한나라당과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해 파문 확산

**【26일】** 노 대통령, ‘취임 3돌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고 “두 문제 모두 복잡한 문제여서 시끄럽겠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다”며 “따라서 남은 2년도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만만치 않게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함.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는 대통령 지지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새로운 과제는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극화 해소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27일】**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동아일보> 여 기자를 성추행한 일로 탈당. 국회 윤리위원회, ‘대구 술자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의 심사안을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폐기

## 통일 · 외교 · 안보

**【4일】** 미 국방부,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자 테러집단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부 신설

**【6일】** 일본,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30일의 단기비자 면제 조치를 90일 한도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상용비자까지 확대해 항구화한다고 발표

**【7일】** 한·일 관광비자 면제조치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

**【7일】** 세계식량계획(WFP), 최근 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대북지원 사업을 놓고 북한 쪽과 협의 중

이라고 밝힘. 이는 비상 식량원조를 개발원조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북한의 요구에 따른 것임

**[8일]** 정부, 북한 위폐 논란으로 6자 회담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감 표명. 위폐 문제와 상관없이 6자 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 밝힘

**[8일]** 북·일 정부 간 협의, 성과 없이 종료. 북한이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을 일본이 “가짜”라고 단정 지은 데 대해, 북한은 불만을 나타내며 유골 반환을 요구했고 일본이 비전향 장기수로 북한에 돌아간 신광수 등 납치 용의자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자, 북한은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 7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국민 납치유괴범이니 인도하라”고 맞불을 놓음

**[9일]** 북한, 올해 총 45만 톤의 비료 지원 요청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금융 분야에서 온갖 비법(위법) 행위들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반자금세척 활동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두 메시지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16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과의 거래 중단 결정 발표. 이 은행은 2005년 9월부터 미국의 조사를 받아 왔으며, 미 재무부의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수십 년 동안 거래해 온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밝힘

## 경 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공식출범

**[5일]** 재정경제부, 2007년부터 저소득층이 소액 저축을 할 때 정부지원금을 합산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008년부터는 ‘근로소득 지원세제’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힘. 저축 용도는 주택구입·임대, 소규모창업, 본인·자녀의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제한

**[5일]** 환경부,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사업의 허가 과정에 기존의 녹지율 개념을 보완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적용 방침

**[7일]** 한·인도 정상회담.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경제, 기술협력까지 포함하는 한 단계 높은 협정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협상 시작함

**[7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제공,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안기부 엑스파일 파문 등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면서 모두 8천억 원 상당의 사회기금 헌납, 그룹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음

**[9일]** 패션기업 신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개성에서 기업투자 설명회 개최

**[10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북한 방문 귀국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현대아산이 북쪽에 제출한 금강산개발 종합계획을 양쪽이 조속히 확정해 관광특구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달 말 북쪽의 내부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양쪽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17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사의 부채는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것”이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운영 부채 4조 5천억 원은 김영삼 정부부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

**[23일]** 한덕수 부총리, “참여정부는 무리한 단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힘

## 사회 · 문화

**【5일】** 외교통상부, 1947~1974년의 비공개 외교문서 191건, 1만 7천여 쪽을 6일부터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원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일반에 공개.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김대중 납치사건(1973~1974년) △지학순 주교 구속사건(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 구속(1974년) △(총련계) 재일동포 북송·북한 방문, 재일한국인 강제 퇴거(1966~1974년)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1969년)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됨

**【7일】** 국가보훈처,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당한 의사상자나 순직·공상 공무원 등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9일】** 여성가족부, 2006년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 발표. 전체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의 62%인 61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됨

**【9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안전망 구축 △직업교육체계 혁신 △공교육 변화 유도를 골자로 하는 200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8조 원의 예산 투입

**【13일】** 노 대통령이 고안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 특허 취득. 기관이나 개인, 단체가 무상으로 활용 가능

**【14일】** 서울고법, “국가가 고문·조작과 사건 은폐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책임 회피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33년 전 중앙정보부(중정·현 국가정보원)의 고문·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내림

**【19일】** 민단과 총련의 이가시 지부 회원들과 시 관계자, 시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가 코리안 협의회’ 결성식. 재일 한국·조선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지방 지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상

설 공동기구를 결성함

**【21일】** 제7차 남북 적십자 회담 금강산에서 개최

**【22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23개 기관의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청교육대, 6·25전쟁, 민간인 학살, 5·16쿠데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기록이 상당수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확인된 기록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함

**【22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비롯한 15명을 새 추기경에 보임했다고 발표. 김수환 추기경에 이은 한국의 두번째 추기경

**【24일】** 남북 적십자 회담, 국군포로·납북자 생사 확인 협의키로 하는 등 7개 항 합의

**【26일】** 국가기록원이 최근 123개 정부와 지방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 결과 발견된 문서에서 한국전쟁 중 산청·거창 이외에 아산과 강화 등에서도 군·경찰 등에 의해 민간인 500여 명이 집단학살됐다는 정부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됨

**【26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조선일보>(조선닷컴 포함)의 비열하며 악의적인 보도행태에 분노한다”며 <조선일보> 직원의 영화제작사 출입 금지, 영화제작 현장 출입 거부, 시사회 및 제작발표회, 인터뷰 등에 대한 취재 거부를 결의했다고 밝힘. 협회는 또 보도자료 배포 등 <조선일보>를 활용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조선일보사가 주관하는 청룡영화제에도 출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정 치

**【2일】** 4개 부처 개각.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용섭,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명근,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성진

**【2일】**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 남측의 서해 공동어로 구역 주장과 북측의 NLL 재설정 주장이 서로 공방

**【3일】** 노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식에서 “올해 안에 한·미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견해를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 훼손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 냈다”라고 설명

**【15일】** 노 대통령, 이해찬 총리의 사임으로 인한 후임 총리 인선 문제에 대해 책임총리 형태와 분권형 국정운영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힘

**【17일】** 노 대통령,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만찬에서 양극화 해소, 한·미 FTA 협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21일】** 노 대통령, 국무회의를 열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 등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결정

**【23일】** 노 대통령, 포털사이트 다섯 곳에서 생중계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한쪽에선 참여정부를 좌파, 한쪽에선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함. 대통령은 이어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며 “확실적 이론 안에 현실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좌파이론이든 우파이론이든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로 써먹을 수 있는 대로 써먹자는 것이며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설명. 대통령은 또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앞으로 4, 5단계 부동산대책까지 나갈 수 있다”고 밝힘

**【24일】** 노 대통령, 새 총리로 한명숙 의원 지명

**【29일】** 청와대, “참여정부의 권력운용 시스템이나 친인척, 측근관리 시스템으로 보면 악성 곰팡이가 서식할 구조는 아니다”라며 “한 개인이 사고를 저지러 수는 있으나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힘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노 대통령, 3·1절 87돌 기념사에서 “일본은 인류양심에 맞게 행동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보편적 방식의 과거사 청산을 촉구

**[1일]** 미국 국무부, 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마약제조·거래활동 개입 언급

**[5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최고법원, ‘북한 화물선 봉수호 마약밀수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봉수호 선장 등 4명의 선원들에게 무죄 선고

**[6일]** 노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위해 출국

**[7일]**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에 협조 지지를 밝힘

**[7일]** 노 대통령,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 “아프리카와 아랍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2008년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부개발원조(ODA)의 전체 규모를 3배 정도 확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7일]** 남·북·미 정부관리, 뉴욕에서 공식 접촉을 진행하며 위폐 논란 및 6자 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도 불법금융 행위에 관한 정보 교환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북·미 사이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

**[7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 진정한 다국적 기구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14일]**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

**[21일]** 노 대통령, 혼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23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에 대해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힘

**[25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게 같은 민족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한 차석대사는 공식 지지냐는 질문에 “공식 지지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내 말에 우리의 뜻이 함축돼 있

다. 이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비동맹 국가들도 반기문 장관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30일]** 제이 레츠코위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도 아무런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판. “최소한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개성공단을 감시·평가하고 그 내용을 유엔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내어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31일]** 통일부, 제이 레츠코위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개성공단 발언에 대해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개성공단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비판. 이어 “개성공단의 1주 노동시간은 48시간이고 여성 노동자의 산전·산후 휴가, 산업재해 규정 등은 국제노동기구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

## 경 제

**[1일]** 재정경제부, 원화환을 하락에 대한 대책조치로 국외 직접투자 한도 폐지, 외국증권 투자대상 제한 폐지 등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발표. 주거용 국외 부동산 매매가 사실상 완전 자유화됨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출자총액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합의

**[2일]** 유럽연합(EU),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

해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6일]** 한·미 FTA협상 예비협상 착수. 협상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 합의

**[7일]** 노 대통령, 이집트 동포간담회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미래에는 제조업 기술보다 금융·법률·회계·세무·컨설팅·디자인·유통·물류 영역에 도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서비스 부분을 과감히 개방하고 경쟁시켜야 선진국과의 격차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설명

**[7일]** 노 대통령,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 두 정상은 이집트의 정보기술(IT) 허브국가 건설 사업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미디어방송기술(DMB)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이집트의 에너지 개발사업과 공항, 석유화학 시설 등 대형 건설사업, 이집트 군의 현대화 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

**[7일]** 재정경제부, 고액 납세자들의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포탈자 은닉재산 신고 시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9일]** 노 대통령,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2008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

**[15일]**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쪽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CIQ)가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에서 각각 준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

**[20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 김용삼 북한 철도상,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3국 철도 운영자 회의에서 한반도 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28일]** 노 대통령, 상공회의소 특강을 통해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며, 세금 거둬서 복지에 지출하는데 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3

분위 계층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설명

**[30일]** 정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고액 아파트 대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 발표

**[31일]**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가 천명하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초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입안되고 보완·강화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3대 기초는 거래의 투명화를 지향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밝힘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강화 기준 유예, 약값 재평가 개선안 유보) 외에도 지난해 몇 가지 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사실을 밝히고, 추가로 한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쇠고기 수입 확대, 약값정책 개입 등을 요구

## 사회·문화

**[1일]** 유홍준 문화재청장, 북한의 만월대 복원, 개성박물관 지원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황우석 교수 등 4명 소환조사

**[2일]** 극장 경영인 대표 당·정 간담회에서 극장주들,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비율을 자율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간담회에 참석한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이에 극장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화답

**[6일]** 황우석 교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증거기초 4~11번의 디엔에이(DNA) 지문 분석에 쓰이는 시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시인

**[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년의 5분의 1(73)일로 축소하는 ‘영화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7월 1일부터 실제 적용

**【7일】** 정부, 연금 수급대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7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10일】** 김연아(16),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2008' 발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비전 제시

**【14일】** 한국야구대표팀, 이승엽, 최희섭의 홈런에 힘입어 한국 야구사상 최초로 야구 중가 미국 대표팀에게 승리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취재차 들어갔다가 팔레스타인해방 인민전선(PFLP)에 납치된 용태영 <한국방송> 두바이 특파원이 24시간 만에 무사히 풀려나

**【16일】** 대법원,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며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힘. 법원 판결로 새만금 물막이 공사 재개

**【20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연루된 교수들에게는 정직 처분

**【21일】** 대검찰청,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키로 법원과 합의했다고 밝힘.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낼 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내지 않고,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뒤에 제출하는 '증거 분리제출 제도' 전면 시행

**【29일】** 국제노동기구(ILO),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95차 이사회를 열어 한국 정부에 공무원 단결권 확대와 파업권 허용을 촉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확정

## 정 치

**【17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힘

**【17일】** 국회, 한명숙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진행

**【17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차오강찬 중국 국방부 장관, 한·중 국방장관 회담.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지역 안정에도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두 나라의 군사협력을 증진하기로 함의

**【18일】** 노 대통령,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등에서 다시 공천비리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선거 부정은 여러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그중에서도 공천비리아말로 구조적으로 부정을 파생시키는 근원적 비리”라며 “공천비리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19일】** 한명숙 총리 국회동의 가결.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

**【20일】** 한명숙 신임 총리, 취임식에서 “각 부처는 말로만 하는 행정, 책상에서만 하는 공리가 아니라 직접 관계되는 현장으로 내려가 몸을 낮추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해 보자”며 “특히 내 이익과 내 부처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거기에 얽매 있다면 국민의 평안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만큼, 부처의 이익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놓아 버리자”고 밝힘

**【24일】** 남북 장관급회담 종결회의, 모두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공동보도문을 채택.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합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비료지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결부시켜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 합의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안’ 통과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미국은 지난 2월 북한 위조달러 수사 칼날을 중국 국영 중국은행(뱅크 오브 차이나)에까지 겨냥, 중국 쪽을 긴장시켰다고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3일 보도. <뉴스위크>는 “미국 관리들은 (북한 금융거래를 겨냥한) ‘표적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

**【3일】** 지난 2월 취임한 버웰 벨(59)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현대화·민주화돼 있으며, 경제가 번창한 위

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존경한다”고 밝힘. 전임 리포트 사령관이 “다음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등 주권 침해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6일]** 호주서 PSI 합동군사훈련 시작, 한국 첫 참관단 파견

**[6일]** 정부, ‘아시아에서 해적 행위 및 선박을 상대로 한 무장 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ReCCAP)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힘

**[6일]** 노 대통령, 스테페 메시치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상호 상주 대사관 설치 방안을 검토, 관광·문화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11일]** 일본 정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디엔에이 감정 결과 발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국에도 일본 이상으로 납치 피해자가 있으니 한국 쪽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함

**[13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쌍방에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경쟁력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높여 줄 것이고, 한·미동맹은 정말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

**[13일]** 북한 6자 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장, 6자 회담 지연 시 핵무기 증강 의사를 밝히고 “마카오 방코텔타아시아의 동결된 자금을 돌려주면 그 순간 회담장에 갈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촉구

**[14일]** 일본,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이 포함되는 동해 해역에서 수로탐사를 하겠다고 14일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 정부는 철회 요구와 함께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힘

**[17일]** 정부,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일본 수로탐사 문제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로 국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와 무관하게 다루며, 일본이 수로탐사를 강행하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18일]** 노 대통령,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도교를 출발해 독도로 향하는 것에 대해 독도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용한 대응’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독도 도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고 경고.

**[18일]** 해양경찰청 비상경계령 내림. 경비함 18척 독도 및 주변 바다에 배치 및 경계활동

**[19일]** 정부, 일본 수로측량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이 우리(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적 수로측량 계획을 강행한다면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힘. 해양경찰청, 20여 척의 경비함을 독도 근해에 집중배치하고 초계기를 강릉공항으로 이동배치하는 등 독도해역 감시에 나서. 국회, 일본의 수로측량 실시 및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22일]** 한·일 외무차관 회담 타결. 일본은 6월 말까지의 독도 근해 수로측량 계획을 중지하고, 한국은 6월 독일에서 열릴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동해 해저지명 등록 방침을 유보하기로. 양국은 이번 사안이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5월 중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확정 관련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

**[25일]** 노 대통령,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 발표.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규정. 대통

령은 이어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고 밝힘

**【25일】** 피터 프라하 국무부 마약단속국 아시아·아프리카·유럽 담당국장은 이날 상원 국토안보·정무위 주최로 열린 북한 불법행위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일을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비록 그 가능성을 우려하긴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27일】** 정부, 독도 문제에 ‘범정부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이 기구는 △각 부처에 설치된 독도 관련 태스크포스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대책을 수립하고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는 등 노 대통령 특별담화의 후속대책 추진을 총괄 조정할 계획

## 경 제

**【1일】** 노 대통령,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회의 핵심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밀고 당기고 고려할 것도 많지만,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남북교류나 시장개척에 한 발짝 더 먼저 나가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당부

**【13일】**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쌍방의 견해 차이로 1년 이상 중단된 상태라 안타깝다”며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향한 큰 이니셔티브가 될 한·일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향해 지금 더욱 노력할 때”라고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

**【18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사전준비협의를 통해 로드맵 확정. 본협상은 17개

분과로 진행되며 5월 19일까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기로 결정

**【19일】** 정부,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근거 없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 워싱턴에서 개성공단 설명회 개최

**【19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부자 소유의 주식 1조 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 중

**【20일】** 론스타, 1천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를 대비 7,250억 원을 예치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힘

**【25일】** 다른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비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 무디스는 상향 조정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안보위험 완화(북핵문제), 양호한 재정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호조 등을 설명. 무디스를 제외한 3대 신용평가기관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려 무디스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했고, 피치도 지난해 10월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해 무디스보다 두 단계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

**【27일】** 대검찰청,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재벌과 타협 없는 원칙적인 수사 천명

**【27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 확인

**【28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 한·일, 한·중 등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힘

**【30일】** 재정경제부, 다음 달 4일 인도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위기기 긴급 자금 지원 체제’(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합동 서명식이 열린다고 밝힘. 이 지원체제가 가

동되면 아시아지역 나라들이 외환위기 같은 금융 위기가 닥치면 최대 8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아세안 +3은 세계 외환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음

**[30일]**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주거용 국외 부동산 구입이 자유화된 이후 국외 부동산 구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4월 말 현재 지난해 전체 금액의 6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30일]** 세계은행(IBRD)의 2005년 연례보고서 '글로벌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방식이 가장 공격적이고 독소조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투자외항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 혜택을 받으며 상대국에게는 투기성 단기자금인 핫머니와 지적재산권도 투자로 강조하는 등 주로 투자자인 미국에는 유리하고 상대국에 불리한 방식을 택함

## 사회 · 문화

**[3일]** 노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위령제 참석. 대통령은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과거사 정리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

**[4일]**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동원호 피랍. 한국인 8명 포함 모두 25명의 선원 억류

**[5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이블(Able) 2010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힘. 1차 연도인 2007년부터 중증 장애인(지체·시각·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며, 2010년까지 10만 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모두 7,05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6일]** 청와대, 혼혈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등 소수인종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힘

**[11일]** 영화감독 신상옥 사망. 향년 80세. 금관문화훈장 추서

**[12일]** 남북의 20~25살 사이 남성 평균키가 15Cm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에이피 통신>의 '2005년 상반기 동아시아 통계 연감'을 인용해 보도

**[18일]** 문화재청, 영·호남지역 마을 10곳의 옛 돌담길을 등록문화재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18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중앙정보부(중정)가 1971년 8월 23일 실미도 사건을 일으킨 공군 684부대의 창설 때부터 실미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적극 관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힘

**[18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교도소나 구치소 수형자에 대한 편지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행법 개정안'을 의결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상장기업 여직원의 비율이 평균 2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됨.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의류업·백화점 등 일부 직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남

**[27일]** 노사정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대표와 비정규직노동자대표도 참석하기로 결정

**[27일]** 남북 최초의 공동 자원개발 사업인 북한 정춘 흑연광산 준공

## 정 치

**【2일】** 국회 본회의,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안 등 3·30 부동산대책 관련 두 법안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등 모두 6개 법안을 처리. 내년 6월부터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 소환이 가능해져

**【4일】** 정부, 해양수산부·외교부·환경부 등 7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343억 원을 들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독도의 보전과 이용에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힘

**【9일】** 노 대통령, 몽골 동포간담회에서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를 양보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이른바 남침로를 완전 포기한 것이고, 금강산도 싸움하면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그런 것을 연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 믿음을 내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9일】** 통일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 협의를 위해 16일부터 실무접촉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

**【13일】** 남북한 당국, 25일 정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기로 합의

**【16일】**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17일】** 남북, 금강산호텔 실무접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합의

**【21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5·31 지방선거 지지유세 도중 피습

**【22일】** 외교통상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가 금지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함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힘

**【22일】** 경향공모함인 대형 수송함(LPX) ‘독도함’(1만 4천 톤급) 시운전. 길이 199m, 폭 31m 규모인 독도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의 수송이 기본임무이며, 대수상전, 대공전, 대잠수함전 등을 지휘통제하는 지휘함의 기능도 수행

**【24일】** 노 대통령 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 개최. 30대 그룹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업에 올해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협력 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에너지 분야로 확대

**[30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폴 윌 포워츠 세계은행 총재에게 북한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공식 요청. 윌 포워츠 총재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택할 경우 지원 가능성을 시사

**[31일]** 5·31 지방자치제 선거 투표. 투표율 51.6%로 집계. 전국 16곳의 광역단체 시·도지사 가운데 12곳 한나라당, 2곳 민주당, 1곳 열린우리당, 1곳 무소속으로 당선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 1차 서울·워싱턴 포럼 기조연설에서 부시 행정부에 북·미 간 직접대화 촉구

**[1일]** 해양수산부, 국제수로기구(IHO) 마라토스 이사장과 이 기구의 개발도상국 수로 업무능력 배양 기금에 해마다 10만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이 첫 지원국이 됨

**[2일]** 북핵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각국 수석 대표의 비공식 만남을 제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6일]**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7명 미국 도착. 미국이 2004년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일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 미국 내 법적 지위는 '정치적 망명자'가 아닌 '난민'으로 규정

**[6일]** <뉴욕타임스>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겠지만, 그럼에도 올여름은 북한이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아리랑 축전과 수천 명이 참여하는 매스게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10일 까지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 이 신문은 8월 중 북한방문 상품 가운데 일부는 이미 매진됐다고 덧붙였다

**[7일]** 노 대통령,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방 위해 출국. 몽골 울란바토르 도착

**[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7~2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방북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에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북핵 6자 회담 복귀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8일]** 노 대통령, 남바린 옹흐바야르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호와 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공동성명 채택

**[10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최근 미국 이민법원이 한국 국적의 탈북자 서재석 씨의 미국 망명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망명 신청을 수용한 것은 자칫 한국 정부가 정치적 박해를 한다는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 판결이 (한국 국적 탈북자 미국 망명의)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힘

**[11일]** 노 대통령,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아제르바이잔 관계 및 협력의 원칙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

**[11일]** 통일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관세 정책 홍보실장 명의의 기고를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의 '노동자 착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북쪽 근로자의 임금은 북한 안 다른 노동자들의 두 배이며,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노동환경 역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

**[11일]** 주한 유엔군사령부,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미 군사전문지 <성조>가 리처드 밀스(준장) 주한미군 특전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

**[14일]** 노 대통령, 7박 8일 동안의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 순방을 모두 마치고 귀국

**[14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북한 기업과 거래가 있는 북수의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15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인권 등 다른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힘

**[16일]** 노 대통령, 청와대를 방문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도를 그려 가며 독도 문제를 설명하고 “결국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이고, 독도는 일본이 잠점했던 것인데 일본 지도자들이 이를 망각하고 있다”고 말함

**[18일]**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면, 6자 회담과 병행해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대북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

**[18일]** 달라이 라마,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고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가 밝힘. 정부는 이에 “한·중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입국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22일]**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먼저 평화체제를 구축한 뒤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며 기타 무기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양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22일]** 에이피 통신의 방송부분인 APTN, 서방 언론으로서 최초로 평양에 상설 지국 개설

**[23일]** 정부, 한·중 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달라이 라마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밝힘

**[30일]** 정부, 캐서린 스티븐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 차관보가 개성공단 방문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북쪽도 초청장을 발급했다고 밝힘

## 경 제

**[4일]** 산업자원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세균 장관과 어린이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한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원’(EveR-1)을 공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백문홍

박사팀이 만든 에버원은 키 160cm, 몸무게 50kg으로 한국 여성의 얼굴과 신체 특징을 따라 만들어짐

**[4일]** 중소기업청, 6월부터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납품업체와 이들에게 납품하는 2차 납품업체를 구분해, 납품단가와 어음결제의 불공정거래 등 하도급거래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4일]** 한·중·일 3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금융통합이라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아시아 공동통화(아쿠·ACU) 도입을 위해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

**[9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할 것”이라며 중단 없는 개성공단 사업을 강조

**[11일]** 석유공사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소카르·SOCAR)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계기로, 카스피해 중남부에 위치한 이남(Inam) 유전광구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12일]**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상속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가 곧 1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힘

**[13일]** 노 대통령,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은 한국에 ‘원유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주요 건설·플랜트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

**[15일]** 외교통상부, 농산물 특별수입관세와 역외 가공 특례(개성공단) 등이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쪽 초안 요약본을 공개

**[16일]**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상품무역협정을 최종 합의해 정식 서명. 개성공단 제품 또한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18일]** 재정경제부, 중장기적 환율정책의 일환으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실행한다고 발표

**【18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거품 경고

**【19일】** 크기 작아진 새 만원권 지폐 시제품 발표. 2007년부터 새 천원권 지폐와 함께 유통

**【19일】** 노 대통령,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해 “부동산 거품이 들어갔다 꺼질 때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는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어 이걸 막자는 것”이라 밝히고 “지금 모두 태연한데 이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 끝나도 안 바뀐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강한 의지를 표명

**【22일】** 창고형 매장을 고수하는 등 전반적인 매장 운영 방식이 고급화를 지향하는 한국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월마트, 한국 철수 결정

**【24일】** 남북 열차 경의선·동해선 동시 시험운행이 북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

**【26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산 제품의 모조품 생산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무역협회에 ‘피해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사례 수집 및 현지 단속 지원활동을 펴기로

**【26일】**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방안 철회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고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보도

**【29일】** 산업자원부, 6월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수범한다는 뜻으로 승용차 요일제 적용하기로 결정

**【30일】** 서울중앙지법, 20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 8천억 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원을 선고

**【30일】** 세계 최초의 북한투자전문 펀드가 영국에서 설립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

## 사회 · 문화

**【1일】** 외교통상부, 노르웨이 베르겐 사스호텔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7차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에 박경서 인권대사와 김영석 주노르웨이 대사 등이 참석한다고 밝혀. 비정부기구 주최의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정부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1일】** 국방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해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함. 한명숙 국무총리는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이주나 생계문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철저히 파악해 조사하라”고 지시

**【3일】** 보건복지부, 모든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등재하는 현행 약값 결정방식(네거티브 시스템)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을 위주로 선별해 등재하는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

**【8일】** 통계청,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서 우리나라 출생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발표

**【9일】** 지린성 바이산시 원평(운봉)댐 수몰지역에서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고분 2천여 기와 돌로 쌓은 성터 발견.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 나라 때의 것”이라고 주장

**【10일】** 민주노총, 반년 만에 노사정위 복귀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통해 대추리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17일】** 국제기자연맹(IFJ)이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위헌 소송 심판을 앞두고 신문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기자협회보>가 보도. 크리스토프 워렌 국제기자연맹 회장, “신문법은 세 신문사가 시장의

60% 이상, 한 신문사가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독과점이 팽배한  
한국의 현 상황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1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과 재일본대  
한민국민단(민단) 반세기 만에 첫 공식회담을 열  
고 △두 단체의 화해·화합 도모와 재일동포사회  
단합을 위한 협력 △6·15 민족통일대축전 일본  
지역위원회 공동 참가 △8·15 기념축제 공동개  
최 △교육·민족문화 진흥사업 공동 노력 △동포  
사회 복지·권익옹호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창  
구 설치 등 6개 항의 공동선언문 채택

**【22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이사회, 한국의 스  
크린쿼터 지키기 운동을 지지하는 공식 선언문  
채택

**【22일】**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향  
년 61세로 별세.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유엔기구  
수장 역임. 무궁화훈장 추서

**【25일】**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인  
구 고령화·저출산으로 노인인구비율 급증

**【2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보건총회에  
서 리철 북한대표부 대사를 만나 보건의료 협력방  
안을 논의하고 남북 보건의료에 관한 합의서 체결

**【25일】** 노 대통령 주제로 17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어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 발표. 학교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인권침해 사범 강력처벌,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선 권리구제 뒤 통보를 명문  
화하기로

**【26일】** 법원,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취지  
의 글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  
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61) 동국대 사  
회학과 교수에게 집행유예 선고

**【27일】** 인도네시아 강진. 사망 4,300명 넘어

**【30일】** 서울대,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조선왕조실  
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을 도쿄대로부터 돌려받  
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151호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됨

**【30일】** 방송위원회, 북한에서 2006 월드컵 주요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  
다고 밝힘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결과는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열린우리당에게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의 참모습이 나오는 법이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멀리 보고 준비하며 인내할 줄 아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

**【1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 사퇴

**【1일】** 북한 경수로 사업 10년 6개월 만에 공식 종료

**【6일】** 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독선과 야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역사발전의 장애물”이라며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조

**【7일】** 권호용 남북 장관급회담 북쪽단장, 6·15 공동선언 6돌 기념 남북 이산가족 특별상봉에서 남북자 김영남(44) 씨 남쪽 가족과 상봉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힘. 김영남 씨는 일본인 남북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

**【8일】**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남쪽의 전

투합정이 북쪽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9일】** 노 대통령, 청와대에서 6·10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10일】** 안경호 북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 반일 6·10만세시위 80돌 평양시 보고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공동선언)가 날아가고 북남 교류협력이 모두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

**【13일】** 노 대통령,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개혁 피로증’이란 말이 있다”며 “특히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혼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

**【13일】** 김원웅 정문헌 김효석 이영순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

**【14일】** 열린우리당,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1년 달이 지나서야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미국 의회가 협상 개시 직후 행정부와 대화창구를 마련한 것과 대조를 이룸. 한나라당은 아예 무반응

**【14일】** 6·15 민족통일대추전 14~17일간 광주 개막. 김대중 전 대통령,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남·북 해외 당국과 민간인 600여 명 참여

**[15일]** 6·15 민족통일대축전. '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 발표

**[18일]** 한나라당, 1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법 등 모든 법안을 사립학교법과 연계해 처리한다고 밝힘

**[19일]** 국회, 국회의장에 임채정 의원 선출. 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헌법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힘

**[20일]**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재판 중인 전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과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사위에 배정돼 '이해 충돌 회피'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 일어남

**[21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준비시간도 부족하고, 돌출상황 때문에 5월에 합의한 김 전 대통령의 6월 말 평양방문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방북연기 방침을 밝힘

**[22일]** 노 대통령,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안보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 맞으나, 협상을 추진하는 데 안보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안보적 이해는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풀어 나갈 것이고, 협상은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미동맹이 전혀 다른 독립변수임을 명확히 밝힘

**[26일]** 방위사업청, 중부전선에 있는 육군 제5군단이 우리 군 역사상 처음으로 군단·사단·연대·대대를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지상전술 C4I(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힘. 방위사업청은 "독자적인 작전통제능력 구비를 위한 출발점을 세웠다"고 설명

**[27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시스템은 탈세를 하다가 적발되면 세금만 내면 되고, 적발되지 않으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돼 탈세가 양산돼 왔다"며 "앞으로는 탈세법을 엄하게 처벌하고 확실히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힘

**[28일]** 학교급식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한나라당

은 학교급식법 등 5~7개 법안처리를 사립학교법과 연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꿈. 이로써 학교급식법은 1년 6개월 만에 처리될 전망

**[30일]** 임시국회,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민생 법안과 안대희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 5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연계 방침으로 로스쿨법은 처리되지 못함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미국, 북한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평양으로 초청했으나 이 제안을 거부

**[5일]** 정부, 12~13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 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에서 '독도 기점' 안을 통해 쪽 경계 획정의 정부 단일안으로 제기하기로 결정

**[6일]**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 한 총리 방문에 맞춰 유교적 권위주의를 깬 여성총리, 민주화운동의 상징 등 한 총리를 한국사회 변화의 상징이라고 보도

**[8일]** 한명숙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의 연쇄 회담에서 외교장각 도서 반환을 공식 요청. 프랑스는 장기·정기 전시회 형식으로 한국서 공개하기로 답변해 사실상 반환 거부

**[14일]** 한명숙 총리, 베를린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 한 총리는 개성공단 사업에 독일 기업의 적극적인 방문과 진출을 당부했고, 메르켈 총리는 한 총리의 주문에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화답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심각한 우려 표명

**[19일]** 미군 태평양사령부, 괌 인근 해역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3개 전단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인 '용감한 방패 2006' 훈련 진행

**[20일]** 북한 외무성,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해 “발사는 애초부터 국가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 누구든 비방할 권리가 없다”고 공식 입장 표명

**【21일】** 북·중, 베이징에서 군고위급 접촉

**【28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 북 미사일 발사 자체 촉구

**【29일】** 납북자 김영남 씨 금강산에서 모자상봉.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납치도 자진월복도 아닌 돌발적 입북이며, 메구미 씨의 유골이 사실임을 확인. 김 씨와 메구미 씨의 딸 은경 양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밝힘

## 경 제

**【2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쪽 초안 일부 공개. 내국민 대우 등 공격적인 요소 많음

**【4일】**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열차 시험운행,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등 9개 항의 합의문 채택

**【4일】** 법무부, 채무 관계의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등 서민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발표

**【4일】**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납북 열차 시험운행 무산에 강한 유감 표명

**【5일】**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공식 협상 시작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에서 노동과 경쟁 2개 분과에서 처음으로 통합협정문 마련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 3일째. 김종훈 협상대표, “오늘까지 분쟁해결, 위생검역(SPS), 통관·원산지, 금융 등 8개 분과와 1개 작업반(자동차)이 마무리됐다”며 “전체적으로 협정문안의 40% 정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힘. 쟁점사항에서는 이견이 심해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 폐막. 모두 17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에서 양쪽의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 협정문을 작성

**【12일】** 주한 외교관 76명 개성공단 방문. 각국 대사는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

으나, 개성공단 폼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냉소적 반응

**【16일】** 건설교통부, 14~1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지역을 개방하고 중국은 산둥성을 즉시 개방하는 시범적 항공 자유화를 하기로 합의

**【16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담보능력이 취약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해 주기로 결정

**【22일】** 코트라·현대아산, 대규모 외국기업 대상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개최

**【25일】** 정부, 내년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 일자리 전담창구를 개설해 원스톱 서비스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노인 일자리 창구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나뉘어져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론스타 의혹 관련해 외환은행 본점과 한국투자공사 본사 압수 수색

**【30일】** 행정자치부·열린우리당,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힘

## 사회·문화

**【2일】** 법원,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을 둘러싼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

**【2일】** 지난달 4일 팽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둘러싼 민·군 충돌 뒤 한동안 끊어졌던 정부와 팽택 주민들 사이 대화 창구가 다시 가동됨

**【7일】** 나이지리아 남부 유전지대에서 한국인 기술자·노동자 5명 피랍

**【7일】** 정부, 노동자 정년 60세까지 의무보장 및 영유아 보육료의 30%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8일】** 오사마 빈 라덴 이후 이라크 저항의 상징이라 지목됐던 알자카라위가 미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이라크 당국 발표

**【9일】** 2006년 독일 월드컵 개막

**【12일】** 박세리, 2년간의 부진을 털고 맥도널드 엘피지에이 챔피언십에서 우승

**【13일】** 한국 축구 대표팀 2006 독일월드컵에서 이천수, 안정환의 연속골로 토고를 2:1로 제압

**【15일】**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

**【17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참가자들, 한반도의 긴장 완화, 아시아의 민주주의 신장, 세계의 평화 진전 등을 촉구하는 ‘광주선언’을 발표

**【19일】** 한국 축구대표팀, 2006 독일월드컵에서 프랑스와 1:1로 비김

**【21일】**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 ‘실패한 외고, 이제는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 집중지역 추가설립 불용 △학생모집 광역자치단체(지역) 제한 △설립 취지 벗어난 학교의 일반 학군 환원 등 방침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관철하겠다고 밝힘

**【21일】** 위탁급식 업체 씨제이푸드시스템(주)이 급식하는 수도권 중·고교 26곳에서 학생 1,200여 명이 집단으로 설사·복통 증세를 보여 급식 중단. 정부의 학교 급식제도 개선책을 담은 법안은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연계처리에 막혀 1년 4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

**【22일】** 대법원,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뀌 달라며 낸 개명·호적 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법원에서 호적 성별변경 허가를 인정하는 첫 판결

**【22일】** 감사원, 전국 20여 개 사학들이 교비와 재단 전입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교수와 교사 채용

또는 학생 편입 등을 빌미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3일】** 자크 로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6월 7일 남북한 정상에게 단일팀 참가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힘

**【23일】** 정부,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업체인 씨제이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1만여 개 학교와 대형 외식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급식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24일】** 한국 월드컵대표팀, 스위스에 패해 16강 진출 실패

**【25일】** 법무부, 경미한 범죄는 무죄 처분을 받자마자 수사경력 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29일】** 대법원,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방 사장은 △아버지인 방우영 씨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 5천 주를 명의신탁 형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23억 5천만 원의 증여세 포탈 △부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처럼 거짓 전표를 꾸며 법인세 1억 7천만 원 포탈 △회삿돈 25억 7천만 원을 사주 일가 명의로 조광출판이나 스포츠조선 등의 계열사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음

**【29일】** 헌법재판소, 신문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한 신문법 4, 5조와 정부가 신문사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27조의 위헌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결정을 내렸으며, 경영자로 신고조항(16조)에는 합헌 결정 내림.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조항(17조)에 대해서는 시장 규제로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림

**【30일】** 민주노총 소속 금속산업연맹, 현대·대우차 등 완성차노조 산별노조 전환이 가결되었다고 밝힘. 총 조합원 12만 7천 명의 거대 금속노조 탄생

## 정 치

**【3일】** 5개부처 개각. 경제부총리에 권오규,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기획예산처에 장병완, 청와대 정책실장에 변양균, 국세청장에 전균표

**【3일】** 방위사업청,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대공·대함 미사일 'SM-2 블록ⅢB'를 장착하기로 하고, 지난해 미국 정부와 구입계약을 맺었다고 밝혔

**【11일】** 국방부, 2007~2011 국방중기계획 수립 발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 공군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전역의 감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중조기경보기(E-X), 다목적 실용위성, 무인항공기(UAV),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을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 기간 중에 착수해,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하기로 결정

**【12일】** 1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6차 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

**【13일】** 남북 장관급회담 성과 없이 결렬. 미사일

관련 시각 차이만 확인

**【14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 주장

**【19일】** 노 대통령,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일의 대북 강경대응과 관련해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20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쌀·비료 지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일본도 (북한과) 일반 교역을 끊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며 “유엔 결의안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

**【20일】** 청와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거진 현직 판·검사들의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

**【21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고 주변국에 불안을 주고 있는데도 일부

국내 언론은 오히려 일본의 이런 태도를 두둔하고 한국 정부에 강경 드라이브를 주문했다”며 “그 결과는 심대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강경 드라이브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힘

**[26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 성북읍과 송파갑, 경기 부천시사, 경남 마산갑 등 네 곳에서 실시. 총 4곳 중 민주당 1곳 한나라당 3곳 당선. 투표율은 24.8%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낮은 수치 기록.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씨 당선

**[30일]**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으로, 동아일보는 ‘약탈정권’으로 표현하며 정부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취재협조 거부 결정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북한, 요코타 메구미 관련 논란 해명을 위해 일본 언론들을 직접 평양으로 초청.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엔에이치케이> 등 6곳의 일본 언론사가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 계획

**[5일]** 정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동북아 군비 증강의 발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의 6자 회담 즉각 복귀를 촉구

**[5일]** 북한 동시다발적으로 총 7발의 미사일을 발사. 북한은 3일 자국 선박에 동해항행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5일]** 일본, 독자적 대북 경제 제재 단행

**[5일]**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 독도 해류조사를 무사히 마침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

**[7일]**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중국을 시작으로 6자 회담 참가국을 차례로 방문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일 비공식 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들어감

**[11일]** 노 대통령, 일본의 북한 미사일 관련 대북 선제공격론 공론화에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을 강하게 성토.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달러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보여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장부만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선참재판’(목을 먼저 자르고 재판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

**[11일]**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12일]**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군사적 제재를 행할 수 있는 근거인 유엔헌장 7조에 따른 내용을 뺀 공동 결의안 제출해 일본·미국과 대립구도 형성. 중국은 미·일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밝힘

**[13일]** 정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통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힘

**[14일]**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양국은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진 반환 예정기지 29곳 가운데 미국이 오염 치유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등 15곳을 한국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미국은 한국 정부의 구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

**[15일]**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및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고위급 외교관을 중국, 미국에 파견, 다각적인 고위급 방문외교 펼치기로 결정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 채택. 일본과 중국의 결의안 초안과 ‘유엔 헌장 제7장’의 언급을 뺀 영국, 프랑스의 절충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 실질 제재가 아닌 경고성 내용

**[15일]**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극히 위

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됐다”며,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성명은 “미국의 극단한 적대행위로 인해 최악의 정세가 도래되고 있다”며 “자위적 전쟁 역지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16일】** G8 정상회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환영하고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 조기 복귀를 촉구

**【25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예비투표인 ‘스트로 폴’에서 1위를 차지

**【28일】** 아세안지역포럼(ARF)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종료. 남북 외무장관 회담 무산

**【28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 아세안지역포럼 오전 회의에서 기존 북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된다면 이를 전면 배격하며 아시아협력연단에 계속 남아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28일】** 이스라엘, 레바논 카나 공습.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 발생

**【31일】** 이스라엘,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 결정

## 경 제

**【1일】** 바이오디젤 판매 시작

**【4일】** 재정경제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인 관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 의무화했던 한국은행 신고가 면제돼 개성공단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인들이 불편을 덜게 됨

**【6일】** 정부,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비과세·감면 조치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영세자영업자 세감면,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인·양도세 감면 등 10개를 연장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로 하는 등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

**【10일】** 노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비판 의견을 수렴해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협상팀과는 별도로 국내팀을 운영할 것을 지시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 시작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 의약품 분야를 둘러싼 양국의 정면충돌로 회의 모두 취소

**【24일】**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에 내정

**【25일】**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청약 제도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청약 제도 개편 방안’ 발표

**【27일】** 조세연구원,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확대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 사회·문화

**【2일】** 법무부, 남편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 이혼절차 등을 폭넓게 담은 민법 개정 시안 발표

**【4일】** 정부,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 개를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

**【6일】** 대법원, 도주죄 사건 상고심에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줬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임의 동행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9일】**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외국어고들이 7차 교

육과정을 지키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고, 설립 취지를 어겨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12일]** 정부, 5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힘

**[13일]**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 1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성 취업자의 과반수가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16일]** 중부권 집중호우로 큰 피해 발생.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위기경보 '경계' 발령

**[17일]** 정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및 재정지원 결정

**[18일]** 정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19일]** 북한, 쌀·비료 등 남쪽의 인도주의적 지원 중단을 이유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통보

**[21일]** 북한 <중앙통신>, 최근 내린 폭우로 북한에서 수백 명이 사망·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도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추진하라고 권고

**[25일]** 보건복지부, 가격 대비 효율을 따져 건강보험 대상 약을 정하는 포지티브(선별등제) 방식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26일]** 문화관광부, 태극기 독도 무궁화 한글 김치 자장면 길거리응원 고인돌 등 '100대 민족문화 상징목록' 발표

**[27일]** 정부·열린우리당, 전국에 만연한 사행성

도박장을 제재하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폐지, 사행성 성인오락기 제심의·퇴출,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의 대책 발표

**[28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위성 2호 발사 성공. 우리나라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아홉 개의 위성을 보유하게 됨

**[28일]** 정부·열린우리당,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제한적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

**[30일]** 지난 4월 4일 소말리아 반군에 납치돼 억류되어 있던 원양어선 '동원628' 호 선원 25명 석방

**[30일]** 북한, 집중호우 피해로 <아리랑> 공연의 취소방침 공식 통보

## 정 치

**【2일】** 육군, 앞으로 10년 안에 수색이나 지뢰 탐지를 위한 정찰용 군사로봇을 개발해, 보병부대 및 대테러부대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3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 관계도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되었다고 설명

**【4일】** 정부, 북한 수재민 돕기와 관련한 지원 의사를 밝힘. 한나라당도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촉구

**【8일】** 사임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내정

**【9일】** 노 대통령,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평택 입주 시기인 2009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2009~2012년 어느 때라도 상관없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명성과 관련해 “어느 선진국에 비해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대통령이 에프티에이

이해관계를 다루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힘

**【9일】** 외교통상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1987년 처음 제기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안으로 갑작스레 제기된 현안도 아니라고 설명

**【11일】** 정부, 북한 수해 관련 대북지원 규모와 시행방식을 확정해 발표. 민간대북지원단체와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

**【11일】** 한명숙 총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하고도 착실하게 논의해 왔던 문제이며 한·미 연합사령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국회에도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며 “일부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언

**【11일】** 정부, 광복절 특사대상 발표

**【13일】** 노 대통령, 중앙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북한 비상시의 작전계획(작계5029)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은 국경까지 미국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단약에 대비해, 우리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

의를) 연기하거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힘. 대통령은 또 “보수언론은 권력화를 넘어 아예 정권 교체 투쟁을 하고 있다”며 “언론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넘어 언론이 정치 권력화하는 수준까지 가면, 언론과 정권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14일]** 이태식 주미대사, “미 정부 쪽 인사들은 (작전통제권 이양이)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을 반영한 적응이고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동맹 와해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잘못된 인식이 퍼져 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

**[15일]** 노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서 인권도,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며 “관용과 인내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힘

**[16일]** 노 대통령, 전효숙(55·사시 17회)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

**[16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대책 발표

**[16일]** 이용훈 대법원장, 기업재판 봐주기와 판사 비리 등 최근 법조계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며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종래의 재판관행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지적

**[16일]** 노 대통령, 국방위 여당 간사인 안영근 의원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작전통제권 환수 국민투표에 대한 의사를 묻자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는 것이고,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추진돼 온 문제인데 국민투표에 부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

**[17일]** 국방부, 현행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이행계획(로드맵)’ 초안 일부

를 공개

**[21일]**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시작.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한·미 양국 군대의 지휘소(CPX) 연습

**[23일]** 정치권과 언론이 온통 ‘바다이야기’로 정부를 성토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05년 사형성 도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밝혀짐

**[29일]** 한명숙 국무총리, ‘바다이야기’ 등 사형성 오락기 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

**[30일]** 기획예산처, 노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 발표. 2010년까지 주요 경제·사회 제도에 대한 혁신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 9천 달러 달성. 이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8.6%인 복지지출 규모를 2020년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의 평균인 2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31일]** 노 대통령, <한국방송>과의 특별회견에서 한나라당의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와 관련해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추진하던 것인데 한나라당의 대통령들 아니냐”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반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

**[31일]** 정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여성인권대사로 임명

**통일 · 외교 · 안보**

**[10일]** 외교통상부, 일본과 제6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회담 개최와 관련한 사전 협의 및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외교부 조약국장 간 협의를 11일 도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15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15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똑같이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강도 높게 항의

**【15일】** 외교통상부, 성명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가 군국주의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또다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양국 우호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 규탄

**【15일】** 중국, 성명을 통해 “국제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인류의 양식을 짓밟은 행위”라며 “강력한 분노와 규탄의 뜻을 표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20일】** 정부, 유엔 사무국이 한국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다고 밝힘

**【24일】** 주한미군사령부, 광주공항에 주둔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부대가 연말까지 대구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

**【26일】** 북한 외무성, 핵포기와 평화공존을 약속한 지난 6자 회담이 이득이므로 6자 회담을 더 하고 싶지만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6자 회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변인 담화문 발표

**【27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 “나는 솔직히 북한을 한국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한국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

**【31일】** 미국 미사일 요격실험 실시. MD 체제 점검

## 경 제

**【4일】** 북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밝힘

**【8일】** 정부·열린우리당,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최소 5만 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경비직 등 공공 부문 저임금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15일】** 한국과 미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관세 양허안을 일괄 교환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 분야인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 이틀 일정으로 진행

**【30일】** 통일부, 개성공단 출입절차를 한 달 전 신청에서 7일 전 신청으로 간소화

**【31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116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추진

**【31일】** 삼성전자, 제주도에서 세계 최고 속도의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시연

## 사회·문화

**【1일】** 북한, 집중호우 피해로 8·15 축전도 취소한다고 통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 외에 모든 정부 간·민간 대화가 공식 중단

**【1일】** 국정원 진실위원회, 1990년대 대표적인 간첩단 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두고 ‘실체는 있으나 확대·과장된 사건’으로 결론 내림

**【1일】** 국정원 진실위원회,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안기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범인 김현희 씨를 대통령 선거 전에 국내로 압송해 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작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3일】** 한국의 일부 개신교도들이 5~7일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려고 했던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가 정부의 자제 요청과 아프간 정부의 경고로 취소됨. 한국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됨

**【4일】** 서울대 연구진, 수소를 압축하지 않고도 상온에서 고체에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구조를 개발. 수소자동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획기

적인 개가

**【7일】**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국립대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2008년에 설립하기로 하고 곧 국무회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7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한에 긴급 구호 물자 보내기로 결의

**【7일】** 제일보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북한의 수재 현황을 상세하게 보도

**【7일】** 정부·열린우리당, 여권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10곳인 서울지역의 여권 발급 구청을 4곳 이상 늘리기로 합의

**【8일】** 2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수해 복구 지원과 대북 식량·비료 지원 재계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

**【9일】** 6·15 공동선언실천 북쪽위원회,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남쪽 민간단체의 노력을 사의를 표하고 수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구체적으로 요청. 정부는 민간의 대북 지원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규모의 수해물자 지원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힘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 1701' 통과. 이스라엘·레바논 정부의 승인, 헤즈볼라도 수용의사를 밝힘

**【11일】** 법원, 엑스파일을 보도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 선고

**【17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개봉영화 사상 최단기간인 21일 만에 전국관객 1천만 명 돌파.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한국 현대사회의 모순을 다룬 작품

**【18일】**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현판식, 친일행위자들이 취득한 재산내역 조사 시작. 조사 대상 재산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것 또는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도 유증·증여를 받은 토지 등

**【19일】**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홍수 피해 지원

요청에 대해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큰 평안남도 성천군의 1만 3천여 주민들에게 30일 분량의 밀가루와 식용유 등 150톤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사행성 오락기를 개발·제조·판매한 혐의로 '바다 이야기'의 제조회사 에이원비즈, 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등 각사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20일】** 정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수해복구에 지원될 물량 규모를 쌀 10만 톤, 시멘트 10만 톤, 복구장비 210대 등으로 결정

**【21일】** 정부, 세계발전심의회위원회를 열어 '2006년 세계 개편안'을 마련.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김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성인오락기 유통업체가 올린 수익 100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추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힘

**【27일】**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29일】**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29일】** 노 대통령, 국제노동기구(ILO) 개막식 환영연설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간 합의를 생산성을 높이고, 합의한 내용을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좀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30일】** 대한적십자사, 첫번째 수해 구호물자를 인천~남포항을 통해 전달

**【30일】** 노동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입법예고 강행 입장을 밝힘

**【31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성차별적 법령이 181개에 이른다고 발표

## 정 치

**【1일】**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 새 교육부총리로 발탁

**【4일】** 노 대통령, 그리스 동포 간담회에서 “내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여러 어려운 문제도 풀고, 밀린 숙제도 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은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대통령이 놓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함

**【8일】** 전효숙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파행 속에 처리 무산

**【10일】** 노 대통령, 핀란드 헬싱키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 대통령은 동북공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서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며, 탄력적·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음

**【13일】** 청와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 한나라당 계속적인 후보자 사퇴 주장으로 국회 파행

**【14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중·김경일·

송인준 재판관 퇴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미뤄지면서 1988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소장자리 공석 사태 벌어짐

**【20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개편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일원화 △문화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20일】** 자이툰 파병 2주년

**【21일】** 국방과학연구소, 사거리 500km급 순항미사일 개발

**【26일】** 정부·열린우리당, 대전 광주에 지방경찰청 신설하기로

**【26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새정부 출범

**【27일】** 국무회의, 2007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복지예산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25% 넘어섬

**【27일】** 국방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국 쪽에 첩보위성 수준의 전락무기인 무인정찰기(UAV) ‘글로벌 호크’ 판매를 요청. 미국은 판매에 부정적

**【27일】**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 당정 협의에서 정보이용료를 제외한 데이터 통화료를 30% 내리

고,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수혜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결정

**【28일】**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100%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결정

**【29일】** 정부, 레바논 평화유지군(UNFIL)파병과 관련해 조사단을 현지로 파견할 계획을 밝힘

**【29일】** 대법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현대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 재벌그룹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에 상응하는 정책과 구체적 대응책(Action Plan)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3일】** 노 대통령, 유럽 세 나라와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

**【5일】**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위원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에 참석하기 위해 공산당 당수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11일】** 노 대통령, 핀란드 헬싱키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경제 분야의 관심사와 함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협의

**【1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의장성명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힘. 또한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 의정서의 성실한 이행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빈곤퇴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셈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도 채택

**【14일】** 노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두 나라가 협의해 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6차 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재확인하는 한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

**【14일】** 미국 하원, ‘일본의 주변국 관계’를 주제로 한 일본의 과거사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일본 성토

**【1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 선거 2차 예비투표에서 또 1위 차지

**【18일】** 한명숙 총리,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4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19일】** 짐 리치 미 하원 동아태위원장, 9·19 6차 회담 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 ‘선 평화협정 회담, 후 핵폐기 논의’와 ‘북·미 직접협상’ 등을 제안. 부시 행정부에 제재보다는 현실적인 외교를 할 것을 촉구

**【20일】**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한명숙 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다짐

**【21일】** 미국 국방부 인사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면담 거절. 한국 외교 망신

**【2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3차 예비투표에서 또 1위. 반 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 <로이터> <파이낸셜뉴스> <이타르타스> <교도통신> <르몽드> <에이피>(AP) <에이비시>(ABC) <시엔엔>(CNN) 등과 잇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회의 참석 기간 동안 각국 외무장관 등과 100여 차례의 면담 진행

## 경 제

**【1일】**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프타)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 회원국과 합의한 8,74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

**[1일]** 정부·열린우리당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합의

**[4일]** 노 대통령, 카를로스 파블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두 나라 간 해운·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 시작

**[7일]** 노 대통령, 타리아 카리나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물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양국 수교 후 한국 국가원수로서는 첫 방문

**[8일]**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최종 허용

**[11일]** 삼성전자, 40나노 기술을 적용한 32기가 메모리 세계 첫 개발. '1년에 메모리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황의 법칙'을 7년 연속 입증

**[19일]** 통일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남쪽관리위원회를 통해 구두로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 계좌 개설을 요청했다고 밝힘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 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

**[20일]** 한명숙 총리, 바그다디 마무디 리비아 총리와 총리회담. 리비아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을 요청. 양국 정부는 두 나라 간 무역협정을 비롯해 포괄적 에너지 자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등을 일괄 체결

**[20일]** 북한, 경의선 도로 북쪽 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 경계선 사이의 부지에 물류단지 조성을 잇달아 요청

**[22일]** 한명숙 총리, 다니알 아흐메토프 카자흐스탄 총리와 회담. "내년 상반기 안에 해외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고려인들의 한국 방문과 한·카자흐스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카자흐스탄 정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24일]** 개성공단, 전체 생산액 5천만 달러 돌파. 수출액도 1천만 달러 돌파

**[25일]**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 분양에 후분양제 도입하기로. 대한주택공사, 2003년 정부에서 마련한 일정대로 후분양제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노 대통령, <문화방송> 100분토론 출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줄속 추진'이라는 비판론에 대해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선 2003년부터 준비했고,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건 2004년부터"라며 "충분히 검토했다"고 반박

**[28일]** 정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창업 시 10%의 보조금과 내국인 한 명 고용 시 외국인도 한 명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28일]** 산업자원부, 삼성테크윈·세진시스템·미디어젠·시스포 등 4개 기업과 고려대가 공동 개발한 '지능형 감시·경계 로봇' 공개

## 사회·문화

**[1일]** 정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국방부·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공식 발족시킴

**[1일]** 정부, 일부 반북 민간단체가 대북 비난 전단을 북쪽에 살포하고 있는 것을 공식 확인. 통일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중단 촉구

**[2일]**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2011년까지 5년 늦추기로 합의.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이 기본원칙이라며 합의안에 반대

**[4일]** 정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수당을 대폭 상향 조정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조인 도움 지원하는 등의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11일】** 노·사·정 대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조건 없이 3년 유예하기로 합의. 이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 하지만 민주노총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음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보면 2005년 사망자는 24만 5,511명으로 사망 원인 중 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

**【19일】** 교육부, 학교 영어교육을 실제로 말하고 쓰는 실용영어능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영어교육 혁신방안(시안)' 마련

**【22일】** 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자와 서해교전 사상자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5천여 명에게 추석선물 발송

**【25일】** 정부,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을 위해 국세청 아래 실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입법화하는 '4대 보험 통합 추진방안' 확정

**【28일】** 통일부, 항일 독립운동을 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후손 26명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힘. 남쪽 사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애국열사릉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29일】** 경북궁 북문인 신무문과 사신 접견 연회장 소로 사용되던 집옥재가 45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개방

## 정 치

**【1일】** 노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기술집약형 군 구조와 전력의 첨단화를 이루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억지력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세계적인 군사력 발전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

**【2일】** 남북, 판문점에서 군사 실무접촉. 미사일 경색국면 이후 처음 가진 정부 간 공식 접촉

**【10일】** 정부, 대부분의 민간 교류 및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해 ‘잠정 보류’ 유도 결정

**【10일】** 북핵실험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지난 4월 부인의 5·31 지방선거 관련 공천비리 사건으로 정계은퇴를 시사하며 여의도를 떠나 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이 의정활동 재개

**【11일】** 노 대통령,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를 추구할 땐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때는 (그렇게) 조치해 나가야 하지만, 어느 쪽이든 평화적인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가치”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력 사용

없이,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 북·미 직접대화 촉구

**【12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받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각료들이 3시간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태 발생. 3시간을 기다린 각료들에게 한나라당 의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정치공세만 퍼부음. 이 같은 상황은 핵실험이 있던 9일부터 나흘 동안 계속됨

**【12일】** 한나라당, 대화를 배제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며 통일안보 분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16일】** 미국 정부가 북핵실험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참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한 의원이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

**【19일】** 정부·열린우리당,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

**【19일】** 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돌아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접견실에서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영접하며 국민급 예우. 반 장관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로서의

계획을 설명

**[25일]** 전국 9개 지역 재·보궐 선거 진행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4차 예비투표에서 1위. 사실상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3일]** 북한 외무성, 핵실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힘. 핵보유 언급 이래 가장 강력한 경고

**[4일]** 정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연 뒤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핵실험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 성명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4일]** 중국 · 미국 · 일본 각국,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 단일 후보로 추천

**[9일]** 북한, 핵실험 강행. “과학연구 부문에서 지하 핵실험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나라당과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

**[9일]** 노 대통령, 한 · 미 정상 간 전화통화와 한 · 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대북 포용정책 수정을 시사

**[9일]** 정부, 북 핵실험 관련 성명서 발표.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과 모든 합의를 저버린 북한에 있으며 이에 대해 냉철

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 · 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9일]** 부시 미국 대통령, 특별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극단적인 위협이자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 하지만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힘

**[1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대화 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중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강조

**[11일]**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우리가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 압력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시엔엔>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

**[11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사설에서 북한만을 비난하는 우리 언론들과는 달리 미국 대북정책의 실패 비판. 한국 언론에선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찾기 힘들

**[13일]** 한 · 중 정상회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

**[1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임기의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됨.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

이 나온 건 버마(현 미얀마) 출신인 우탄트 3대 사무총장(1961~1971년) 이후 35년 만

**[1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 수락연설에서 “조용히 일을 추진하는 결단력인 겸손의 미덕을 바탕으로 조화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 선임의 의미 △새 세기 유엔의 임무 △유엔 개혁 △사무총장으로서 약속 등으로 나뉘는 자신의 구상을 밝힘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근거해 해상에서의 선박 검문, 대량살상무기의 전용이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15일]** 북한 유엔주재 북한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

**[15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지지하며 “이를 준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남북경협 사업의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PSI 참여 확대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힘

**[16일]** 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협의

**[18일]** 아소 일본 외상, 일본 핵무장 언급

**[1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일본의 핵무장과 동북아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 표명

**[18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의구심 표명. 정부는 이에 “다른 나라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

**[19일]** 노 대통령,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

**[19일]**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

**[20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제3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 2012년 3월에 넘겨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23일]** <뉴스위크>, 1994년 당시의 전쟁피해 예측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중국특사 탕자쉬안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6자 회담 견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2차 핵실험 계획이 없지만 외부에서 더욱 큰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힘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핵실험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부 참여국들이 협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25일]** 북한과 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안과 무관하게 북·러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2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대상 품목에 관한 기본원칙 잠정 합의. 핵 관련 수출통제체제인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통제체제인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을 기본으로 제재대상 품목 선정

**[30일]**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인터뷰에서 “유엔을 21세기의 도전과 과제를 적합하게 처리해 가는 기구, 다자주의 외교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강조

**[31일]** 북한, 미국, 중국 대표 비공식 베이징 접촉, 6자 회담 재개하기로 합의

## 경 제

**[1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북쪽 근로자들의 1인당 월 생산액이 1천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13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낸 건수는 사실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18건, 법령해석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17건 등 총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 시작

**【27일】** 건설교통부, 새도시 추가계획 발표. 인천  
검단 340만 평 규모, 이미 건설 중인 파주에는 212  
만 평 추가

**【30일】** 수입 재개 결정 후 미국산 쇠고기 첫 국내  
반입

## 사회·문화

**【1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묘소를 둔 임시  
정부 요인 남한 후손들, 북한의 국립묘지에서 성묘

**【15일】** 한국기자협회, 6·15공동선언실천남쪽언  
론본부와 북쪽언론분과위원회 대표들이 다음 달  
14~15일 금강산에서 '남북 언론인 통일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17일】** 문화재청, 진흥왕순수비가 있었던 북한산  
비봉 정상에 원형을 살린 복제 비석을 세움

**【22일】** 최규하 전 대통령 급성 심부전증으로 별세.  
향년 88세

# 11

## 2006

### 정 치

**[1일]** 외교·안보 분야 개각. 외교통상부 장관에 송민순, 통일부 장관 이재정, 국방부 장관에 김장수, 국가정보원장엔 김만복 임명. 북핵실험에 대한 경질성 개각보다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따른 인선

**[6일]** 노 대통령,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 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

**[8일]** 방위사업청,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기종으로 보잉사의 B-737을 확정.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도입

**[9일]** 청와대,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합의한다면 내각 구성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지난 1년 동안 여야 정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국방개혁과 사법개혁, 비정규직 법안 등 주요 국정 과제와 전효숙 헌

법재판소장 문제 등의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지면서 국정이 표류해 왔다”며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여야 합의로 내각 구성을 요청해 온다면 협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

**[9일]** 노 대통령,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5·31 지방선거 때 나타난 공천현금과 당비 대납 등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의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보고한 당선 무효대상 범위의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12일]** 청와대, 국가 개혁과제 평가단에서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있다고 밝힘. 평가단은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부분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돼 △정치 △외교·안보·통일 △경제·사회 △행정 등 4대 분야 268개 세부 개혁과제를 점검

**[14일]** 정부·열린우리당, 2007년 남북협력기금 예산규모 협의. 2007년의 예산규모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예산이 크게 줄어 2006년 수준보다 25.9%가 줄어든 규모

**[14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사의 표명

**[14일]** 한나라당,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

명동의안 처리를 막는다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밤샘농성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행정 도시개발계획안을 의결, 발표. 대공원을 중심으로 중심축과 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주변에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 지식 등 6개 주요 시설과 21개의 생활권, 2개의 사립대학을 유치할 계획

**[21일]** 국방부, 위장막 형태의 디지털 무늬를 도입한 신형 전투복 도입 발표

**[21일]**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 대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3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라며 국회의 무능을 강도 높게 비판

**[24일]** 노 대통령,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을 한국방송 사장에 재임명

**[24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2008년부터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26일]** 노 대통령, 국회 교착상태 해소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치협상회의를 열자고 제안

**[27일]** 노 대통령, 국회의 장기 파행을 막고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철회

**[27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강력 비판.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 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해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

**[28일]** 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

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굴복했습니다”라며 “이런 비논리적인 정치판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에게 인격적 수모를 계속 견디어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헌법질서가 정쟁에 휘말려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라며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 한탄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부시 미 대통령, 중국 외무부는 각각 6자 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힘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사일과 핵,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힘

**[1일]** 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부 군축·비확산담당 차관, 북한 핵보다는 이란 핵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1일]** 노 대통령,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는 않을 것이며,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이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향배와 관계없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설명

**[3일]**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팀 개각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자신의 정책으로 야기된 대미관계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온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

**[3일]**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팀 개각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자신의 정책으로 야기된 대미관계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온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

**[3일]**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팀 개각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자신의 정책으로 야기된 대미관계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온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6자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일본에 회담 참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대. 북한 외무

성은 “지금껏 일본의 참가가 달갑지 않았지만 다른 참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당히 대해 왔다”며 “참가 인원이 적어지는 것은 회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밝힘

**[8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차단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려 한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며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해 놓고 한잔하자고 초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부시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 이어 대화창구만 열리면 북핵문제는 1년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9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가톨릭 대 초청강연에서 “개성공단은 언젠가 북한이 개방될 경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적절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언급

**[13일]** 정부,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와 관련한 제재조치로서, 한국의 독자적 추가 조치로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쌀·비료 지원 유보 △경공업 원자재 제공·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당국 간 경험 잠정 중단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유지 등 발표

**[1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 뉴욕 도착, 인수준비 업무 시작

**[1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치범 환경부 장관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감축 목표치를 넣는 방안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힘

**[17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한국은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짐. 북한 유엔대표부 김명길 공사, 남북관계에 악영향 경고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막. 6

자 회담 당사국 정상과 외무장관, 양자·다자 간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협의. 노 대통령, 17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한·일, 한·러 정상회담을 연속해서 진행

**[18일]**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교육 등 분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밝힘

**[20일]** 중국, 미국과 협의하에 조사결과 합법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진 1,200만 달러 상당의 BDA 북한 동결계좌를 해제

**[29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진행

**[30일]** 정부, 한국군 1개 대대 규모 350여 명을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

**[30일]** 정부·열린우리당, 자이툰부대 임무종결 계획 수립, 임무종결 시한 2007년으로 명시하기로

## 경 제

**[2일]** 노 대통령,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대회에서 “금융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만큼 금융이 자율화됐다”며 “(주택대출 등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밝힘

**[2일]** 금융감독원도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 도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3일]** 정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들어서

는 새 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 주요 은행들의 대출규정 준수 여부 조사에 착수

**【8일】** 한국은행 발표 금융시장 동향에서 두 달째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일】** 전군포 국세청장,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 과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조세 형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도 보탬을 줄 것”이라고 밝힘

**【9일】** 정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송파 새도시부터 분양값을 지금보다 20~30% 내리기로 하고 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하며 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결정. 또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값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12만 5천 가구 추가 공급 △공공택지 공급 주택 분양값 25%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뼈대화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5일】** 국세청, 부동산투기 혐의자 384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 실시

**【16일】** 금융감독원, 은행들에게 대출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 자제 당부

**【17일】** 정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힘

**【17일】** 노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20일】** 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캄보디아 지방행정전산망 구축사업 시행 약정, 고용허가 인력송출 양해각서, 외교관·관용여권 비자 면제협정, 3,100만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 등 합의

**【21일】** 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인천 부평·연수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북구 10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23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협상 파기

**【23일】** 10월 30일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뱀조각이 발견돼 ‘검역 불합격’ 판정. 농림부, 미국 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

**【24일】** 북쪽 보험사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서 남측 차량에 보험금 지급

**【28일】** 포스코, 외주 협력업체 88곳 1만 7천여 직원들의 4조 3교대 근무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장 내 평생학습체제를 꾸림. 한 단계 격상된 대기업·중소기업 사례

## 사회·문화

**【1일】**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기업들이 국외 투자와 공장 이전에 나서는 이유가 경영계 주장처럼 ‘노사관계 악화’ 때문이 아니라 ‘시장 개척’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3일】**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참여를 위해 법률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또한 외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권리와 사회적 서비스, 교육시설의 혜택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5일】** 이라크 특별법정에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사형 선고

**【8일】** 제1차 한국·아프리카 포럼 개막

**【8일】**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사교육비 상승을 이끄는 특강계층·그룹을 정책 표적으로 삼겠다고 대통령에 보고

**【13일】** 산업자원부, 단전가구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 전기공급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

**【14일】**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 “전국 13개국·공립 사범대는 전문성과 전인적 인격을 갖춘 교사를 키우기 위해 교육기간을 늘리고, 정원의 절반을 5년차에 뽑는 ‘개방혼합형 6년제 사범대’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22일】** 전북 익산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림부, 전라북도에 긴급방역조치 실시

**【23일】** 연출가 오태석 씨가 한국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영국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음

**【28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농림부, 확산 차단 작업에 주력

**【28일】**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대표적 진보세력 탄압 사례인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 처형 사건을 두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는 한편, 국가에 재심할 것을 권고

## 정 치

**【1일】** 국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인력 중심의 군 구조를 정예화, 첨단화하는 군 개혁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

**【4일】** 노 대통령,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여당은 어려움에 처하면 대통령과 차별화로 해결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이런 차별화가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 대통령은 또 차별화와 탈당은 답이 될 수 없으며 당헌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통적이고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4일】** 보건복지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을 종합 평가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이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2월에 2006년도 첫 회의 진행

**【7일】** 노 대통령, 시드니 동포간담회에서 “한국은 특권과 권위주의 해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우리는 아직도 싸움을 너무 많이 한다”며 “나는 아직 (대통령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또 “우리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사상투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서로 인정

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나도 그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다”고 덧붙임

**【8일】** 노 대통령, 한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라고 밝힘

**【8일】** 방송위원회,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방통위 설립 입법예고안을 거부하기로 결정. 방송위는 법안의 독립성 훼손 사안으로 △위원 구성에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관여 배제 △소관업무의 ‘독입제’(위원장이 일반 부처 장관처럼 권한 행사)적 처리 절차로 인한 합의제 운영원리 왜곡 △사무처 직원의 일반직 공무원화로 행정관료 일반의 방송행정 관여 등을 제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투표권을 국외 체류자에게 확대하고 투표참여를 유도하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방법 제시

**【21일】** 노 대통령, 민주평통 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군 원로들의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론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매섭게 비판  
**【27일】** 국회, 파행을 거듭한 끝에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2007년 예산안 통과. 사립학교법, 반값아파트 법안, 신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가 2007년으로 넘겨졌으며,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2년 동안 공들여 만든 로스쿨 법안도 국회에서 2년을 넘기게 됨

**【29일】** 200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함정과 전투기 노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평가됨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노 대통령,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방문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4일】** 노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관한 정상 공동선언에 서명

● 국가청렴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6일】** 노 대통령,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한·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민간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8일】** 노 대통령, 7년 만에 뉴질랜드 국민 방문, 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경제협력 등 공통 관심사 논의

**【10일】** 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가 태풍으로 연기됨에 따라 뉴질랜드 일정 후 귀국

**【1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공식 취임. 뉴욕 유엔본부 총회 취임선서에서 "불신의 어두운 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화합시키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이 되고자 한다"고 밝힘

**【18일】** 13개월 만에 5차 6차 회담 개최. 미국의 금융제재를 논의할 북·미 금융 실무그룹 회의도 동시에 열려. 북핵문제 협상국면으로 전환

**【18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장, 미국의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9·19 공동성명' 이행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현단계에서 핵폐기를 논의한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핵 군축 회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혀

**【22일】** 북·미 금융 실무그룹 회의 연장 진행

**【22일】** 제5차 2단계 6차 회담이 북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하지 못한 채 휴회하는 형식으로 끝남

**【25일】** 탕자쉬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할 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힘

## 경 제

**【1일】** 미국산 쇠고기, 두번째 수입물량에서도 뺏조각 발견

**【1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4명 개성공단 방문

**【3일】** 한국은행 발표, 가계의 국외 소비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섬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시작

**【5일】** 연간 수출액수 3천억 달러 돌파

**【6일】** 미국산 쇠고기, 세번째 수입물량에서도 뺏조각 발견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분과 대표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미국이 쌀을 건드리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밝힘

**【15일】** 정부·열린우리당, 민간택지의 분양값 상한제 도입대상 논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

**【15일】** 집단 반발이 예상되던 의료기관들의 연말 정산자료 자진신고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은 반발하는 의료기관들엔 아예 개별 의료기관을 설득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18일】** 새 10원 동전 발행. 제조비용 절감 차원에

서 작고 가벼워짐

**[19일]** 일부 언론들의 강한 조세저항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97.7%가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해 작년보다 오히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군표 국세청장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 의식을 보여준 데 감사한다”고 밝힘

**[19일]**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이 회장이 올해 납부한 종부세는 30억 원을 약간 넘어서. 이 회장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단독주택 상위 5개 중 세 체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20일]**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21일]** 농림부, 뽕조각 발견으로 반송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허용치를 넘겨 검출되었다고 밝힘

## 사회 · 문화

**[1일]** 15회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

**[1일]** 인천지법, 전국 법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혼 숙려제’ 도입.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이혼 가능

**[6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106명 발표. 정부 차원의 첫 조사 · 결정 · 발표

**[7일]** 카타르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김형철 선수, 종합마술 경기에서 낙마사고로 사망

**[7일]** 전북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적단체 ‘일심회’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간첩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 5명 중 2명이 민주노동당 당원

**[8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북한에 교과서 운전

기 기증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공식 견해를 밝힘

**[11일]** 국가인권위원회,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뽑은 올해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일심회 사건, 편파 보도 사례에선 박근혜 피습 사건 등이 뽑힘

**[13일]** ‘유엔 세계인구 전망’ 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할 것으로 전망됨

**[16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 금메달 획득

**[20일]** 교육부, 학교급식 직영 비율을 2009년까지 97.3%(1만 497개교)로 높이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에 2조 2천여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 발표

**[25일]**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로 고산(30), 이소연(28) 2명 최종 확정

**[26일]** 대만 지진으로 해저통신 케이블 7개 파손. 이로 인해 외국계 은행의 전산망 마비돼 한국 재외공관의 영사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27일]** 한국, 통신 우회로 가동으로 통신장애 대부분 복구. 그러나 대만, 홍콩의 경우 복구까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알려짐. 케이블망의 우회로 확보 필요성이 요구됨

**[27일]**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 개선방안’을 노동부 · 여성가족부 · 행정자치부 ·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

**[27일]** 삼성전자, 1기가바이트 모바일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

**[29일]** 산업자원부, 2007년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안 발표. 가스요금 4% 인하, 연탄값 12.3% 상승

**[29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터, 경북 경주시로 결정

**[30일]**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처형

## 정 치

**【1일】** 노 대통령, 새해 인사에서 “하루하루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짜증스럽기만 한데, 남들이 평가하는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문턱 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며 “가정과 국가가 다 행복하고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힘

**【1일】**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안’ 입법예고.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처럼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빼곤 사병 사이에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

**【3일】** 노 대통령,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누구라도 때때로 다리를 다치지만(레임덕),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내가 가진 합법적 권력을(임기) 마지막까지 행사하겠다”고 임기 말까지 충실히 국정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4일】** 외교통상부, 국내외의 고위 인사들의 방문 기록을 방문국가·기간·직책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검색해 볼 수 있는 ‘해외출장 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공개

**【4일】** 노 대통령, 산업자원부 장관에 김영주, 국무

조정실장에 임상규 내정

**【8일】** 기획예산처, 지난해 3분기 중 예산 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등을 통보한 대표적 사례 17가지를 공개

**【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대북 쌀 제공을) 차관으로 한 것은 남북 간 합의”라고 전제한 뒤, “이것 전체를 차관으로 할지, (그중) 일부를 인도주의로 할지, 전체를 인도주의로 할지 이런 것은 북쪽 여건에 달려 있고 남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9일】** 노 대통령, 개헌 제안. 대통령은 이날 개헌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헌법 개정의 단임제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나 미래 과제들을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어려우며,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며 “1987년 개헌 과정에서 장기집권을 막고자 마련된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고 개헌 제안 배경을 밝힘

**【10일】** 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에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예정대로 개헌안 발의를 하

겠다고 밝힘. 법무부는 '헌법 개정 실무추진단' 을 구성하기로 결정

**【10일】** 노 대통령, 개헌 논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되지 않고 정략적이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밝힘

**【10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주한미군 이전시기 논란에 대해 “기지 이전 시기 문제는 한·미가 협상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한 시간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책임을 돌릴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

**【10일】** <연합뉴스>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2%(83명)가 개헌에 찬성. 하지만 개헌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4.9%(89명)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1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은 국정 파탄의 책임자로서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만 초래하는 정략적 개헌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11일】** 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이 부결돼도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야당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열린우리당 탈당을)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 태도에 대해 “어떤 정당이 대화도 토론도 안 하겠다는 건, 말도 안 하고 깎아뭉개겠다는 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

**【15일】** 정부,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한국군의 주둔지로 유엔이 티레를 후보지로 제안했다고 밝힘.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티레로 실사단을 보내 치안 상태와 주둔 여건, 사령부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점검해 파병지를 최종 결정할 뒤 유엔과 파병장소, 병력규모, 임무 등을 담은 파병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

**【16일】** 방위사업청, 미국이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라는 한국

쪽 요청에 대해 원칙적 찬성과 함께 곧 관련 협약 개정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고 밝힘

**【17일】** 방위사업청, F-X 2차사업 추진방침을 결정. F-15K급 전투기 2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힘

**【23일】** 노 대통령, 새해 특별연설에서 “남북 정상 회담은 6자 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문제는 양극화 문제에 있음을 강조하며 양극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의지를 밝힘

**【24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방문

**【3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과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선고 판사 실명 공개가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5차 2단계 6자 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안에 대해 “상당히 과감한, 쉽게 말해 크게 주고 크게 받는 그런 방식을 하자는 것이며, 그것을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정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5일】**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때 북한에서 10만~15만 명 규모의 난민이 일본으로 들어올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예측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7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힘

**【14일】** 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 정상은 지역 및 국제 이슈와 정치·외교적 사안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위해 한·중·일 외교부 사이에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 세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기로 결정

**【15일】** 아세안+3 회원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 정상, 필리핀 세부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열고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선언문’을 채택

**【18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장, 베를린에서 2일간 북·미 협의의 진행. 힐 차관보는 협상이 끝난 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협상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힘

**【18일】** 미국 하원, 외교부 청문회를 열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성토했고, 북한과의 담판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외교를 촉구함

## 경 제

**【4일】** 정부, 경제성장률 4.5%, 일자리 30만 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으로 2007년 경제운용방향 확정.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중장기적 효과가 나는 개혁 과제에 중점을 뒀고, 그 효과는 차기 정권서 나올 것”이라며 “신바람 나는 효과를 내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힘

**【11일】** 정부·열린우리당, 당정 협의에서 △기존 대출자의 대출 건수를 1인당 1건으로 제한 △투기 과열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 △분양값 상한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

**【21일】** 롯데, 오리온, 해태, 크라운제과 등 대형 제과업체들, 트랜스지방 ‘제로화’ 선언

**【15일】** 재정경제부,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 균형을 맞춰 환율을 안정시키고 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외 투자 확대 대책’을

발표

**【27일】** 주요 26개국 통상 장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 사회·문화

**【2일】** 김신일 교육부총리, “논술이 교육 정상화에 도움된다면 힘들어도 가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

**【2일】** 정부와 평택 대추·도두리 주민,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이주 및 생계지원 대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 이로써 3년 5개월에 걸친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이 사실상 막내림

**【8일】** 베트남 정부, 강금실 여성인권대사에게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할 정부 사이 협력채널 개설을 정식으로 요청

**【11일】**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 한국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

**【12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과학·역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

**【14일】** 박종철 씨 사망 20주기 추모제 열림

**【15일】** 노동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6천 명에서 올해 1만 2천 명으로 두 배로 늘렸다고 밝힘

**【15일】** 보건복지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 발표. ‘임신·출산 토털 케어’가 도입,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선, 노인건강 증진 허브보건소 확대 등의 내용

**【23일】** 법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숨진 피고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건 발생 3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것이 인정돼, 수사

기관 및 검찰에서 신빙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방송 청취 반공법 위반 혐의 등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함

**【31일】** 진실화해위원회,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실명을 전부 공개. 긴급조치 전체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볼 때, 일반 시민, 교사, 학생, 종교인 등이 술집, 거리, 학교, 교회 등에서 당시 유신체제를 비판하다 처벌받은 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함

**【31일】**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HR-121)을 미 하원에 제출. 2006년 제출된 결의안에 비해 내용이 강해짐

# 2

## 2007

### 정 치

**[1일]** 열린우리당,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판결 무효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6일]** 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 또한 올해 안보 정책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정착 가시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9·19 공동성명 이행단계 진입 등 북핵문제 해결 본격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 협력 확대를 2대 전략 과제로 제시

**[6일]** 열린우리당 의원 23명 집단 탈당. 한나라당 원내 제1당으로 부상

**[7일]** 정부, '2단계 균형정책발전구상' 발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부담을 50% 가까이 줄여 주고, 출자총액 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

**[8일]** 5차 6자 회담 시작

**[9일]** 노 대통령, 강제섭 한나라당 대표와 민생회동. 한나라당,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실질적 합의를 이룬 것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 신당 결의. 정세균 신임 당의장 선출

**[15일]**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진행

**[17일]** 노 대통령,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란 글을 통해 △'비전 2030' 같은 장기적 국정 과제에 대한 진보 진영의 무관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진보 진영이 '교조적 진보'에 빠져 참여정부를 무책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보 진영에게 "유연성과 책임성을 가지라"고 당부

**[21일]** 행정자치부, 2007 업무계획 확정, 발표. 지방 고위공무원의 재산 심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이 확대되는 등 공직윤리 제도가 대폭 강화됨

**[27일]** 20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28일]**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공식 탈당.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의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며 아쉬운 심정 토로. 대통령은 이어 "나는 비록 지금 당적은 정리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국민 통합과 새로운 정치라는 창당 정신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치 발전이라는 역사의 길에서 언젠가 여러분과 다시 함께 어깨를 같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한·미·일 정책입안자들이 모여 21세기 국가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비전2030 글로벌 포럼'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림

**[8일]** 한국과 미국, 제11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개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맞춰 유엔군사령부(UNC)의 정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 협의 창구를 마련하기로 함

**[13일]** 5차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 명명된 합의문서를 채택. 1단계로 △한반도 비핵화(의장국 중국),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의장국 한국),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장국 러시아) 등 5개 워킹그룹을 설치 △북한은 60일 안에 영변 5mw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검증·감시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 2단계로 북한은 추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현존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참가국은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13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BDA 문제를 30일 안에 해결하기로 했으며 이를 6자 회담 참가국에 통보했다"고 밝힘

**[20일]** 데이빗 울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25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핫라인 설치 합의

## 경 제

**[5일]** 한명숙 총리,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비전 2030 - 인적 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 입직 연령을 당기고 퇴직 연령을 늦춤.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 개편 △근 복무기간 단축, 퇴직 연령 연장 △기업의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형태 다양화 △정년 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도입 등의 내용

**[6일]** 정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며,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은 자본 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

**[7일]** 농림부,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약의 관련해 "대원칙인 '빼 없는 살코기'는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강조

**[9일]** 재정경제부, 역모기지 상품의 지급 방식과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7차 협상 시작

**[1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국세 징수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집값 급등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26% 더 걷히는 등 총 8.3%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5일]** 노 대통령, 이탈리아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대북 지원에 대해 "북핵문제 때문에 (대북 지원이) 중단됐는데, 우리도 그것을 진행할 수 있고, 북한 경제를 살려가면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를 통해 동북아의 큰 시장이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고,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고(접근하고) 있다"고 설명

**[16일]** 통일부, 개성공단 방문인원 10만 명,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돌파했다고 밝힘

**[2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국제표준화기구 '사회적 책임' 총회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회 개최.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국제기준(ISO 26000)은 조직의 지배구조, 환경, 인권, 노동관행,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등을 포괄해 2009년 발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작업

**【28일】** 주택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건설교통부, 분양값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값이 지금보다 15~25%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

## 사회 · 문화

**【1일】** 경남 합천군이 '새천년 생명의숲 공원'의 이름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 '일해공원'으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비판

**【2일】** 유엔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 제4차 평가보고서 기후변화과학 분야 요약본 발표.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방출한 온실가스의 축적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이 90~99%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세기 후반에 북극 얼음이 사라질 것이라 경고

**【2일】** 세계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면서도 교토 의정서 서명을 거부하는 미국은 '허리케인의 위력 증대가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문구를 보고서에서 빼려는 노력을 벌였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보도. <가디언>은 미국 석유기업 엑손 모빌의 지원을 받는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각국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 보고서의 단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내주면 1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

**【6일】** 교육인적자원부, '값비싼 교복' 논란에 대해 "교복 공동구매에는 발의 뒤 납품까지 보통 두 세 달이 필요하므로 신입생들에 한 해 착용 시기 조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 연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중·고등학교에 보냈다"고 밝힘.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제작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8일】** 행정자치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4,902만 4,737명이라고 밝힘. 수도권 인구는 2,374만 6,274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

**【9일】** 정부, 국민 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을 포함시킨 300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 방침을 확정

**【11일】** 여수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화재로 외국인 9명 사망. 중국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화재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우즈베키스탄, 여수에 영사를 보내 현황 파악과 사후조치 진행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014 동계올림픽 개최 신청을 한 강원도 평창 현지 실사작업을 17일까지 진행

**【16일】** 정부 · 열린우리당, 대학 학자금 지원을 크게 늘린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연간 50만여 명인 학자금 대출 대학생 가운데 70%인 35만 명 이상이 무이자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됨

**【16일】** 미국 하원,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 개최. 이 용수(79), 안 루프 오헤르(85), 김군자(81) 등의 피해 할머니들 참석, 증언함

**【19일】** 보건복지부, 자살 시도자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1일】**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대구서 개최

**【22일】** 통계청, 2006년 농·어업 기본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

**【23일】**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군을 현행 5가지에서 6가지로 늘리고 논술교육, 역사·사회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앞 테러, 한국군 다산부대 윤장호 병장 사망

# 3

## 2007

### 정 치

**[1일]** 노 대통령,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문제는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본은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선례에 따라 성의를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

**[1일]** 20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의 즉각적인 재개에 합의

**[2일]** 20차 남북 장관급회담, 열차 시험운행,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개최, ‘2·13 합의’ 이행 공동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보도문에 합의

**[2일]** 국방과학연구소, 차세대 전차(XK2) ‘흑표’ 시제품 출고식 개최. 흑표는 승무원 3명이 탑승하며 전투 중량 55톤, 주포 120mm 활강포, 엔진 1,500마력, 최고속도 70km/h로 화생방 방호 기능도 갖추고 있음. 육군은 내년 말까지 육군에서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2년간의 양산준비 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

**[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탈당. 한나라당,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원도 아닌데 장관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다른 장관들도 탈당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6일]** 노 대통령, “우리의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미국,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이 비율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좌파, 우파정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의 우파정부고 한참 왼쪽으로 달려 가야 미국, 일본이 있다”며 참여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

**[7일]** 한명숙 국무총리 퇴임. 열린우리당으로 복귀

**[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방북

**[8일]**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 해 1차로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빼대로 하는 6개 항의 헌법 개정 시안을 공개. 노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서 각 당과 대선주자들이 자기 정부에서 개헌 추진을 대국민 공약으로 분명하게 제시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힘

**[9일]** 노 대통령, 새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지명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 2007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특별강연에서 북·미 양자가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기에 6자 회담 속에서 올해 안에 해결될 전망이 크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

**【16일】** 한나라당, 경선후보 경선규칙 확정

**【17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전체회의,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 시설의) 영구적 무력화(불능화)를 하겠다”고 밝힘

**【19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탈당

**【20일】** 노 대통령, 일부 정치인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본다는 논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26일】** 노 대통령,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다이만부대(공군 제58항공수송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파병의 정당성을 역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찬반논란이 있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개인적 판단을 지우고 그 명령에 기꺼이 따라달라”고 당부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이제 수주 전 합의된 2·13 합의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양국이 잘 공조하고 있고, 이런 공조가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화답

**【5일】** <AP>통신, ‘2·13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은 조만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가운데 800만~1,200만 달러의 동결 해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미 재무

부와 국무부 관리들이 밝혔다고 보도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결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사죄할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

**【5일】** 북·미관계 정상화 첫 실무그룹 회담 미국에서 진행. 회의차 방미한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000년 이래 최고위급 북한 관료

**【5일】** 유럽연합(EU) 대표단 북한 방문. 독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핵포기 등 6자 회담 2·13 합의 내용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북 결과는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부 논의 과정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7일】** 북·일 국교 정상화 실무회담.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이 선행조건이라는 주장에 북한 반발

**【8일】**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수준의 협의를 추진하고, 60일 동안의 초기 이행조치가 완료되면 중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들어간다는 데 합의. 양자 모두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

**【8일】** 북·일 국교 정상화 실무회담 이틀째. 45분만에 결렬. 송일호 북한 교섭담당 대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6자 회담의 합의에 따라 과거청산과 국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노이에 왔으나 일본은 이미 2002년에 종결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과 같은 억지”라고 밝힘. 하지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철회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탄압을 중지하며 과거청산을 시작한다면 납북자 재조사도 시작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김

**【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

**【1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북. 핵사찰 재개 논의

**【14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북한 방문 후 기자회견에서 “북

한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복귀에 긍정적 자세이며, 금융제재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14일】** 미 재무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18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최종 판정. 관련 계좌(50여 개 2,500만 달러)의 처리 권한이 마카오 금융당국으로 넘어감

**【15일】** 6차 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첫 회의. 한국, 5만 톤의 중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운송하겠다는 방침. 미국은 긴급 인도지원 명목으로 30억 원에 해당하는 의료용 발전기를 지원하고 중국은 초기단계 조처 이후 추가지원을 첫번째로 할 의사를 밝힘. 러시아, 북한 내 화력·수력 발전소 개보수 제안

**【16일】** 일본 정부, 각료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상 부인하는 정부 견해를 공식화. <뉴욕타임스>, 일본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

**【19일】** 6차 6자 회담 시작

**【21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2·13 합의는 아직 취약한 프로세스이고, 북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며 “입체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여유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납치문제를 앞세우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양자적 문제가 다자적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선택을 한다면 다자 포럼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22일】** 6차 회담, BDA 자금 해제 및 송금 문제로 파행 끝 휴회. BDA 문제는 국제신인도 등을 고려해 돈받기를 거부하던 중국은행이 제3국 은행으로 이체하는 데 동의

**【23일】** 6차 회담이 휴회한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를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2·13 합의의 복핵 폐기 초기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힘

**【23일】** 천영우 6차 회담 한국 수석대표, “북한은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북한 안 계좌로 보내 주는 것은 원치 않았고 외국 은행(중국 은행)에 계좌를 열기를 원했다”고 밝힘.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기피대상’이 된 현실에서 사실상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

**【26일】** 노 대통령, 쿠웨이트 국왕 주최 국민 만찬장에서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에게 참여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북 메시지를 전달

**【2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진 약속을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모든 참가국들의 권리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외교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

**【26일】** 미국 정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솔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

**【27일】** 캐나다 하원, 일본 위안부 문제에 사죄와 함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 추진

## 경 제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8차 협상 시작

**【11일】** 미국,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황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라는 등급 판정을 받음

**【12일】**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팔리도록 승인한 사실이 감사 결과 최종 확인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위원장에게 통보

**【13일】** 노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5일】** 노 대통령, 사우디 국왕 자문회의를 방문,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쪽 모두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올해 안에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장관급 협상 시작. 김종훈 수석대표는 “좁혀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며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쌀과 같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결렬 상황이 발생해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장관급 협상에서 미국, 승용차 관세의 조기 철폐를 약속. 한국, 지적재산권 분야의 미국 요구 대폭 수용. 다른 쟁점 분야 여전히 난항

**【29일】** 노 대통령, 카타르 도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핵심 쟁점에 대해 협의. 노 대통령 수시로 한국에 전화, 협상 상황을 체크

**【30일】** 노 대통령, 중동 순방 귀국 후 곧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국대표단과의 회의 진행. 실시간 총괄지휘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의 마지막 날. 미 협상단, 타결 시한 자체를 공휴일인 4월 2일까지 미루자고 비공식 제안. 청와대, “연장은 없다”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4시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강행. 신제윤 금융서비스분과장, “우리나 저쪽이나 여전히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고 언급

## 사회 · 문화

**【1일】** 뮤지컬 〈명성왕후〉 관객 100만 돌파. 한국 창작 뮤지컬로서는 최초

**【2일】** 교육인적자원부, 학점 교류와 복수 학위 취득을 활성화, 초·중등학교 교육 기간이 우리보다 짧은 필리핀·몽골 등의 학생들도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주기로 하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 계획’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해 심의를 마쳤

다고 밝힘

**【3일】** 국제 구호기구들, 북한에 확산된 홍역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2단계 합동 행동계획’을 실시. 국제적십자연맹과 유엔아동기금, 1단계 사업으로 홍역 예방접종 및 비타민A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힘

**【10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오는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보도문 발표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대학에 체육대 학생들의 ‘비인격적인’ 신입생 길들이기와 관련해 방지책 마련과 엄격한 학칙 적용을 촉구

**【20일】** 북한 청소년 축구대표팀, 사상 첫 한국 전 지훈련을 위해 제주도 도착

**【21일】**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10명 가운데 4명은 출신국보다 한국의 여성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22일】** 노 대통령, 주요 사립대 총장들과 서울대가 본고사 허용 등 정부의 ‘3불 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대학본고사 금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힘

**【25일】** 박태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한국 수영 ‘최초’의 세계대회 우승

**【27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2011년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대구를 확정. 세계육상대회는 하계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림

## 정 치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찬성 논평, 민주노동당, 민주당 강하게 반발. ‘한·미 에프티에이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 51명도 성명에서 협정 타결을 비판하며 청문회, 국정조사, 비준동의안 거부 밝힘

**【2일】** 국회, 주택법 개정안·기초노령연금법안 등 통과시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

**【6일】** 합동참모본부, 레바논에 파병될 한국군 유엔평화유지군(UNFIL)의 주둔지가 디반(Dibban)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 합참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한테서 한국군 주둔 지역을 놓고 레바논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는 공식 서한을 받았다”라고 밝힘

**【8일】** 노 대통령, 모교인 부산개성고(옛 부산상고) 체육대회에 참석. 개회식 기념축사를 한 뒤 축구 경기 시축, 기념식수 등을 진행. 모교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

**【10일】** 노 대통령,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어 통과돼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 국정 처리가 굉장

히 어렵게 됐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재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의(재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힘

**【11일】** 각 정당대표 6명은 회담을 열어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합의

**【12일】** 청와대, “자기 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우리는 진전된 입장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1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열어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

**【14일】** 청와대,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당 합의를 수용한다”며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힘

**【18일】** 노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버지니아공대 참사 관련 위로 전문을 보내고 애도의 뜻을 밝힘.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조승희 씨 개인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분석하고 인종갈등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결정. 외교통상부, 미국내 한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 및 비상망을 점검

하라는 지침을 내림

**【9일】** 노 대통령,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종민(58), 해양수산부 장관에 강무현(56), 법제처장에 남기명(55), 보훈처장에 김정복(61)을 각각 내정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민연금개혁법안 쟁점 합의. 가입자단체와 민주노동당, “노후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

**【25일】** 경기 화성, 대전 서구를, 전남 무안·신안 등 3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6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3곳 중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각 1석씩 당선. 기초단체장은 한나라당 1곳, 무소속 5곳 당선

**【27일】** 참여정부의 전직 장관,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주축이 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27일 출범.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논하고, 업적을 밝히고 아쉬운 점을 반성할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5년을 냉정하게 평가함으로써 다음 시대의 비전과 과제를 올바르게 수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힘

**【30일】** 정부의 3불정책에 반발하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

**통일 · 외교 · 안보**

**【9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BDA 동결자금 2,500만 달러 이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2·13 합의 초기조치 시안을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방북 중인 리처드슨 지사 일행을 만나 BDA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뜻을 거듭 확인

**【10일】** 노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 김포공항과 상하이 훙차오 공항 사이에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고 두 나라 해·공군 사이에 직통 통신망(핫라인)을 꾸리기로 합의. 정상회담 후 ‘해상수색구조협정’, ‘한·중 철새보호협정’ 등 4가지 협약을 체결. 한·중 자유무역협정

에 대해서 원 총리는 빠른 협상 진행을 원했으나 노 대통령은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임

**【10일】** 미국 재무부, BDA 자금을 대해 북한이 BDA은행에서 계좌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없는 동결 해제’ 방침을 발표

**【14일】**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60일 시한 종료. 북한, 초기 핵폐기 조치 불이행.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자금도 북에 전달되지 않음

**【16일】** 6자 회담 러시아 수석대표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 “미국의 재무당국은 이 돈(북한 자금)의 사용을 가로막는 것들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돈을 받았다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이에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것은 정확한 상황 설명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비디에이 북한자금 전달 지연 문제)는 북한과 은행의 문제”라고 로슈코프 차관의 발언 내용을 반박. 마카오 BDA, 은행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미 재무부의 조치를 비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힘

**【20일】** 북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지금 우리 은행과 마카오 비디에이 사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 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편지에서 밝힘

**【23일】**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 76살을 일기로 사망. 국무회의를 진행하던 노 대통령은 소식을 접한 지 몇 시간 내에 한명숙 전 총리 등 조문사절단을 꾸려 러시아로 출국시킴. 한국은 빠른 대응을 했지만 일본과 중국 조문단은 시간에 맞추지 못해 러시아의 빈축을 샀. 한 총리는 철도·경제협력들의 정부 문서를 가지고 러시아 유력인사들과 회담

**【23일】** 미국은 이란·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기술·자재를 거래한 혐의로 23일 (현지시각) 외국인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 등 모두 14곳에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밝힘. 북한 관련 기업이나 개인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6일]** 북한과 미얀마가 '아웅산 사건'으로 단절됐던 외교 관계를 24년 만에 복원

**[30일]** 미국 국무부, 북한을 포함한 '2007년 테러리즘 국가보고서'를 발표

## 경 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막판 진통. 유례없는 협상시한 연장. 노 대통령은 사실상 최종 협상안을 보고받았으나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 협상 지시. 청와대는 비상체제 가동하고 "미국이 막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수입 개시 일자를 문서화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과 결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미국 협상단을 강하게 압박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14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 쌀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고 복핵문제의 진행에 따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북한 전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심사해 인정하기로 결정. 이 두 가지 모두 협상 초기 미국측이 '논의 불가'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큼. 양국 대표단,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고 평가. 우리나라는 이 협상으로 세계 147번째로 자유무역협정 협정을 했던 자유무역 후진국에서 자유무역협정 교역량 면에서 세계 상위권인 주도세력으로 도약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등 재계, 상공계는 환영 논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환영 분위기와 함께 북·미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

**[2일]** 노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에 합의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라고 비판론을 강하게 반박. 피해를 볼 분야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약속함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던 북한은 3월 말 이후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음.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지역은 한국의 자유무역협상국들에게 수출할 때는 자유무역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수입에는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공정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됨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여론조사, 잘한 일 (56.7%), 국회비준동의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 (66.2%) 등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

**[3일]** 일본의 주요 언론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 '중단된 한·일 FTA' 재개를 일본 정부에 촉구. 아베 신조 총리, 기자회견에서 재계에 강한 의욕

**[3일]** 미국 민주당 지도급 위원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안에 강한 불만 제기. 비준거부 의사를 밝힘. 미국 자동차업계, 반대성명 발표. 한국에 계열사를 갖고 있는 GM의 경우 논평을 자체

**[5일]** 원자바오 중국총리, "지금 세계는 경제블록화 시대에 있고, 이런 시대에 중·한 두 나라는 경제협력 구도를 고도화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조기체결을 희망. 현재 한·중은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

**[5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텔레비전은 방송이고, 따라서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 인터넷티브이의 주된 서비스는 방송이며, 통신은 부가서비스로 규정

**[6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체결대책특위에 출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협정 수정은 없다”고 밝힘. 권오규 재정경제부총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유럽연합(EU), 한·중 협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피력

**[8일]** 법무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국내 법규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에프티에이 법규 정비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힘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통계를 보면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교육물가는 지난달에 6.2% 올라 2004년 1월(6.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9일]** 코스피 지수 1500 돌파

**[10일]**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한·미 FTA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35가지를 얻은 반면에 미국은 28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에 협정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밝히고, 6월 말 정식 서명까지는 협정문이 법률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힘

**[12일]** 노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치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발전·송배전 시설 복구, 공장 개보수 등 이라크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

**[17일]**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평양에서 개최

**[19일]** 북한, 경협위에서 개성공단에 북한 은행 지점을 설치해 남·북 간 금융 직거래를 하는 방안을 제의. 이에 대해 경협위 남측 대변인, 남·북 간 ‘코레스(외환거래)’ 계약이 돼 있지 않아 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대답

**[22일]**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의·동해선 남북 열차 시험운행. 쌀 40만 톤 지원,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으로 합

의문 발표. 이로써 남북 경제 분야 협력은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전 상태로 복원

**[23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10차 협상. 최고기 수입 재개 요청. 박창용 농림부 자유무역협정과장, “캐나다의 요구가 미국과 동일하다”고 밝힘. 장재형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캐나다로서는 미국보다 못한 협상을 하면 나중에 의회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한·캐나다 협정이 한·미 협정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고 설명

**[27일]** 건설교통부, 2년 3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일제히 하락했으며 전국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사회·문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며 허세욱 씨 분신. 반대시위 치열

**[5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밀 누출 의혹 등 경인티브이의 최대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경인티브이 전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경인티브이와 영안모자로부터 조건을 담은 이행각서를 내게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경인티브이를 경기·인천지역 지상파 민방사업자로 허가 추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장웅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북한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방한. 방한 목적은 ITF 한국협회 창설 축하, 세계태권도연맹(WTF)와의 통합회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자문 등

**[8일]** 노 대통령, <교육방송>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 주제의 특강에 출연, 특수목적고가 입시 학원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을 비판, 또한 3불정책(고교등급제, 기어입학제, 본고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17일]** 미국 버지니아공대 최악의 총기난사사건. 33명 사망 15명 부상, 범인은 한국 국적의 영주권

자 조승희(23, 영문학과 4)라고 발표. 한국대사관, 영사를 파견해 사건 파악 지시

**【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26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인천을 2014년 아시아경기 대회 개최지로 결정

**【19일】** 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발표

**【24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한인 학생이 집단구타를 당함. 연방수사국(FBI)이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보복' 성 증오범죄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

**【26일】** 두산그룹 비리에 연루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용성(67)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복권

**【27일】** 청와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유홍주점 종업원 보복 폭행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엄정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찰청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보복폭행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소환 조사

**【30일】** 건설교통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시행 예정이라고 밝힘

## 정 치

**[2일]** 노 대통령,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정당, 가치와 노선이 중요합니다' 라는 글에서, "열린우리당은 4·25 재보선의 책임을 물을 대상조차 모호한 처지에 빠졌다"고 탄식하면서 "책임을 따진다면 이미 당을 깨고 나간 사람들, 또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통합노래'를 부르며 떠날 명분만 만들어 놓고 당을 나갈지 말지 저울질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비판. 또 '정치지도자, 결단과 투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글을 통해 "지도자가 되려는 분은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투신해야 한다"며 "한 발만 슬쩍 걸쳐 놓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 아날 성싶으면 발을 빼는 자세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

**[2일]** 노 대통령, 서해교전 전사자와 동티모르 등 해외파병 순직 장병 유가족 초청 위로 오찬. "국가의 보훈제도가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7일]** 열린우리당 탈당의원들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로 김한길 선출. 김한길 대표, 수락연설에서 "창당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며 민주당 등 정치

권과 시민사회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을 밝힘

**[8일]** 노 대통령,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고 아쉬움을 표시. 대통령은 이어 임기와 상관없이 정책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 부처의 업무로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밝힘

**[1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17대 대선 출마 선언.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

**[11일]** 제5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 수역,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등을 합의. 서해 군사적 긴장완화 물꼬 터

**[14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특별 기자회견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17일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분단 반세기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천릿길을 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 장관은 "연결된 남북 철도는 최대 자원보유국인 러시아 및 엄청난 시장인 중국과 연결해 우리 경제에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쪽 노후 철도 현대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

**[17일]** 역사적인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경의선은 문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판문역-손하역-개성역 구간(27.3km)에 남쪽 열차가, 동해선은

금강산역-삼일포역-감호역-제진역 구간(25.5km)에 북쪽 열차가 운행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 지역으로 들어갔다 돌아옴

**【18일】** 노 대통령, 5·18 기념사에서 “요즘 민주 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해 이룬 것이다. 민주세력 이야말로 한국 미래를 새롭게 열어 가고 있다”고 밝힘

**【21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열린우리당으로 복귀

**【22일】** 정부, 정부 중앙부처 기사 송고실(기자실)을 세 곳으로 통폐합하고, 중앙 부처의 브리핑을 세 곳에 마련된 합동브리핑센터에서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 등. 노 대통령은 “세계의 보편적 관행과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의 제도와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는 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설명

**【22일】** 노 대통령,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 시찰 파문 대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기업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에 대해 감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

**【23일】** 한국·중국 간 해군·공군 군사 핫라인 개통기로 합의

**【25일】**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차세대 구축함(KDX-3) 세종대왕함 진수. 7천 톤급 이지스함 진수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 항속거리 1만km, 1천km 밖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900여 기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지상공격용 크루즈미사일까지 갖춰 공격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세종대왕함은 2008년 하반기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2010년과 2012년에는 두번째, 세번째 함도 해군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

**【29일】** 노 대통령, 기자실 통폐합조치와 관련해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

아나고 있어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인데,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기자실 개혁 조치가 마치 언론 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이어 “많은 선진국들은 (기사) 송고실도 두지 않는다. 한꺼번에 바뀌면 (기자들이) 너무 불편할까 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며 송고실 폐지도 시사

**【30일】** 정부, 한강 하구인 경기도 김포와 고양시에 있던 23.5Km 길이의 군 경계 철책을 포함해 전국 해안가에 설치된 군 철조망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밝힘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중 절반가량이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두 은행으로 나뉘어 송금될 것이라고 <마카오일보>가 보도

**【7일】**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모나코에서 개최. 정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힘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대신 공물을 바친 것으로 밝힘. 외교통상부,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

**【10일】**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원퍼드 윌리엄스 총회 의장이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S23) 4판을 한국과 일본이 명칭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해 부분을 빼고 제작하자고 제안

**【12일】** 미국은 지난달 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북한에 대한 테러국가 지정 해제문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공식 견해를 일본 쪽에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25일】** 정부, 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지연됨에 따라, 대북 식량자관(쌀 40만톤) 제공을 미루는 쪽으로 결론내림

**【31일】** 노 대통령, <에이피>통신과의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정상회담이) 6차 회담 결과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시점은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차 회담 진전을 위해서 그 뒤로 늦춰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힘

## 경 제

**【2일】** 한국은행 총재, “2009년 상반기 중에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동시에 발행해 유통시키겠다”고 발표. 10만원권 지폐가 발행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1만원권 지폐 사용이 줄어들어 발행·관리 비용이 한 해에 각각 2,800억 원과 400억 원씩 절약될 것으로 추정

**【5일】** 제10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800억 달러(약 74조 4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조성해 역대 위기 발생 때 공동대응하기로 합의. 세계 외환보유고의 2/3 이상을 소유한 아시아 지역의 이번 결정은 역대 각국의 금융안전 확보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함

**【6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맨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 7일부터 1차 협상 시작

**【9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6월 말까지 상품 개방안을 교환하고, 공산품 관세는 협정 발효 뒤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합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서로 민감성을 인정

**【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이는 아시아에 보내는 ‘재앙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의회에 강력하게 경고. 미국은 나프타 이후 이렇다 할 자유무역협정을 못 맺고 있는 상황

**【11일】** 아시아 지역 증시의 과열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올해 초 발표된 국외투자 활성화 대책은 애초 기대한 수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국외투자가 특정 지역, 특정 상품에 편중될 경우 투자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

**【14일】** 산업자원부와 코트라의 주문으로 산업정책연구원이 전세계 21개국 2,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 국가브랜드 맵’을 발표. 전반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는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인들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휴대폰, 정보기술(IT)·반도체, 가전, 철강, 문화상품, 자동차, 의류 순서로 평가

**【15일】** 제10차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중국, 러시아, 대만, 독일, 방글라데시,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200여 회사들이 참가해 각종 상품을 전시하는 행사로 북쪽의 경험 의지를 표현해 온 행사

**【15일】** 통일연구원 주관의 남북경협토론회,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와 함께 개최. 남쪽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원, 대우조선 등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북쪽에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해당 기업소 등의 직원이 참석

**【15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북경협 조선·항만분과 토론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중국에서 블록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건이 맞고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북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안. 북쪽의 차선모 육해군성 국장, “북쪽 여건이 다른 곳과 다를 게 없다”며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호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17일】** 재정경제부,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추진 계획 발표. 올해

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이 늘어난 노동자 1명당 달마다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21일]** 재정경제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고 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짐

**[22일]** 국제무역 사무국(OIE), 미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6개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결정하는 데 찬성

**[23일]**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한국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협박

**[25일]**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공개. 김종훈 수석대표는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협정을 공식 체결하면서 공개하는 게 '최종 확정 협정문'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사회 · 문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명의로 돼 있거나 그 후손들이 상속·증여받은 땅 154필지 25만 4,906㎡(공시지가 36억 원, 추정시가 63억 원)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 사실상 국가에 의한 첫 친일파 단죄. 대상자는 이완용·이병길·송병준·송중헌·고희경·권중현·권태환·이재극·조중응. 이 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에 쓰일 예정

**[2일]** 정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안을 발표

**[3일]** 행정자치부, 지난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

빼는 대신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한 데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는 조항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

**[3일]** 나이지리아에서 대우건설 한국인 직원 3명 납치. 잦은 납치사고에 대해 외교부, "우리 공관이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협력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나이지리아 정정이 워낙 불안해 한계가 있다"며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출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2006 출생아 수가 2005년에 비해 1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7일]**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간부급 조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경찰 확인

**[9일]** 경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11일]**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한밤중에 서울 북창동 스킨십 종업원들을 청계산 건물 신축 공사장에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김 회장, "저 같은 어리석은 애비가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의 심경을 밝힘

**[12일]** 중국 다렌 남동쪽 38마일 해상에서 제주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3,849톤급)가 중국 화물선 '진성호'(4,822톤급)와 충돌 후 침몰해 선원 16명 실종. 진성호는 충돌 직후 구조 지원없이 다렌항에 도착해서야 사실을 신고. 외교통상부, 오감렬 재외동포 영사대사 등 현지 급파중국 구조본부, 경비정 20척,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

**[13일]** 질병관리본부, 열대·아열대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뎅기열에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 뎅기열 위험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 가운데 39도 이상의 고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당부

**【15일】** 해양경찰청, 구난함 2척, 헬기 1대, 특수구난요원 10명을 ‘골든로즈호’ 사고해역에 투입, 한·중 합동 수색에 나섬

**【16일】**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가 사고 발생 직후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고 <신화통신>이 밝힘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 베를린 자유대학이 정치·사회·학술 분야에서 자유의 이상 실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주기로 한 ‘제1회 자유상’ 수상

**【16일】** 소말리아 근해에서 한국선박 2척이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고 외교통상부가 확인. 정부, 소말리아 외무장관에게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방한 중인 데니스 아워리 일본 주재 케냐대사(주한 대사 겸임)한테도 협조를 당부

**【1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 보건 통계 2007’을 보면,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5살로 세계 194국 중 26위를 차지

**【19일】** 미국 게임 개발회사 블리자드, 잠실 체조·펜싱경기장에서 ‘블리자드 월드 와이드 인비테이셔널’ 행사를 열어, 현재 개발 중인 스타크래프트 2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 록 발도 수석 부사장, “블리자드로서는 스타크래프트2가 사실상 첫 번째 글로벌 게임인 만큼 앞으로 한국시장에서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국에서 첫 공개를 한 이유를 설명

**【22일】** 청와대,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계층이 500만 명 이상 존재한다”며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투자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힘. 이어 “일단 복지부 예산 280억 원을 종잣돈으로 해 출발하고 현대자동차와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약속한 기부금도 활용하겠다”고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28일】** 영화 <밀양>의 여주인공 전도연(34), 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가 주연상을 받은 것은 1987

년 강수연 이후 20년 만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언론 장악 의도에 따라 일어났으며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 정수장학회는 헌납 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고 국가는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권고.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또다시 ‘정치공세’라고 반발

## 정 치

**【1일】** 노 대통령과 청와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스템과 관련한 대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기자회견 등 언론들은 부정적 입장 밝힘

**【1일】** 21차 남북 장관급회의, BDA 송금문제의 지연으로 대북지원이 같이 유보된 것을 이유로 성과 없이 종료

**【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사실상 '결렬'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지난해 7월 19차 회담과 유사하지만, 북남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할 환경과 조건이 성숙되는 등 그때와 다르다'고 평가

**【2일】** 노 대통령,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 특강에서 강연. 대통령은 강연에서 열차 폐리, 대운하 등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한마디로 부실하다"고 평가하며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 제안.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보다 언론자유도가 높은 한국에서 언론탄압 운운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성토. 대통령은 이어 진보진영에 대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는 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참여정부의 진보를 표현함에 있어 '합리적 진보'가 가장 포괄적인 용어

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날 4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100번 안팎의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 대통령과 참가자들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부르며 행사 마무리

**【4일】**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합당선언. '중도통합민주당' 창당. 중도개혁통합신당, 창당 27만에 소멸

**【5일】** 참여정부를 폄하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시장은 대통령의 강연에 대해 정책의 타당성은 밝히지 않고, 트집을 잡고 있다"며 "지금 이 전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책임성 있게 토론하는 것이지,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훈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

**【5일】**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며 자신들이 집권한다고 하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힘

**【5일】** 노 대통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수장학회 반환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

한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5일】** 정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경비로 55억 4,100만 원의 일반 예비비 지출을 의결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에서 한 강연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으나,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강연 대상이 참평포럼으로 국한됐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강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관하다고 밝힘.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도 되고, 대통령은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 벌어짐

**【8일】** 노 대통령, 원광대 강연에서 "대통령의 정치중립 요구는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에서는) 중립을 하라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서는 중립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현행 법 체계의 모순점을 강하게 비판. 법조계와 학계는 이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폭넓은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하는 게 옳다는 견해가 많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힘

**【8일】**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그룹 16명 탈당

**【10일】** 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해, "1997년 이후 우리 경제의 지체를 발미로 민주세력의 무능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이 없는 중상모략"이라며 "그 위기는 관치경제, 관치금융, 법치가 아닌 권력의 자의적 통치라는 독재시대의 낡은 체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비판. 대통령은 이어 "수구세력에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주의에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1987년 이후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주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자"고 역설

**【11일】** 이명박, 박근혜, 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등록

**【11일】** 통일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6·15 공동행사에 불참 결정. 반면, 민간차원 행사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12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대선 불출마 선언

**【13일】** 노 대통령, <한겨레>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선거중립 위반 결정에 대해 "가급적이면 선관위 해석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선관위 판단이 헌법기관 판단이라고 해서 불복 못하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취재지원 시스템 개선에 기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공개 토론을 다시 제안하며 "한국에서 진정한 언론자유 문제는 기자실이나 정치권력의 문제가 아닌 시주로부터의 자유 문제"라고 지적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6·15 남북 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서 북측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주석단(귀빈석)에 앉힐 수 없다며, 남·북·해외 주석단의 입장을 중시시켜 행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짐

**【15일】** 열린우리당 의원 16명 탈당. 세번째 집단 탈당

**【17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해외위원회 대표단,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민족단합대회'를 열어, △불신과 대결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 화합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것 △민족공조를 실현해 민족의 공존과 공리, 공영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 △6·15 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갈 것 등을 선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

**【18일】** 한명숙 전 총리 대선출마 선언

**【18일】** 중앙선관위, 대통령이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

**【19일】** 노 대통령,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일일이 발

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밝힘

**【20일】** 청와대,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실시되는 브리핑은 매일 오후 2시 30분에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청와대 브리핑>(www.president.go.kr)을 통해 생중계되며, 청와대는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브리핑 중계를 확대할 예정

**【21일】** 청와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밝힘. 현직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처음

**【21일】** 노 대통령,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경부윤하 보고서를 ‘청와대 공작’이라 비판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공작, 공작 하고 퍼붓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오늘 또 얘기하면 선관위에 당장 고발해 버릴 것이다. 얼마나 코미디냐”라고 강하게 비판

**【21일】**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서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포·상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힘

**【22일】** 노 대통령, 제주평화포럼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왔다”며 “6자 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

**【25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안한 ‘범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힘

**【2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쌀 차관 40만 톤과 관련해 “30일 첫회분 3천 톤을 군산항에서 남포항으로 보낼 것”이라며 “모든 분량을 이른 시일 안에 보내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표명했다”고 밝힘

**【28일】** 중도통합민주당 공식 출범

**【28일】** 헌법재판소, 재외거주 동포 15명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고, 개정 입법시한을 2008년 12월 31일로 정함

**【30일】** 노 대통령, 과테말라 방문 위해 출국. 기간 중 2014년 겨울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를 결정하는 119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참석할 예정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서울-상하이-도쿄를 잇는 항공편 셔틀 개설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 민간공동연구 촉진 △에너지·안보 대화 강화 △황사·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 대응 및 새로운 청정에너지 개발 협력 등에 합의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미국언론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대해 ‘비디에이 → 뉴욕 연방준비은행 → 러시아 중앙은행 → 러시아 극동 상업은행의 북한 휴면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안에 대해 보도. 미 재무부 대변인, “러시아 정부의 송금 협력과 마카오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정체에 빠진 북한자금 송금 문제에 러시아가 적극 개입해 해결

**【14일】** 김장수 국방장관,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고 밝힘

**【14일】** 탐팍웬 마카오 경제부총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오늘 오후 마카오를 떠나 미국으로 송금됐다”고 밝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지난 48시간 동안 북한 쪽과 이 프로세스를 두고 많이 논의했다”고 밝혀 6자 회담 당사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을 시사. 이로써 비디에이 송금문제는 완전 해결

**【16일】** 톰 랜토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하원의원 140명이 공동발 의자로 서명한 위안부 결의안은 꼭 통과돼야 하며, 통과되도록 하는 게 내 임무”라며 “26일 외교 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 계획이며, 통과에 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힘

**[16일]** 리제션 북한 원자력총국장, 모하메드 엘바 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편 지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우리 자 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한 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17일]** 정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협이가 진 행되면 앞으로 2~3주 안에 원자력기구 감시·검 증단이 방북하게 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의 폐 쇄·봉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고 밝힘

**[21일]**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 무부 차관보, 평양 방문

**[22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기자회견에서 북쪽이 영변 원자료를 신속하게 폐쇄하겠 다는 의사를 밝히고 핵 불능화의 세부 내용에 대 해서도 일부 논의를 했다고 밝힘

**[2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 26일 방북

●북한 외무성 대변인,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13 합의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26일부터 평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 대표단과 핵시설 가동중지·검증감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힘

**[2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제2차 세계 대전 당 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39 대 반대 2로 통과.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인정·사과해 역사적 책 임을 질 것 △위안부 동원 부인 주장을 반박할 것 △미래세대에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총리 자격으 로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

**[2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 영변 핵시설 현장 방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 구의 실무협약이 끝나면 영변 핵시설의 폐쇄가 최 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영변 핵시설 폐쇄 문제는 정치적 의제가 아 니라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낙관

**[28일]** 한·미,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 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서명. 전시작전통제권 이 양에 맞춰 기존의 ‘작전계획 5027-04’를 폐기하 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작계를 작성하기로 결정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본인 납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경 제

**[1일]** 코스피지수 1700선 돌파

**[1일]** 정부, 화성시 동탄면 일대 660만 평에 ‘동탄 제2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5일]** 정부,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재 정과 휴면예금, 증시 상장을 전제로 생명보험회사 들이 내놓기로 한 사회공헌기금 등을 이용해 이자 제한법 시행 이후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저소득 금융 소외 계층 25만 명 에게 교육비·의료비·창업자금 등으로 6,4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

**[8일]** 행정법원,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 산세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 대해 종부세는 합헌 이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1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미 한국대사관 을 통해, ‘신통상정책’ 등을 담은 한·미 자유무 역통상협정 협정문 7개 분야 수정안을 공식 제안

**[19일]** 정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제의 수락

●한덕수 국무총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

서 애초 일정대로 30일까지 서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밝히며 “7개 분야 협상에서 (이달 말까지) 완전 합의가 안 된다면, 일단 서명을 하고 아마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언급

**[20일]** 보건복지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와 품목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1일]** 개성공단에 10만kw의 전력을 공급할 한국 전력의 송전선로 및 ‘평화변전소’ 준공식 열림

**[28일]**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발표. △수입확대로 피해를 보는 농산물 품목의 소득보전 비율을 85%로 상향 △구조조정 자금 융자 등의 지원제도 도입 △ ‘보건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

**[30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문 서명

**[3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서명 직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 사회·문화

**[3일]** 노동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명시한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발간.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돼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참고 자료로 이용될 예정

**[3일]** 대법원,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관계 사항을 하나의 등록부로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출생과 사망), 혼인관계증명서(혼인과 이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됨

**[12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서 ‘무이자’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향후 대출 광고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하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도 반드시 명기해야 함

**[13일]** 한국방송, 현행 텔레비전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

**[13일]** 통일부, “조섯 시련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이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고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힘. 이에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옥수수 5만 톤 등 대북식량 지원을 하기로 결정

**[14일]** 조선왕조 의궤와 함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 및 제경판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현재 한국이 등록된 세계기록문화유산 문화재는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2001년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 이번 2건으로 총 6가지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됨

**[14일]** 일본 의원과 교수, 언론인 등 지도급 인사 63명, “위안부 동원에 강압이 없었고 위안부들은 대우를 잘 받았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

**[15일]** 정부, 일부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내신)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정신모집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50% 확정’ 과 내신 등급(1~9 등급) 사이에 같은 점수 차를 둘 것을 요청. 또한 이에 반하는 대학들에 대해, “2008 대입제도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시행하는 대학에는 1조 5,875억 원(2007년도 예산 기준) 규모의 정부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7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가입 회원국 중 세번째로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발표. 또한 2003년 일반

세의 사회보장 사용비율이 3%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중 꼴찌이며 평균 4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25일】** 한국인 승객 13명을 태운 캄보디아 국내선 U4-241편 여객기가 캄보디아 캄포트 인근 밀림에 추락. 캄보디아, 군 500여 명을 동원에 수색. 미국에 사고현장에 위성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

**【26일】** 노 대통령,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서울대의 반발에 대해 “2004년에 정부, 학교, 학부모 등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 대통령은 이어 “대학 자율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학의 자유도,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문

**【27일】** 유네스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전문가그룹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제주 면적의 10.1%를 차지하며 자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27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35개 인터넷 사업자 가운데 주요 사업자부터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힘

**【28일】** 캄보디아 추락여객기 탑승자 22명 모두 사망 공식 확인

## 정 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안(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세 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의결. 특히 사학법 개정안의 경우, 애초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됨

**【4일】** 김혁규 의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해찬 전 총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대선주자 6명, 국회에서 연석회의 개최,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

**【7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통합민주당의 박상천·김한길 공동대표, 그리고 열린우리당 탈당파 그룹의 정대철 전 고문, 대통합을 위한 회동

**【10일】** 행정자치부,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을 2,151명 늘리는 직제개편·증원안을 의결

**【10일】** 청와대,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예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사건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선관위를 비판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 이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책연구소 등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12일】** 한국기자협회, 최근 정부와 언론단체 대표들이 마련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공동합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 정부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기사송고실 통합합 공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13일】** 청와대, 정례 브리핑에서 "6자 회담이 재개되고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도 속도감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화체제 협상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관계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부, 북한제공 중유 5만 톤에 대해, 14일 첫항차분 북한 도착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지원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힘

**【16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한나라당이 이명박 의혹 관련 국정원의 조사활동에 대해 부패적결태 스킵포스의 활동은 국정원법 3조에 어긋나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익 증진에 국가안보의 개념에 속한다"며 "부패는 국익 증진에

반하는 개념이므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밝힘

**【17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내고 부패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6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에 근거해 이 같은 업무를 해 왔다”고 밝힘

**【17일】** 노 대통령,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폭넓은 개헌 논의를 촉구

**【18일】** 국방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비를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2008-2012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

**【18일】** 통합신당 등 대선주자 7명, 전국 순회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이 오는 9월 1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함

**【19일】** 노 대통령,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 대통령은 이어 “불신과 대결을 앞세우는 냉전시대의 사고,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는 경박한 상호주의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인내와 절제, 관용의 자세로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

**【20일】** 노 대통령,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기공식에 참석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성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

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는 모두 이곳(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오는 게 순리”라고 밝힘

**【24일】**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중앙선관위에 창당 결성 신고

**【27일】** 정부, 새 여권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여행 금지 국가’ 지정문제를 논의. 새 여권법에 따르면 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손 대교 맥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5만 톤의 1차분 중유 가운데 한 자릿수의 물량을 (폐쇄) 절차의 초기에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의 초기 선적 요구가 지연전술이 아니며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4일】** 레바논 남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에 소속될 한국군 ‘동명부대’ 선발대 60여 명 출국

**【6일】** 북한 외무성, “우리는 6자 회담 과정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 중유 5만 톤 전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0분의 1가량 되는 첫 배분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핵시설 가동을 앞당겨 중지하는 문제까지 적극 검토하고 해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사국에 이미 통보를 했다고 강조

**【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열어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조치를 취할 북핵 감시·검증단의 북한 파견을 승인.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검증단은 북한 쪽과 합의에 따라 △영변 5mw 원자로(후연감속로) △방사 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영변 50mw 원자로(건설 중단) △태천 200mw 원자로(건설 중단) 등 5개 시설을 폐쇄·봉인하게 됨

**【12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 북핵 감시·검증단이 14일 방북해 다음 주 초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형식과 방법에 대

해 북한 쪽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힘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 수레의 두 바퀴”라며 “6자 외무장관급회담이 열린다면 이 두 바퀴가 잘 맞물려 굴러갈 수 있도록 정치적 추동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13일】**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 협의를 위한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

**【1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유 5만 톤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했다”고 밝힘

●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다음 조치는 불능화 단계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의 논의·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16일】**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차기 6자 회담에서 만약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회담틀 안에서든, 개별적인 접촉에서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16일】**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 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한 수준만큼 정치·안보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힐 차관보, “북한이 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18일】** BDA 문제로 휴회되었던 6자 회담 베이징에서 재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및 중유 95만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북·미와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 등 2·13 합의 2단계 조처 이행 방안을 협의

**【20일】**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들, 베이징에서 열

린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 각국 회담 관계자들은 “각국의 구상과 우려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밝혀 상호이해를 높였고 이로써 2·13 합의 이행의 로드맵 작성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

**【2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1차 검증단과 임무를 교대하여 영변 북핵 시설 폐쇄·봉인 작업을 진행할 2차 검증단 파견

**【30일】** 미국 하원,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한 결의안(HR 121)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동북아 역사문제의 해결에 역사적인 이정표 제시

**【31일】** 외교통상부, 판문점에서 열린 6자 회담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에서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에서 북한에 제공될(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

## 경 제

**【3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힘. 무디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성장률 제고 노력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 △북한 핵 관련 2·13 합의 이행 절차 재개 등을 상향 이유로 설명

**【5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해 낸 국세심판 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추징금 불복 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7일】** 남북, 개성에서 열린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기간 제2차 실무협에서 올해 제공하기로 합의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품목별 가격을 국내 조달가로 하기로 하고 남쪽으로부터 원자재를 50%, 100% 제공받는 시점에 원자재 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아연괴와 마그네슘, 샤프트, 카본 등으로 합쳐. 잔여분에 대해서는 자원개발권으로 상환하기로 결정

**[10일]** 통일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외국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힘. 방문객은 주한 외교사절, 전·현직 각료, 한반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미 하원 의원과 보좌관, 국제신용평가기관 관계자, 기업 투자 시찰단, 바이어 등 직업과 국적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11일]** 정부,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발표. 유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춤

**[12일]** 기존의 유기물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최소 30% 이상 뛰어난 최고 성능의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를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이광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앨런 허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2000년 노벨상 수상))이 개발함

**[13일]** 조세연구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

**[16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 164개의 영세한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의 경쟁력있는 대규모 사업자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

**[16일]** 이집트 건설·시멘트 업체인 오라스콤, 북한의 평양명당무역회사와 1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맺고 평안남도 순천시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지분 50%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오라스콤의 나세프 사위리스 최고경영자는 "북한은 곧 여러 나라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받아 시멘트 수요가 늘게 될 것"이라며 연간 250만 입방톤에 그치는 상원시멘트의 생산량을 300만 입방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18일]** 금융감독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을 모델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담보 대출 시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확대 적용됨

**[25일]** 코스피 지수 한국 증시 사상 최초로 2000선 돌파. 2003년 3월 17일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지수 515 포인트에서 무려 4배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상승을 기록

## 사회·문화

**[2일]** 노 대통령, 과테말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호소

**[2일]**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둘째 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4일]** 교육인정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정시모집 전행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힘쓰기로 합의

**[5일]** 노 대통령,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평창 프레젠테이션' 연설에서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는 역사적 축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여러분께 약속한 완벽한 올림픽을 위한 모든 보증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

**[5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119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의 2014년 겨울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평창은 러시아 소치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7-51, 4표 차로 탈락

**[8일]** 교육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입학 총정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합격률이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 표명

**【10일】** 정부,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직권중재를 없애고 필수 유지업무와 대체 근로를 도입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일】** 문화재청, 안동시 보광사 관음전에서 국보급 고인쇄물과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밝힘. 발견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3세기 고려시대 불상으로 확인. 또한 이 불상속에 있던 '보협인다라니경' 등도 고려시대 목판인쇄술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19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 가즈니주 카라바그 지역에서 한국인 21명이 반군세력에게 납치됨. 납치된 사람은 선교·봉사활동 중인 분당 샘물교회 신자 19명과 의료선교단체 에이엔에프(ANF) 소속 2명으로 밝혀짐

**【20일】** 탈레반 대변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 <에이피>(AP) 통신과의 위성 통화에서 인질범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동의·다산부대 철수 요구. 청와대는 이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감

**【21일】** 외교통상부, 주한 아프간 대사관에 비자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현지 한국인에 대해서도 단기 여행객을 중심으로 빠른 귀국을 권유. 문화관광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주요 책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여행 자체·제한 지역에 대해선 사전에 소속 교단과 협의하고 △소속 교단은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여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22일】** 국방부, 아프간 납치범들의 한국군 철수 요구와 관련해 동의·다산부대는 올해 철군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23일】** 문하영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아프간 정부의 고위급 대책회의에 참여해 한국·아프간 공동 대책기구를 구성

**【24일】** 문화재청,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고려시대 배를 발견했다고 밝힘. 최고 6천~1만여 점의 고품질 청자가 실린 것으로 추정. 유홍준 문화재

청장은 '850년 전 타임캡슐이 발견된 셈'이라며 "청자 발달사와 조선·해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함

**【25일】** 광주민중항쟁을 정면에서 다룬 영화 <허전한 휴가> 개봉

**【26일】** 탈레반, 배형규(42) 분당 샘물교회 목사 살해. 청와대는 백종천 안보실장을 특사로 파견

**【31일】** 탈레반, 심성민(29) 씨 살해

**【31일】** 청와대, 납치된 두번째 희생자 심성민(29) 씨가 살해된 사실 확인 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인명까지 해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정 치

**【2일】** 통합신당 교섭단체 등록

**【2일】** 노 대통령,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거부권 행사.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과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언급

**【5일】**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이명박 후보의 옛 동업자인 김경준 씨가 곧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5일】**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열린우리당 탈당한 80명, 민주당을 탈당한 5명 등 국회의원 85명 확보

**【5일】** 8·15 민족공동행사, 북대표단 불참 통보로 무산. 정부 당국자는 "북쪽이 장관급회담을 9월에 개최하자고 제의해 온 점 등을 보면 남북관계 전반의 냉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5일】** 김만복 남쪽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북쪽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

**【6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대선 출마 선언

**【7일】** 노무현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회성 성과

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제도화,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동시에 발표

**【8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남북 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8일】** 북측 중앙통신, "북남 수뇌부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8일】**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준비

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이 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을 한 '준비기획단'을 발족·운영하기로 함

**【9일】** 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정성진, 농림부 장관에 임상규, 정보통신부 장관에 유영환 등 소폭 개각

**【10일】** 정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남북 경협을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10일】** 대통합민주신당, 열린우리당과 합당. 민주신당 85석, 열린우리당 58석으로 원내 1당으로 출범.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실시 합의

**【14일】** 정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기간에 병행할 예정이던 한국군 단독 기동훈련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북쪽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문제를 공식 요청하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과 상대 배려 차원에서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안보정책 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내린 조치"라고 설명

**【15일】** 노 대통령,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남북 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북핵과 평화,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15일】** 경찰청,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초안 마련. △전화·면담 취재 때 지방경찰청 홍보관리관실 경우 의무화 △기자 등록신청서 심사 뒤 출입증 발급 △경찰서 기자실의 송고실·브리핑룸 전환 등의 내용

**【15일】** 남북 정상회담 차관급 준비 접촉에서 남북은 △왕래 철차 △대표단 규모 △회담 의제 등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큰 골격에 대해 합의. 남북은 경의선 도로를 이용한 남쪽 대표단의 방북에 합의하고, 대표단 규모도 1차 정상회담 때보다 20명 늘림. 북쪽이 남쪽의 제안을 수용함

**【16일】** 정부, 집중호우에 따른 북한의 수해가 지난해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쌀 10만 톤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

**【18일】** 정부, 최근 심각한 수해를 입은 북한에 생필품과 의약품 등 75억 원어치의 긴급구호 물품을 이르면 내주 초부터 지원한다고 밝힘

**【19일】** 남북 정상회담 10월 2일부터 4일까지로 연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큰 수해를 당하고 나서도 가능하면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던 북한이 긴급 수해 복구를 끝내고 손님을 맞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밝힘

**【2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명박 후보 당선

**【20일】** 노 대통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우리 쪽도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평양에서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남쪽이나 북쪽 정상이 공식 서한을 공식적인 방식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

**【23일】** 정부, 주유엔 대사에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대사 10명과 총영사 6명에 대한 인사 단행

**【23일】** 문국현 전 유한김벌리 사장, 대선출마 선언

**【24일】** 정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75억 원어치의 긴급 구호물품과는 별도로 시멘트, 철근, 트럭 등 자재·장비 374억 원(수송비 등은 별도)어치를 지원하기로 결정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 양국 현안을 협의하고 2·13 합의의 조기 이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

**【2일】** 한·일 항공회담, 항공 자유화 합의. 일본이 외국과 합의한 첫번째 항공 자유화 조치

**【7일】**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에 상응하는 중유

95만 톤 상당의 대북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6자 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판문점 남쪽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

**[8일]** 미국, 한국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 직후 “우리는 남북 대화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고, 북핵 6자 회담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힘.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고 밝힘. 아베 일본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싶다”며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언급

**[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화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런 긍정적인 발전이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진 진전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10일]** 부시 행정부, 남북한 간 정상회담 합의의 통보에 대해 “사전에 조언해 왔다”며 “(6자 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정도에 맞춰 미국과 협의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11일]** 일 각료 전원, 야스쿠니 참배 보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아베 내각의 각료 전원도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

**[11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동명부대, 본격적인 임무 수행 시작

**[16일]** 미국 정부, 북한 수해지원에 대해 “유엔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16일]** 6자 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첫날 회의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신고 단계에서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임

**[3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 핵문제를 자신의 남은 17개월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촉구

## 경 제

**[2일]** 정부, “지난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톤에서 수입위생 조건상 특정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발견돼,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2일]** 현정은 현대 회장, “북쪽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나 개성관광을 포함한 대북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말을 나누고 신규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3일]**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공장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전 사고가 일어나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됨

**[3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상에서 북쪽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50달러에서 52.5달러로 5% 인상하고, 매년 8월 1일 월 최저임금을 합의해 결정하기로 함

**[16일]** 법원,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과 대상과 과표 적용률 등이 한층 강화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판결

**[24일]** 농림부, 미국 측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데 대한 해명서와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한다고 발표

## 사회·문화

**[1일]** 정부,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한 아프간 등 3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1일]** 교육인적자원부, 2009년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교당 정원 150명 이하로 확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입법 예고

**【2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아프간 한국인 피랍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가 조기에 안전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양쪽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3일】** 지난 3월 도입된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전에 피해 구제에 나서는 등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상승됨

**【4일】**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최상급 고려청자가 대량으로 나온 데 이어, 근흥면과 안면도에 서도 고려청자가 잇따라 발견

**【6일】** 심형래 감독의 <디워> 개봉 첫주 295만 명을 동원, 화려한 컴퓨터그래픽으로 무장한 <디워>는 역대 개봉영화 첫 주 기록을 갱신

**【6일】** 노 대통령, 아프간 인질 석방 관련해 군사작전을 배제하고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

**【10일】** 인질 석방을 위한 한국협상 대표단과 탈레반의 첫 대면 협상 성사

**【12일】** 한국 정부와 탈레반의 직접 대면협상에서 한국인 여성 인질 2명의 석방 결정

**【13일】** 외교통상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자 김경자, 김지나 2명이 “무사히 풀려나 우리 쪽에 인도됐다”고 밝힘

**【14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민영휘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명의 후손들이 소유한 땅 257억여 원어치에 대해 2차로 국가귀속 결정

**【22일】** 법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1975년 법원 판결 등의 불법성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 국가가 지급해야할 액수는 637억 원으로 시국사건 국가배상액중 최고액

**【27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7~18일 집중호우로 적어도 북한에서 454명이 숨지고 156명이 실종됐으며, 4,35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 북한 중앙통계국, 북 수해로 600여 명 사망·실종했다고 밝힘. 북한 수해 사상 최대규모

**【28일】** 한국협상대표단과 탈레반, 인질의 전원석방 전격 합의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최근 잇따르는 가짜 학력 파문과 관련해, 학력 위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학위 위·변조에는 사법 당국이 대처하고, 학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결정

**【30일】** 정부, 이번 아프간 피랍 사태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당사자들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힘

## 정 치

**【5일】** 청와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 후보가 아무 단서나 근거도 없이 청와대를 겨냥해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덕성 검증 요구와 불법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선거용 술수로, 이것이 야말로 비겁하고 낡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

**【7일】**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 답화문을 내어 조속한 비준 동의 촉구

**【9일】**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 공식수행원 확정. 권오규 재경·김우식 과기·이재정 통일·김장수 국방·임상규 농림·변재진 보건복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청와대 보좌진 등 13명

**【11일】**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 발표. △정치(6명) △경제(17명) △사회·문화(21명) △여성(3명) 등 4개 분야 47명

**【11일】** 노 대통령, 정치권의 대선주자들을 비판하며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싸움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함

**【14일】**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개선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취지

는 좋았지만 집행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 언론단체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3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만큼 이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함

**【15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권영길 의원 확정

**【18일】** 남북정상회담 1차 선발대 방북. 노 대통령의 육상 방북로, 회담장, 행사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체류일정을 논의

**【20일】**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추가조작 연루 의혹과 도곡동 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 발의

**【2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보건 분야, 교육 분야,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배분된 '2008년도 예산안' 의결

**【26일】** 정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정상회담 때 개성공단에 이은 '제2의 경제특구' 건설을 북쪽에 제안하는 방침을 확정. 제2경제특구 후보지는 해주가 최적으로 논의됨

**【27일】** 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집단 예술극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로 결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초청하는 북한 쪽의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제 과거의 대결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체제 인정·존중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며 “정상회담 기간에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청

한 북한 쪽 제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28일]** 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방북길  
 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안을 확정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북 · 미관계 정상화 양자 협의 제네바에서  
 진행

**[3일]** 북한 <중앙통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말  
 을 인용해 “조 · 미 쌍방은 연내에 우리의 현존 핵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토의하고  
 합의했다”며 “그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고 적성국 무역법에 따르  
 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

**[6일]** 노 대통령, 8~9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오전 출국. 기간 동안  
 한 · 미, 한 · 중, 한 · 러, 한 · 오스트레일리아 등  
 양자 정상회담을 열 계획

**[7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미국 · 중  
 국 · 러시아의 핵전문가 대표단이 11~15일 북한  
 의 핵시설 단지인 영변을 방문해 2 · 13 합의에 따  
 른 핵시설 불능화 문제를 북쪽과 협의하기로 했다  
 고 공식 발표

**[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한 · 미 정상회담에  
 서 “지난해 11월 하노이 한 · 미 정상회담에서 밝  
 힌 바와 같이 우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  
 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  
 명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  
 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  
 에게 전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25%의 ‘에너지  
 집약도’ (국내총생산 1000달러를 만드는 데 소비  
 되는 에너지양) 감축 목표 달성 △2020년까지 아  
 펙 역내 산림 면적을 최소 2천억㎡(2천만ha)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  
 개발에 관한 시드니 정상선언’을 채택. 또 교착 상  
 태에 빠져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  
 제(DDA) 협상이 연내에 최종 협상단계에 진입하  
 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합의

**[11일]** 노 대통령, 아펙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평화선언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 협상은 종전에서 평  
 화체제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 아니겠느냐”며  
 “그것은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수준이 아니  
 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말함

**[12일]** 아베 일본 총리 사퇴 의사 밝힘

**[12일]** 미국 행정부는 2 · 13 합의 이행에 따른 대  
 북 중유 5만 톤 제공 선적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예산 사용에 대해 의회 쪽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17일]** 미국, 마약생산 및 거래 주요국가 명단에서  
 “마약활동 주요국가 목록에 오를 만큼 북한은 미  
 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북한 제외

**[27일]** 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 시작

**[28일]** 부시 미국 대통령, “대외지원법에 따라 북  
 한에 2,500만 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률상의 유보조항 적용 없이 대북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라고 지시

**[30일]** 6자 회담 참가국, 올 연말까지 북한 핵시설  
 의 완전한 불능화 신고에 대응해 △미국의 테러지  
 원국 해체 △미국의 5만 톤의 중유 제공을 포함해  
 모두 40만 톤의 중유와 50만 톤의 중유에 상당하  
 는 발전설비 및 개 · 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행동계획에 합의

## 경 제

**[3일]** 금융감독위원회, 론스타와 홍콩상하이은행  
 (HSBC)은행의 외환은행 매각 합의에 대해 “현재 외

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힘

**[6일]** 공정거래위원회, 현대·기아자동차 5개사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모두 6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재벌의 '물량 몰아주기'를 제재한 첫 사례

**[17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유럽연합, 미국 수준의 개방 요구

## 사회 · 문화

**[2일]**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19명 피랍 45일 만에 귀국

**[2일]** 미국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 한국 교회가 19세기의 낡은 방법에 따라 선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

**[5일]**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 선발협의체 회의를 열어 우주인 최종 후보였던 고산(30) 씨와 이소연(28) 씨 가운데 고산 씨를 탑승 우주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고 씨는 내년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계획. 이 씨의 경우 '예비 우주인'이 되어 우주선 탑승 전까지 똑같이 훈련을 계속 받게 되며 사고 발생 시 탑승 직전이라도 교체될 수 있다고 과기부가 밝힘

**[10일]**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지난 5월 말 열암곡 제3사지 발굴조사 중 발견한 통일신라 대형 마애불상의 얼굴을 공개

**[10일]** 통계청, '대한민국의 행복을 저해하는 5대 결핍 요소'로 △남편 역할의 부족 △가정 생활의 부족 △자기 계발의 부족 △대화의 부족 △기부·봉사의 부족을 지적

**[11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아토피·천식, 위해식품, 비만, 컴퓨터 게임 중독 등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4대 요인으로 지적하고 국

가 차원에서 이를 퇴치해 나갈 '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해 발표

**[1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양성 평등 출산문화 정착과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옛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

**[17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명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선정

**[18일]** 정부, 종교적 이유 등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하고 병역법을 고치겠다고 발표

**[18일]** 교육인적자원부,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안을 확정 발표. 총 입학정원은 미정

**[20일]** 정부,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26일]** 유가 인상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미안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정부군의 무차별 발포로 유혈사태로 격화

**[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학력위조 과문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신정아 씨 알몸사진을 보도한 <문화일보>에 "사진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격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2단 기사 크기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내림

## 정 치

**【1일】** 노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해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다”며 “나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함.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 6자 회담의 진전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군비 축소와 같은 문제까지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2일】** 노 대통령, 서울을 떠나며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분야에 대해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경제협력 △군사적 신뢰구축과 인도적 문제 3가지로 밝힘

**【2일】** 노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처음으로 오전 9시 5분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는 역사적 순간을 연출. 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

았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힘.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말함

**【2일】** 김영남 북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최한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한다”고 환영하고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 우리 민족 성원 모두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 노 대통령은 답사에서 “지난 7년간의 교류 협력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다”며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처럼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 대통령은 이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며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

**【2일】** 남측 수행원과 기자들을 위해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인터넷을 설치. 이는 2005년 남북 적십자사 사이에 구축한 광케이블

망을 확장한 것. 향후 남쪽 기업들이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쉽게 확장 가능

**[2일]** 미국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언제나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해 왔으며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특히 “이번 회담이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일본 정부,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라는 의미에서도 남북 회담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언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로서는 기대하는 바”라고 말함

**[4일]** 남북 정상,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 선언문에는 △종전 선언 추진 △정상회담 수시 개최 △경제특구건설과 서해 공동 어로구역 지정 △남북총리회담 진행 △백두산 관광사업과 직항로 개설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음

**[4일]** 노 대통령, 남쪽 출입사무소(CIQ)에서 진행된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에서 “가져간 보자기가 작을 만큼, 짐을 다 싸지 못할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만족감 표현

**[5일]** 정부, 정상회담 설명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를 위해 고위급 특사를 관련국에 파견

**[8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편집·보도국장단 남북 정상회담 설명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이 상당 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조만간 북과 접촉하며, 이는 6자 회담과는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힘

**[9일]** 노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 교환

**[11일]** 노 대통령, 보수세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함. 대통

령은 이어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

**[12일]** 노 대통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자율형사립고 100곳 육성,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공약에 대해 “다시 본고사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교육정책을 이렇게 흔들어도 교육이 제대로 갈까 정말 걱정스럽다”며 “본고사가 부활되면 고교 간 격차를 인정해야 하고 고교 선택의 권리를 중학생에게 줘야 하고, 이는 고교 입시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중학교까지 입시를 부활시켜 놓으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지 대개 짐작이 가능하실 것이다”라고 비판

**[14일]** 이명박 후보 측, BBK 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의 귀국 일정 연기를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14일]**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 창조한국당 창당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정동영 선출

**[16일]**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이인제 선출

**[18일]** 노 대통령, 혁신 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을 언급하면서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서로 대결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둘의) 융합을 해보자는 시도이고,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 경제에 대응해 가는 전략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시장친화적 진보주의’ 또는 보수적인 시장주의와 비교해 ‘진보적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또한 “보수주의는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도 깎고 정부는 줄이지면서 (선거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라며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한다”고 보수주의의 경제논리를 비판

**[18일]** 미국 법원,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해 온 김경준 전 BBK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

**【19일】** 정부,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

**【31일】** 노 대통령, 경남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보수세력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시대 5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고 부패해도 좋다는 사회로 되돌아간다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 내내 경제위기를 얘기했지만 2003년 취임 당사가 위기였고 이를 극복하는 데 2년이 걸렸으며, 올해 2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한다"고 말한 뒤 "도대체 부패보다 더 무섭다는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실체가 있는 주장이냐"고 강한 불쾌감 표시

## 통일 · 외교 · 안보

**【1일】** 미국 백악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약속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백악관이 부시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면담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면담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 참여정부 외교사에 먹칠

**【2일】** 북한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장, "이번 6자 회담 합의문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이 명시돼 있다"며 "미국이 좀 사정이 있어서 발표를 미뤄 놓았다"고 밝힘

**【2일】** 미국, 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에서 타결된 합의문 승인. 참가국 주중 대사들은 2·13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동문건에 서명하고 공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북한은 핵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함

**【4일】** 북·미, 6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하는 시한을 연말로 명기한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관련 조처에 들어감

**【9일】** 미국 핵 불능화 전문가팀, 북한 입국. 비핵화 2단계 조치 시작

**【9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이 회담 주체인 3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이며 북한과의 조약 체결국"이라며 "동북아 정세와 평화 체제 문제에서 중국은 당연히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함

**【11일】** 미국, 한국에 이라크·아프간 파병 연장을 공식 요청

**【19일】** 유엔 운영위원회, '2007 남북정상선언'을 유엔 차원에서 지지하자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의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통일' 의제안을 제62차 총회에 추가의제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30일】** 6차 회담 참가국, 제3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를 열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에 따라 북쪽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45만 톤은 매달 5만 톤씩 중유로, 나머지 50만 톤은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등으로 지원하기로 함의

## 경 제

**【15일】**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 미국 수석대표,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 없이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며 쇠고기 수입의 전면 허용을 강하게 요구

**【16일】** 청와대, 정례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 사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불인 이름이 아니며 정부는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해서 사업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놓고 평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로, 앞

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함

**【18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네바 국제회의 센터에서 진행된 전파총회 본회의에서 한국의 와이브로 기술을 3G 국제표준으로 승인

**【25일】**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한국 증시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다른 많은 시장보다 가격이 훨씬 싸다고 할 수 있다"고 한국 증시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시사

## 사회 · 문화

**【2일】** 미국 상원,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는 법안을 포함한 2008년 국방예산수권법안을 93 대 2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

**【6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 미국 순회공연을 위해 LA 공항을 통해 입국. 북·미 문화교류 본격화

**【16일】** 외교통상부, 일제시대 강제징용 조선인 마을인 일본 '우토로 마을'의 토지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5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힘

**【18일】** 교육인적자원부, 2009년 3월 출범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9년 첫해는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늘리는 방침을 정해 발표. 김신일 교육부장관은 그 근거로 △늘어날 법조인 수요에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으로도 변호사가 배출되며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는 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힘

**【18일】** 대통령 휴양지로 쓰였던 충북 청원군 대청호변의 청남대, 대통령 역사 문화관 개관

**【23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김대중 납치사건'과 '칼 858기 폭파사건' 등 7대 의혹 사건 조사 결과 등을 담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 발표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0·27 법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 1980년 신군부 핵심인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불교·언론탄압 공작 실상을 상세히 담음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9년 개원 첫해부터 2천 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

**【30일】** 소말리아 인근 해안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의 북한 선원들이 격투 끝에 해적들을 제압했으며, 미군 구축함 '제임스 이 윌리엄스호'가 북한 선박에 올라 부상당한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

## 정 치

**【7일】**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전 시작전통제권 이양 상황 평가와 전시 작통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의 문제 협의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

**【11일】** 노 대통령,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를 통해 "새집에 들어와서 새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참여정부가 설거지를 다 잘했다"고 참여정부 5년을 회고. 대통령은 언론정책에 대해 "내가 안 싸우면 (보수언론이) 참여정부를 예뻐해 주겠냐"고 되물은 뒤 "나는, 저항도 못하고 내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무너졌을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경제 대통령론'에 대해 "어지간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는다"며 "요즘 (대선주자들이) '경제는 내가 책임자다' 숨씨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핵심 요소는 정체성"이라고 비판

**【16일】** 제1차 남북 총리회담, 8개조 49항에 걸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합의를 채택. 20일부터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이 개성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에 14차례의 남북회담이 열리며 한강하구 개발, 해주특구개발, 금강산면회소 준공 등 여덟 가지 주요 남북 경협 사업이 진행됨

**【22일】** 정부,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비전을 남북 공동변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두고 이를 위한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

**【27일】**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마감. 모두 12명으로 역대 최다 후보

**【27일】** 27~29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 통일 · 외교 · 안보

**【2일】** 노 대통령,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에서, "당연히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어야만 (3자 또는 4자 정상)의 평화선언과 종전선언에 도달하게 된다"면서도 "핵 포기에는 실질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고, 핵 포기가 모두 끝난 뒤에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함. 한반

도 평화체제 협상과 북한의 핵 폐기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

**[6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팀 단장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이번 주 3개 영변 핵시설에서 불능화 조치가 시작됐다”며 “이번 주 안에 (3개 시설에 대한) 11개 불능화 조치 중 최소 1개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14일]** 노 대통령, 농 득 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1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이 어느 정도의 결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힘. 그는 일본 납북자 문제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음

**[16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하원 외교위원회 톰 랜토스 위원장과 로스네티언 공화당 간사를 만나 북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19일]** 북·미 금융 실무회담 진행. 미국 측은 북한에 국제금융사회의 관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준수를 주문

**[19일]** 노 대통령,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20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는 “한국 쪽 유족이 봉환을 요구하는 징용·징병 조선인 유골 101위를 내년 1월까지 반환하겠다”고 말함

**[20일]** 제62차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 한국 정부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

**[21일]** 외교통상부,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의료 및 직업훈련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 명, 군 의료진 4명 등으로 이뤄진 지방재건팀이 내년부터 아프간 현지 주민을

상대로 의료와 직업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경 제

**[3일]** 현대그룹과 북한,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사업을 내년 5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개성관광도 곧 시작하기로 한 내용의 백두산·개성 관광 합의서 서명. 금강산 비로봉 코스도 2008년 4월부터 개방하기로 결정

**[5일]** 한국은행, 2009년 발행될 고액권 지폐에 들어갈 인물로 10만원권은 백범 김구, 5만원권은 신사임당을 선정. 이어 고액권 뒷면에 들어갈 보조 소재를 찾아 올 연말까지 화폐 디자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11일]** 영국·이탈리아·한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고등훈련기 구입사업을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에어쇼 개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훈련기 T-50을 국제사회에 선보임

**[20일]** 과학기술부, 2020년에 우리나라도 달 탐사 궤도위성 1호를 쏘아올리고 2025년엔 달 탐사 위성 2호를 쏘아 착륙선과 탐사로봇이 달 표면을 밟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세부 실천 로드맵’을 발표

**[2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남북 정상회담 지지 성명을 채택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협정과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 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역내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22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실무접촉. 오는 12월 11일부터 파주 문산-개성 봉동을 잇는 정기화물열차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하기로 합의

## 사회 · 문화

**【9일】**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경주 방폐장) 착공식. 경주 방폐장은 내진설계, 천재지변 대비 등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 80~130m 지하 최적의 압반 내에 수직형 동굴 형태로 건설되는 아시아 최초의 중저준위방폐장

**【9일】** 노 대통령, 경주 방폐장 착공식 축사에서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은 사회적 갈등과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역사”라고 밝힘. 대통령은 이어 “이제 개발독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대”라며 “급할수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경주 방폐장 합의과정의 의미를 강조

**【12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9만 3,728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1위를 기록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과 관련해, 숨진 김기설 씨의 유서는 강기훈 씨의 필적이라는 당시 감정을 뒤집고 “유서는 김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재감정 결과를 내놓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림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왕족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 201만 8,645㎡(시가 410억 원)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림. 이로써 지금까지 총 543필지 329만 3,610㎡의 토지가 국가로 환수됨

## 정 치

**【1일】** 남북, 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 시간 합의. 11일부터 매일 정기운행. 철도연결이 상장을 넘어 실제 활용 단계로 들어섬

**【3일】** 2002년 대선 하루 전날 약속을 어기고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했던 정몽준 씨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

**【4일】** 노골적인 지역주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 온 심대평 국중당 후보,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후보 사퇴

**【4일】** 정동영·문국현 후보 단일화 논의 가속화, 문 후보는 재야 원로에 모든 것을 맡기며 단일화 제안. 정동영 후보는 이를 쾌히 승낙

**【5일】** 2004년 총선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대선자금 수사를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당 총재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 선언

**【5일】** 서울중앙지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BBK 수사결과 발표. 하지만 다스 실소유주, 이 후보의 날인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5일】** 검찰의 BBK 무혐의 발표에 대통합민주신

당·민주노동당·이회창 후보 측은 일제히 ‘검찰 치욕의 날’, ‘떡값 검찰의 작품’이라며 강하게 반발

**【6일】** 정동영 문국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재야원로 9인위원회가 중재 포기 결정. 단일화 논의는 양 후보 측 캠프로 넘어감

**【9일】** 검찰의 BBK 수사발표에 항의하며 광화문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규탄집회 열림

**【12일】** 남북 장성급회담 1차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문제에 대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내년부터 개성공단 등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무선 전화 사용이 가능해짐

**【13일】** 이수성 국민연대 대통령 후보 사퇴

**【14일】** 정부와 공무원 노조, 첫 단체협약 체결

**【16일】**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BBK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힌 내용이 담긴 동영상 이 공개됨.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BBK를 언급한 기사들에 대해 ‘오보’라고 주장해 온 바 있음

**【17일】**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특검법 국회 통과. 수사 대상은 △이명박 후보의 엘케이이뱅크와 BBK를 통한 주가조작, 횡령 및 자금세탁 사건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주)다스의 재산 누락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수사 및 축소 발표와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 등

## 통일 · 외교 · 안보

**[3일]**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방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기자들에게 “백 실장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핵 불능화 진전 과정, 6자 회담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

**[3일]** 평양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 회담 수석대표, “비핵화 과정이 이루어지면 외교관계 설정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4일]**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노 대통령의 친서 전달. 수르길 가스진과 우라늄 개발사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

**[6일]** 북미, 지난 1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해 간접적으로 정상간 대화를 했음을 확인. 부시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에게 세 차례 친서를 보낸 바 있음

**[6일]** 정부, 6자 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에너지 설비·자재 1차분과 중유보일러를 남북협력기금 45억 범위 내에서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

**[7일]** 노 대통령, 제5차 한·중동 협력포럼에 참가한 중동 및 이슬람 기구 대표 21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동 관계가 에너지와 건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

**[8일]** 노 대통령, CNN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지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한다는 상황만 조성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

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 불신하지 않는다”고 밝힘

**[10일]** 경제협력기구(OECD)와 통계청, 제3차 OECD 세계포럼을 2009년 10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

**[1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6자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추진에 동의한다며, 이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힘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북한 핵문제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

**[17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팔레스타인 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표명하며 2010년까지 2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경 제

**[3일]**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56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일]** 10·4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부총리급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 시작.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개보수 등 구체적 논의 진행

**[5일]** 당일 개성관광 시행. 개성 박연폭포 근처의 관음사 주지 청맥 스님은 “가까우면서도 먼 곳에서 오셨다”며 남측 첫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함

**[5일]**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 시작

**[6일]** 남북,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북쪽 노동자 총원 협력과 숙소 건설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10조로 이뤄진 합의서 채택

**[6일]** 경제협력기구(OECD),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007년 4.9%, 2008년 5.2%, 2009년

5.1%로 전망해 지난해 5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8일】** 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인 이란의 골람 호세인 노자리 석유장관, “달리 이외의 통화로 원유를 거래한다는 정책에 따라 현 시점에서 원유의 달러 결제는 완전히 중단된다”고 선언

**【10일】** 도라산 물류센터 완공

**【11일】** 분단으로 끊긴 경의선 문산~봉동(판문역) 구간에 56년 만에 열차 정기운행 시작. 이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신발은 화물열차로 부산까지 운반되는 등 인적 교류와 물류비 절감이 기대됨

**【13일】** 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에 대해 “시장에 맡겨 놓은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이고, 그건 금융위기 상태”라며 “미국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고 유럽도 위태위태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겨내지 않았느냐”고 지적

**【14일】** 통일부, 경공업 원자재 대북 현물차관 제공(8천만 달러 상당)에 따른 초년도 대가 상환 3% 중 1.5%, 120만 달러에 해당하는 북한산 아연과 500t이 인천항에 도착했다고 밝힘. 정부가 제공한 대북차관에 대한 북측의 첫 상환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협력대상 수역 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 자체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17일】**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와 측량 시작. 2단계 개발은 1단계 사업의 2.5배 규모

**【18일】** 과학기술부, 자체 개발한 과학기술혁신지수(COSTI)로 평가한 결과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국가 중 12위인 것으로 나타나

## 사회 · 문화

**【6일】** 30대 중반의 남성이 해병대 병사 두 명을 차

로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 발생

**【6일】** 노 대통령, 국정원·국방부·경찰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에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사 정리 업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추진력과 의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원 여러분은 계획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한편, 그 결과 또는 경과를 국민들께 잘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여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 유출 사건 발생. 정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는 한편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섬

**【11일】** 노 대통령,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원유 오염이 남북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시

**【12일】**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용의자가 1주일 만에 검거됨

**【13일】** 노 대통령, 제3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든 5·31 교육개혁은 국민적 합의였다”며 “우리나라 모든 신문사들이 본고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완전히 뒤집어 탄소리하고 있다”고 비판. 대통령은 이어 대학당국의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교육 이기주의를 버려야 선진국이 가능하다”고 밝힘

**【13일】**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대학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고 수업 및 지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전형료 회계처리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2009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16일】** 김연아, 그랑프리파이널 2회 연속 금메달

**【17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에 민·관·군 합동 방제작업 진행. 16일부터 사고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유엔환경기구(UNEP), 유

립공동체,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공동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고 관계기관, 지방정부, 군당국,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라고 밝힘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부정 의혹이 있는 사례 65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⑧

---

### 일지 / 자료

발행처 국정홍보처  
발행인 김창호  
발행일 2008년 2월 20일  
편집협력 김형운편집회사  
인쇄제본 삼화인쇄(주)